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of Busan Metropolitan city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Master Plan for Architectural Policy of Busan
Metropolitan city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책임연구원	우신구_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연구원	이인희_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신병윤_동의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정재훈_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백지웅_신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양진국_(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무소 연구소장 추동엽_CNA건축사사무소 대표
보조연구원	강혜원, 하남구, 정인아, 이봉_부산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유재영, 정지현_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석사과정
특별자문위원	김민수_경성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부산광역시	정정규_행복주택복지국장 박근수_건축정책과장 이인구_건축정책과 건축정책팀장 김관욱_건축정책과 주무관 박정훈_건축정책과 주무관
부산건축제 총괄지원 연구행정지원	유재우_집행위원장 권한대행(부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조창래_사무국장, 정선영_대리
인쇄일	2018. 12. 2019. 02.(부산시 직제개편 등을 반영하여 수정 인쇄)
발행처	(사)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

제 출 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본 보고서를<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12

(사)부산건축제조조직위원회

목 차

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018
1.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필요성	018
1.2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018
2.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019
2.1 공간적 범위	019
2.2 내용적 범위	020
2.3 시간적 범위	021
3. 계획의 성격 및 위상	022
3.1 상위법 등에 관한 분석	022
3.2 관련 계획에 관한 분석	028
3.3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030
3.4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평가 및 재수립	031
4. 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조	032
4.1 계획 수립절차	032
4.2 계획의 구조	032
4.3 건축기본계획의 추진과정	033
II. 부산시 건축정책 현황 및 분석	
1. 여건과 패러다임 변화	036
1.1 국제 여건변화 및 이슈	036
1.2 국내 여건변화 및 이슈	038
2. 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 분석	040
2.1 서울시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0
2.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1
2.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2
2.4 강원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2
2.5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3
2.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2017~2021)	043
3. 해외사례	044
3.1 초국가적 정책사례	044
3.2 국가적 정책사례	044
3.3 통합적 도시정책사례	046
3.4 실천프로그램의 사례	047
4.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048
4.1 분석 목적	048
4.2 분석대상 및 방법	048
II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기초현황 분석	
1. 자연환경	064
1.1 지리적 위치	064
1.2 지형	064
1.3 기후	065
2. 인문환경	066
2.1 부산의 역사	066
2.2 행정구역의 변화	066
2.3 문화자원	067
3. 토지이용	068
3.1 용도지역	068
3.2 용도지구	069
3.3 용도구역	069
3.4 지구단위계획	069
4. 인구	070
4.1 인구변화	070
4.2 연령별 인구	071
4.3 구/군별 세대와 인구	072
4.4 1인 가구 변화	073
4.5 노인인구	074
4.6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076
5. 건축 및 공공공간	077
5.1 주거	077
5.2 건축물	080
5.3 보육시설 및 고령자시설	085
6. 재난과 안전	087
7. 건축서비스산업	088

IV.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방향과 체계

1. 기본방향	092
1.1 부산건축을 둘러싼 이슈	092
1.2 부산건축의 10대 과제	092
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098
2.1 기본계획의 구성	098
2.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099
2.3 전략별 세부 전략	100
2.4 전략별 세부과제	103

V.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전략별 세부사업

S1. 공공성 : 일상공간과 공공공간을 아우르는 공공성과 쾌적성 제고	110
S2. 경관성 : 심미성과 지역성이 조화를 이룬 매력 적인 도시경관의 형성	136
S3. 지속성 : 복지와 건강을 융합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회복	158
S4. 생활성 : 이웃공동체에 기반한 정주성제고와 공동체 역량강화	198
S5. 안전성 : 지진·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건축 시스템 구축	222
S6. 환경성 : 기후변화, 생태, 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246
S7. 문화성 : 역사와 문화자산에 기반한 지역밀착의 건축문화시스템 구축	272
S8. 경제성 : 저성장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건축 서비스산업 활성화	308
S9. 혁신성 :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 선진화	330

V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추진방안

1. 계획의 운영 관련 지침	354
1.1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을 위한 메타계획 으로 활용	354
1.2 구·군 건축기본계획 수립	354
1.3 정책과제와 실행과제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천 주체	354

1.4 각종 건축 및 도시공간 관련 시책 및 사업 수립 시 계획의 반영	354
1.5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평가를 위한 부산 건축 협치 조직 운영	354

2.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	355
-----------------------------	-----

3. 세부과제별 실행주체 및 소요예산	356
----------------------	-----

VII. 부 록

1. 연구진행 과정	364
1.1 착수보고회	365
1.2 1차 Workshop	366
1.3 2차 Workshop	366
1.4 3차 Workshop	367
1.5 1차 전문가세미나	367
1.6 5차 Workshop	368
1.7 6차 Workshop	368
1.8 7차 Workshop	369
1.9 8차 Workshop	369
1.10 9차 Workshop	370
1.11 전문단체 의견청취	370
1.12 10차 Workshop	371
1.13 11차 Workshop	371
1.14 중간보고	372
1.15 실무진회의	372
1.16 공청회	373
1.17 12차 Workshop	373
1.18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연구진, 행정간 상견례	374
1.19 시의회 의견청취	374
1.20 성평등영향평가	375
1.21 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최종보고회	375
1.22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376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그림목차

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개요

[그림 I -1] 건축기본계획관련 계획	018
[그림 I -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019
[그림 I -3] 부산의 행정구역	019
[그림 I -4]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내용적 범위	020
[그림 I -5]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021
[그림 I -6] 건축기본법의 구성	022
[그림 I -7] 제2차 국가건축정책의 기본계획	025
[그림 I -8] 공공디자인의 방향	026
[그림 I -9]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전략	027
[그림 I -10] 부산시 건축기본계획관련 타 계획 분석	030
[그림 I -11]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재수립	031
[그림 I -12] 부산 건축기본계획 수립 추진체계	032
[그림 I -13]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구조	033
[그림 I -14]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추진과정	033

II. 부산시 건축정책 현황 및 분석

[그림 II -1]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037
[그림 II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039
[그림 II -3] 덴마크 건축정책(2014)	045
[그림 II -4] 국가건축전략(Stratégie Nationale pour l'Architecture) 보고서	046
[그림 II -5] 팔러랭장관의 국가건축전략 발표 장면, 2015.10.20., 파리벨빌국립고등건축대학	046
[그림 II -6] 영국 The London Plan	046
[그림 II -7] 미국 뉴욕 : PLANYC&ONENYC	046
[그림 II -8] 일본 New Tomorrow, 2020의 홈페이지 및 보고서	047
[그림 II -9] 우수 건축물 안내표지판, 미국 컬럼버스	047
[그림 II -10]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내용 분석	048

II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기초현황 분석

[그림 III -1]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064
[그림 III -2] 그림으로 보는 부산지형	064
[그림 III -3] 부산의 평균기온(2008~2017)	065
[그림 III -4] 부산의 행정구역 변천	066
[그림 III -5] 부산(2011~2016)의 인구 변화	070
[그림 III -6] 부산의 연령별 인구비교(1992/2015)	071
[그림 III -7] 구·군별 세대와 인구	072
[그림 III -8] 시도별 1인 가구 비율	073
[그림 III -9] 부산시 구·군별 고령인구	074
[그림 III -10] 부양비의 노령화 지수	076
[그림 III -11] 연도별 주택유형	077
[그림 III -12] 구군별 주택유형	077
[그림 III -13]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078
[그림 III -14] 2016 부산시의 각 구·군 주택보급률	079
[그림 III -15] 면적별 건축물 현황(전국·서울·부산)	080
[그림 III -16] 층수별 건축물 현황(전국·서울·부산)	081
[그림 III -17] 용도별 건축물 현황(전국·서울·부산)	082
[그림 III -18] 구·군별 건축물 노후도	083

[그림 Ⅲ-19] 건축물 용도별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전국·부산)	084
[그림 Ⅲ-20] 전국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087
[그림 Ⅲ-21] 부산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087
[그림 Ⅲ-22] 전국 건축서비스산업현황(2006/2016)	088

Ⅳ.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방향과 체계

[그림 Ⅳ-1] 부산건축을 둘러싼 이슈	092
[그림 Ⅳ-2]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위기(Nickolay Lamm의 가상도)	092
[그림 Ⅳ-3] 태풍으로 침수되는 마린시티(2016)	092
[그림 Ⅳ-4]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의 다세대 주택(2017)	093
[그림 Ⅳ-5] 재난 건 수 및 인명 피해(2017, 부산광역시, 도로교통사고제외)	093
[그림 Ⅳ-6] 부산시 사하구 오피스텔 부동산침하(2017)	093
[그림 Ⅳ-7] 밀양요양원 화재(2018)	093
[그림 Ⅳ-8] 고령화 추이	094
[그림 Ⅳ-9] Credit Suisse data available 2000~2015	094
[그림 Ⅳ-10] 브라질 상파울루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모룸비(Morumbi) 지구	094
[그림 Ⅳ-11] 다양한 기술 분야 및 솔루션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개념도	095
[그림 Ⅳ-12] 스마트 빌딩 기술이 구현된 The Edge Building, 암스테르담	095
[그림 Ⅳ-13] 황령산에서 본 해운대 지역	096
[그림 Ⅳ-14] 수정동 망양로에서 본 북항 전망	096
[그림 Ⅳ-15] 시민계획단이 참여한 부산도시계획현장	096
[그림 Ⅳ-16] 주민이 참여하는 건축협정	096
[그림 Ⅳ-17] 부산 오페라 하우스 조감도(설계 : 스노헤타)	097
[그림 Ⅳ-18] 키스와이어 센터(설계 : 조병수)	097
[그림 Ⅳ-19]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카페	097
[그림 Ⅳ-20] 가족이 즐기는 광복로 거리공연	097
[그림 Ⅳ-21]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098
[그림 Ⅳ-22]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099

Ⅴ.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전략별 세부사업

S1 공공성	
[그림 Ⅴ-1] 영화의 전당, 부산국제영화제	110
[그림 Ⅴ-2]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의 3단계와 세부과제, 계획-실현-활용	111
[그림 Ⅴ-3] 서울 오류 2동 주민센터 동네도서관	114
[그림 Ⅴ-4] 뉴욕시 보행성지표(Walk Score)	116
[그림 Ⅴ-5] 보행친화성 및 안전성의 저하	119
[그림 Ⅴ-6] 연제구 망미주공아파트	121
[그림 Ⅴ-7] 사진실험	122
[그림 Ⅴ-8] 연제구 배산 주변	124
[그림 Ⅴ-9] 부산대역 주변 온천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라라라페스티벌(2017)	126
[그림 Ⅴ-10] 시민을 위한 마라톤대회를 위해 개방된 광안대교	127
[그림 Ⅴ-11] 동래구 동래읍성 역사축제	128
[그림 Ⅴ-12] 개발 이전의 낙후된 모습	129
[그림 Ⅴ-13]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따뜻한 로비공간	129
[그림 Ⅴ-14] 보행로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입구공간	129
[그림 Ⅴ-15] 공공공간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통한 공공성의 창출	130
[그림 Ⅴ-16] 마을버스 주차장을 겸한 커뮤니티 공간(부산 서구 아미·초장도시재생사업)	132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그림목차

S2 경관성

[그림 V-17] 부산시 인공경관 관리구역	136
[그림 V-18] 경관관리계획의 환원주의적 논리 오류	139
[그림 V-19] 황령산에서 광안리조망	141
[그림 V-20] 경관이란 무엇인가 "What is Landscape?"	142
[그림 V-21] 광안대교 야간조명	146
[그림 V-22] 후쿠오카 아일랜드시티 항만 색채계획	149
[그림 V-23] 동부산관광단지 내 아난티코브(설계 : 민성진, 박인갑)	151
[그림 V-24] 장산에서 바라 본 광안대교 야경	152
[그림 V-25] 감천문화마을 경사주거지의 아름다운 야경	154
[그림 V-26] 일본 하코다테의 야경	154

S3 지속성

[그림 V-27]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가 밀집한 우암동 소막마을	158
[그림 V-28] 부산시 위험 주택 사례	159
[그림 V-29] 부산시 고시원 시설 사례 1-3	160
[그림 V-30] 부산시 다세대주택 사례	161
[그림 V-31] 노인가구 유형별 구성비	164
[그림 V-32] 환경개선사례	165
[그림 V-33] 액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미국 뉴욕 Elmhurst 주민도서관	167
[그림 V-34] 건축과 도시공간의 액티브 디자인 개념도	168
[그림 V-35] 부산 초고령마을 중 취약지	168
[그림 V-36] 자전거도로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69
[그림 V-37]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예비인증 대덕구 종리길	170
[그림 V-38]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화장실	170
[그림 V-39]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의 '건강기부계단(피아노 음악계단)'	171
[그림 V-40] 뉴욕의 자전거 주차장	172
[그림 V-41] 시카고 전철역에 설치된 조형적인 자전거스탠드	172
[그림 V-42] 활동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174
[그림 V-43] 마을기업 늘품이 운영하는 서구 초장동 천마산 에코하우스	175
[그림 V-44]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으로 조성된 중구 영주동 산리마을회관	176
[그림 V-45]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 젠트리피케이션과 생활문화공동체	177
[그림 V-46]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	178
[그림 V-47] 창신송의 도시재생협동조합(CRC)	179
[그림 V-48]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동래구 명장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81
[그림 V-49] 사하구 장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82
[그림 V-50] 사상구 주례동 주례문화공터(2012, 상수도 폐가압장을 재생하여 조성)	183
[그림 V-51] 근대건축물의 재생(구.한성은행)	184
[그림 V-52] 노후 주거를 활용한 감천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	184
[그림 V-53] 부산진구 범천4동 신암어르신쉼터(상수도 폐가압장을 재생하여 조성)	184
[그림 V-54] 2017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워크숍, 코모도호텔	186
[그림 V-55] 마을활동가1기 기초·심화교육(2013)	188
[그림 V-56] 지역주민과 청년이 함께 일하는 이바구캠프	188
[그림 V-57]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189
[그림 V-58] 수영고가도로 하부 유휴공간의 청년문화공간화 계획안	191
[그림 V-59] 오노미치의 빈집에 무상으로 입주한 동경출신 만화가의 이주체험을 담은 만화	192

[그림 V-60] 1932년 지어진 독특한 모양의 공가를 리노베이션하여 임대형 문화공간으로 재활용한 <가우디하우스>	192
[그림 V-61] 도심 아케이드 상점가의 빈상가를 재생한 게스트하우스 '장어의 침대'	192
[그림 V-62] 서구 아미동·초장동·남부민동 노후 경사주거지 유희공간(공가, 폐가, 나대지) 현황	193
[그림 V-63] 영도구 동삼1동 <가치가치 하우스>	194
[그림 V-64] 빈집정비계획 수립절차	194
S4 생활성	
[그림 V-65] 2017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에 참여한 국내외 대학생들의 좌천아파트의 현황 현장조사	198
[그림 V-66] 수정아파트 중복도	200
[그림 V-67] 공동화장실	200
[그림 V-68] 안락동 단독주택지	202
[그림 V-69] 부산시 연도별 주택유형(2006~2015)	203
[그림 V-70] 부산시 구별 주택유형(2015)	203
[그림 V-71] '레고마을'로 알려진 만덕동 단독주택단지	203
[그림 V-72] 영주동 일대 단독주택지	203
[그림 V-73]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발굴	205
[그림 V-74] 10분 생활권 개념도	206
[그림 V-75] 서울시 상도동 도화공원 녹색 골목길 중심의 10분 동네 조성계획	206
[그림 V-76]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좌천아파트	207
[그림 V-77]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Pruitt Igoe 아파트단지	209
[그림 V-78] 동구 좌천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경사엘리베이터	209
[그림 V-79] 주거환경개선사업(2012)을 통해 현대식 화장실로 개선한 동구 수정 시영아파트의 공동화장실	209
[그림 V-80]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기장군 00아파트)	211
[그림 V-81]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	213
[그림 V-82] 재개발로 사라지는 골목커뮤니티(영도 동삼동)	214
[그림 V-83] 건축협정의 제도적 특징	217
S5 안전성	
[그림 V-84] 제천스포츠크센터 화재(2017)	222
[그림 V-85]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순찰	225
[그림 V-86] 도면 미확보로 피해가 커진 제천사우나 화재	225
[그림 V-87]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지역의 2차 피해 모습(2017)	227
[그림 V-88] 2014년 부산지역 폭우로 붕괴된 해운대 좌동 공사현장	228
[그림 V-89] 폭우로 침수된 부산연제구의 도로(2017)	229
[그림 V-90] 화재위험 건축물 예측모델	230
[그림 V-91] 우신골드스위트 화재(2010)	230
[그림 V-92] 미국 뉴욕시 침수 안전지도	230
[그림 V-93] 건축물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건축물 정보 모델링 개념도	232
[그림 V-94] 건축물 생애주기 중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건축행위	233
[그림 V-95] 건축시설물 생애주기(Life Cycle)에 기반한 정보체계	234
[그림 V-96] 건축물 관련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도시	236
[그림 V-97] Big Data Based Urban Safety System	237
[그림 V-98] 3차원 지질 모델링	238
[그림 V-99] 지진으로 심각하게 파손된 포항의 노후학교	240
[그림 V-100] 내진보강공사를 마친 충남 홍성중학교	241

그림목차

S6 환경성	
[그림 V-101] 독일 프라이부르크 Vauban 지역 주거단지	246
[그림 V-102]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초고층 건물(마린시티)	247
[그림 V-103] BED ZED 영국 런던 Beddington 지역	247
[그림 V-104] 충남 적정기술 보유센터	249
[그림 V-105] Solhuset(The Sun House) 덴마크 Hørsholm 지역	251
[그림 V-106] 온천천 구조물 하부	255
[그림 V-107] 부산의 노후건축물	256
[그림 V-10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진행과정과 지원유형	257
[그림 V-109] 태양광패널과 통합된 고층건물 차양장치	258
[그림 V-110] 남부민동 천마경로당 사업 전	258
[그림 V-111] 천마경로당 녹색리모델링사업 계획안	258
[그림 V-112] 부산 대연동 단독주택(2017)	259
[그림 V-113] 시공 전	259
[그림 V-114] 시공 후	259
[그림 V-115] 초장동 에코하우스	261
[그림 V-116] 일본 큐슈 아크로스 후쿠오카	263
[그림 V-117]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263
[그림 V-118] 스웨덴 함마르비 수변 녹색도시	265
[그림 V-119] 남항 주변 시가지	266
[그림 V-120] 멜버른의 수변 창고를 활용한 아라강(Yarra River) 수변재개발계획 전·후 비교	266
[그림 V-121] 수변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뉴욕 브루클린의 Greenpoint 단지계획	267
S7 문화성	
[그림 V-122] 동구 초량동 소재의 근대건축물(백제병원)을 리모델링한 카페	272
[그림 V-123]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마을모습이 잘 보존된 감천문화마을	273
[그림 V-124] 템플바 지구의 대표적 장소인 템플바(The Temple Bar)	274
[그림 V-125] 지구의 중심 템플바 광장	274
[그림 V-126] 재개발로 2016년 철거된 온천장 권철현 씨 가옥	275
[그림 V-127] 부산중앙 도서관, 〈부산의 근대건축〉	275
[그림 V-128] 1970-80년대 부산의 랜드마크였던 국제호텔	275
[그림 V-129] 강강이예술마을 프로젝트	275
[그림 V-130] 창원시 마을흔적보전사업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용지주공아파트(1983)	276
[그림 V-131] 용지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용지아이파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조성된 ‘용지주공아파트 마을흔적 전시관’	276
[그림 V-132] 부산야행 역사투어프로그램	277
[그림 V-133] 폐가로 방치된 일제강점기 적산가옥(1941)을 개보수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한 동구 초량동 카페	277
[그림 V-134] 부산 에코델타시티	279
[그림 V-135] 마을환경 가꾸기	280
[그림 V-136] 마을건강 돌보기	280
[그림 V-137]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공모 포스터	281
[그림 V-138] 〈골목관찰전〉 전시풍경	281
[그림 V-139] 부산 기장군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284
[그림 V-140] 금정구 금사동 보림팩토피아	286
[그림 V-141]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289
[그림 V-142] 싱가포르 City Gallery	290

[그림 V-143] 오래된 마을의 골목과 건물을 보존한 서울의 돈의문박물관마을	290
[그림 V-144] 집행위원회와 프로그래머를 중심으로 하는 부산건축제 조직도	291
[그림 V-145]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도시건축센터	292
[그림 V-146] 3331 Arts Chiyoda	292
[그림 V-147] 2016 찾아가는 건축문화 아카데미	294
[그림 V-148] 미국 미시간건축재단의 전문가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공간의 첫수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모습	295
[그림 V-149] 찾아가는 건축문화 아카데미, 부산건축제, 2016	296
[그림 V-150]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한 건축사와 함께 하는 어린이 건축 한마당	296
[그림 V-151] 건축학교 2017	296
[그림 V-152] 시카고건축재단이 주관하는 리버 크루즈 건축투어	297
[그림 V-153] 세그웨이를 이용한 시카고건축투어	297
[그림 V-154] 부산 경남 학생 건축디자인 연합 가온	298
[그림 V-155] 교육 플랫폼 <COURSERA>	298
[그림 V-156]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298
[그림 V-157] 1953년 동광동 40계단	300
[그림 V-158] 부산도시기록 사진집	301
[그림 V-159] 제1차 도시기록화 사업으로 수집한 1904년대 해운대와 2009년의 해운대 비교	302
[그림 V-160] 분류·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수집자료	302
[그림 V-161] 수집자료 중 1950년대의 유네스코 본부 관련 조감도	302
[그림 V-162] 건축아카이브 내의 루이스 칸 컬렉션 전시실	303
[그림 V-163] 목천건축아카이브의 업무 범위	303
[그림 V-164] 수집자료 중 1950년대의 유네스코 본부 관련 조감도	303
S8 - 경제성	
[그림 V-165] 연희동 리프로그래밍	308
[그림 V-166] 부산건설기업들의 현황과 개선방안	310
[그림 V-167]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도	311
[그림 V-168]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도	311
[그림 V-169] 지역의 건축문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방송콘텐츠<조나단의 상상이상>	313
[그림 V-170] 지역 랜드마크 기념품	314
[그림 V-171] 시카고 특별판 레고	314
[그림 V-172] 감천문화마을 내 판매시설	314
[그림 V-173] 전주한옥마을 내 판매시설	314
[그림 V-174] 미국 도시 가상 체험 <The City VR Experience>	315
[그림 V-175]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전경	316
[그림 V-176] 일본 후쿠오카의 지역한정 굿즈	316
[그림 V-177] 쿠마모토현의 쿠마몬	316
[그림 V-178] 홍콩 전통시장의 팝업형 먹거리 지도책	316
[그림 V-179] 노스테라스(황두진 건축가), 아키굿즈워크숍	317
[그림 V-180] <뷰박스>(동래구 안락동 소재)	318
[그림 V-181] <멋진 할아버지집>(김해시 소재)	319
[그림 V-182] 2018 부산건축주간에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한 조정훈 소장(건축사사무소 아익)의 전시모습	319
[그림 V-183] 2016 부산다운건축상 대상 삼화퍼티에스	321
[그림 V-184] 국립현대미술관 젊은건축가 프로그램	322
[그림 V-185] 2014 건축명장에 선정된 대정종합건설(주)이 시공한 천주교 부산재속맨발가르멜회관	323
[그림 V-186] 2018 건축명장 소개 책자	324

그림목차

S9 - 혁신성	
[그림 V-187] 경북 영주시 풍기읍 행정복지센터	330
[그림 V-188] 민간분야의 보편적 설계의뢰절차	333
[그림 V-189] 일본 우토로마을 기억보존 프로젝트(동아대학교 건축학과)	335
[그림 V-190] 민간전문가 총괄코디네이터가 지원하는 창원시 완월지구새뜰마을사업의 사회적협동 조합주택 설계안 협의	336
[그림 V-191] 민간전문가 총괄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부산서구 아미·초장도시재생사업의 회의 모습	336
[그림 V-192] HOPE with HUG 프로젝트	337
[그림 V-193] 건축가가 참여한 빈집프로젝트, 전주 노송동 별의별 프로젝트	338
[그림 V-194] 마을 단위 건축서비스 산업 생태계	338
[그림 V-195]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포털	340
[그림 V-196] 건설업 노동생산성의 저하	341
[그림 V-197] UCLA에서 개발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예측 프로그램 <프레드폴(PredPol)>	342
[그림 V-198] 공간-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프로그램	342
[그림 V-199] 영국 왕립건축협회 <데이터로 디자인하기>	342
[그림 V-200]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컨퍼런스	343
[그림 V-201] 부산 글로벌 스마트 시티 조성도_해운대구 센텀시티	346
[그림 V-202] 스마트 시티 개념도	347
[그림 V-203]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세종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348
[그림 V-204] 스마트머릿돌 사업 개념도	349
[그림 V-205] 스마트건축행정구축 단계	349
[그림 V-206] WAAG society	349
[그림 V-207] 해커스페이스	349
[그림 V-208] 바르셀로나 펍랩	350
[그림 V-209] IoT를 활용한 증강현실 길안내	350
[그림 V-210] 비콘을 통한 정보제공	350

Ⅵ.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계획의 추진방안

[그림 Ⅵ-1] 건축기본계획의 단·중·장기 계획	355
----------------------------	-----

Ⅶ. 부 록

[그림 Ⅶ-1] 2017.05.25 착수보고	365
[그림 Ⅶ-2] 2017.07.20 2차 Workshop	366
[그림 Ⅶ-3] 2017.08.16 3차 Workshop	367
[그림 Ⅶ-4] 2017.09.14 전문가세미나	368
[그림 Ⅶ-5] 2017.10.12 6차 Workshop	368
[그림 Ⅶ-6]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369
[그림 Ⅶ-7] 2017.11.25 7차 Workshop	369
[그림 Ⅶ-8] 2018.01.29 전문단체 의견청취	370
[그림 Ⅶ-9] 2018.02.08 10차 Workshop	371
[그림 Ⅶ-10] 비전 및 목표, 전략(안)	371
[그림 Ⅶ-11] 2018.03.22 중간보고	372
[그림 Ⅶ-12] 2018.04.02 실무진회의	372
[그림 Ⅶ-13] 2018.05.10 공청회	373
[그림 Ⅶ-14] 2018.08.10 회의사진	374
[그림 Ⅶ-15] 2018.10.19 시의회 의견청취	374
[그림 Ⅶ-16] 2018.11.20 최종보고	375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

표목차

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개요

[표 I-1] 관련 법정계획	028
-----------------	-----

II. 부산시 건축정책 현황 및 분석

[표 II-1]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	036
[표 II-2]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더불어 잘사는 경제	038
[표 II-3]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038
[표 II-4] 정부 100대 국정과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039
[표 II-5]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040
[표 II-6]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041
[표 II-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042
[표 II-8]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042
[표 II-9]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043
[표 II-10]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043
[표 II-11] 네덜란드 국가 건축정책	045
[표 II-12]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050
[표 II-13]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054
[표 II-14]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058

II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기초현황 분석

[표 III-1] 월 평균기온(2017)	065
[표 III-2] 문화재 현황(2016)	067
[표 III-3] 용도지역 지정현황(2017)	068
[표 III-4] 용도지구 현황(2017)	069
[표 III-5] 용도구역 현황(2017)	069
[표 III-6] 지구단위계획 현황(2017)	069
[표 III-7] 인구변화(2011~2016)	070
[표 III-8] 연령별 인구	071
[표 III-9] 구·군별 세대와 인구	072
[표 III-10] 연도별 1인 가구의 비율(1995~2016)	073
[표 III-11] 2015~2016 고령사회	074
[표 III-12]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075
[표 III-13]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076
[표 III-14] 주택 유형(2005~2016)	077
[표 III-15] 구·군별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078
[표 III-16] 주택보급율	079
[표 III-17] 구·군별 주택보급율	079
[표 III-18] 면적별 건축물 현황(전국·서울·부산)	080
[표 III-19] 층수별 건축물 현황	081
[표 III-20] 용도별 건축물 현황	082
[표 III-21] 건축물 노후도 현황	083
[표 III-22] 건축물 용도별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동, 2017년 8월 현황)	084
[표 III-23] 부산시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	085
[표 III-24] 부산시 노인 복지시설	086
[표 III-25] 전국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087
[표 III-26] 부산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087
[표 III-27] 전국 및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변화	089

Ⅳ.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방향과 체계	
[표 Ⅳ-1] 1인 가구 증감	094
Ⅴ.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전략별 세부사업	
[표 Ⅴ-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160
[표 Ⅴ-2] 대체주택 분류	160
[표 Ⅴ-3] 중앙정부 대비 부산시 생애단계별 주거복지사업	162
[표 Ⅴ-4]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공공건축가(민간전문가)의 자격·역할 및 업무 범위	285
[표 Ⅴ-5] 부산시 공공건축가 현황	286
[표 Ⅴ-6] 공공건축가(민간전문가) 제도 유형별 역할 및 업무	286
[표 Ⅴ-7] 건축단체 교육프로그램	295
[표 Ⅴ-8] 디자인 감리제도	332
[표 Ⅴ-9] 각 국가별 주요 정책	347
Ⅵ.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계획의 추진방안	
[표 Ⅵ-1]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356
[표 Ⅵ-2]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358
[표 Ⅵ-3]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360
Ⅶ. 부 록	
[표 Ⅶ-1] 계획수립 추진 경과	364
[표 Ⅶ-2] 연구 분야	366

■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018
1.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필요성	018
1.2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018
2.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019
2.1 공간적 범위	019
2.2 내용적 범위	020
2.3 시간적 범위	021
3. 계획의 성격 및 위상	022
3.1 상위법 등에 관한 분석	022
3.2 관련 계획에 관한 분석	028
3.3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030
3.4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평가 및 재수립	031
4. 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조	032
4.1 계획 수립절차	032
4.2 계획의 구조	032
4.3 건축기본계획의 추진과정	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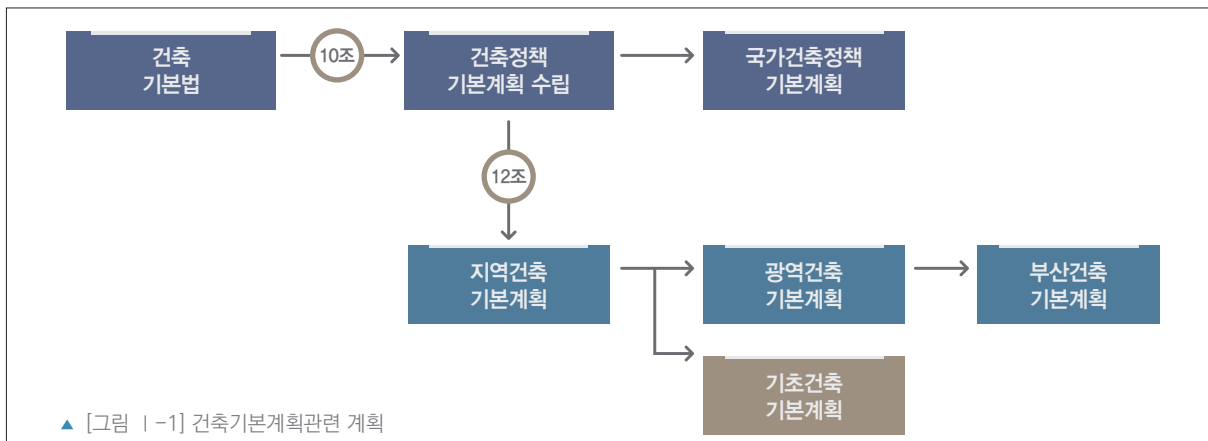
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개요

1. 배경 및 목적

1.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배경 및 필요성

국가 계획을 승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건축 분야 법정 정책 계획 수립

-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의해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5년 단위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건축기본법의 시행 및 제1차 국가건축기본계획에 의해 부산의 실정에 맞는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2012년)을 수립하여 품격 높은 공간환경 조성, 우수한 품질의 건축물과 올바른 건축문화 형성의 기틀을 제공하여 왔음
- 사회의 제반 환경변화와 국가의 정책 변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올바른 건축문화형성을 위하여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2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건축·도시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통합계획 (Integrated Plan)

- 건축 및 도시환경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은 그 자체만으로 좋은 건축을 제공할 수는 없지만, 시민과 도시를 위한 좋은 건축, 즉 '부산다운 건축'의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임
- 경관·디자인·산업·문화·건설 기술 등 건축 및 도시 분야의 다양한 시책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계획임

건축·도시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실용적 전략계획 (Strategic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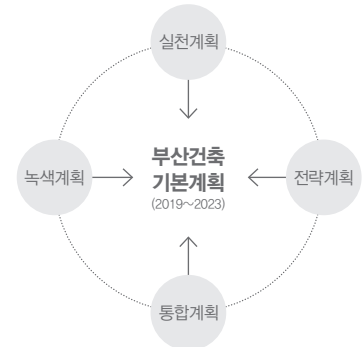
- 부산의 건축·도시환경에 파급효과가 큰 정책의 주요 핵심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적으로 접근
- 추상적인 공간계획이 아닌, 실천적인 수단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1세기형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녹색계획 (Green Plan)

- 성장위주의 난개발로부터 친환경적인 건축·도시환경으로 정책의 변화를 수용
- 21세기를 이어갈 지속가능한 발전의 패러다임을 공유하는 건축·도시 정책 유도

개념계획이 아닌 실질적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 (Action Plan)

- 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의 제시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과제들을 제시
- 단편적이거나 일회성의 정책이 아닌 중장기의 지속적인 실천과제들로 구성



▲ [그림 1-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성격

2. 과업의 범위 및 주요 내용

2.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의 건축물 및 도시 공간환경
 -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역 : 면적 약 769.82km²
 - 건축물과 그 주변의 공간환경

건축기본법 제3조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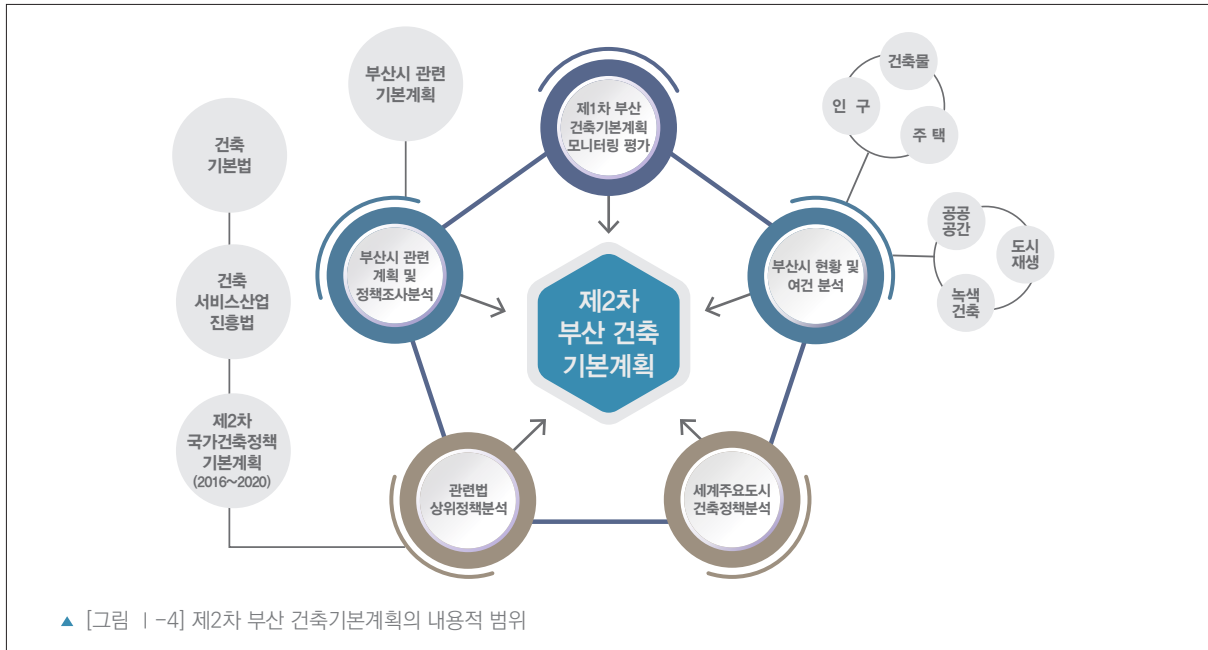
1.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2.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



▲ [그림 1-3] 부산의 행정구역

2.2. 내용적 범위

- 국가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분석을 통한 부산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 범위 설정
- 광역건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분석
- 광역건축기본계획 기본방향 설정
- 부산광역시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 광역건축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 수립(관련 행정절차 이행 포함)
- 광역건축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관련제도 정비 및 실천방안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상의 내용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건축기본법시행령 제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상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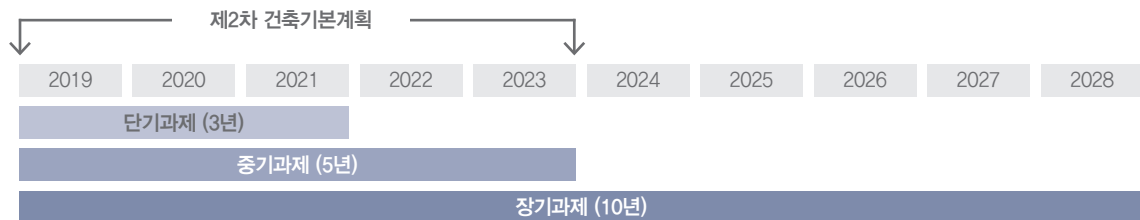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 자료의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2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상의 내용

1. 건축정책의 장기적인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축의 사회적·문화적 공공성 구현에 관한 사항
3. 건축의 문화적·산업적 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항
4. 건축분야 지식발전 및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기준, 시범사업, 설계공모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 건축문화유산 및 우수건축물 보존에 관한 사항
7. 에너지절약, 친환경 등 지속가능한 건축에 관한 사항
8. 건축 관련 해외 진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9. 건축문화 기반 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시민의 건축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참여에 관한 사항
11.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3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자료수집의 기준)
- 목표연도 : 2023년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해 5년 단위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정책의 목표 및 추진과제의 성격과, 정책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분하고 각각 3년(2021년), 5년(2023년), 10년(2028년)을 계획기간으로 함



▲ [그림 1-5]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시간적 범위

3. 계획의 성격 및 위상

3.1 상위법 등에 관한 분석

1) 건축기본법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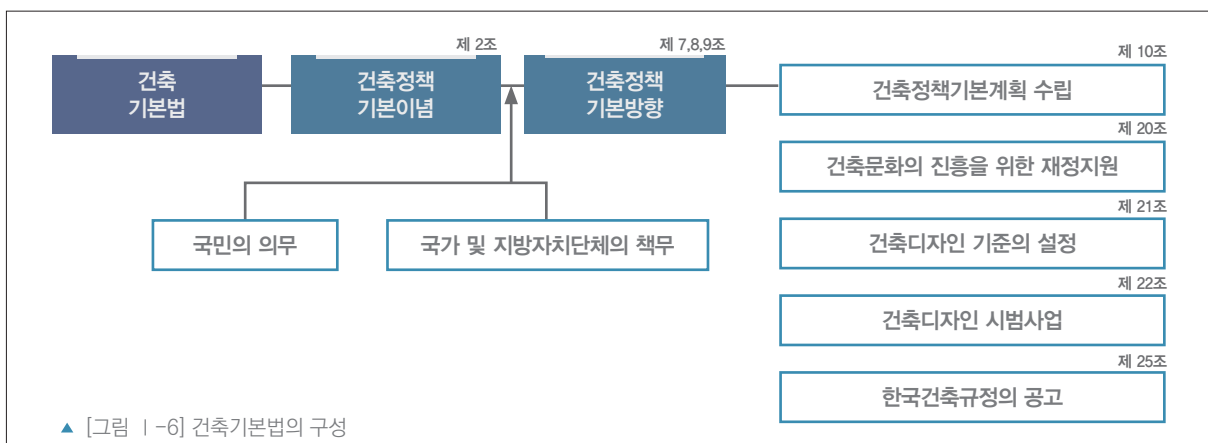
-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기본이념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2007년 12월 제정·공포, 2008년 6월 시행)
-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기본이념

-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
-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조정하고 수용하며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공간환경의 조성
- 지역의 고유한 생활양식과 역사를 반영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문화공간의 창조 및 조성

3. 주요내용

-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 및 사회적 공공성 확보, 문화적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정책의 기본방향
-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내용, 지역건축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및 지역건축위원회의 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건축디자인의 기준설정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 건축기본법에 따라 국가에서는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을 세우며, 시·도에서는 이와 정합성을 지닌 지역 건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2)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1. 법적근거

건축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건축기본법 제10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 (건축기본법 제10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의의 및 성격

- (법정계획)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 (종합계획) 건축 관련 산업, 경관, 환경, 에너지,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정책 계획
- (전략계획) 장기적인 비전, 목표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성과관리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실천적 계획
- (범정부계획) 과제의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복수부처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계획

3.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 국민의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축의 품격 및 품질향상, 도시경관 향상 등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 계획 내용은 건축기본법 제11조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내용을 포함

[건축기본법] 제11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건축의 품격 및 품질 향상
4.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 향상
5. 지역의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 대책
6. 우수한 설계기법 및 첨단건축물 등 연구개발
7. 건축분야 전문 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
8.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
9. 건축문화 기반구축
10. 건축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선도시범사업
11. 건축정책기본계획 시행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진흥에 필요한 사항

[건축기본법 시행령] 제 3조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

1. 건축물에 대한 국민 교육과 홍보
2.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
3. 한옥의 보전 및 진흥
4. 건축물과 공간환경에 관한 기록자료 구축
5.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건축문화진흥을 위하여 의결한 사항

3) 제2차 국가건축정책의 비전·목표

1.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안전과 행복, 창조와 문화를 이끄는 건축”
- 목표 – 1. 행복한 건축실현
2.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3.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2.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 생활공간의 안전성 증진 : 생활안전과 관련된 건축물 규정 및 관리절차를 정비하고, 범국민적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계획 마련
- 생활밀착형 복지공간 체계 구축 : 다양한 연령층의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을 확충하고, 그 활용방안을 제시하며, 근린생활권 단위의 복지 체계 구축
- 건축물 리뉴얼 촉진 활성화 : 주민이 참여하고 전문가가 지원하는 공동체 활성화사업 등을 통해 지역내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만들고, 그 활용 모델을 개발
- 공공 건축 효율화 : 공공건축의 기획·발주 절차를 개선하고, 발주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건축서비스 산업 활성화 : 건축서비스업무 조달제도를 개선하고, 실무중심의 인력을 양성하며, 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녹색건축실현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건물 에너지 소비 효율화, 친환경 건축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녹색건축 활성화 추진
- 지역고유의 건축문화 창달 : 한옥을 실용화하여 보급하고, 건축자산의 가치 증진 및 한옥의 브랜드화를 통해 건축문화 기반의 관광산업 육성
- 국토경관 향상 : 경관가치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및 체계적인 경관관리 기반 구축
- 통일한국 비전제시 : 북한의 건축문화자산 및 미래 건축·도시방향 연구

3. 추진체계 및 역할 분담

- (국가) 법·제도 정비, 디자인 행정 프로세스 개선 등 계획의 실행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지원, 선도사업 추진에 중점
- (지자체)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역건축기본계획 수립·추진

4. 실행력 제고

- (성과측정) 각 전략별 실천과제에 대하여 매년 말 성과를 측정
- (대국민 공개) 계획 추진 현황, 추진실적 등 위원회의 재평가 결과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여 성과 환류 및 대국민 홍보
- (국회보고) 매 2년마다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 국회 보고



▲ [그림 1-7] 제2차 국가건축정책의 기본계획

4)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1.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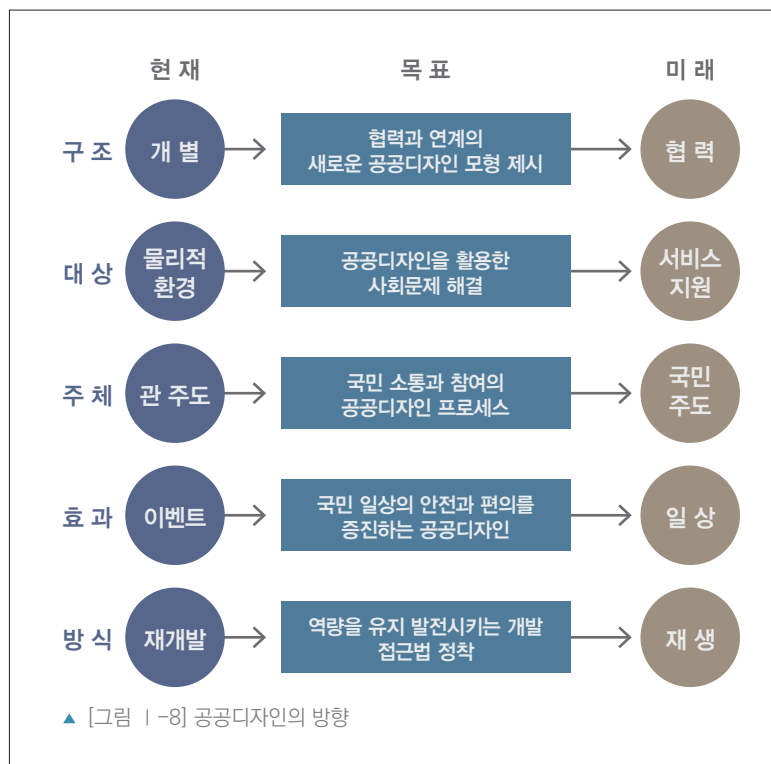
-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의 수립방향
- 건축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의 기본방향 및 비전·목표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국민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공공디자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였음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국가 차원의 법정계획으로서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의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방향을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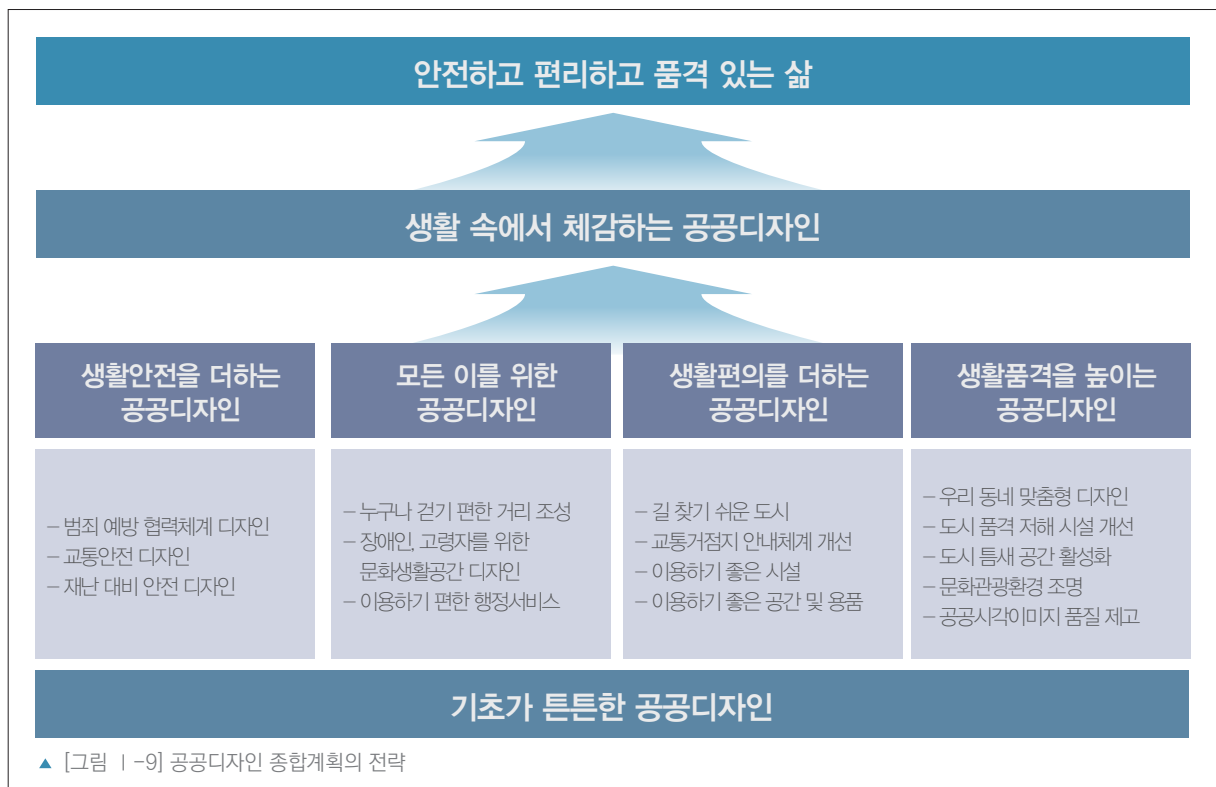


1. 계획의 배경

- 그동안 공공디자인은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부처, 기관마다 공공시설물 등의 배치 기준이 서로 달라서 협력·통합적 관점이 필요함
- 일회성·보여주기식 디자인에서 벗어나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어 왔음
- 이에 문체부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을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의 비전으로 제시

2. 계획의 비전과 목표

- 비전 - “안전하고 편리하고 품격 있는 삶”
- 5대 추진 전략
 - 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통합협력체계를 구성하는 ‘생활안전을 더하는 공공디자인’
 - 고령자, 장애인, 일반국민 등 모두가 이용하기 편리한 ‘모든 이를 위한 디자인’
 - 안내체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활편의를 더하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으로 바꾸는 우리 동네·도시·나라의 품격 ‘생활품격을 높이는 공공디자인’
 -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역량강화 및 R&D기반조성 ‘기초가 튼튼한 공공디자인’



3.2 관련 계획에 관한 분석

1) 법정계획

▼ [표 1-1] 관련 법정계획

계획명	근거법	공간적범위	시간적범위	계획개요
2020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국토기본법	부산광역시 김해시 양산시	기준연도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 광역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존의 공간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광역적인 차원의 도시계획 수립 · 광역도시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각종 정책방향을 체계화하고 도시별 인구 및 기능분담, 광역시설에 관한 장기계획 제시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정방향을 제시
			목표연도 2020	
2030부산 도시기본계획 (변경)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기존 계획과 차별화된 부산권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인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수립
			목표연도 2030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경관법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경관 기본구상 재정립, 경관기본계획 수립 · 중점경관관리구역의 설정·관리, 경관 실행계획과 가이드라인 정비 등
			목표연도 2030	
2020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장래의 사회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거지의 종합적인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생활권 계획 시범적 도입
			목표연도 2020	
2022 부산주택 종합계획	주택법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의 주택현황 및 주거실태 분석, 주택시장 변화와 전망, 주택수요 추정, 공급계획,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제시
			목표연도 2022	
202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건을 종합 분석하여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 우선순위 선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목표연도 2025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건축물의 실태 파악,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한 녹색도시 구현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 'GREEN UP CLEAN BUSAN'을 추진방향으로 삼고, 4대 추진전략별 12개 실행과제, 41개 세부사업을 제시
			목표연도 2022	
2030 부산광역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산광역시	기준연도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시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중 장기 전략계획 수립
			목표연도 2030	

2) 조례에 근거한 계획

1. 부산광역시도시디자인기본계획(2010)

- 근거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
- 목적 : 부산시 도시디자인의 미래상 및 지향점 도출, 풍요롭고 품격 높은 부산 실현을 위한 도시디자인 마련, 도시디자인 시행계획의 근간으로 활용
- 내용 : 도시경관 기본계획과 도시공간디자인 기본계획으로 나뉘 부산 도시 디자인에 대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
- 범위 : 부산광역시 행정구역전체
- 주관부서 : 건축정책과

2. 부산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 근거 :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목적 : 도시 내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내용 :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2007년)에 대하여 사회적 변화와 시민의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시균형발전 수정계획
- 주관부서 : 지역균형개발과

3) 비법정계획

1.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 목적 :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의 역사, 문화, 자연경관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자력수복형 종합재생 프로젝트」
- 대상 :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
- 내용 : 공간, 문화, 생활재생 등의 자력 수복형 복합재생
- 기간 : 10개년 사업(2011~2020년)
- 주관부서 : 도시재생정책과

2.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 목적 : 함께 어울려 살고 싶은 행복한 마을 - 공간기반조성, 주민역량강화, 마을경제력 증대
- 대상 : 도시 내 낙후마을
- 내용 : 주거·교육·문화·복지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사업
- 기간 : 2010~2018년
- 주관부서 : 도시재생정책과



3.3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위상

1. 「부산 건축기본계획」

-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건축정책계획으로서 부산광역시 건축·도시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을 구현하고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며 문화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임

2. 법에 근거한 관련계획과의 관계

- 「부산 건축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내 건축·도시 관련계획들의 계획기조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관련계획들이 건축·도시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짐

건축기본법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3. 조례에 근거한 관련계획 및 비법정 계획과의 관계

- 「부산 건축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로 정하는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계획되었으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짐
- 부산광역시와 자치구는 건축·도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5조 (교류·협력의 증진)

② 시장은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부산광역시 경관조례」로 정하는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의 목적과 부합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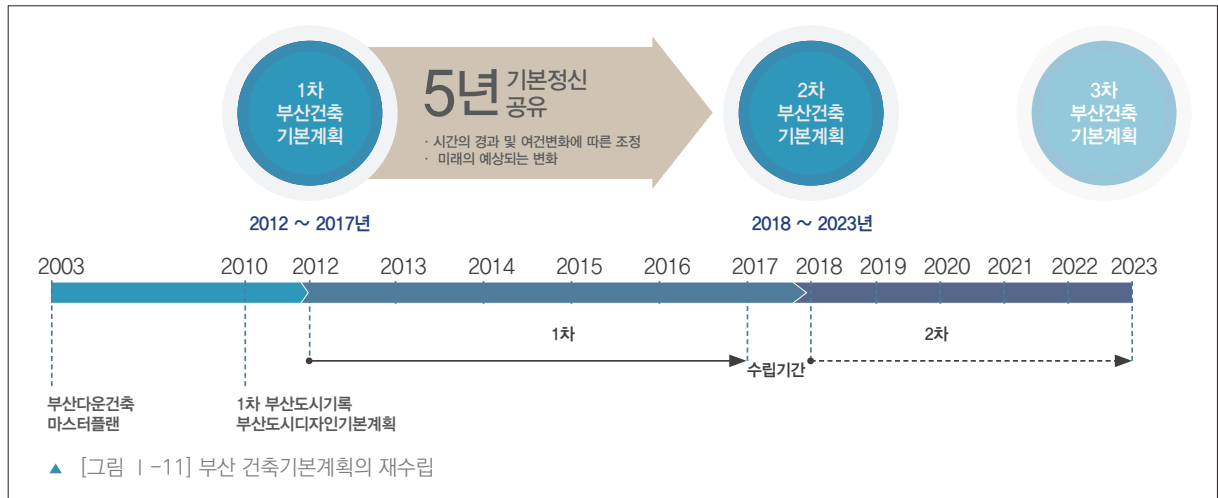
3.4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평가 및 재수립

1) 부산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

- 계획수립이후 사회적·물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현 시점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
-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및 관련 법안들과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유지 : 시간의 흐름과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수정 및 보완 필요

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2차 수립 시점 도래

- 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계획임
- 도시 및 건축에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부산광역시건축기본계획을 재수립 하여야 함



4. 계획의 수립절차 및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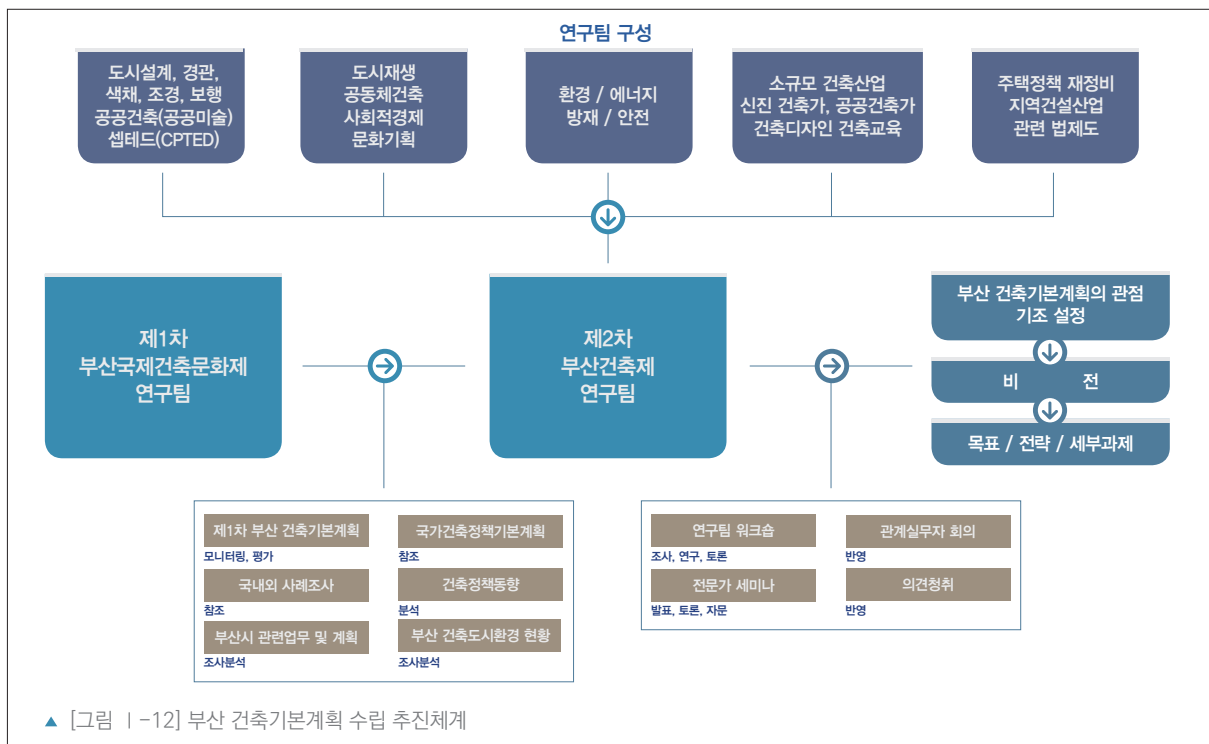
4.1 계획 수립절차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주체

-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시·도지사가 수립 (건축기본법 제12조(지역건축기본 계획의 수립 등))

2)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체계

- 시·도지사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시·도 건축정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제4조의 2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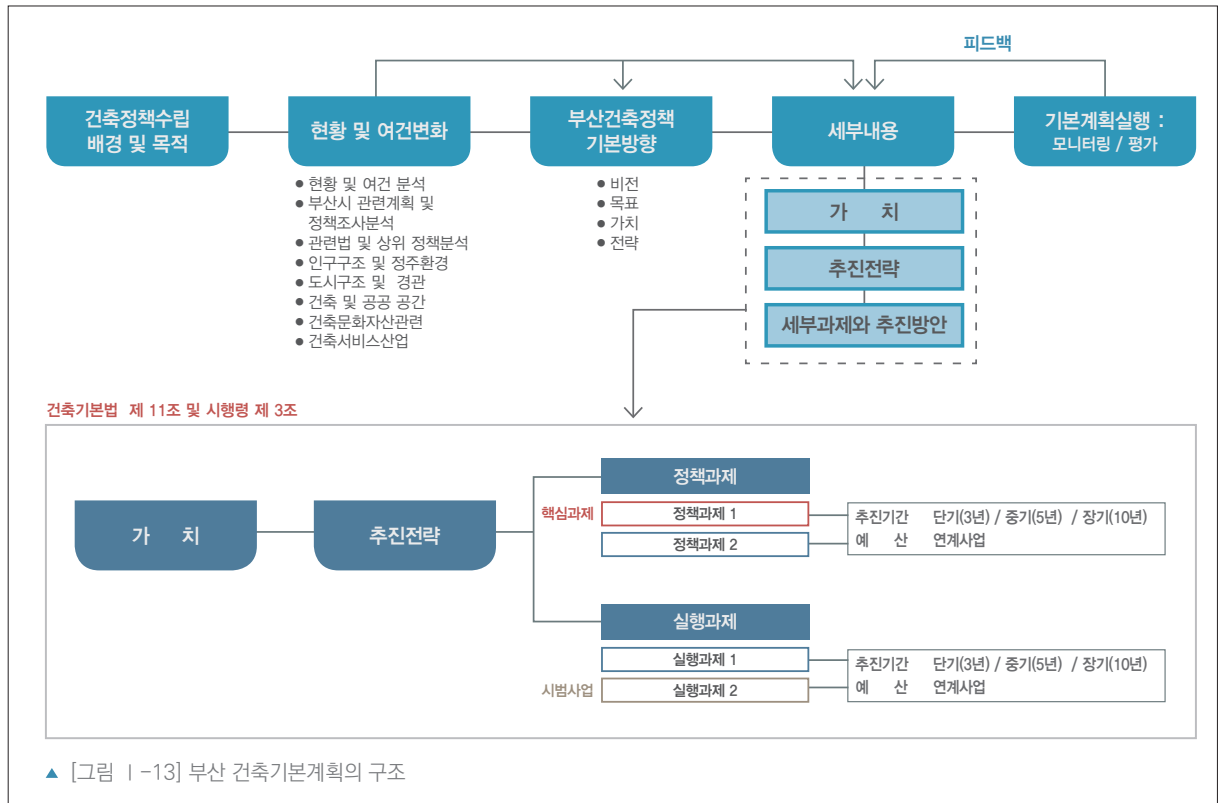


4.2. 계획의 구조

1) 계획의 구성체계

- 「부산 건축기본계획」은 최상위 비전, 그에 따른 목표, 그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과제들로 구성
- 비전(Vision)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지향점
- 정책목표 부산광역시 건축·도시정책의 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목표
- 가치 부산의 건축이 지향해야 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미 또는 덕목
- 추진전략 부산의 건축이 지향해야 할 가치를 이루기 위해 정책을 이끌어가는 방안

- 정책과제(Policy Task)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시행하여야 하는 정책
- 실행과제(Action Project) 추진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
- 핵심과제(Core Task) 예산, 시급성 및 파급력을 고려하여 정책과제 중 우선 추진 과제
- 시범사업(Pilot Project) 예산, 시급성 및 파급력을 고려하여 실행과제 중 우선 추진 사업



4.3 건축기본계획의 추진과정



■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부산시 건축정책 현황 및 분석

1. 여건과 패러다임 변화	036
1.1 국제 여건변화 및 이슈	036
1.2 국내 여건변화 및 이슈	038
2. 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 분석	040
2.1 서울시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0
2.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1
2.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2
2.4 강원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2
2.5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043
2.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2017~2021)	043
3. 해외사례	044
3.1 초국가적 정책사례	044
3.2 국가적 정책사례	044
3.3 통합적 도시정책사례	046
3.4 실천프로그램의 사례	047
4.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048
4.1 분석 목적	048
4.2 분석대상 및 방법	048

II. 부산시 건축정책 현황 및 분석

1. 여건과 패러다임 변화

1.1 국제 여건변화 및 이슈

1) 국제적 변화와 트렌드

-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영국, EU, 미국, 일본에서 2020년 및 2050년을 목표연도로 수립된 미래 전망보고서와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는 에너지, 고령화 사회, 세계화, 양성평등 사회, 기후 변화, 물 부족 문제 등이 있음
- 에너지 기반의 변화, 고령화 사회의 파장, 세계화에 따른 여파, 양성평등 사회로서의 재편,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의 일상화 등은 향후 건축분야에 다양한 정책 및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됨
 - 에너지 기반 변화 : 석유의존도 감소와 새로운 에너지의 등장, 풀뿌리 에너지정책의 형성 및 발전, 에너지 효율기술의 발전
 - 고령화 사회의 파장 : 건강, 경제, 직업노동의식의 변화
 - 세계화가 미치는 여파 : 산업, 경제, 정치의 다원화, 인재고도화, 서비스 산업의 발달, 개인화로 인한 사회 결속의 약화
 - 양성평등사회로의 재편 : 여성의 활동증대, 정신·정서적인 삶 추구
 - 기후변화와 물 부족 문제의 일상화 : 기후변화의 영향, 물 활용 기술의 진보

2) 유엔 해비타트 어반 아젠다(UN HABITAT III Urban Agenda) 채택

- 2016년 10월 유엔 해비타트Ⅲ 회의(제3차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가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Quito)에서 개최되었고, 향후 20년간 주거와 지속 가능한 도시에 관한 지구적 책임을 논의하여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를 채택하였음

새로운 도시의제(New Urban Agenda) 주요내용 요약

▼ [표 II-1]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	
서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비타트Ⅲ에서의 NUA 채택과 2050년까지의 도시화 규모 · 해비타트 회의의 역사와 도시의 역할, 그리고 NUA의 역할 · 관련 회의와 선언문에 대한 인정과 계승 ·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여 인정 · NUA와 SDGs의 연계 강조
우리 모두의 비전 (공유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권(Rights to the City : 모두를 위한 도시)을 보장하는 도시 · 모두에게 적절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도시 ·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
우리의 원칙과 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UA 채택 원칙에 대한 결의(경제, 사회, 환경적 포용성) · NUA를 통한 도시 패러다임 전환 약속(중앙-지방 파트너십,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한 거버넌스, 통합적·장기적 목표 설정, 투명한 재정과 회계)
행동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와 도시가 채택해야 할 보편적 가이드라인으로서 NUA 인정 · 각 국가의 상황, 역량, 관습을 존중하며, 같지만 다른 수준의 책임 원칙 확인 · 개도국과 특별한 어려움에 있는 국가, 그리고 취약계층에 특별한 관심 · 모든 수준의 정부와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촉구하는 NUA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의 비전이자 정치적 약속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

1.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환적 사명 공약

사회	· 사회적 포용성과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공공공간, 교통, 문화유산)
경제	·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도시의 번영과 기회(도시-농촌 연계)
환경	·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개발 · 취약성, 회복력, 센다이 프레임워크

2. 효과적인 이행

거버넌스	· 도시 거버넌스구조 구축 : 지원체계수립(중앙~지방~이행당사자)
도시계획	· 도시공간 개발계획 및 관리(교통 재해예방, 안전, 폐기물, 식량, 문화유산, 도농연계)
이행수단	· NUA구현을 위한 환경적 여건 지원(재정체계, 국제 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및 역량강화)

3. 후속조치 및 검토

보고서	· SDGs 점검 체계와 연계,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등 · 71차 UN총회에서 UN-Habitat의 지위와 역할 확인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 제안 · 2026년에 NUA 진행사항 점검 및 2036 해비타트Ⅳ 개최 약속
-----	---

4. 유엔 해비타트 어반 아젠다 요약



▲ [그림 II-1]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1.2 국내 여건변화 및 이슈

1) 국내적 변화와 트렌드

- 국제여건 변화 및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등 패러다임 변화로 국내 미래 메가트렌드는 세계화, 고령화, 에너지, 기후변화와 물 부족, 경제시장의 변화, 정치행정의 변화의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예측되고 있음
 - 세계화 : FTA 시장개방에 따른 경제통합, 지리적 경계와 조직경계의 약화,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의 증가
 - 고령화 : 삶의 질에 가치를 두는 시대, 비노동집약 사회 진입, 노년층의 재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산업 증대, 가족의 해체
 - 에너지 : 에너지 고효율산업구조로 전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급격한 성장, 석유대체기술의 발달
 - 기후변화 및 물 부족 : 물 부족은 식량의 부족을 가중, 기후·물 비즈니스 시장 성장, 기후변화 대응
 - 경제시장의 변화 : 체험적 소비 증가, 일터와 가정의 분리개념 약화, 여성 및 노령인구·장애인의 노동참여 보편화, 생체 인식기능 결합 시스템 시장의 보편화, 경제적 양극화 심화, 자본·인력이동 패턴의 변화, 도시 인프라의 변화 및 메가 시티 시대 도래
 - 정치 행정의 변화 : 정부기능의 변화, 대의 민주주의의 전환, 정부고유의 정보를 활용한 통제력강화의 시대, 남북관계개선
- 이러한 국내의 메가트렌드를 사회적 변화, 기술적 변화, 경제적 변화, 환경적 변화, 정치·경제적 변화의 5개로 구분하여 건축도시 분야의 흐름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 필요

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건축

국정목표 : 더불어 잘사는 경제

▼ [표 II-2]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더불어 잘사는 경제

전략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7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	복지부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기재부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6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재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8	소상공인·자영업자 역량 강화	중기청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산업부·미래부·국토부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40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 환경 구축	중기청

국정목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 [표 II-3] 정부 100대 국정과제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전략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3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복지부
	46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국토부
	47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 부담 경감	국토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54	미래 교육 환경 조성 및 안전한 학교 구현	교육부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55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	안전처
	56	통합적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현장 즉시대응 역량 강화	안전처
	59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환경부
	61	신기후체제에 대한 건실한 이행체제 구축	환경부
자유와 창익이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화부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부
	71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생활의 균형 실현	고용부

국정목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표 Ⅱ-4] 정부 100대 국정과제 -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략	번호	과제명	주관부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자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9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추진	국토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목표	전략	국정과제 (주관부처)
국민이 주인인 정부 (15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촘촘민주주의 실현	1. 권력의 철저하고 완전한 정산 (법무부)
	■ 전략 2 : 소중으로 통하는 평화로 대통령	5. 365의 국민과 소통하는 평화로 대통령 (행자부)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 전략 1 : 소중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4. 재벌 총수 일가 전형 폐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사회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공육 육신 (교육부)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화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26개)	■ 전략 1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74.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 (행자부)
	■ 전략 2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산업부·국토부·행자부)
	■ 전략 3 : 사람이 돌아오는 농식품	81.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농촌인촌 조성 (농식품부)
	■ 전략 1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86.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략적 조기 전환 (국방부)
	■ 전략 2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90. 한반도 신경제지대 구상 및 경제통일 추진 (통일부)
	■ 전략 3 : 국제협력에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95.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4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96.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부)
	■ 전략 5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97. 주민 4과목의 담당자 협력으로 추진 (외교부)
	■ 전략 6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98. 동북아협력의 책임공동체 형성 (외교부)
	■ 전략 7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99. 국익을 증진하는 경제외교 및 개발협력 강화 (외교부)
	■ 전략 8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100.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외교부)
	■ 전략 9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101.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부)
	■ 전략 10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102.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부)
	■ 전략 11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103.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부)
	■ 전략 12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104.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32개)	■ 전략 1 : 국민주권의 촘촘민주주의 실현	1. 권력의 철저하고 완전한 정산 (법무부)
	■ 전략 2 : 소중으로 통하는 평화로 대통령	5. 365의 국민과 소통하는 평화로 대통령 (행자부)
	■ 전략 3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8.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 (행자부)
	■ 전략 4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13.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법무부·경찰청·감사원·국정원)
	■ 전략 1 : 소중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부)
	■ 전략 2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23.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공정위)
	■ 전략 3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24. 재벌 총수 일가 전형 폐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 (공정위)
	■ 전략 4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부)
	■ 전략 5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중기청)
	■ 전략 1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42.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 (복지부)
	■ 전략 2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48.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복지부)
	■ 전략 3 : 국민안전과 생활을 지키는 안심사회	50. 교실혁명을 통한 공공육 육신 (교육부)
	■ 전략 4 :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63. 노동존중 사회 실현 (고용부)
	■ 전략 5 :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문화국가	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문화부)
	■ 전략 6 :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96. 국민이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국토부)

100대 국정과제

국민과의 약속,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 [그림 Ⅱ-2]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039

2. 타 지자체 건축기본계획 분석

2.1 서울시 건축기본계획(2016~2020)

- 3대 목표, 6대 전략, 13개 세부과제, 31개 세세부 과제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기존의 개발된 공간의 질적 개선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정해진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융통성을 갖는 방식으로 제시함
- 서울시 건축기본 계획은 하나의 사건이나 사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기 보다는 그러한 해결책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제안을 함
- 서울시 건축기본계획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즉, 조례 개정, 제도 정비, 가이드라인 제시, 책임자 지정, 업무 프로세스 제안, 데이터 구축 프로그램 등을 제시함

▼ [표 II -5] 서울특별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품격있는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하고 창의적인 열린 공간 서울		
3대 목표	시민건축문화 축적과 공유	창의적인 건축서비스지원 시스템 구축	행복하고 지속가능한 건축공간환경 실현
6대 전략 및 14개 실천과제	1. 건축문화 확산 기반 구축	3. 건축디자인 품질향상 기반 구축	5. 안전하고 행복한 건축공간환경 조성 시스템 개선
	1.1 건축문화 지원체계 마련	3.1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	5.1 365안심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1.2 시민의 건축문화 이해증진	3.2 민간건축 디자인 품질향상 지원 시스템 구축	5.2 10분동네 사회서비스공간 시스템 구축
	1.3 서울건축문화 자산축적		
	2. 시민이 만드는 건축문화자산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기반 구축	6. 지속가능한 녹색공간환경 시스템 구축
	2.1 지역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한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	4.1 건축서비스 공정거래 기반 구축	6.1 건축 및 공간환경 재생지원 프로세스 마련
	2.2 시민참여형 지역문화 공간 조성	4.2 건축서비스산업 지원시스템 구축	6.2 녹색건축물 및 공간환경 시스템 구축

2.2 경기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 3대 목표, 9대 전략, 30개 세부과제
- 경기도는 “지역과 상생하는 건강한 경기건축”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건강한 지역건축문화 육성,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는 일상속의 건축, 상생하는 건축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적으로 함
- 계획의 범위는 2018~2022(5개년)

▼ [표 II-6] 경기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지역과 상생하는 건강한 경기건축		
목표	건강한 지역 건축문화 육성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 일상 속의 건축	상생하는 건축생태계 조성
추진전략	건강한 건축문화 증진	생활밀착형 리모델링 활성화	동반성장을 위한 탄소저감형 녹색건축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퇴하는 지역을 살리는 Key Architecture 조성 - 도민 건축문화 이해증진 - 지역과 상생하는 건축문화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이 만들어가는 커뮤니티형 공공건축 - 빈집 및 소규모 건축물 관리 방안 마련 - 노후건축물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 유휴 공공공간 관리와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활성화 - 그린 리모델링 기반 구축 - 녹색건축의 민간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추진전략	경기건축 특성화	커뮤니티를 살리는 지역재생	민간협력을 통한 신기술 기반마련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접경지역 건축 현안 대응마련 - 창의적 건축구역 관리 및 경관개선 - 경기건축 오픈하우스 운영 및 경기건축 브랜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신진건축가 대상 지역 코디네이터 양성 - 커뮤니티형 사회적 주거 활성화 - 지역사업 디자인 컨설팅 및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건축산업 클러스터 조성 - 민간건축물 품질개선 관리체계 구축 - 일자리 창출형 건축산업 생태계 지원
추진전략	아름다운 건축자산 발굴 및 활용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건축	선진적인 공공 건축문화증진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름다운 경기건축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정보공유 - 시군 협력형 건축자산 콘텐츠 활성화 - 지역특성을 발현하는 집합적 건축자산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안전체계 구축 - 장기 방치 건축물의 관리체계 구축 - 경기공공디자인 개발 및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건축 공간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개선 - 경기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 - 공공건축사업 DB 구축 및 입주후 평가체계 구축 -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 및 시민중심 디자인사례 워크샵

2.3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2016~2020)

- 3대 목표, 5개 핵심 전략과제, 15개 실천과제
- 세종시의 건축·공간 개선을 위해 “상생과 소통이 있는 스마트도시, 세종”을 비전으로 설정, ‘행복하고 안전한 삶터 조성’, ‘신구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창출’, ‘건축산업의 진흥과 친환경 세종 구현’ 등 3대 정책목표 선정

▼ [표 II-7] 세종특별자치시 건축기본계획

비전	상생과 소통이 있는 스마트도시, 세종		
3대 목표	행복하고 안전한 삶터조성	신구가 조화로운 문화도시 창출	건축산업의 진흥과 친환경 세종 구현
5개 전략 및 15개 실천과제	전략 1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조성	전략 3 건축문화기반구축	전략5 건축행정개편 및 서비스산업 육성
	1.1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 환경 조성	3.1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을 위한 기반 마련	5.1 건축행정 효율화
	1.2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	3.2 한옥건축 활성화	5.2 지역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1.3 건축물 실내공기질 강화	3.3 한옥마을 조성사업 추진 지원	
	전략2 시민행복주거환경조성	전략 4 도농 상생 경관창출	
	2.1 주거환경 개선 지원	4.1 경관 향상을 위한 행정기반마련	
	2.2 노인주거복지시설 조성	4.2 세종시 경관정체성 강화	
	2.3 유휴공간을 활용한 귀농·귀촌 지원	4.3 건설지역과 주변지역 간 경관 격차 해소	
	2.4 읍면지역 소규모 커뮤니티시설 조성		

2.4 강원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 4대 목표, 9개 전략, 세부과제 31개, 실천과제 88개
- ‘녹색쉼터’와 ‘건강한 건축문화’라는 주요 키워드를 조합하여 강원도 광역 건축기본계획의 비전설정

▼ [표 II-8] 강원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자연과 공존하는 녹색쉼터, 건강한 건축문화 강원			
4대 목표	삶이 풍요로운 행복한 건축·도시	자연과 소통하는 건축·도시	올림픽유산과 창의적인 건축문화 진흥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건축산업육성
9개 전략	전략1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도시 조성	전략3 녹색건축 성장기반구축	전략5 창조적 건축문화 육성과 가치향상	전략8 건축인력양성 및 지역 경기 활력 제고
	전략2 품격있는 주거환경조성 및 건축복지실현	전략4 강원도형 녹색건축 도시보급 및 확산	전략6 강원도 한옥산업 구축 및 활성화	전략9 건축품질 향상 및 기능강화
			전략7 지속가능한 올림픽 유산 창출	

2.5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2016~2020)

- 충청북도 관련 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비전, 충청북도의 주요 건축자원, 퍼실리티에서 제시된 주요 미래상, 건축기본계획에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의 미래상을 ‘자연과 느낌의 건축미학 - 충북’으로 제시함
- 주민참여, 건축자원, 건축환경, 건축행정, 녹색건축 등 5대 분야를 설정하여 전략을 제시함

▼ [표 II-9] 충청북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자연과 느낌의 건축미학 - 충북				
5대 분야	주민참여	건축자원	건축환경	건축행정	녹색건축
5개 전략	주민이 만드는 건축문화조성	아끼고 관리하는 건축자원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	공감하는 건축 행정실현	태양과 함께하는 지속가능 건축
	건축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우수건축물, 건축문화재에 대한 자부심 고취	건축환경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	건축문화와 녹색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행정 마련	녹색산업과 연계된 에너지절약형 건축물

2.6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2017~2021)

- 3대 목표, 6개 추진전략과 12개 실천과제로 구성
- 전라남도의 풍부한 자연경관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건축으로 빛나는 생기 넘치는 생명의 땅 전남”을 비전으로 설정
- ‘자연과 지역성을 배려한 건축 조성’, ‘건축행정 및 디자인 관리역량 강화’, ‘생활공간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으로 3대 정책목표 선정

▼ [표 II-10] 전라남도 건축기본계획

비전	건축으로 빛나는 생기 넘치는 생명의 땅 전남		
3대 목표	자연과 지역성을 배려한 건축조성	건축행정 및 디자인관리역량강화	생활공간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
6개 전략 및 12개 실천과제	전략1 지역정체성을 살린 건축디자인 기준개발	전략3 지역공공건축디자인 관리체계구축 및 전문인력육성	전략5 인구고령화에 대응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안선, 하천, 산맥, 도서 등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건축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 향상 및 공공자산 관리	초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무장애생활, 헬스케어 디자인 도입, 빈집 정비
	전략2 재해·재난에 안전한 친환경 녹색건축 확대	전략4 건축행정혁신 및 마을단위의 건축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6 지역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건축문화진흥사업 추진
	재해·재난에 안전한 전라남도 환경 친화적 녹색건축물 확산기반 마련	건실한 건축행정 체제로 개편하고 지역건축산업의 발전	한옥, 근대건축자산, 현대 우수 건축물의 보전관리 및 활용

3. 해외사례

3.1 초국가적 정책사례

1) EU : 유럽이사회

- 1994년 유럽 건축가평의회(ACE)에서 유럽 건축백서 발간
- 2001년 유럽이사회에서 ‘건축의 질’에 대한 결의안 채택, 회원국에서 실행 요구
- 2004년 ACE에서 유럽 건축 정책집 ‘건축과 삶의 질’ 발간
- 유럽의 건축정책 추진현황
 - 유럽의 건축정책은 197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지난 20여 년간 37개 국가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 유럽 건축정책포럼에 소속된 37개 국가 중 핀란드, 프랑스 등 16개 국가가 건축정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 문서로서 법령 제정 또는 계획 수립
- 유럽 건축정책의 3가지 유형
 - 〈법률제정〉을 통해 건축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는 프랑스와 스웨덴으로 건축의 공공성 및 문화적 가치에 대해 강력한 규범인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 지원기구 또는 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 추진
 - 〈종합정책계획 수립〉유형은 유럽에서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 12개국이 채택하여 종합 정책계획 수립
 - 〈부분정책〉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국가차원에서 법률 또는 종합정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니나 건축위원회 또는 전담지원 기구를 중심으로 건축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출판물을 발간하는 형태로서 키프로스 등이 있음

* 참고자료 : auri brief No.90, 유럽 건축정책 동향과 시사점, 김영현, 2014.6.15.

3.2 국가적 정책사례

1) 네덜란드

- 1991년 최초로 건축정책 수립 - “Space for Architecture”
- 주요한 방향성
 - 양질의 공간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건축관련 기반시설과 제도를 유지하는 것
 - 통합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품격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
 - 좋은 디자이너와 클라이언트를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창조적인 발주 방식 개발
 - 4년 단위의 건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차수별로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 관리
 - 선례가 없는 건축정책을 약 25년 동안 유지해 오면서 그 내용적 범위와 대상 또한 점진적으로 확장
 - 관계된 부처 및 민관의 협업 파트너들도 지속적으로 확대

▼ [표 II-11] 네덜란드 국가 건축정책

정책	내용	
1차 건축정책 (1991~1996)	건축을 위한 공간	건축부문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설확충에 초점 건축문화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기관 및 인프라 조성
2차 건축정책 (1997~2000)	공간의 건축	건축관련 영역의 확장
3차 건축정책 (2001~2004)	네덜란드 만들기	건축의 공공성 확보에 초점 시범프로젝트 선정 10개의 대형 모델
4차 건축정책 (2005~2008)	공간계획과 문화	문화정책과의 통합 3개를 추가하여 13개의 모델 선정
5차 건축정책 (2009~2012)	건축과 공간디자인의 비전	건축을 비롯한 공간디자인 분야의 문화적 가치와 역할을 담은 전략계획
6차 건축정책 (2013~2016)	디자인 역량의 강화	5차 건축정책의 실행계획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모델이 확장되고 전파됨 창조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지원시설과 기금의 구축이 정책상의 변화

2) 덴마크

- 2014년 덴마크는 시민의식을 높이고 건축물의 환경적·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촉구하는 건축 정책을 시행 : “사람이 우선이다(Putting People First)” 발표
- 사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축을 향한 정책 수립
- 덴마크의 “사람이 우선이다” 정책은 64개의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시행
- 시민들의 건축에 대한 교육부터 건축을 통한 지속가능성 촉구, 삶의 질 향상, 덴마크 건축 산업의 국제시장 진출 가능성 등의 여러 포커스를 갖고 있음
- Marianne Jelved 덴마크 문화부 장관 : “삶의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건축적 가치와 이상향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살기 쾌적하며 삶에 활기를 부여하는 환경 조성의 의무가 있으며 성장, 에너지, 이민 등의 사회적 과제들을 건축을 통해 완화하는 방법 또한 강구해야 한다”



▲ [그림 II-3] 덴마크 건축정책(2014)

3) 프랑스 국가건축전략 수립

- 건축이 국민의 일상생활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정책에서 건축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기인
- 건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건축교육 강화
- 도시재생이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시대요구에 건축가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혁신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 포함

- 2015국가건축전략 수립

– 6가지 전략 방향과 30개 조치를 담은 ‘국가건축전략’ 공식 발표

- ① 건축에 대한 인식을 높이자
- ② 20세기 이후 현대건축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행위를 장려
- ③ 건축의 교육과 실무 역할을 명확히 하고 그와 동시에 연계를 강화하자
- ④ 건축의 경쟁력 강화 : 건축정책을 지역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부(DRAC)의 건축분야 역할을 강화하고 건축도시환경위원회(CAUE)의 역할을 재정립 하고자 함
- ⑤ 건축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건축분야의 변화를 꾀함
- ⑥ 실험적 건축을 허용하고 그 문화적 가치에 주목

*출처 : 건축과 도시공간 Vol.25-(2017 봄)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의 수립, 현황과 전망 pp.40~48 요약



▲ [그림 II -4] 국가건축전략 (Stratégie Nationale pour l'Architecture) 보고서

3.3 통합적 도시정책사례

1) 영국 런던 : The London Plan

- 2008년 런던의 향후 15~20년을 대비한 공간발전전략
- ‘시민들이 살기 더 건강하고 좋은 도시 만들기’ 등 6개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분야의 주제별 정책, 환경을 고려한 3분야의 포괄적 정책 수록



▲ [그림 II -5] 펄프랭트관의 국가건축전략 발표 장면, 2015.10.20., 파리벨빌국립고등건축대학

2) 미국 뉴욕 : PlaNYC & OneNYC

- 2007년 지구의 날에 향후 25년을 대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책계획
- 2015년 ‘더 강하고 공정한 도시’를 지향하는 ‘OneNYC’ 계획으로 전환
- 뉴욕의 ‘OneNYC’는 기존의 ‘지속가능성 계획(2007)’과 ‘PlaNYC(2008)’를 통합하여 도시기본계획 내에서 하나의 목표체계로 제시하고 있음
- ‘OneNYC’의 미래상은 ‘성장하고 번영하는 도시(Our Growing, Thriving City)’와 ‘정의롭고 공평한 도시(Our Just and Equitable City)’, ‘지속가능한 도시(Our Sustainable City)’, ‘회복력 있는 도시(Our Resilient City)’로서, 지속가능성을 하나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림 II -6] 영국 The London Plan

3) LA : ‘The Sustainable City pLAn’

- 도시기본계획과는 별도의 지속가능한 도시계획(The Sustainable City pLAn)을 시장집무실에서 직접 수립하여 평가하고 있음
- 목표연도는 2035년으로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매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하는 모니터링을 실행하고 있음
- 환경과 경제, 형평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 지향
- 2015년 현재의 현황을 진단하고 단기 2017년, 장기 2025년과 2035년의 미래상과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소부문을 고려하여 총 33개의 지표를 설정



▲ [그림 II -7] 미국 뉴욕 : PLANYC&ONENYC

4) 일본 도쿄 : New Tokyo, New Tomorrow, 2020

- 도쿄도는 향후 도정 및 구체적인 정책 전개를 보여주는 새로운 4년의 실시 계획으로서 도민을 퍼스트로 만드는 「새로운 도쿄 2020년을 위한 실행 계획」을 2016년 12월에 책정하였음
- 도민 FIRST(퍼스트)의 관점에서 3개의 도시목표를 실현하고 새로운 도쿄를 실현
- 새로운 도쿄는
 - ①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쿄. 희망을 품고 활발한 삶을 살기
 - ② 성장을 계속하는 지속가능한 도쿄
 - ③ 일본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엔진으로 전 세계에 빛나는 도쿄
- 도쿄의 3가지 도시목표
 - 안전한 도시 : 도쿄 시민의 생활과 자산을 모든 종류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역동적이고 변화한 도쿄를 건설
 - 다양한 도시 : 다양성을 포용하는 도쿄를 창조해 나가며, 모든 사람이 생동감 있고 사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친절과 따뜻함으로 가득 찬 도시.
 - 스마트 시티 : 글로벌 메가시티와 일본의 경제를 주도하는 자본과 엔진으로서 거대 도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간 국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쿄 창조

*출처 : <http://www.metro.tokyo.jp/english/about/plan/index.html>



▲ [그림 II-8] 일본 New Tomorrow, 2020의 홈페이지 및 보고서

3.4 실천프로그램의 사례

1) 일본 구마모토 아트폴리스

- KAP를 통한 점-선-면의 점진적 개선
- 커미셔너 제도를 통한 협치
- 건축물의 문화자원화 : 미래에 물려줄 건축유산의 창조
- 대내외적 홍보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2) 미국 컬럼버스

- 열악한 교육 및 생활환경 개선의 필요성
- 민간 기업체가 재정 지원하는 우수 건축물 창출 프로그램(Architecture Program)으로 점진적 도시환경 개선 전략



▲ [그림 II-9] 우수 건축물 안내표지판, 미국 컬럼버스

4.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4.1 분석 목적

-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성과 분석을 통하여 미진했던 사업이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연계사업 도출

4.2 분석대상 및 방법

-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과제 및 사업을 대상으로 2013~2016년 부산시 시정백서 및 실·국별 정책 검토를 통해 추진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파악
- 현재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기준 미비로 부산시의 여건 변화 및 현황 그리고 이슈를 고려하여 연계사업 도출

비전	시민의 건축·품격있는 부산					
목표	생활경관도시 산과 바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부산건축 실천		녹색정주도시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건축기반 강화		건축문화도시 창의적 건축문화 육성과 건축서비스의 선진화	
추진 전략	가치 1 공공성	일상공간의 생활편의적 공공성 개선	가치 4 사회성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정주환경 조성	가치 7 안전성	통합과 협치의 도시 건축도시행정시스템
	가치 2 심미성	자연과 지역성을 배려한 매력적 도시경관	가치 5 지속성	지역밀착의 지속가능한 통합적 도시재생 추진	가치 8 문화성	문화시스템으로서의 도시건축
	가치 3 역사성	미래 세대와 함께할 지역건축자산의 보전과 창출	가치 6 환경성	녹색건축에 기반한 생태적 도시성장	가치 9 경제성	지시경제시대에 맞는 건축산업시스템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및 여건변화 분석						

▲ [그림 II-10]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내용 분석

4.3 분석결과

- 45세부 과제(139 사업)중 실행, 부분실행, 미실행은 각각 54개, 57개, 28개임
- 이중 미실행 과제에 대해서는 원인을 살펴보고 폐기하거나 일부 수정하여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 반영
- 진행 중인 과제는 연속적 차원에서 내용을 승계하여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함

목표1. 생활경관도시 : 산과 바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부산건축실현

▼ [표 II-12]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전략			세부과제	실행사업
S1 공공성	일상공간의 생활 편의적 공공성 개선	정책 과제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공공건축물 우수 디자인 확보를 위한 방안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 및 도시활성화 거점 형성
			도시 보행 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자전거 운행성 개선	가로변 연접 전면공지/공개공지의 조성 기본방향 설정
				전면공지/공개공지 현황조사 및 마스터플랜 작성
				근린데마가로의 발굴, 보존 및 활성화
				부산광역시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 유도
			약자와 소수에게 친근한 건축과 도시 공간	부산시 복지도시계획 조례 수립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설계 가이드라인 수립
				‘부드러운 도시(soft city)’ 시범지구 지정
		실행 과제	생활환경 Clean & Green 프로젝트	거브넨스를 통한 생활환경 저해요소 발굴 및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생활환경 Clean & Green 주민협정제도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기업협정제도 수립 및 시범사업 실시
			동네골목가꾸기 프로젝트	주거지 주차현황 분석, 사례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
				주거지 주차문제해소를 위한 (가칭)녹색주차문화기금 설립 및 운용
				단독주택지역 그린주차사업
				소규모 블록형 공용주차장 사업
S2 심미성	자연과 지역성을 배려한 매력적 도시경관	자연지형 및 토지이용을 고려한 도시형태 (높이/스카이라인) 관리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모니터링 및 평가	
			수변구역별 건축물 높이관리 계획	
		도시 인프라를 포함한 공간 환경 전반에 대한 공공 디자인 적용	협력적 추진체계구축 : 도시인프라경관 TF 구성	
			가로시설물 경관 현황조사 및 개선 모니터링	
			도시기반시설 경관 현황 및 개선 모니터링	
			항만시설물 경관 현황 및 개선방안 수립	

추진기간				과제구분				추진사항		
핵심 과제	단기	단기	장기	연구 과제	사업 과제	시범 사업	제도 개선	추진 여부	추진부서	사업
	○						○	△	건축주택	2015 부산시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및 건축가 선정
	○	○					○	△	건축주택	건축사협회/건축가협회 등과 논의 부산다운 건축상
	○	○	○	○			○	○	건축주택 도시재생	다수의 생활문화센터 및 규모별 체육시설 신설
	○						○	△	도시정비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건축사업에서 부분시행
	○			○				×	도시정비	공개공지 관리실태조사(감사관실)
		○	○		○			○	자치행정담당관실 철도시설과 도시재생	부산 1000리길 조성, 부산그린레일웨이 조성, 산복도로 이바구길
		○	○				○	○	교통운영	자전거이용시설 정비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자전거도로 개설 및 설치(정비) 자전거이용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	○	다복동사업추진단	주거복지와 연계(다복동 사업)
	○			○				△	도시경관	2017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				○				
	○			○				△	도시경관	부산시 공공디자인 공모전
		○				○	○	○	도시재생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	○			○	○	△	도시경관	금사동 보림팍토피아
V	○			○				○	도시재생	단독주택지의 주차문제 교통국 연계 그린주차사업
V	○	○					○	×		
V	○	○			○			△		
V		○	○		○			×		
	○			○				△	건축주택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지정 시행지침
		○	○	○				×		
		○	○				○	△	도시경관	2015 도심지 그린용벽디자인 개선사업 2015 도시기반시설 현황조사
	○	○		○				△		
	○	○		○			○	△		
		○	○	○			○	△		

목표1. 생활경관도시 : 산과 바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는 부산건축실현 [표 계속]

▼ [표 II-12]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_ 계속

전략			세부과제	실행사업
S3 역사성	미래 세대와 함께 할 지역건축 자산의 보존과 창출	실행 과제	입지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설정을 통한 경관특성 강화	경사지 명품마을 조성
				특별건축구역 도입을 통한 수변명품공간 조성
				어촌, 어항, 도서 생활문화경관 관리 및 특성화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도시색채조절과 품격 있는 야간경관 관리를 통한 부산 특유의 경관연출		어번 컬러링(Urban Coloring) 사업
				어번 라이팅(Urban Lighting) 사업
				색채시범마을 평가 및 확산
				백만불 야경 조성사업
	미래 세대와 함께 할 지역건축 자산의 보존과 창출	정책 과제	역사 문화적 건축물/ 장소 보존 및 지원	근대문화자산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근대건축문화자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영화촬영장소의 관리 및 명소화
			달동네, 재래시장 등 생활문화자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생활문화자산에 대한 이야기 발굴 및 기록화
				생활문화공간의 네트워크 구축
				부산시 고유의 생활문화지구 조성
				장소형 콘텐츠 포털 운영(부산도시건축 가이드앱 연동)
		실행 과제	근대문화특화구역 지정 및 명소화	근대문화특화구역 대상지 발굴 및 관리계획 수립
				근대문화특화구역 조례 제정
				근대문화특화구역 지정 및 정비사업
			건축주제(테마)공원 조성	시민공원 폴리 프로젝트
				어린이 건축공원
				도시생태관

추진기간				과제구분				추진사항		
핵심 과제	단기	중기	장기	연구 과제	사업 과제	시범 사업	제도 개선	추진 여부	추진부서	사업
		○		○		○		△	도시재생	경사지 마을 도시재생사업
		○		○			○	△	구·군	자연친화적인 하천 환경 복원
			○	○		○		○	도시경관과	청사포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V			○	○			○	○	도시경관과	부산시 도시색채계획
V			○	○			○	○	도시경관과	2016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북항대교, 광안대교 야간조명 외
V	○	○		○		○			도시재생	대청동/망양로일대 시범마을 조성
V	○	○		○		○		○	도시경관과	관문경관 및 심볼릭한 시설물 야간경관 조명사업
	○			○				△	관광사업	2017 동남권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			○			○	△	도시재생	피란수도 부산의 건축문화자산 유네스코 등재 노력
		○		○	○		○	○	영상콘텐츠사업	2017 부산진구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의 관광자원화
			○				○	△	서부산개발기획과	서부산권 인문문화자산 발굴 연구 실시
	○			○				△	도시재생	부산 도시재생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진행 중
		○					○	△	도시재생	이바구공작소, 사상 생활사 박물관, 청자빌딩의 생활문화센터화 진행
	○			○	○			△	관광진흥 경제기획	2016 글로벌 복합문화공간
V	○			○				○		근현대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V	○						○	○		
V						○		○	도시재생	우암동 소막마을 근대역사문화공간 신청
	○							×		건축주제 공원 변경 필요
		○						×		
			○					×		

목표 2. 녹색정주도시 :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기반 구축

▼ [표 II-13]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전략			세부과제	실행사업
S4 공공 정주	공동체가 다시살아나는 정주환경 조성	정책 과제	산복도로 르네상스 등 자력수복형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통합형 마을만들기 지원조직 구축
				마을 공동 기반시설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수립
				용도쇠퇴 건축물/공간 활용방안 수립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정주성/경관성 개선사업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및 경관 개선방안 수립	노후 공동주택 개선시범사업
				노후 공동주택 개선시범사업
		실행 과제	빈집 재고 활용을 위한 〈드림 홈 트러스트〉	빈집 신탁회사 〈드림홈 트러스트〉 설립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빈집 활용 반값하숙집 및 순환형 주택
				상가신탁을 통한 원도심 재생
			저층주거지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다목적 복합 프로젝트	저층 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유형의 개발방안 연구
				살기 좋은 마을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점진적 개선방안 연구
				저층 주거지의 개선을 담당하는 마을닥터(부산 공공건축가) 컨설팅 지원
				지역밀착형 부산형 “주거서비스기동센터” 설립 지원
			부산다운 전통 스타일·전통 공간 형성 방안	공동주택단지 내 한(韓)스타일 공간 마련
				시범사업추진방안 수립
				한(韓)스타일 형성구역 : 동래읍성 역사문화시범구역
S5 지 속 성	지역밀착의 지 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정책 과제	도심부발전계획 : 도심재생 마스터플랜 수립	원도심 재생 전략계획 및 마스터플랜 수립
				재생 유형별 기법 및 가이드라인 제시
				원도심 재생 시범사업 도입
			커뮤니티 뉴딜 정책 수립	커뮤니티뉴딜 기본계획 수립(기 추진중)
				지역 커뮤니티 지원 및 인적역량 강화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커뮤니티뉴딜 Test Bed 사업추진
			도시건축의 방재성 제고를 통한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부산지역 맞춤형 저류조 구축 및 침수 예방 시스템 대비
				도시 안전을 위한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 도시맵(City Map) 구축

추진기간				과제구분				추진사항		
핵심 과제	단기	중기	장기	연구 과제	사업 과제	시범 사업	제도 개선	추진 여부	추진부서	사업
	○					○	○	△	도시재생	(재)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				△	도시정비	2012~2017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소 추진 중
	○			○				△	도시정비	부산시와 상수도사업본부, 경찰청의 협업을 통해 범죄나 화재 등의 각종 사회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빈집정보시스템' 도입
	○	○			○		○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역량강화사업〉 실시
	○							○	건축주택	2017 노후공동주택 주거환경 및 경관개선 방안 수립(좌천 아파트)
		○	○					○	건축주택	구조안전 보강사업실시
V	○					○		×	도시정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017.2.8. 제정
V	○	○			○			○	도시정비	햇살등지사업, 새마을사업
V		○	○		○			×		
	○			○				○	도시재생	2012 커뮤니티 뉴딜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			○				○	도시재생	각 지자체 공동체 활성화사업 및 도시재생사업
		○				○		○	건축주택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총괄계획가
		○	○			○		○	도시재생	2017 이동 마을지기사무소 <다복동 마차> 운영
		○		○			○	×		한옥마을 조성조례 없음
		○		○			○	×		매축지, 우암동과 같은 특색 있는 주거형태를 기록, 보전하는 것이 필요함
			○			○		○	동래구	
	○							△	도시재생	2015.11.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	도시재생	2015.11.3.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						△	도시재생	중구, 영도구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			○				○	도시재생	2012 커뮤니티뉴딜 계획수립
	○	○			○			○	도시재생	2012 슬로시티 협력도시
	○	○	○		○			○	도시재생	2015 (재)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운영
		○	○		○			○	도시재생	부산시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
		○	○	○			○	○	녹지정책	2013 저영향개발기법(LID)이 도입된 부산시 최초 신개념 도시재생형 쌈지공원 준공
	○	○		○	○			△	재난안전	2017 지역재해 및 인적재난 도시맵 구축

목표 2. 녹색정주도시 : 사회적·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건축기반 구축 [표 계속]

▼ [표 II-13]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_ 계속

전략			세부과제	실행사업
S5 지 속 성	지역밀착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정책 과제	지속가능 리모델링 활성화 : 공동주택 친환경 녹색리모델링 활성화	리모델링 활성화방안 협력연구
				녹색리모델링제도도입 및 지역업체 육성
				공동주택 녹색리모델링 유형별 시범사업 실시
		실행 과제	부산형 도시 재생 시범사업(가칭) “부산형 행복타운” 계획 및 실행	(가칭)“부산형 행복타운” 사업지 선정 및 기초조사
				(가칭)“부산형 행복타운” 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사회적 자본의 형성
				(가칭)“부산형 행복타운” (커뮤니티뉴딜 Test Bed) 사업 추진
			건축물 생애관리 시스템 구축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황조사
				부산시 영구임대주택 장기관리계획 수립
S6 환 경 성	녹색건축에 기반한 생태적 도시성장	정책 과제	자원 순환형 녹색입체도시	부산형 녹색도시건축 협력연구
				녹색도시건축 제도개선
				지역 녹색산업 활성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관리 시스템 융합화	건축물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및 에너지심의 분과위원회 부활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업 및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 육성
		실행 과제	부산시 맞춤형 친환경 건축물 구축	에너지절약기준과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 융합화 조례신설
				부산시 친환경 건축물 인증기준 조례신설
				부산시 맞춤형 그린홈 시범사업
			부산 녹색건축센터 설립	건축물 녹화 지원사업
				친환경 건축 전문 인력 양성
				부산녹색건축센터 설립 및 친환경 건축물 인증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및 보급
				친환경건축설계 국제공모전 및 학생작품전
			선샤인닝(Sun-Shining) 부산 프로젝트	시민 녹색생활 교육
				도시 음영지 현황조사 및 선샤이닝 개선 사업
				빛의 흐름을 소통하는 건축물 가이드라인 구축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	빛의 흐름을 소통하는 '선샤이닝 부산' 도시 브랜드 구축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남항 수변형 녹색도시모델 개발
				수변형 녹색도시모델 적용

추진기간				과제구분				추진사항		
핵심 과제	단기	중기	장기	연구 과제	사업 과제	시범 사업	제도 개선	추진 여부	추진부서	사업
	○			○				○	도시정비	햇살둥지사업
		○					○	△	에너지산업	
			○			○		×		
V	○			○				○	도시재생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V	○	○			○			○	도시재생	커뮤니티뉴딜사업
V	○	○	○			○		○	도시재생	철로변 커뮤니티 뉴딜 시범사업
		○	○		○		○	×		국토교통부구축 부산광역시 건설 알림이
	○	○		○			○	○	건축주택	2016 임대형 주택공급
	○			○				○	도시경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시범사업(서구)
		○		○			○	△		2014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	○			○		○	도시재생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시범사업(서구)
	○	○	○			○	○	○		공원 녹지 계획 자발적인 참여제도(부산 그린트러스트)
V	○						○	△	에너지산업	건축심의 등에서 부분적인 내용은 다루고 있음
V		○			○		○	×		
V		○		○			○	△	에너지산업	2017 클린에너지 부산 원년선포
	○							○	에너지산업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	○					○	에너지산업	2012 저에너지 주택 보급사업
	○	○	○					○	산림녹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추진 및 지원 사업 확대실시 예정
	○	○			○			×		
		○			○		○	○	기후대기	2015~2016 그린 아파트 인증제
		○		○				△	도시경관	친환경 지속가능도시 조성 시범사업(서구)
	○	○			○			×		
		○	○	○	○			△	기후대기	부산녹색구매지원센터 설립 운영
	○							×		
		○						△	도시경관	2017 야간경관기본계획 수립
		○						○	도시경관	밝고 건전한 거리 구성을 위한 도로조명 교체 및 신설
		○						△		
		○	○					△	에코델타시티개발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에코델타시티

목표 3. 건축문화도시 : 창의적 건축문화 육성과 건축서비스 선진화

▼ [표 II-14]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전략			세부과제	실행사업
S7 안정성	통합과 협치의 도시건축 행정시스템	정책 과제	도시건축 관련 위원회 및 심의제도 개선	통합 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장기정책연구 : 협력형 설계관리시스템(가칭) 공공 건축 디자인 리뷰 패널 시범운영
		실행 과제	부산건축디자인기준 수립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적용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적용평가 및 모니터링
			도시건축 거버넌스 체계 구축	부산형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공공건축가 활용 체계 구축 : 총괄계획가(MP), 도시 닥터/마을 닥터
				주민 주도의 거버넌스 조직 구축 및 사업활성화
S8 문화성	문화시스템 으로서의 도시건축	정책 과제	부산건축의 비전 공유와 확산	부산건축의 비전, 가치, 전략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방안
				증강현실을 이용한 부산도시건축정보 앱(App.) 개발
			시민 참여형 건축문화기반강화	지역의 '우리 동네 전문가'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지역의 '우리 동네 전문가' 활용 및 지원방안
		실행 과제	부산도시건축재단의 추진	부산도시건축재단 설립
				부산도시건축역사관 건립
				부산건축의 국제화/경쟁력 강화
			도시건축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	도시 건축 기초자료 DB 구축 및 운영 계획
				건축도시 문화의 보급·확산 위한 : "20세기 도시 건축기록물 보존소"
				건축가 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도시건축 공공사업 및 수상작 DB 자료 구축
			우수 건축 및 건축가의 지원, 홍보 및 위상 강화	우수건축가 발굴 및 지원제도 마련
				우수 신인건축가 지원 및 홍보
			건축 문화 제고를 위한 시민건축상	건축문화제고를 위한 시민건축문화상
			도시건축아카데미 운영	도시건축아카데미 설립/운영
				건축문화 교육/홍보

추진기간				과제구분				추진사항		
핵심 과제	단기	중기	장기	연구 과제	사업 과제	시범 사업	제도 개선	추진 여부	추진부서	사업
	○							△	건축주택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창조도시국	
			○					×		
V	○			○			○	○	건축주택 도시경관	부산시 건축위원회 기준
V		○				○		○	건축주택 도시경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심의기준
V			○	○				×		평가 및 모니터링 항목 부재
	○					○	○	○	건축주택	공공건축가운영
		○	○		○			△	건축주택	공공건축가제도가 도입은 되었으나 실질적인 실효성에 대해 의문
		○	○		○			○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 시행
V	○	○		○	○			○	건축주택	부산국제건축문화제에서 다양한 사업시행
V	○				○		○	△	건축주택	부산국제건축문화제 SNS등을 통한 홍보체계 가동
	○	○		○	○		○	△		건축문화해설사 교육 및 운영
								△	도시재생	마을활동가 교육 및 위촉
V		○						△	건축주택 부산건축제	부산건축제로 변경
V	○							△	문화예술	부산 근현대역사박물관 조성 추진
V		○	○					△	건축주택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자매도시전시(시카고), 관련 전문가 해외견학
	○			○	○			△	토지정보	항공사진 촬영
		○	○		○			×		
		○			○			×		
		○			○			△	건축주택	부산다운건축상
	○				○		○	△	건축주택	부산다운 건축상 홈페이지 개설 준비 중 (부산국제건축문화제)
		○			○		○	○		건축사협회 및 건축가협회에서 운영
		○	○		○		○	×		
	○	○			○		○	○	건축주택	부산국제건축문화제
		○			○			○	건축주택	2017 부산건축문화 진흥사업

목표 3. 건축문화도시 : 창의적 건축문화 육성과 건축서비스 선진화 [표 계속]

▼ [표 II-14]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_ 계속

전략			세부과제	실행사업
S9 경 제 성	지식경제 시대에 맞는 건축산업 시스템	정책 과제	지속가능한 지역 건설 산업을 위한 지원	부산지역 건설 산업 건설화 방안
				부산지역 건설업체 육성
			지역설계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디자인감리 제도 도입
				기획, 계획설계의 전문성 강화
				소규모 공공건축물 용역의 업무 간소화
			건축전문가의 역할/책임/영역 확대 지원	청년(예비)건축가, 신진건축가의 지원
				지역 건축전문가 사회활동 참여 제고
		실행 과제	부산“영화의 전당” 건축·장소마케팅	부산 영화의전당 365 지도 만들기
				주변 관련 산업 비즈니스 벨트만들기
				주변 관련 문화서비스산업의 문화벨트만들기
				영화의전당 주변 오픈 스페이스 연계 계획 수립

추진기간				과제구분				추진사항		
핵심 과제	단기	중기	장기	연구 과제	사업 과제	시범 사업	제도 개선	추진 여부	추진부서	사업
		○			○		○	△	건설행정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	○					○	△	건설행정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지역인력고용 MOU
	○	○					○	×		현행 시공단계보다는 설계 단계(DR, -VE) 적용방안 검토
	○	○					○	△	건축주택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 제정
		○					○	×		
		○			○		○	△	건축주택	부산시 공공건축가
	○	○					○	○	건축주택	부산국제건축문화제, HOPE프로젝트, 부산건축사협회 '건축사랑'
V	○			○	○			△	영상콘텐츠산업 건축주택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대로 높은 객석점유율
V		○	○		○			○	영상콘텐츠산업 건축주택	영상산업센터
V		○	○		○		○	○	영상콘텐츠산업 건축주택	2016 부산영화체험박물관 건립 2017 건축투어활성화(부산국제건축문화제)
V	○	○		○				×	영상콘텐츠산업	

■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기초현황 분석

1. 자연환경	064
1.1 지리적 위치	064
1.2 지형	064
1.3 기후	065
2. 인문환경	066
2.1 부산의 역사	066
2.2 행정구역의 변화	066
2.3 문화자원	067
3. 토지이용	068
3.1 용도지역	068
3.2 용도지구	069
3.3 용도구역	069
3.4 지구단위계획	069
4. 인구	070
4.1 인구변화	070
4.2 연령별 인구	071
4.3 구/군별 세대와 인구	072
4.4 1인 가구 변화	073
4.5 노인인구	074
4.6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076
5. 건축 및 공공공간	077
5.1 주거	077
5.2 건축물	080
5.3 보육시설 및 고령자시설	085
6. 재난과 안전	087
7. 건축서비스산업	088

Ⅲ.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기초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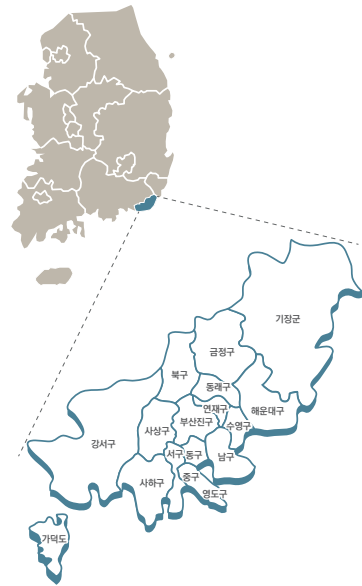
1. 자연환경

1.1 지리적 위치

- 한반도의 남동단에 자리 잡고 있고, 남으로는 대한해협에 면해 있고, 동으로는 울산광역시, 북으로는 양산시와 김해시, 서로는 진해시와 면함

1.2 지형

- 부산은 노년기의 구릉성 산지와 이들 산지 사이에 발달한 소침식 분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은 이러한 육성지형의 조건에 의해 해안선의 출입이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대부분은 고도 400~800m의 구릉성산지로 부산만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으나, 이들 산지로부터 한 단계 낮은 독립구릉과 산각이 발달하고 있으며, 곳에 따라 이들 산지와 낮은 구릉산지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음
- 해안은 바로 이러한 산지의 특성 때문에 소반도와 섬 그리고 만입의 풍부한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으로 해안선의 출입이 심하고 해안 평야의 발달이 미약한 것이 특징임
- 서부평야지대는 낙동강의 하구일대에 발달한 거대한 삼각주에 해당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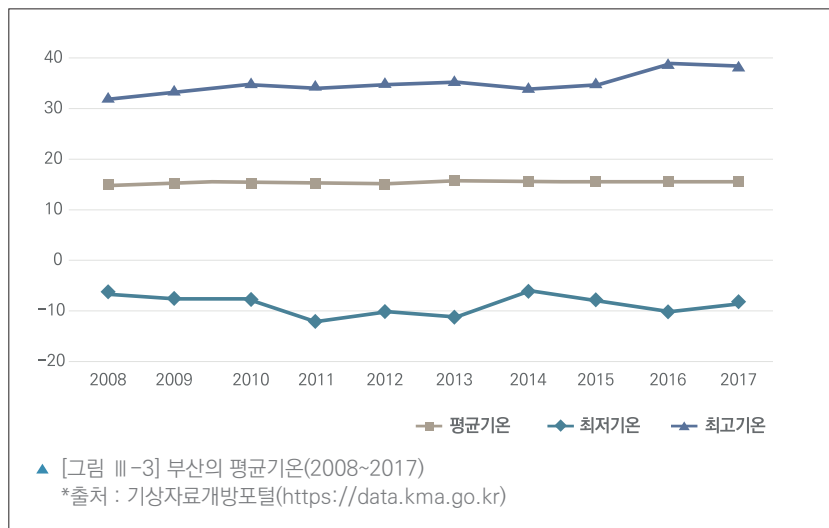
▲ [그림 Ⅲ-1]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공간적 범위



▲ [그림 Ⅲ-2] 그림으로 보는 부산지형

*출처 :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

1.3 기후



▼ [표 Ⅲ-1] 월 평균기온(2017)

기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C)	4.1	5.5	9.0	15.0	19.0	21.0	23.9	26.1	22.1	18.1	13.6	7.9
최고(°C)	15.1	17.7	18.1	23.2	28.2	30.4	32.7	36.2	29.7	28.7	23.6	14.5
최저(°C)	-7.7	-5.7	-2.3	5.0	12.8	15.4	21.2	18.7	14.5	7.3	-1.0	-6.1

*출처 :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

- 기후대적 위치로는 온대 계절풍 기후대와 대륙 동안 기후대에 속하며, 대한 해협에 면해있기 때문에 해양의 영향을 크게 받아 해양성기후의 특징이 잘 나타남
- 연평균기온은 14.7°C, 연평균강수량은 1,519.1mm, 바람은 겨울철에는 북~북서계열, 그 외 계절에는 북~북동풍의 빈도가 높음. 봄에는 남남서와 북북동풍이 강하고, 여름에는 남서풍, 가을에는 북동풍, 겨울에서는 북서풍이 강함.
- 부산의 4계절의 기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봄(3~5월) : 남서풍이 불 때는 따뜻하나 북동풍이 불 때는 싸늘한 날씨가 보임.
 - 여름(6~8월) : 장마전선이나 발달한 저기압 통과 시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장마가 끝나면 남동계절풍으로 습도가 높고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며, 맑은 날 오후에는 해풍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가을(9~11월) :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하고는 가을철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대체로 맑은 날이 많고, 가을이 되면서 일교차가 커짐
 - 겨울(12~2월) : 찬 대륙고기압 확장 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과 동풍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내림

*출처 : http://www.weather.go.kr/weather/climate/average_regional04.js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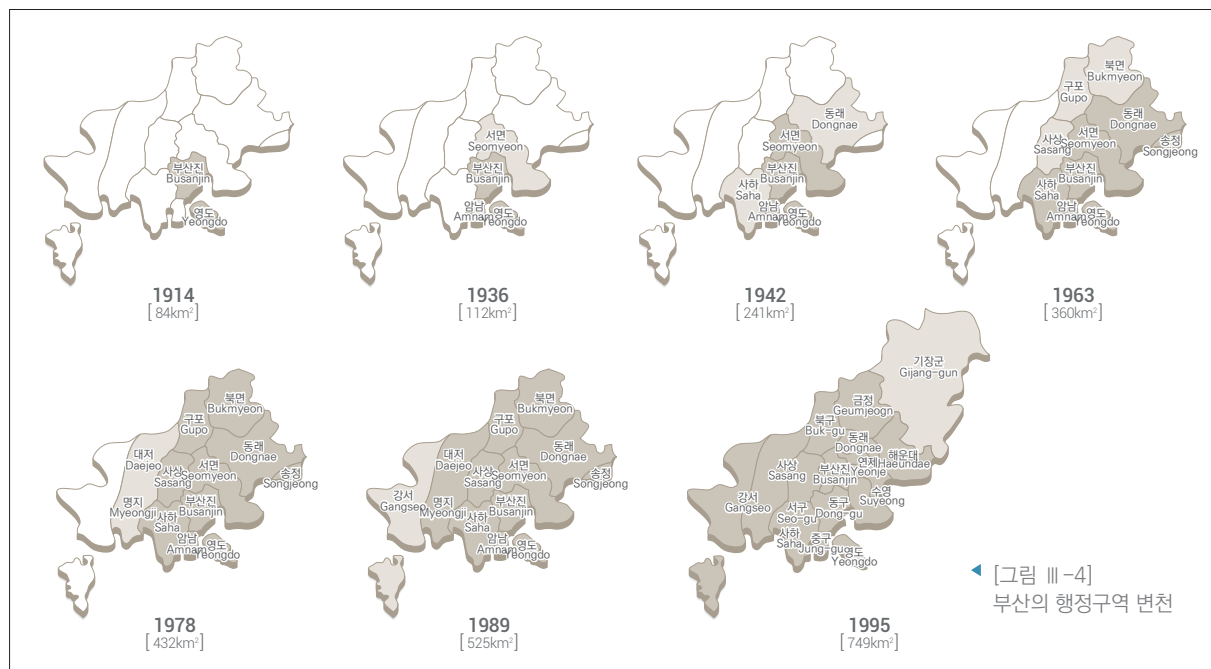
2. 인문환경

2.1 부산의 역사

- 부산광역시는 해운대 좌동·중동의 후기구석기 유적과 신석기시대의 조개무지가 시내 도처에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먼 옛날부터 사람이 살아온 지역인 것으로 추정됨
- 삼한시대에는 거칠산국(居漆山國),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동래군(東萊郡), 고려시대에는 동래현(東萊縣), 조선시대에는 동래부(東萊府)에 포함
- 1407년 부산포(富山浦)로 최초 개항 하였으며,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1469년에 부산포(富山浦)가 부산포(釜山浦)로 변경된 기록이 있으며, 1876년 국제항으로 개항
- 1963년 직할시로 승격하여 명실상부한 국제교역과 해양관광도시로 발전
- 1995년 부산광역시로 확대 개편되어 우리나라 제1의 항만·해양관광도시, 동북아 컨벤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세계 굴지의 항만도시이자 21세기 동북아의 중추도시로 성장

2.2 행정구역의 변화

- 부산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지금의 중구, 동구, 영도구 및 서구 일부가 포함된 부산부제(釜山府制)가 실시되면서 면적이 85.15km²에 달하는 현재 원도심의 모습을 갖추
- 1936년 동래군 서면과 사하면 암남리 편입으로 112.12km²로 확장
- 1942년 동래군의 동래읍과 사하면이 편입되어 241.12km²로 종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남
- 1963년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동래군 구포읍, 사상면, 북면과 기장읍의 송정리가 편입되면서 360.25km²로 확장
- 1978년 김해군 대저읍, 명지면, 가락면의 일부가 편입되면서 432.32km²로 확장
- 1989년 경남 김해군의 가락면, 녹산면과 창원군의 천가면의 편입으로 525.25km²에 이릅니다
- 1995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광역시로 개칭하면서 양산군 5개읍·면과 진해시 웅동 일부 지역이 편입되면서 749.17km²로 확장
- 2016년 현재 행정구역은 15구·1군, 2읍 3면 206동이며, 면적은 769.89km²임



2.3 문화자원

- 부산시의 문화재는 총 444개로 국가지정문화재 69개, 시지정문화재 262개, 문화재자료 95개, 등록문화재 18개 지정되어있음
- 자치구·군별로는 금정구가 국가지정문화재 15개, 시지정문화재 61개, 문화재 자료 30개, 등록문화재 2개 총108개로 가장 많음

▼ [표 III -2] 문화재 현황(2016)

구분	계	국가지정 문화재								시지정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천년 기념물	명승	중요 무형	중요 민속	소계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 문화재		
계	444	69	6	41	4	7	2	6	2	262	169	24	53	16	95	18
부산시	44	6	2	2		1	1			36	23		7	6	2	
중구	5									1			1		2	2
서구	63	16	2	13					1	33	29	3		1	8	6
동구	13									7			5	2	3	3
영도구	13	3		1	1		1			6	4			2	4	
부산진	18	2				2				7	7				7	2
동래구	35	4			2			2		29	13	8	8		2	
남구	13	8	1	6			1			2	1		1		2	1
북구	7	1				1				5	1	1	3		1	
해운대구	17	3		3						8	5		2	1	5	1
사하구	7									7	1	3	3			
금정구	108	15		11	1	1		1	1	61	56	1	3	1	30	2
강서구	14									11	3	1	7		3	
연제구	11	1	1							3	1		2		7	
수영구	15	5		1		2		2		9	3	3	3		1	
사상구	6	1		1						3	2	1			2	
기장군	55	4		3				1		34	20	3	8	3	16	1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2016)

3. 토지이용

3.1 용도지역

- 2017년 기준 부산시의 용도지역별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면적 940,825,056㎡ 중, 녹지지역 546,225,644㎡(58.06%), 미지정 지역 160,876,957㎡(17.10%), 주거지역 143,981,240㎡(15.30%), 공업지역 64,512,179㎡ (6.86%), 상업지역 25,229,036㎡(2.68%) 순으로 지정되어 있음
- 비도시지역 중 자연관리보전지역 52,710,694㎡ 임

▼ [표 III-3] 용도지역 현황(2017)

(단위 : ㎡, %)

구분 / 부산시			면적	비율
도시 지역	주거 지역	소계	143,981,240	15.30 %
		전용	1종	
			2종	
		일반	1종	
			2종	
			3종	
		준 주거	10,640,676	
	상업 지역	소계	25,229,036	2.68%
		중심	1,093,814	
		일반	22,447,628	
		근린	899,915	
		유통	787,679	
	공업 지역	소계	64,512,179	6.86%
		전용	10,635,038	
		일반	37,637,048	
		준공업지역	16,240,093	
	녹지 지역	소계	546,225,644	58.06%
		보전	40,884,537	
		자연	504,088,269	
		생산	1,252,838	
	미지정		160,876,957	17.10%
	자연관리 보전지역		52,710,694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통계(2017)

3.2 용도지구

- 부산시 용도지구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개소, 30,350,912㎡가 지정되어 있음
- 방화지구가 84개소 20,017,399㎡로 '개소'수 기준, 면적기준으로 가장 많이 지정되어 있음
- 미관지구는 중심지, 역사문화, 일반으로 나뉘고 취락지구는 자연과 집단 취락지구, 시설보호지구는 학교, 공용, 항만, 공항, 고도지구는 최고, 최저 지구로 나뉨
- 부산은 보존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는 없음

▼ [표 III -4] 용도지구 현황(2017)

(단위 : ㎡)

합계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177	30,350,912	1	115,700	43	2,632,757	31	1,429,763
		방화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84	20,017,399	2	5,696,687	16	458,606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통계(2017)

3.3 용도구역

- 부산의 용도구역은 6개소 251,491,854 ㎡가 지정되어 있음
- 개발제한구역이 유일하게 지정되어 있음

▼ [표 III -5] 용도구역 현황(2017)

(단위 : ㎡)

소계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6	251,491,854	6	251,491,854	0	0	0	0	0	0	0	0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통계(2017)

3.4 지구단위계획

- 부산의 지구단위계획은 580개소 109,653,841㎡로 기존시가지정비가 335개소, 기존시가지의 관리 182개소, 신시가지의 개발 60개소, 주거형 3개소 임
- 부산은 복합용도개발, 유희토지 및 이전적지개발, 비시가지 관리개발, 용도지구대체, 복합구역은 없음

(단위 : ㎡)

▼ [표 III -6] 지구단위계획 현황(2017)

계		기존시가지의 정비		기존시가지의 관리		신시가지의 개발		주거형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580	109,653,841	335	30,319,001	182	21,848,935	60	57,407,061	3	78,844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계획통계(2017)

4.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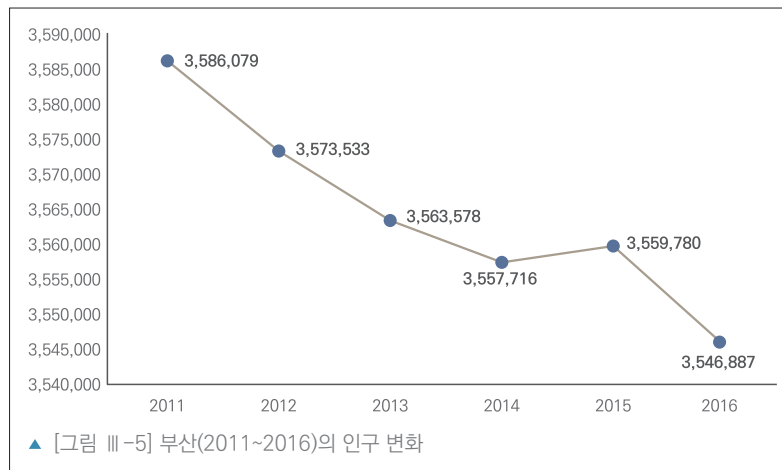
4.1 인구변화

▼ [표 III-7] 인구변화(2011~2016)

(단위 : 명)

구·군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부산광역시	3,586,079	3,573,533	3,563,578	3,557,716	3,559,780	3,546,887
중구	49,859	49,407	48,614	48,058	47,530	47,117
서구	124,824	122,040	120,044	119,506	117,608	114,752
동구	101,845	99,907	97,450	96,017	93,877	91,807
영도구	144,884	141,422	137,437	133,750	131,251	128,259
부산진구	397,411	395,032	391,957	389,558	384,274	379,309
동래구	284,649	279,805	277,596	276,823	273,993	273,939
남구	298,776	294,673	295,195	290,137	286,940	283,070
북구	309,239	314,085	310,880	308,215	312,016	312,098
해운대구	428,663	431,526	429,109	427,460	428,004	425,036
사하구	359,651	356,769	353,243	347,859	342,804	339,620
금정구	257,090	258,066	256,015	252,850	249,778	248,908
강서구	69,371	70,356	74,765	85,097	100,597	114,749
연제구	214,131	212,326	210,043	208,787	211,645	208,211
수영구	177,676	177,678	176,156	179,620	181,397	181,016
사상구	258,515	254,377	251,014	247,364	242,671	238,108
기장군	109,495	116,064	134,060	146,615	155,395	160,888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 2016



- 부산의 인구는 1963년 136만 명으로 시작해 1970~1980년대 경제개발에 따른 산업화, 도시화로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산업시설의 역외 이전 등으로 감소
 - 1996년 3,878,918명에서 2016년 3,546,887명으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구군별 인구규모를 보면 해운대구 425천명, 부산진구 379천명, 사하구 339천명 순으로 많으며, 중구 47천명, 동구 91천명, 강서구 114천명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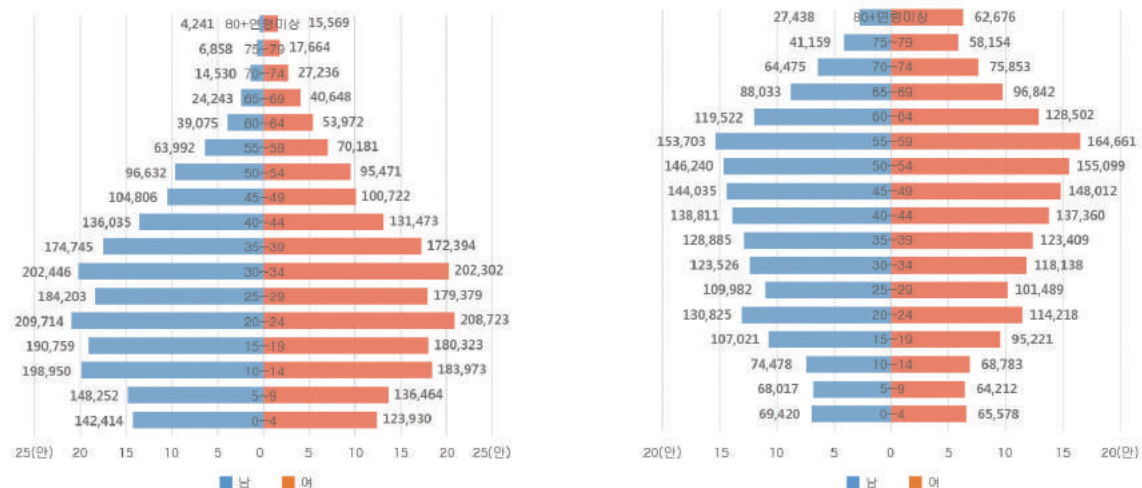
4.2 연령별 인구

▼ [표 III-8] 연령별 인구

(단위 : 명)

연령별	1992년 인구			2015년 인구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계	1,941,895	1,940,494	3,882,319	1,735,570	1,778,207	3,513,777
0~4세	142,414	123,930	266,344	69,420	65,578	134,998
5~9세	148,252	136,464	284,716	68,017	64,212	132,229
10~14세	198,950	183,973	382,923	74,478	68,783	143,261
15~19세	190,759	180,323	371,082	107,021	95,221	202,242
20~24세	209,714	208,723	418,437	130,825	114,218	245,043
25~29세	184,203	179,379	363,582	109,982	101,489	211,471
30~34세	202,446	202,302	404,748	123,526	118,138	241,664
35~39세	174,745	172,394	347,139	128,885	123,409	252,294
40~44세	136,035	131,473	267,508	138,811	137,360	276,171
45~49세	104,806	100,722	205,528	144,035	148,012	292,047
50~54세	96,632	95,471	192,103	146,240	155,099	301,339
55~59세	63,992	70,181	134,173	153,703	164,661	318,364
60~64세	39,075	53,972	93,047	119,522	128,502	248,024
65~69세	24,243	40,648	64,891	88,033	96,842	184,875
70~74세	14,530	27,236	41,766	64,475	75,853	140,328
75~79세	6,858	17,664	24,522	41,159	58,154	99,313
80+연령미상	4,241	15,569	19,810	27,438	62,676	90,114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 2016



▲ [그림 III-6] 부산의 연령별 인구비교(1992/2015)

- 부산시 연령대별 인구는 1992년에는 20대 여성이 388,588명, 20대 남성이 394,446명으로 가장 많고, 2015년에는 50대 여성이 322,330명, 50대 남성이 302,03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1992년에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젊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흔히 도시형이라고도 불리는 별형의 특징을 보이고, 2015년에는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고, 평균수명이 길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하는 방추형의 특징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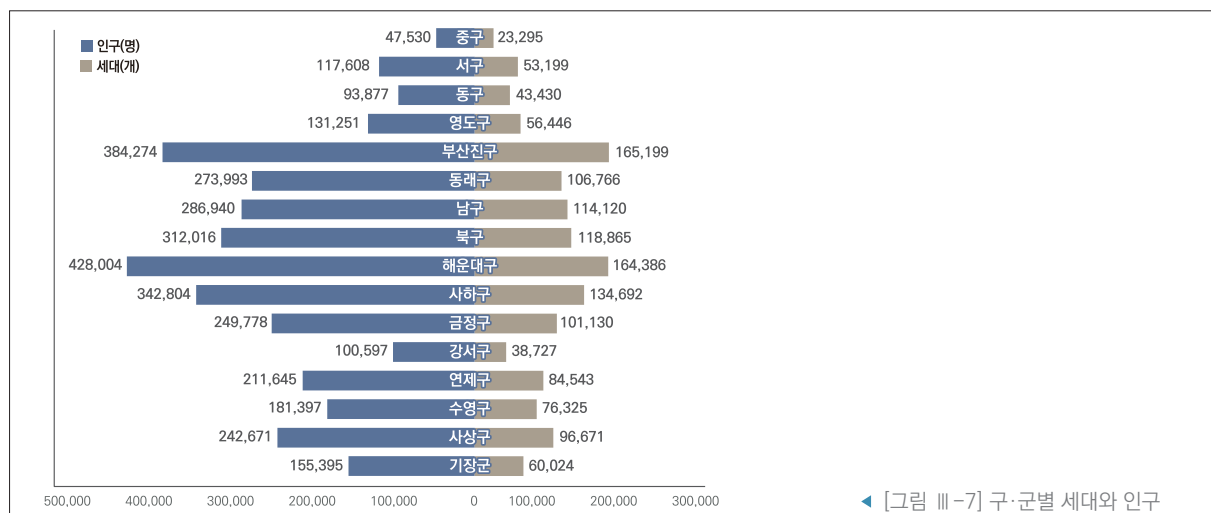
4.3 구·군별 세대와 인구

▼ [표 III-9] 구·군별 세대와 인구

(단위 : 명)

구·군별	세대수	인구	남자	여자
합계	1,437,818	3,559,780	1,761,594	1,798,186
중구	23,295	47,530	23,598	23,932
서구	53,199	117,608	58,075	59,533
동구	43,430	93,877	46,403	47,474
영도구	56,446	131,251	65,359	65,892
부산진구	165,199	384,274	188,061	196,213
동래구	106,766	273,993	134,675	139,318
남구	114,120	286,940	141,177	145,763
북구	118,865	312,016	155,065	156,951
해운대구	164,386	428,004	208,501	219,503
사하구	134,692	342,804	172,035	170,769
금정구	101,130	249,778	122,564	127,214
강서구	38,727	100,597	54,275	46,322
연제구	84,543	211,645	103,885	107,760
수영구	76,325	181,397	86,798	94,599
사상구	96,671	242,671	123,744	118,927
기장군	60,024	155,395	77,379	78,016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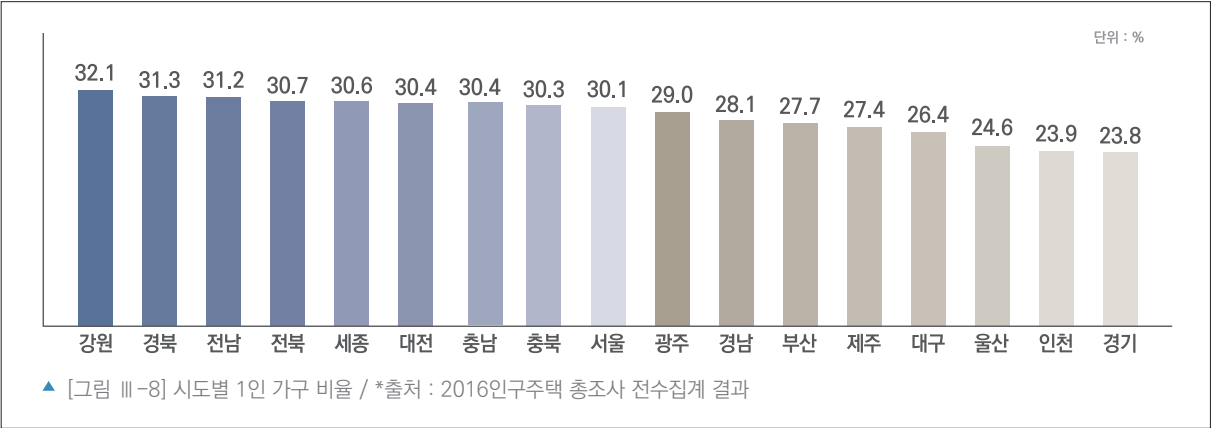


◀ [그림 III-7] 구·군별 세대와 인구

- 2016년 부산시에서 세대수가 많은 구·군은 부산진구(165,199), 해운대구(164,386)이며 작은 구·군은 중구(23,295), 동구(43,430)순임
- 부산진구의 인구수는 384,274명이고 해운대구의 인구수는 428,004명으로 인구수는 해운대구가 많음

4.4 1인 가구 변화

- 시도별로 1인 가구 비율을 보면 강원이 32.1%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23.8%로 가장 낮음
- 부산은 27.7%로 전국 평균(27.9%)과 유사함



-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율은 27.9%(5,398천 가구)로 전년 27.2%에서 0.7%p 증가하였고 부산시의 경우도 27.7%(372,412 가구)로 전년에 비해 0.6%p 증가하였음

▼ [표 Ⅲ-10] 연도별 1인 가구의 비율(1995~2016) (단위 : %, %p)

행정구역별	1995	2000	2005	2010	2015 (A)	2016(B)	증감 (B-A)
전국	12.7	15.5	20.0	23.9	27.2	27.9	0.7
서울	12.9	16.3	20.4	24.4	29.5	30.1	0.6
부산	10.7	13.8	18.8	23.4	27.1	27.7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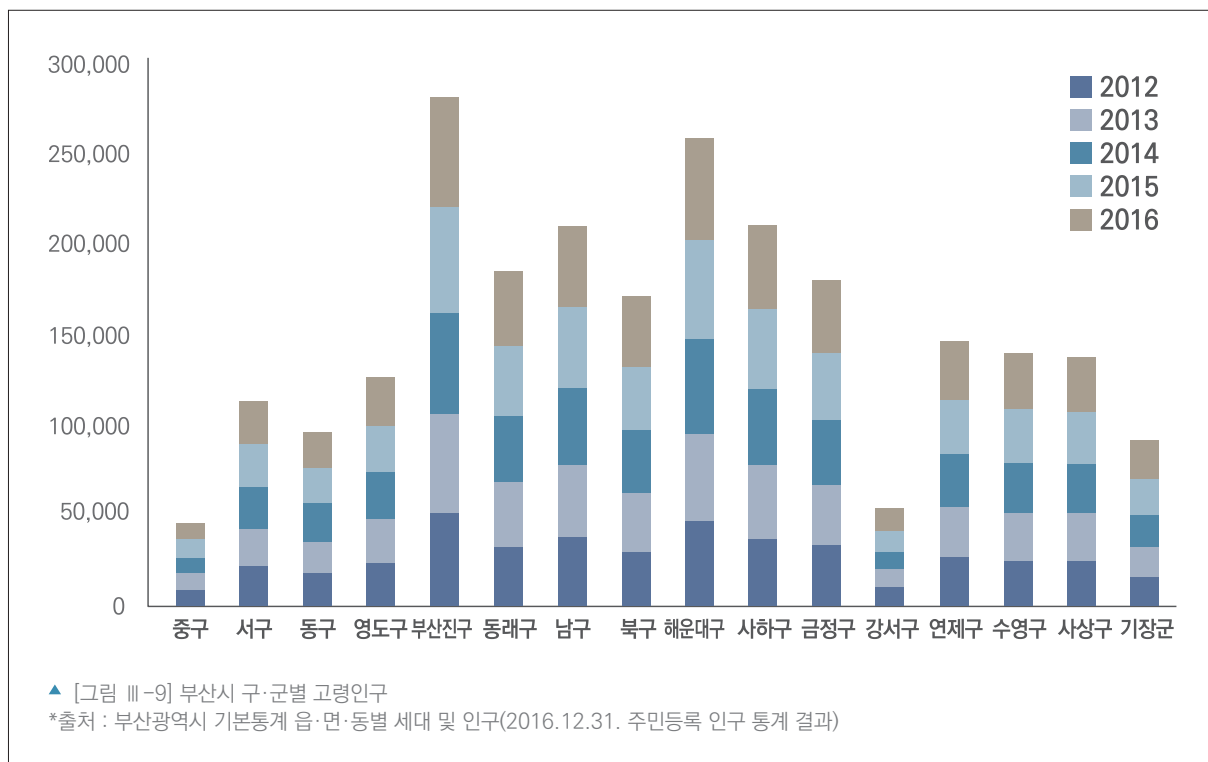
4.5 노인인구

- 부산은 2015년 14.7%에 이어 2016년에는 15.1%로 고령사회로 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령사회 임
-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부산진구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인구가 적은 중구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수는 제일 작지만 전체 인구비율로 봤을 때 중구는 초고령사회임
- 동구, 영도구, 서구, 중구 순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높고 원도심은 모두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 [표 III-11] 2015~2016 고령사회

구분	2015년	2016년
고령화 사회	경남(13.9), 대구(12.8), 서울(12.6), 광주(11.2), 인천(10.8), 대전(10.8), 경기(10.7), 세종(10.5), 울산(8.9)	대구(13.3), 서울(13.0), 광주(11.8), 대전(11.3), 인천(11.2), 경기(11.0), 세종(9.6), 울산(9.3)
고령사회	전북(17.9), 경북(17.8), 강원(16.9), 충남(16.3), 충북(14.8), 부산(14.7), 제주(14.1)	전북(18.4), 경북(18.2), 강원(17.2), 충남(16.5), 부산(15.1), 충북(15.0), 경남(14.3), 제주(14.2)
초고령사회	전남(21.1)	전남(21.3)

*65세 이상 인구 비율 : 7%이상 고령화 사회, 14%이상 고령사회, 20%이상 초고령사회



- 부산의 각 시군구의 고령화율을 살펴보면 중구(20.6), 서구(20.8), 동구(22.1), 영도구(21.2)는 20%이상으로 초고령사회임
-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는 고령사회임
- 인구대비 65세 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22.1%로 동구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서구로 10.8% 임

▼ [표 III-12]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단위 : 명, %)

읍면동	65세 이상 고령자					2016 인구	비율 (65세 이상 고령자/인구*100)	비고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442,199	467,416	492,116	514,630	536,064	3,546,887	15.1	고령사회
중구	8,570	8,850	9,154	9,470	9,700	47,117	20.6	초고령사회
서구	21,178	21,941	22,902	23,517	23,906	114,752	20.8	초고령사회
동구	17,991	18,734	19,493	19,945	20,334	91,807	22.1	초고령사회
영도구	23,663	24,625	25,637	26,419	27,192	128,259	21.2	초고령사회
부산진구	51,572	54,218	56,777	58,579	60,541	379,309	16.0	고령사회
동래구	33,132	35,153	37,045	38,437	40,349	273,939	14.7	고령사회
남구	38,346	40,543	42,392	44,110	45,778	283,070	16.2	고령사회
북구	30,373	32,212	34,057	36,451	38,522	312,098	12.3	고령화사회
해운대구	46,662	49,353	51,970	54,547	56,854	425,036	13.4	고령화사회
사하구	37,748	40,007	42,209	44,389	46,778	339,620	13.8	고령화사회
금정구	32,560	34,397	36,090	37,649	39,482	248,908	15.9	고령사회
강서구	9,550	9,947	10,593	11,429	12,348	114,749	10.8	고령화사회
연제구	26,353	27,994	29,397	31,042	31,832	208,211	15.3	고령사회
수영구	24,892	26,394	28,266	29,695	30,831	181,016	17.0	고령사회
사상구	24,495	26,174	27,712	29,182	30,561	238,108	12.8	고령화사회
기장군	15,114	16,874	18,422	19,769	21,056	160,888	13.1	고령화사회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2016)

4.6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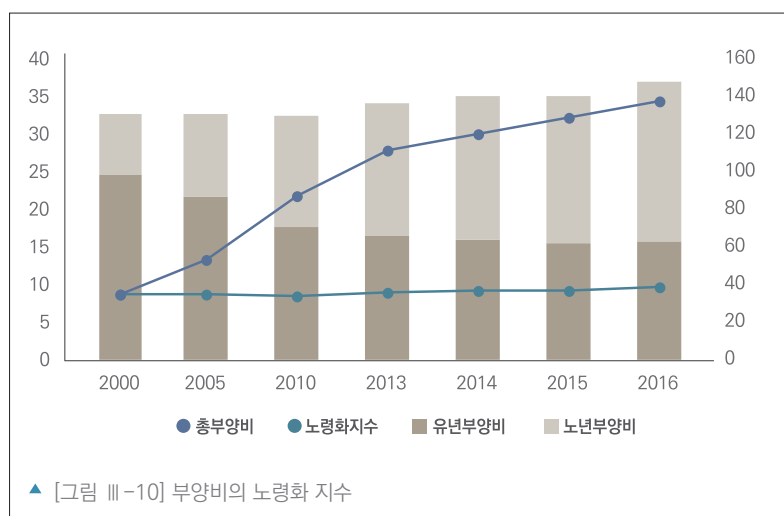
- 노년부양비는 총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 연령층(15~64세)인구에 대한 노년 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
- 노년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기초 및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총부양비는 생산가능 연령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비생산 연령인구 비율로 2000년 32.6%에서 2015년 35.3%로 증가 추세를 보임
 - 총부양비 증가세는 노년부양비 증가에 기인함
 - 비생산 연령인구 중에서도 노령(65세 이상)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결과임
-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0~14세)인구에 대한 노령 인구의 비율로 인구의 노령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음
- 부산시 노령화 지수는 2000년 32.6%에서 2015년 125.4%로 급격히 증가했음
- 노령화 지수의 증가세는 유년 인구의 감소, 노령 인구의 증가에 따라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표 III-13]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단위 : 명, %)

구분	총부양비	유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2000	32.6	24.6	8.0	32.6
2005	32.7	21.7	11.0	51.0
2010	32.5	17.6	14.9	85.0
2013	34.1	16.4	17.8	108.6
2014	35.0	16.1	18.9	117.1
2015	35.3	15.6	19.6	125.4
2016	37.0	15.8	21.2	134.3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2016)



5. 건축 및 공공공간

5.1 주거

1) 주택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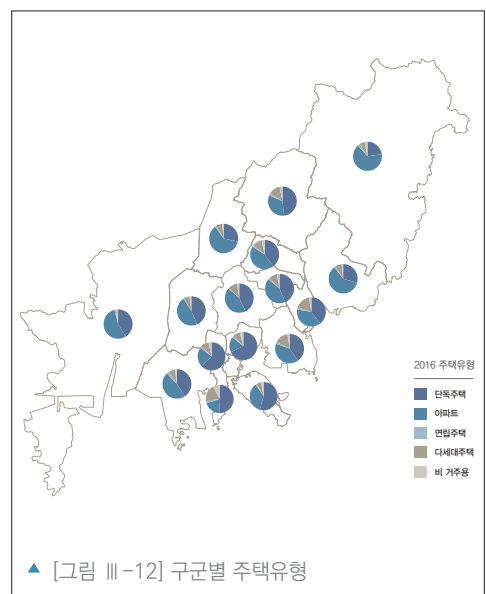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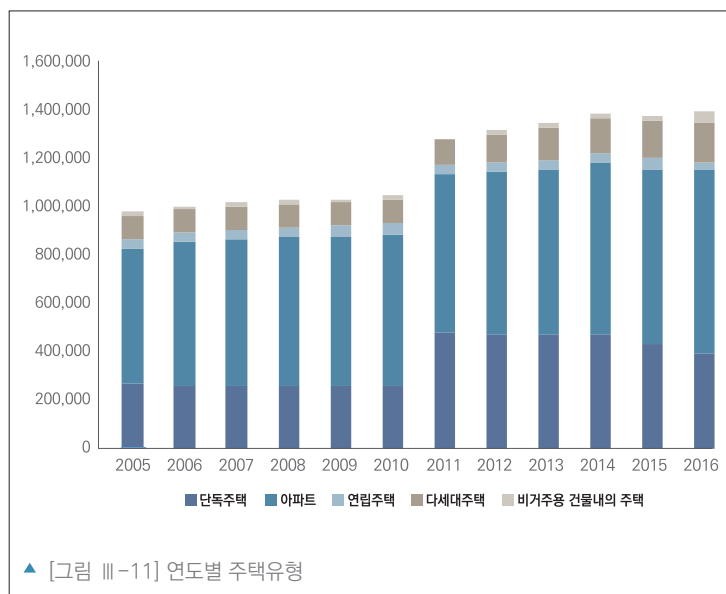
- 부산의 주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단독주택은 2011년(469,453호)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아파트는 2005년 555,033호에서 2016년 750,122호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구군별 주택유형을 살펴보면, 단독주택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은 동구(56%), 서구(51%)이고, 아파트 비율이 70%를 넘는 지역은 북구(71%), 해운대구(70%), 기장군(70%)순이며,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중구(25%), 수영구(20%)로 나타남

▼ [표 III-14] 주택 유형(2005~2016)

(단위 : 개소)

연도별 주택수	합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의 주택
2005	967,138	260,592	555,033	41,069	93,491	16,953
2006	993,358	257,480	583,937	40,846	94,229	16,866
2007	1,005,390	254,724	599,081	40,654	94,333	16,598
2008	1,016,471	253,077	611,413	40,644	94,791	16,546
2009	1,020,977	252,154	615,688	41,178	95,391	16,566
2010	1,035,110	250,790	627,916	41,326	98,475	16,603
2011	1,268,724	469,453	655,647	36,102	107,522	-
2012	1,302,002	466,005	662,632	38,930	120,182	14,253
2013	1,333,334	464,158	680,709	39,361	133,407	15,699
2014	1,369,518	463,955	706,272	39,493	139,089	20,709
2015	1,358,554	427,864	709,802	54,045	146,759	20,084
2016	1,375,534	390,849	750,122	32,073	157,476	45,014

*출처 : 부산광역시, 행정구역별 주택유형(2005~2016),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포함됨)



2)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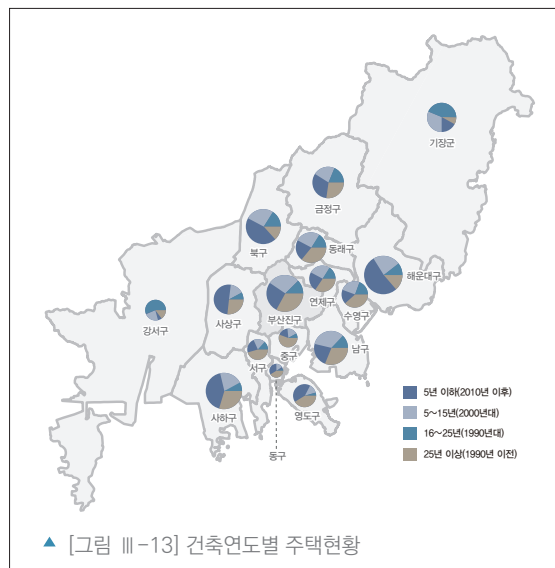
- 2000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 비율을 살펴보면 강서구가 80%로 가장 높았으며 기장군(72%), 수영구(43%) 순으로 확인되며 이는 강서구 명지, 녹산신도시 및 기장군의 정관신도시의 영향인 것으로 추측 됨
- 건축붐이 일었던 1990년대에는 약 38만여 채의 주택이 건축되었고 해운대구, 사상구, 북구 및 사하구 등에 집중적으로 건축됨
- 1990년 이전에 건축된 25년 이상된 부산의 주택은 33만여 채이며, 구군별로는 동구(47%), 중구(42%), 서구(37%)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주택 비율이 40%를 넘어 앞으로 이 지역의 노후주택 관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표 III -15] 구·군별 건축연도별 주택현황

(단위 : 호(%))

읍면동	5년 이하	6년~15년	16년~30년	30년 이상	합계
	(2012년이후)	(2000년대)	(1990년대)	(1990년 이전)	
합계	152,152	272,510	491,994	257,378	1,174,034
중구	1,902 (11)	1,923 (12)	5,743 (35)	7,022 (42)	16,590
서구	4,953 (13)	6,270 (16)	13,479 (35)	14,263 (37)	38,965
동구	2,138 (7)	5,186 (17)	8,635 (29)	14,130 (47)	30,089
영도구	1,995 (4)	4,931 (11)	23,640 (51)	15,719 (34)	46,285
부산진구	14,031 (11)	35,342 (27)	49,653 (33)	32,502 (25)	131,528
동래구	10,082 (12)	23,981 (28)	25,739 (31)	24,415 (29)	84,217
남구	9,762 (10)	28,411 (28)	36,455 (37)	25,178 (25)	99,806
북구	15,076 (14)	23,613 (23)	56,102 (54)	9,552 (9)	104,343
해운대구	9,212 (7)	34,550 (25)	81,704 (59)	13,662 (10)	139,128
사하구	9,829 (9)	20,333 (18)	57,319 (51)	24,867 (22)	112,348
금정구	12,449 (15)	18,338 (23)	32,719 (41)	17,129 (21)	80,635
강서구	18,231 (55)	8,395 (25)	2,730 (8)	3,685 (11)	33,041
연제구	7,856 (12)	16,604 (25)	22,140 (33)	19,976 (30)	66,576
수영구	10,526 (17)	16,349 (26)	15,984 (26)	19,310 (31)	62,169
사상구	4,375 (6)	9,493 (13)	48,749 (66)	11,668 (16)	74,285
기장군	19,735 (37)	18,791 (35)	11,203 (21)	4,300 (8)	54,029

*출처 : 통계청(주택총조사), 부산광역시기본통계



3) 주택보급률

- 지속적인 보급으로 주택 수는 꾸준히 늘어나 2007년 1,005,390호, 2010년 1,035,110호, 2014년 1,369,518호, 2016년 1,375,534호로 증가
- 신 주택보급률은 기존 주택보급률의 보완을 위하여 주택 수에 다가구 구분 거처를 반영하고, 가구 수는 1인가구를 포함한 일반가구로 대체함
- 2016년 부산시 각 구군의 주택보급률은 영도구(107.7%), 서구(106.5%), 남구(105.8%) 순으로 낮고, 동래구(99.1%), 강서구(98.8%)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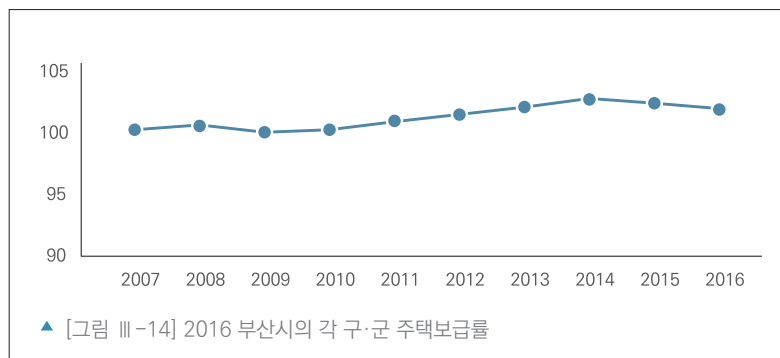
▼ [표 III-16] 주택보급률

구분	가구수	주택수	주택보급률	신주택보급률
2007	953,082	1,005,390	105.6	-
2008	950,890	1,016,471	106.9	-
2009	949,935	1,020,977	107.5	-
2010	953,177	1,035,110	108.6	-
2011	1,258,393	1,268,724	100.8	-
2012	1,271,453	1,302,002	102.4	100.8
2013	1,283,003	1,333,334	105.9	101.7
2014	1,293,450	1,369,518	105.9	102.6
2015	1,335,900	1,370,184	102.6	102.6
2016	1,344,170	1,375,534	102.3	102.3

*출처 : 국토교통부(2016)

▼ [표 III-17] 구·군별 주택보급률 (단위 : %)

구·군별	주택보급률
합계	102.3
중구	100.5
서구	106.5
동구	103.6
영도구	107.7
부산진구	101.3
동래구	99.1
남구	105.8
북구	103.3
해운대구	101.3
사하구	104.2
금정구	101.5
강서구	98.8
연제구	101.5
수영구	102.5
사상구	100.0
기장군	100.5



5.2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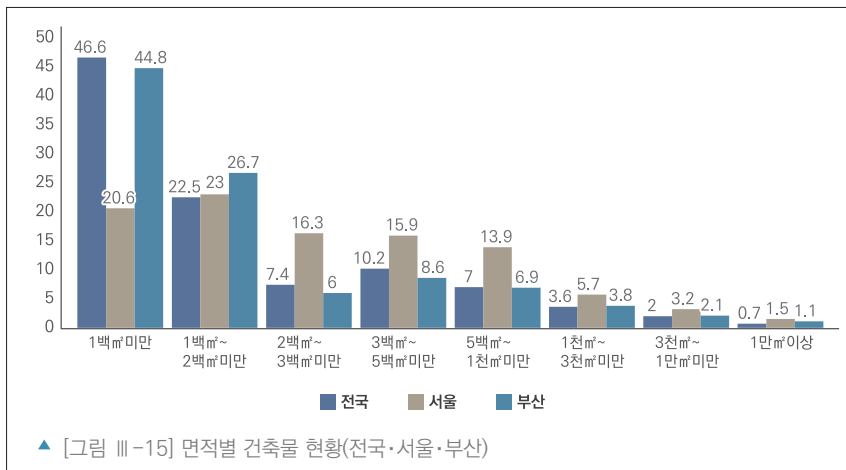
1) 면적별 건축물 현황

- 부산은 연면적 100㎡ 미만의 건물이 44.8%, 100~200㎡ 미만의 건물이 26.7 %로 전체 건축물의 과반수를 차지함
- 「건축법」상 연면적 100㎡ 이하의 소규모 공사, 연면적 200㎡ 미만의 대수선 공사는 신고사항으로 분류(「건축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신고건축물은 공사감리 미적용, 설계도서 간소화 등 특례 등 인정(「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

▼ [표 III-18] 면적별 건축물 현황(전국·서울·부산)

면적별	전국		서울		부산	
	동	%	동	%	동	%
합계	6,986,913	100.0	628,947	100.0	377,147	100.0
1백㎡미만	3,253,776	46.6	129,741	20.6	169,037	44.8
1백㎡~2백㎡미만	1,568,675	22.5	144,551	23.0	100,657	26.7
2백㎡~3백㎡미만	518,552	7.4	102,355	16.3	22,493	6.0
3백㎡~5백㎡미만	715,298	10.2	99,710	15.9	32,328	8.6
5백㎡~1천㎡미만	492,081	7.0	87,251	13.9	26,109	6.9
1천㎡~3천㎡미만	248,442	3.6	35,705	5.7	14,474	3.8
3천㎡~1만㎡미만	137,979	2.0	20,076	3.2	7,859	2.1
1만㎡이상	52,110	0.7	9,558	1.5	4,190	1.1

*출처 : 국토교통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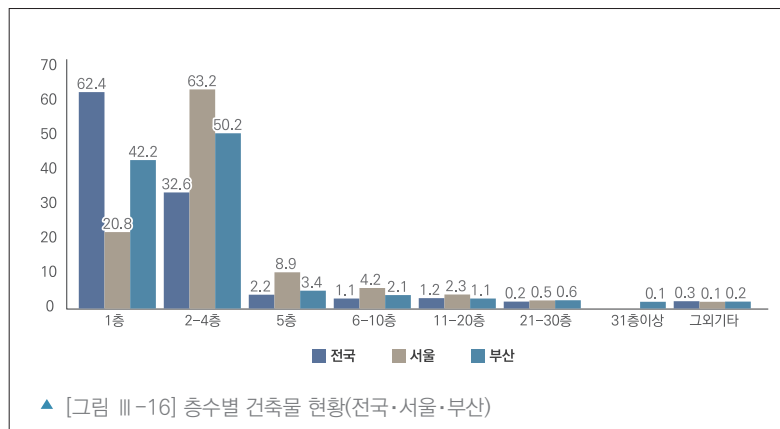
2) 층수별 건축물 현황

- 부산은 1층 규모의 건물이 42.2%, 2~4층 건물이 50.2%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1층 건물의 비율이 높고 부산은 전국과 비교하면 4층 이하 건물이 비율이 높음
- 31층 이상의 고층건물은 307동으로 0.1%를 차지하고 서울의 269동보다 많음

▼ [표 III-19] 층수별 건축물 현황

층수별	전국		서울		부산	
	동	%	동	%	동	%
계	6,986,913	100.0	628,947	100.0	377,147	100.0
1층	4,356,666	62.4	130,737	20.8	159,216	42.2
2~4층	2,279,814	32.6	397,336	63.2	189,481	50.2
5층	154,587	2.2	56,012	8.9	12,880	3.4
6~10층	76,542	1.1	26,173	4.2	8,099	2.1
11~20층	80,836	1.2	14,475	2.3	4,289	1.1
21~30층	16,413	0.2	3,183	0.5	2,170	0.6
31층이상	1,478	0.0	269	0.0	307	0.1
그외기타	20,577	0.3	762	0.1	705	0.2

*출처 : 국토교통부(2016)



3) 용도별 건축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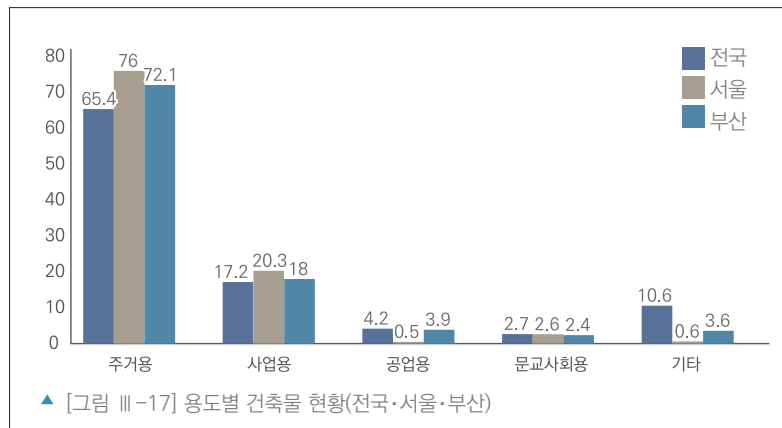
- 동 수를 기준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약 72%(271,775동)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상업용 18%, 공업용 3.9%, 문교사회용 2.4%, 기타(공공용, 농수산용 포함) 3.6%
- 전국 평균과 비교하여 주거용, 상업용의 비율이 높고 공업용, 문교사회용과 기타 용도의 비율은 낮음

※ 전국 평균(2016년 기준) : 주거용 65.4%, 상업용 17.2%, 공업용 4.2%, 문교사회용 2.7%, 기타 10.6%

▼ [표 III-20] 용도별 건축물 현황

용도별	전국		서울		부산	
	동	%	동	%	동	%
계	6,986,913	100.0	628,947	100.0	377,147	100.0
주거용	4,568,851	65.4	478,197	76.0	271,775	72.1
상업용	1,198,932	17.2	127,678	20.3	67,805	18.0
공업용	293,051	4.2	2,957	0.5	14,730	3.9
문교사회용	186,721	2.7	16,065	2.6	9,146	2.4
기타	739,358	10.6	4,050	0.6	13,691	3.6

*출처 : 국토교통부(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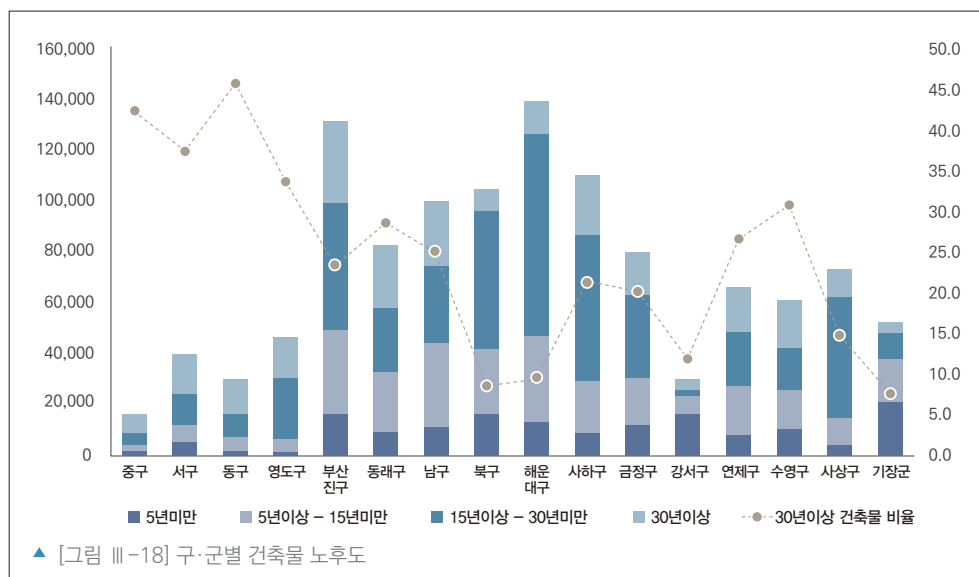
4) 건축물 노후도

- 부산시 건축물 중 30년 이상 된 건물의 비율이 높은 곳은 중구(42.3%), 동구(45.4%)이고 낮은 곳은 기장군(8.0%), 북구(8.3%)임
- 5년 미만의 신축건물이 많은 곳은 강서구와 기장군으로 각각 54.5%와 40.5%에 달함
- 영도구는 15년 이상 된 건축물이 전체 건물의 85%에 달함
- 중구, 동구, 사하구 등 원도심 지역은 70% 이상이며 사상구도 79.8%에 달함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높아 앞으로 이 지역의 노후 건축물 관리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표 III-21] 건축물 노후도 현황

건축물 노후도(%)	5년 미만	5년 이상 ~ 15년 미만	15년 이상 ~ 30년 미만	30년 이상
부산시전체	13.6	23.9	41.2	21.3
중구	11.8	12.4	33.5	42.3
서구	12.5	17.6	32.5	37.4
동구	7.5	18.3	28.8	45.4
영도구	3.7	11.3	51.7	33.3
부산진구	12.6	25.3	38.2	24.0
동래구	11.6	28.2	31.3	28.8
남구	10.8	33.3	30.8	25.0
북구	15.4	25.2	51.0	8.3
해운대구	9.8	23.9	57.2	9.1
사하구	8.1	18.8	51.8	21.3
금정구	14.9	23.9	40.9	20.2
강서구	54.5	24.3	9.1	12.0
연제구	12.5	28.9	31.8	26.9
수영구	17.1	25.1	27.1	30.6
사상구	5.4	14.7	64.8	15.0
기장군	40.5	32.0	19.5	8.0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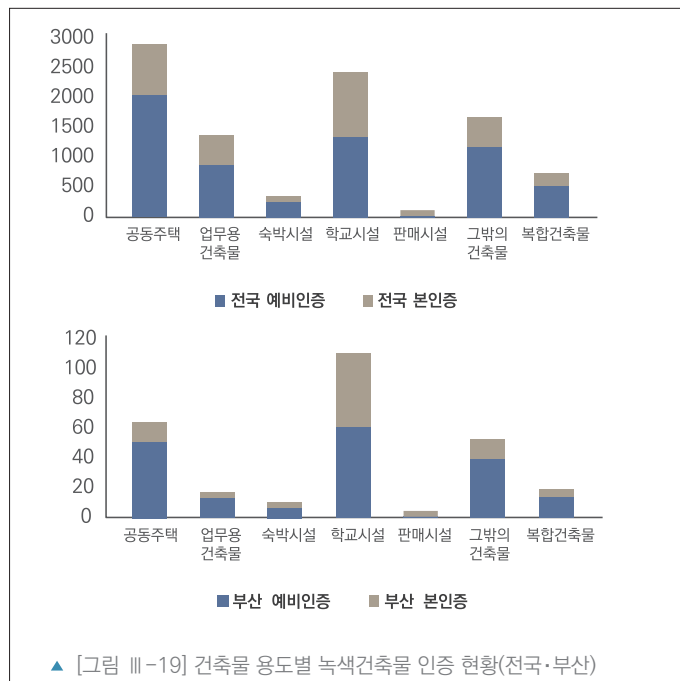


5) 녹색건축물 현황

-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운영·유지보수 후 해체까지 고려하고, 건물 사용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건축물을 말함
- 2017년 8월 기준 부산의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은 총 258건이며 본인증 88건, 예비인증 170건으로 집계
- 녹색건축물 중 본인증 건물의 용도는 학교시설 49건, 공동주택 13건이며 예비인증의 경우도 학교시설 59건, 공동주택 48건으로 의무취득대상인 학교, 공동주택, 공공시설 등이 대부분을 차지
- 녹색건축물은 전국적으로는 공동주택 > 학교시설 > 그 밖의 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 복합건축물 순으로 많음
- 부산은 학교시설 > 공동주택 > 그 밖의 건축물 > 복합건축물 > 업무용 건축물 순으로 전국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고 더불어 양적인 차이가 나타남

▼ [표 III-22] 건축물 용도별 녹색건축물 인증 현황(동, 2017년 8월 현황)

지역	총계	공동주택	업무용 건축물	숙박 시설	학교 시설	판매 시설	그밖에 건축물	복합 건축물
전국	예비인증	1974	788	174	1272	24	1114	445
	본인증	852	502	103	1089	18	484	210
	계	2826	1290	277	2361	42	1598	655
부산	예비인증	48	10	4	59	1	37	11
	본인증	13	4	3	49	1	13	5
	계	61	14	7	108	2	50	16

*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s://www.gbc.re.kr/app/data/authStatus/list.do>)

5.3 보육시설 및 고령자시설

1) 영유아 어린이 보육시설

- 부산의 영유아 어린이 보육시설은 총 1,937개로 보육시설(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해운대구(228개), 사하구(205개), 기장군(180개) 순이고 적은 지자체는 중구(14개), 서구(45개), 동구(38개) 순임
- 유치원이 많은 지자체는 부산진구(47개), 사하구(45개), 해운대구(40개) 순이고 작은 지자체는 중구(4개), 서구, 동구(각 10)임
- 부산의 영유아 어린이 보육시설의 수가 15개 미만인 지역은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와 같은 원도심지역임

▼ [표 III-23] 부산시 영유아 및 어린이 시설

영유아 및 어린이시설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합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민간	법인·단체	부모협동	직장	가정	원수(개)
부산시	1,937	163	82	804	38	13	42	795	416
중구	14	4	1	5	-	-	2	2	4
서구	45	12	2	19	3	-	-	9	10
동구	38	9	2	11	2	-	7	7	10
영도구	49	12	1	18	7	-	1	10	14
부산진구	173	20	5	71	6	2	8	61	47
동래구	124	11	5	60	-	1	2	45	33
남구	146	12	6	55	2	1	4	66	26
북구	210	8	7	85	1	3	1	105	35
해운대구	228	13	13	100	2	1	2	97	40
사하구	205	18	10	78	6	-	3	90	45
금정구	114	5	7	63	1	1	2	35	28
강서구	91	6	5	26	-	1	3	50	19
연제구	100	7	4	52	5	-	3	29	17
수영구	81	4	6	48	1	-	1	21	22
사상구	139	11	3	60	2	-	1	62	31
기장군	180	11	5	53	-	3	2	106	35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2017)

2) 고령자시설

-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540천명으로 부산시 전체 인구의 1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13.8%)보다 1.9%p 많음
- 노인 여가시설 중 경로당 개소 확대가 많고 노인 복지관은 2010년 16개에서 2016년 25개로 9개소 증가, 경로당은 2010년 2,148개소에서 2016년 2,252개소로 104개 증가하였으나 노인교실은 2010년 171개에서 2016년 172개로 1개소 증가하였음
- 노인의료시설은 2010년 159개소에서 114개소로 감소하였는데 노인요양시설은 92개소에서 91개소로 거의 변화가 없고 노인요양 공동 생활가정은 65개소에서 23개소로 1/3로 감소하였음
- 노인주거의 종류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 생활가정, 노인 복지주택이 있고 2010년 7개소에서 2016년 8개소로 거의 변화가 없음

▼ [표 III-24] 부산시 노인 복지시설

(단위 : 개소)

노인 복지시설	노인여가				노인의료			노인주거			
	합계	노인 복지관	경로당	노인 교실	합계	노인 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합계	양로 시설	노인 공동생활 가정	노인 복지주택
2010	2,335	16	2,148	171	157	92	65	7	5	-	2
2011	2,389	19	2,195	175	129	73	56	7	5	-	2
2012	2,293	20	2,103	170	138	90	48	7	5	-	2
2013	2,306	22	2,120	164	125	89	36	7	5	-	2
2014	2,366	23	2,179	164	124	91	33	7	5	-	2
2015	2,431	24	2,235	172	119	92	27	8	5	-	2
2016	2,449	25	2,252	172	114	91	23	8	6	-	2

*출처 : 부산광역시, 부산통계연보(2017)

6. 재난과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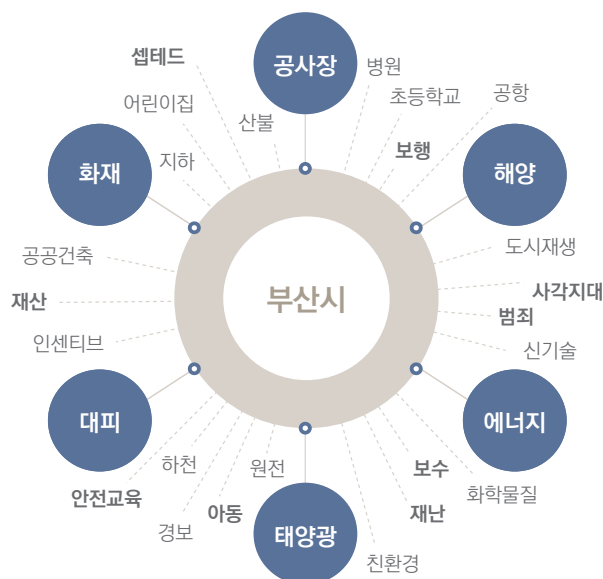
-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함
- 최근 들어 지진과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 생활 안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건축·도시분야 보도자료, 지역별 재난 안전관련 보도자료(2018년 1월~5월) 1,362건을 분석하여 형태소 분석 시행
 - 2018년 상반기 전국 재난·안전 관련 보도자료 키워드분석 결과, 화재, 지진, 사고, 범죄, 노후, 미세먼지 등 안전 위협요인 관련 키워드 도출
 - 공사장, 공동주택, 공원, 지하, 차량, 주차, 통학, 보행 등 사고 발생 장소 상황 관련 키워드 도출
 - 대피, 보호, 시험, 보강, 안전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대책 관련 키워드 도출
- 부산시의 재난·안전 연관 키워드는 에너지, 공사장, 화재, 해양, 대피, 범죄 순으로 나타남
 - 셉테드(CPTED), 범죄, 안전교육, 사각지대 등 범죄안전 관련 키워드 특징적으로 나타남



▼ [표 Ⅲ-25] 전국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키워드	빈도
화재	58
스마트	43
사고	40
에너지	38
지진	36
대피	33
보행	32
범죄	31
지하	24
공원	21

▲ [그림 Ⅲ-20] 전국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도시정책동향_47호, 2018상반기, p.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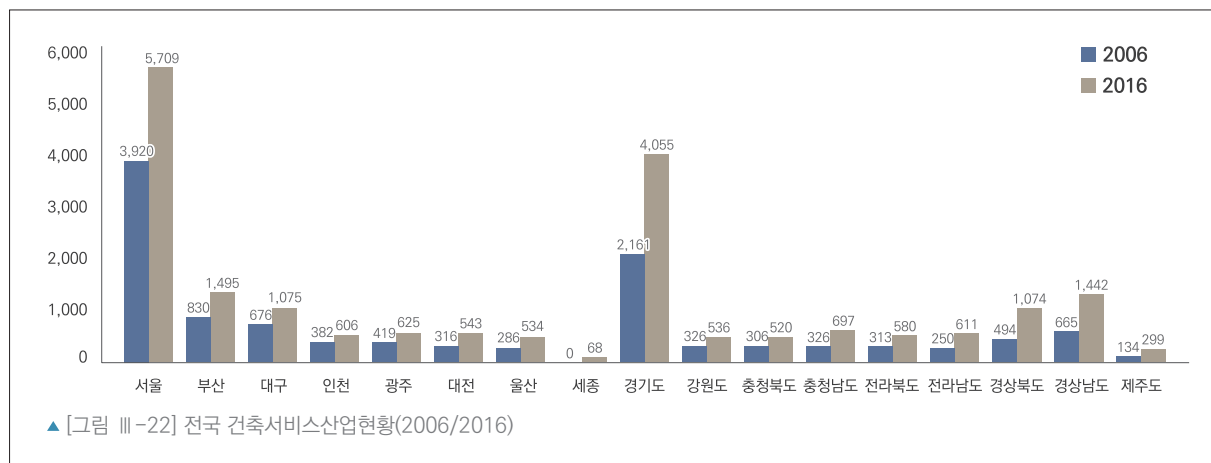
▼ [표 Ⅲ-26] 부산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키워드	빈도
에너지	5
공사장	4
화재	3
해양	3
대피	3
범죄	2
태양광	2
보행	2
아동	2
안전교육	2

▲ [그림 Ⅲ-21] 부산 재난·안전 보도자료 분석결과

7. 건축서비스산업

- 건축서비스산업은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인구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는 복지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임
- 건축산업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4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하였으며, 건축 서비스산업의 현황파악 및 미래전망을 통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실태조사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 2016년 건축서비스 사업체 수는 총 20,469개로 2006년에 비해 73.4% 증가하였으며, 가장 많은 사업체가 늘어난 곳은 경기도로 2006년 2,161개에서 4,055개로 1,894개(87.64%) 증가하였음
- 부산은 2006년 830개에서 2016년 1,495개로 1,165개(80.1%) 증가하였고 서울은 2006년 3,920개에서 2016년 5,709개로 1,789개(45.6 %)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건축서비스업이 서울과 경기도에 편중되어있음



▼ [표 III-27] 전국 및 행정구역별 사업체수 변화

(단위 : 개)

구분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국	11,804	13,642	14,981	16,786	17,318	18,856	20,923	20,469
서울	3,920	4,189	4,587	5,062	5,004	5,485	6,097	5,709
부산	830	932	1,022	1,190	1,240	1,360	1,518	1,495
대구	676	716	770	874	891	969	1,102	1,075
인천	382	398	434	501	519	565	631	606
광주	419	398	424	482	488	558	657	625
대전	316	353	411	461	471	503	548	543
울산	286	361	415	447	458	489	549	534
세종	-	-	-	27	44	65	72	68
경기도	2,161	2,752	2,968	3,333	3,451	3,700	4,111	4,055
강원도	326	341	356	415	467	499	527	536
충청북도	306	388	421	455	456	483	528	520
충청남도	326	424	464	489	533	611	680	697
전라북도	313	371	418	464	502	529	571	580
전라남도	250	374	434	454	501	548	605	611
경상북도	494	601	658	775	877	957	1,030	1,074
경상남도	665	887	1,038	1,178	1,222	1,324	1,455	1,442
제주도	134	157	161	179	194	211	242	299

* 통계청, 전국사업체 조사, - 는 조사내용 없음

■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IV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방향과 체계

1. 기본방향	092
1.1 부산건축을 둘러싼 이슈	092
1.2 부산건축의 10대 과제	092
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098
2.1 기본계획의 구성	098
2.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099
2.3 전략별 세부 전략	100
2.4 전략별 세부과제	103

Ⅳ.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방향과 체계

1. 기본방향

1.1 부산건축을 둘러싼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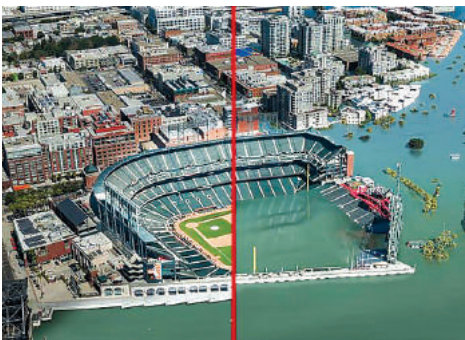
지구적 차원	국가적 차원	부산시 차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와 기후 변화 ◆ 신자유주의와 신보호주의의 대립 ◆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빈곤계층 증가 ◆ 기술 발전과 4차산업혁명 :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 사물인터넷의 발전과 스마트시티 실현 ◆ 공유경제의 확산 : 보유가치에서 이용가치로의 변화 ◆ 수명연장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 ◆ 관광산업의 성장과 투어리피케이션 확산 ◆ 지속가능성과 도시의 회복탄력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재해와 건축재해의 대형화 ◆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 ◆ 장기 저성장시대의 진입 ◆ 산업구조의 변화 (2차산업에서 3차산업) ◆ 과학기술의 융·복합화 ◆ 저출산과 인구정체 및 감소 ◆ 급격한 노령화로 인한 복지비용의 급증 ◆ 1인가구의 급증 및 청년 주거난 ◆ 부동산 수요의 변화, 주거유형의 변화, ◆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 ◆ 도시공간변화와 젠트리피케이션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가 : 가족중심주의, YOLO, 워라벨 등 ◆ 보유가치에서 이용가치로의 변화되는 등 건축 수요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해의 위협 ◆ 원전 안전과 클린에너지 개발 ◆ 산업구조의 변화 (제조업의 퇴조와 관광컨벤션, 영상, 물류, 문화 산업으로의 전환) ◆ 급격한 노령화와 젊은 세대 유출 ◆ 주변 신도시로의 인구유출과 원도심의 쇠퇴 ◆ 북항, 서부산, 김해신공항 등 메가프로젝트의 진행 ◆ 도시재생사업의 평가 및 지속성 확보 ◆ 다함께 행복한 동네 만들기 확산 ◆ 건축물의 급속한 노후화로 인한 지역공동화와 도시안전 문제 우려 ◆ 수변 고밀화 및 초고층 아파트 난립 ◆ 콤팩트시티의 추구 ◆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용한 도시공간 개선기회 ◆ 시민참여형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

▲ [그림 IV-1] 부산건축을 둘러싼 이슈

1.2 부산건축의 10대 과제

1) 지구온난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

-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의 빈발 : 슈퍼 태풍, 폭염과 폭한, 가뭄과 홍수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의 리우협약, 1997년 유엔기후변화회의의 교토의정서,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으로 대응
 - 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한 냉·온대 기후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고 있으며, 겨울철은 짧아지고 여름철이 길어지고 있어 심한 무더위가 자주 나타나고 있음
-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와 친환경 건축
 -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건물부문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타 산업에 비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증가폭이 가장 큼
 -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건축과 안전한 도시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부각



▲ [그림 IV-2]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도시 위기 (Nickolay Lamm의 가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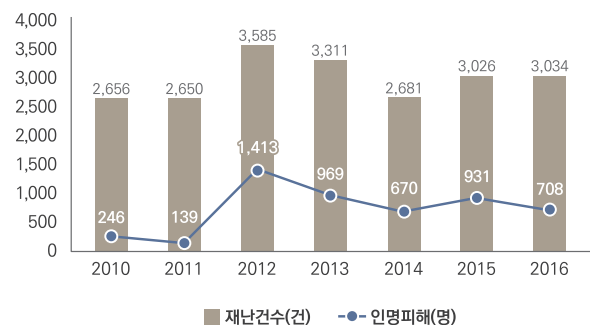
▲ [그림 IV-3] 태풍으로 침수 되는 마린시티(2016)

2) 대규모 재난에 대한 대응

- 부산 인근 동남권에 빈발하는 지진
 -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도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2018년 2월 11일에 또 다시 포항에서 규모 4.6의 여진이 발생함
- 산업화시대 건설된 부산의 건축의 내진성능 부실과 노후화
 - 내진설계 의무대상인 전국의 건축물 273만8172동 중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은 56만3316동(20.6%)에 불과함
 - 공공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내진율)은 25.1%, 민간 건축물은 20.4% 이고 지역별로 내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부산으로 13.7%, 대구15.7%와 강원15.8% 임(2016 행안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 노후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생활시설 등은 지진의 사각지대에 있음



▲ [그림 IV-4] 지진으로 파손된 포항의 다세대 주택(2017)



▲ [그림 IV-5] 재난 건 수 및 인명 피해 (2017, 부산광역시, 도로교통사고제외)

3)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건축시공 및 관리에 대한 대응

- 시공 및 관리 부실로 인한 건설사고
 - 지반침하로 인한 사하구 기우동 오피스텔, 시공관리 부실로 인한 엘시티 추락사고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가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사전에 막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체계에 대한 요구 증대
- 자본의 과도한 이익 추구로 편법적인 공간 이용과 관리로 인한 인적·물적 손실
 - 공사기한과 시공비 절감에 매달리는 건설업계의 관행이 자리 잡고 있어 독립 감리제도와 같은 공사장 안전을 확보할 근본 대책이 필요함
 - 건축물의 임의개조로 인한 구조부실, 물건 적치로 인한 피난동선 방해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그림 IV-6] 부산 사하구 오피스텔 부동침하(2017)



▲ [그림 IV-7] 밀양요양원 화재(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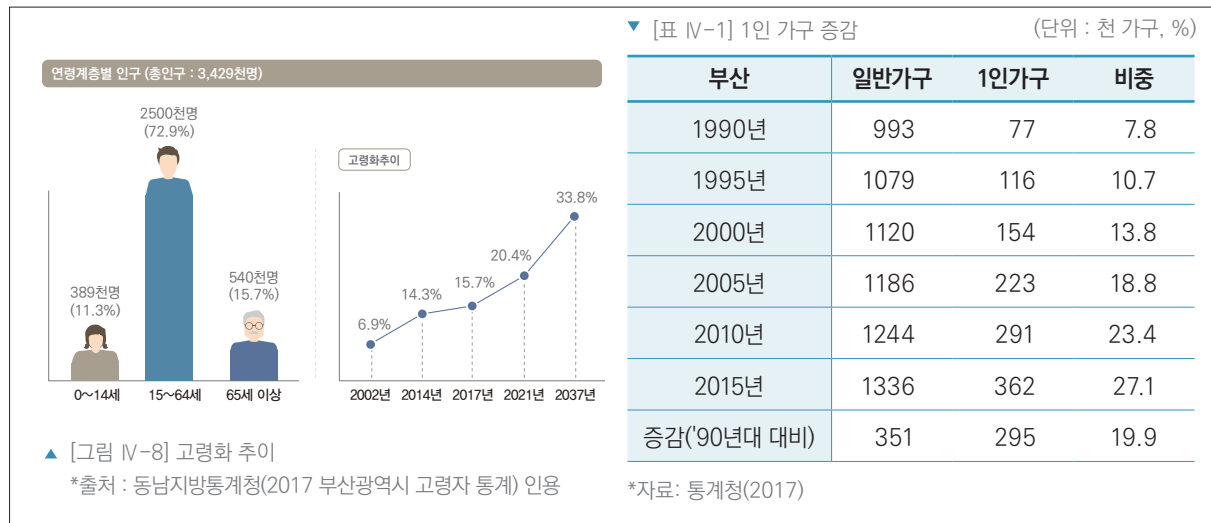
4)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대응

• 고령자 비율의 증가

- 전국 7대 광역시 가운데 지난 2014년 처음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추세라면 2021년에는 고령자 수가 20.4%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 20년 후에는 33.8%로 3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되는 심각한 수준으로 예상됨
- 부산에서 연이어 발생되고 있는 고독사의 위험군인 고령자 단독가구는 10만7000(27.9%) 곳으로 나타났고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32만3000(23.9%) 곳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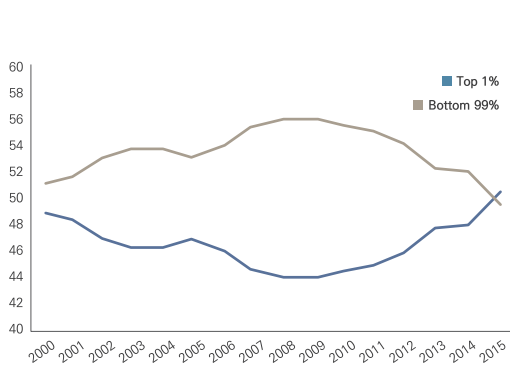
• 1인가구의 꾸준한 증가추세

- 2017년 발표된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부산의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27.1%를 차지하며,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32.0%, 2035년에는 34.9%, 2045년에 36.2%로 세 가구당 한 가구가 1인가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5)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에 대응하는 공정한 도시에 대한 요구

-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으로 전세계 1%의 부자가 전 세계 부의 50% 이상을 차지
- 성, 연령, 소득, 인종, 장애 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도시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음
- 민주사회의 성숙으로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 증대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 : 청년 주거난, 고령친화주거, 노후주거지 주거환경



▲ [그림 IV-9] Credit Suisse data available 200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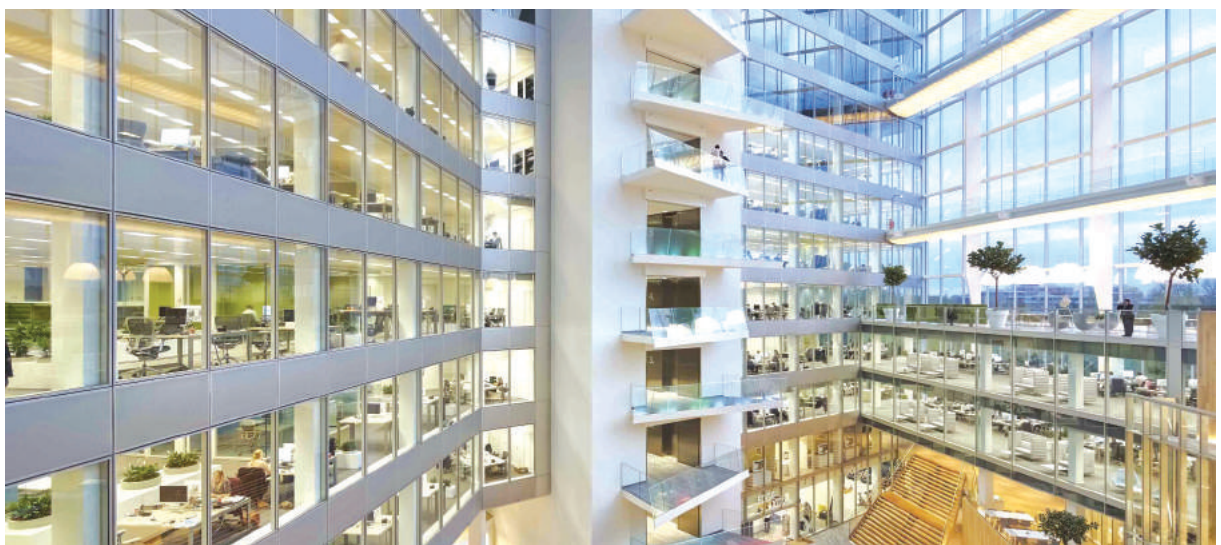
▲ [그림 IV-10] 브라질 상파울루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보여주는 모룸비(Morumbi) 지구

6)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과 건축산업의 고도화

- 디지털, ICT, 인터넷, AI, 가상현실(VR), 증강 현실(AR) 등 건축과 도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음
- 지역 수요에 맞는 스마트도시재생 서비스의 선정과 적합한 스마트도시 솔루션 제시가 가능한 스마트 거버넌스 지원이 필요함
- 건축서비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
 - BIM의 활용으로 건축자재 절감 및 공기단축, 원하는 형태의 정확한 제작으로 건축폐기물의 최소화 가능
 - 신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으로 부산 건축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그림 IV-11] 다양한 기술 분야 및 솔루션으로 구성된 스마트시티 개념도



▲ [그림 IV-12] 스마트 빌딩 기술이 구현된 The Edge Building, 암스테르담

7) 고층화 및 경관훼손에 대응하는 도시건축

- 초고층 아파트시대 진입으로 기존 경관정책으로 대응 어려움
 - 부산의 해안이나 강변 등 수변부에 지속적인 대규모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로 도시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조망을 차폐하고 있음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제한 방식으로 변경된 뒤, 과거에 비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고층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대규모 재개발과 합필개발(고층고밀의 공동주택, 나홀로 아파트 건설 등)로 인한 저층 주거지의 스카이라인 파괴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 해운대 지역 등 특정 지역 집중 개발로 인한 경관과 교통의 문제
 - 인기 있는 특정지역에 고층건물이 집중 건설됨으로 경관을 훼손하고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의 우려가 있음



▲ [그림 IV-13] 황령산에서 본 해운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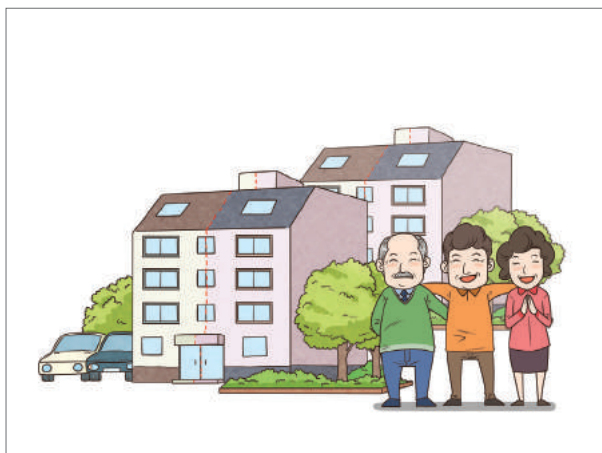
▲ [그림 IV-14] 수정동 망양로에서 본 북항 전망

8) 시민 참여에 대한 요구

- 민주사회의 성숙과 공정한 사회에 대한 요구 증대
 - 민주사회와 시민의식의 성숙으로 성, 연령, 장애, 종교, 빈부 등의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인정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음
- 건축 및 도시공간 생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 의식
 - 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높이고, 도시의 건축문화 활동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
 - 주거지 안정화 및 도시재생 관련하여 시민과 주민이 참여하는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그림 IV-15] 시민계획단이 참여한 부산도시계획현장



▲ [그림 IV-16] 주민이 참여하는 건축협정

9) 수준 높은 건축과 도시공간에 대한 요구

- 1950년대 피난 시절과 1960년대 이후 산업화시대에 형성된 무질서한 도시공간과 임시변통의 건물로 인한 도시 이미지의 극복이 필요함
- 수준 높은 건축디자인의 지원과 창작으로 국제적인 건축문화도시로 정립하여 관광컨벤션, 영상 등의 산업에 시너지 효과를 제공
- 우수한 건축가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로 경제활성화와 문화교류에 기여



▲ [그림 IV-17] 부산 오페라 하우스 조감도(설계 : 스노헤타)



▲ [그림 IV-18] 키스라이어 센터(설계 : 조병수)

10) 시민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구

- ‘저녁이 있는 삶’, 워라벨(Work-Life Valance), YOLO 등 삶의 질을 보장하는 도시에 대한 요구
 - 도시민의 삶의 질이 곧 도시의 질이므로 생산기반중심에서 생활환경과 문화중심으로 전환
- 시민을 위한 안정된 삶터를 제공하는 도시가 가장 지속적인 도시임
- 특색과 매력을 갖춘 도시환경이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것이 21세기 도시 경쟁력의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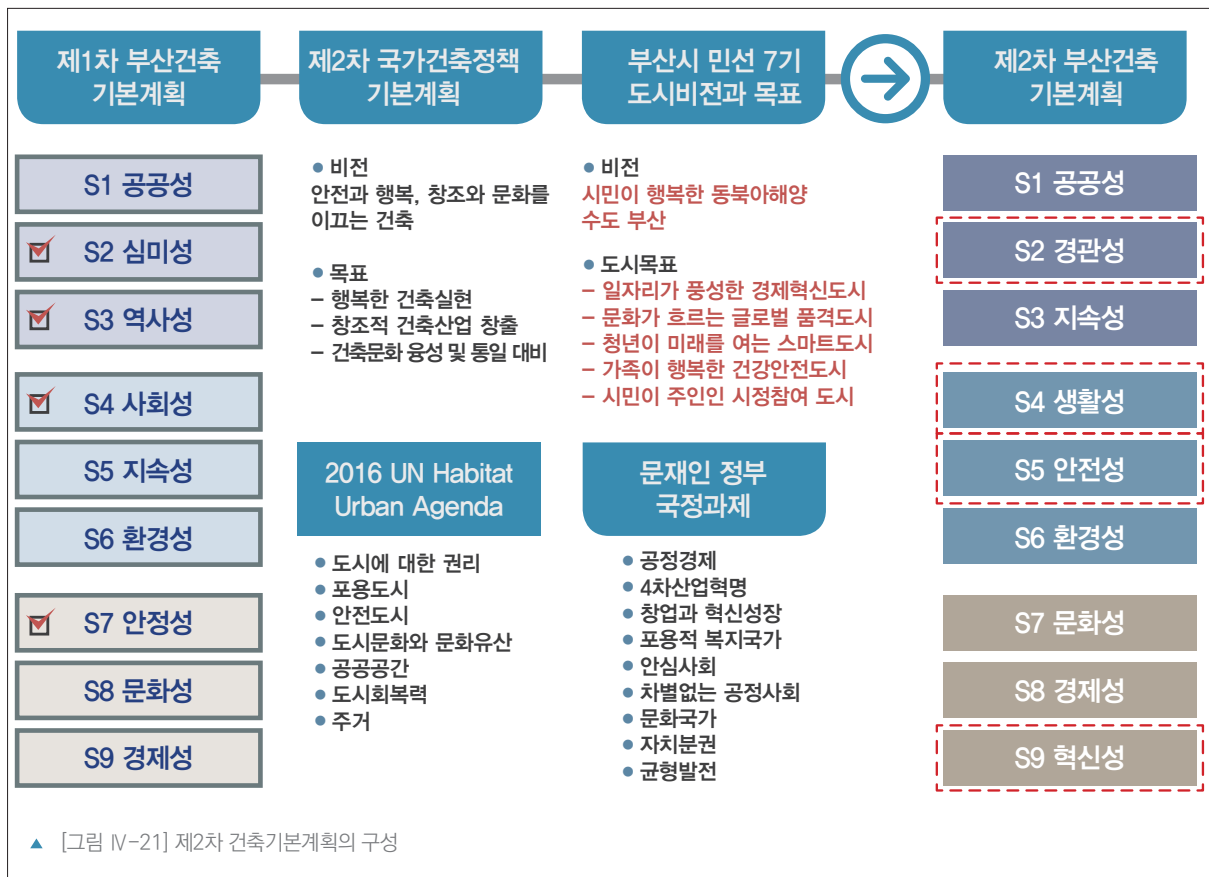
▲ [그림 IV-19] 근대건축물을 리모델링한 카페



▲ [그림 IV-20] 가족이 즐기는 광복로 거리공연

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구성

2.1 기본계획의 구성



- 2012년 이후 제2차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부산시 민선7기의 도시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기초를 수정
-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9가지 기조인 공공성, 심미성, 역사성, 사회성, 지속성, 환경성, 안정성, 문화성, 경제성을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에서는 공공성, 경관성, 지속성, 생활성, 안전성, 환경성, 문화성, 경제성, 혁신성으로 변경
- 심미성, 역사성, 사회성, 안정성을 경관성, 생활성, 안전성 혁신성으로 수정
 - 매력적인 도시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성
 - 정주성제고와 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활성
 - 각종 재난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건축 시스템을 위한 안전성
 - 4차 산업혁명과 건축산업의 고도화에 대응하는 혁신성

2.2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목표 1

공정한 도시

지역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개방적인 품격 있는 도시기반

공공성	경관성	지속성
전략 1 일상공간과 공공공간을 아우르는 공공성과 쾌적성 제고	전략 2 심미성과 지역성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 도시경관의 형성	전략 3 복지와 건강을 융합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회복

목표 2

안전한 도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심·안전·안정의 친환경 도시건축

생활성	안전성	환경성
전략 4 이웃공동체에 기반한 정주성 제고와 공동체 역량강화	전략 5 지진/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건축 시스템 구축	전략 6 기후변화, 생태, 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목표 3

활기찬 도시

창의적 건축문화육성과 혁신적 건축생태계

문화성	경제성	혁신성
전략 7 역사와 문화자산에 기반한 지역밀착의 건축문화시스템 구축	전략 8 저성장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전략 9 미래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선진화

▲ [그림 IV-22] 제2차 건축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2.3 전략별 세부 전략

가치	9대 전략	세부 전략
목표1.	공정한 도시 : 지역을 존중하고 모두에게 개방적인 품격있는 도시기반	
S1 공공성	일상공간과 공공공간을 아우르는 공공성과 쾌적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시민의 삶과 밀착된 일상 공간을 정비하고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공공건축물이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한다.
S2 경관성	심미성과 지역성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 도시경관의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부산의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기존의 도시 맥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건축과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해 세부지역별 그리고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다양한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경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중첩된 경관, 밤과 낮의 시간적 경관, 독특한 근대사가 만든 생활문화 경관 등 부산다운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보존·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한다.
S3 지속성	복지와 건강을 융합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기능의 저하와 왜곡을 초래하는 노후 시가지의 재생을 위해 관련 제도와 계획을 정비하고, 부산의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기능의 효율화와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지원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공간복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건축의 조성을 유도한다.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의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결과물이 지속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가치	9대 전략	세부 전략
목표2. 안전한 도시 : 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심·안전·안정의 친환경 도시건축		
S4 생활성	이웃공동체에 기반한 정주성제고와 공동체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 온 단독주택지와 노후 공동주택단지 등의 정주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 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혹은 민관 협력으로 정주환경을 가꾸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범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한다.
S5 안전성	지진·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건축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노후화, 대형화, 고층화와 함께 증가하는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 건축과 공간환경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관련 기관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S6 환경성	기후변화, 생태, 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건축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온난화와 자원감소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있어서 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지원한다. • 기존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녹색정주공간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친환경 건설 산업을 육성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간다.

가치	9대 전략	세부 전략
목표1. 활기찬 도시 : 창의적 건축문화융성과 혁신적 건축생태계		
S7 문화성	역사와 문화자산에 기반한 지역밀착의 건축문화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건축 및 공간환경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건축문화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 지역의 역사와 삶을 간직한 건축과 공간환경을 부산의 문화자산으로 보전하고 기억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록과 연구를 지원한다.
S8 경제성	저성장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설계/건설업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 국제화, 지역화, 전문화되고 있는 건축분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건축 전문가의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인적 자원을 육성한다. • 우수한 디자인과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건축과 도시공간을 여타 산업 분야와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S9 혁신성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건축산업계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습적인 규제와 절차를 혁신한다. • 건축전문가들이 융·복합시대의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2.4 전략별 세부과제

가치	전략		정책과제 / 실행과제		핵심과제 / 시범사업
목표 1. 공정한 도시					
S1	공공성	정책 과제	S1PT1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
			S1PT2	도시공간의 보행친화성(Walkability) 향상	
			S1PT3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공간	
		실행 과제	S1AP1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V
S2	경관성	정책 과제	S2PT1	경관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모니터링	
			S2PT2	부산다운 경관 창출방안	○
			S2PT3	도시 인프라 및 구조물의 경관개선	
		실행 과제	S2AP1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입지별 경관특성 강화	V
S3	지속성	정책 과제	S3PT1	다함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S3PT2	건강한 도시건축 인프라 구축	
			S3PT3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부산형 도시재생 완성	○
		실행 과제	S3AP1	다함께 행복한 동네거점 조성	V
			S3AP2	도시재생 지역주체 양성	
			S3AP3	유희공간 자원화	
가치	전략		정책과제 / 실행과제		핵심과제 / 시범사업
목표 2. 안전한 도시					
S4	생활성	정책 과제	S4PT1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및 관리	
			S4PT2	쾌적한 단독주택지 유지 및 관리	
		실행 과제	S4AP1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S4AP2	단독주택지 동네골목 가꾸기	
S5	안전성	정책 과제	S5PT1	노후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
		실행 과제	S5AP1	부산지역 건축시설물 안전지도 작성	
			S5AP2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S5AP3	활용 가능한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S5AP4	노후건물 안심보강 시범사업	V			
S6	환경성	정책 과제	S6PT1	자원순환형 녹색 입체도시	
			S6PT2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정책의 융합	○
		실행 과제	S6AP1	부산시 맞춤형 녹색건축 개발 보급	V
			S6AP2	부산녹색건축센터 설립	
			S6AP3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	

가치	전략		정책과제 / 실행과제		핵심과제 / 시범사업
목표 3.			활기찬 도시		
S7	문화성	정책 과제	S7PT1	우수 건축문화 자산 발굴 사업 및 보존 활용	
			S7PT2	건축문화 향상과 시민참여 다양화	
			S7PT3	도시건축거버넌스 활성화	○
		실행 과제	S7AP1	부산도시건축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	
			S7AP2	도시건축 시민아카데미 활성화	
			S7AP3	도시건축기록화 및 아카이브(DB) 구축	√
S8	경제성	정책 과제	S8PT1	부산건설관련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
		실행 과제	S8AP1	'부산다운건축' 가치증진을 위한 건축문화 콘텐츠 개발	√
			S8AP2	우수 건축가 지원 및 육성사업	
			S8AP3	중소 건설업체 지원 육성	
S9	혁신성	정책 과제	S9PT1	지역건설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순순환체계 조성	
			S9PT2	건축전문가의 역할·책임·영역 확대지원	○
		실행 과제	S9AP1	도시건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S9AP2	부산형 스마트 시티 구축	√

V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전략별 세부사업

S1. 공공성	
일상공간과 공공공간을 아우르는 공공성과 쾌적성 제고	110
S2. 경관성	
심미성과 지역성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형성	136
S3. 지속성	
복지와 건강을 융합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회복	158
S4. 생활성	
이웃공동체에 기반한 정주성제고와 공동체 역량강화	198
S5. 안전성	
지진·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건축 시스템 구축	222
S6. 환경성	
기후변화, 생태, 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246
S7. 문화성	
역사와 문화자산에 기반한 지역밀착의 건축문화시스템 구축	272
S8. 경제성	
저성장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308
S9. 혁신성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 선진화	330

S1

공공성

일상공간과 공공공간을 아우르는 공공성과 쾌적성 제고

S1-a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시민의 삶과 밀착된 일상공간을 정비하고 조성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S1-b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을 창출하는데 공공건축물이 시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식을 개선한다.

정책과제

- 1 **S1PT1** | 핵심과제 |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 2 **S1PT2** 도시공간의 보행친화성 향상
- 3 **S1PT3**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공간

실행과제

- 1 **S1AP1** | 시범사업 |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2011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받은 작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부산 문현동의 '푸른솔 경로당'이에요. 소방도로 개설공사를 하고 남은 구유지의 자투리땅 65㎡에 지은 정말로 작은 경로당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작은 땅을 어떻게든 살려내려 동분서주했던 공무원의 의지가 없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을 집이었습니다. 이 조그만 집을 정감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했던 건축가의 마음이 보였죠."

(설계 : 서원건축 조서영소장)

_ 서울대학교 김광현 교수의 마지막 강의



공공성

정책과제 1 | 핵심과제 |

S1PT1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 ✓ 공공건축물이 디자인 향상을 통해 도시의 건축수준을 높이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 ✓ 공공건축물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이용범위를 넓힌다.
- ✓ 우수한 디자인 확보를 위한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발주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 [그림 V-1] 영화의 전당, 부산국제영화제

1. 배경 및 필요성

1.1 부산의 문화수준 향상과 질 높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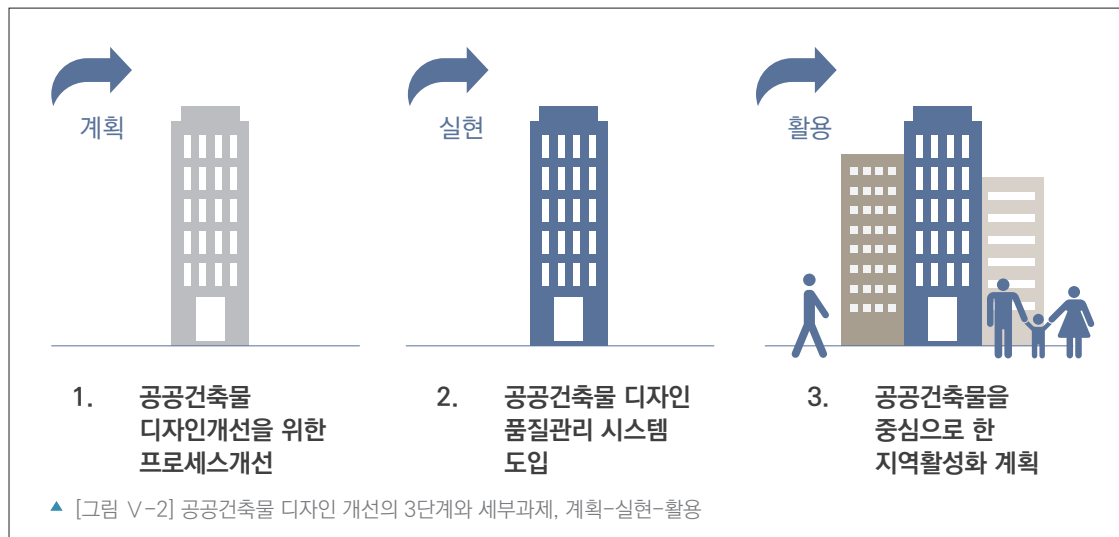
- 부산의 공공공간은 부산 시민의 생활수준 및 행정서비스의 발전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낙후되고 부족한 실정임
- ‘도시의 공공공간이 도시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가시적인 지표’라는 인식이 필요함
- 행정서비스는 시민을 위해 점점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에 대한 요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1.2 공공건축물의 다각적인 이용 및 공공성 확대 필요

- 기존 공공건축물에 휴식공간, 식음료 공간, 유통 및 상업 공간, 복합문화 공간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업무기능 위주의 공간을 탈피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이용을 확대함
- 공공건축물의 시각적·공간적 중심성을 부여하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며, 외부 공공공간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개방적으로 공간을 구성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1.3 공공건축물의 건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의 중요성 증가

- 공공건축물을 계획할 때, 개별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수립하고, 건축 전문 부서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기획 단계에서 발주, 설계,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디자인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 디자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디자인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여 최저가 입찰 방식 등은 지양하고, 우수한 건축가를 선정하기 위한 다양한 현상설계 공모 발주방식을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 기존의 공공건축물들이 행정, 복지, 교육 등 기본적인 업무에만 이용되어, 시민들이 언제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현재 많은 공공건축물이 공간시설이 낙후되었고, 디자인도 뒤쳐져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긍심이나 삶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 있음
- 공공건축의 기획에서 건축전문이 아닌 행정에 주도되는 경우가 많아서, 부실한 기획으로 추진될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의 기능 및 이용의 변화를 수용할 여지가 없음
- 공공건축물 디자인 결정 과정에서도 우수 디자인 선정을 위한 관리조직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하향적 체계로 디자인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음
- 디자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시공 및 이용 과정에서 디자인 변형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공공건축물 디자인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있음
- 결과적으로 단순한 기능과 매력 없는 디자인을 가진 공공건축이 양산되어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3. 과제의 목적

- 공공건축물의 우수한 디자인 확보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디자인 행정 시스템 개선
- 시민들의 커뮤니티, 문화생활, 도시 활성화 거점으로 공공건축물의 역할을 확대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군이 발주하고 그 예산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4.2 내용적 범위

-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의 기획에서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
- 공공건축물 조성 관련 조직과 운영방식, 행정업무체계 개선
-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 및 커뮤니티 거점화를 위한 추진방향 제시

5. 세부과제

5.1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S7PT3와 연계)

1)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민·관 전담조직(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을 구성하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 기획 및 디자인 선정 방식 결정
-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공공건축물 조성 예정인 각 부처들이 참여하는 분기별 사전협의회를 운영하여 정보교환, 사업 조정, 상호 지원을 협력함

2) 공공건축물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 : 계획참여방식 개선

- 공공건축물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급자 계획에서 수요자 계획으로 프로세스 개선
- 건축물의 용도, 성격, 디자인 방향에 대한 지역의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및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을 확대
- 부산건축제를 중심으로 산·관·학 프로젝트 확대
 - 부산의 현안들에 대해 부산건축제 국제워크숍과 같은 산·관·학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확대 및 실행 프로젝트의 추진

3) 다양한 발주방식을 통한 우수 디자인 확보

- 우수 건축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참여방식 간소화 및 집중화
- 제출물 간소화를 통한 현상설계 비용을 절감토록 하는 약식 현상설계 공모 확대
- 건축가의 능력에 상관없는 가격 입찰제를 지양하고 우수 건축가를 선정할 수 있는 평가 제한 및 지명설계 등 다양한 방식 도입

4) 현상설계 공모 운영과정 개선

- 설계경기 참여자에 대한 적정보상금 지급 노력
- 심사위원의 적정인원 한정 및 심사위원 명단 사전 공개
- 심사결과 및 심사결과보고서 공개 및 참여 작품 공개전시

5.2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S7PT3와 연계)

1)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조정건축가(CA : Coordinating Architect) 제도 도입

- 현상에 당선된 설계안이 시공과정이나 내장공사로 인해 중간에 변질되거나 디자인 수준이 저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건축가 중에서 조정건축가를 위촉하여 디자인 품질을 관리하도록 함
- 장기적으로 현상설계의 경우 당선자가 설계안의 의도에 따라 시공 및 내·외장 디자인 감리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

2)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품질 책임제도 도입

- 공공건축물이 문화공간, 커뮤니티 및 도시 활성화 거점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획을 한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를 대상으로 '우수기획'에 대한 포상 제도 도입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산다운 건축상>의 공공부문의 수상자로 건축가, 건설회사와 함께 디자인 품질을 잘 관리한 행정 담당자도 포함하여 시상

5.3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1) 공공건축물의 커뮤니티 및 도시 활성화 거점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 공공건축물의 커뮤니티 활동 거점화 방안 : 공공건축물을 기획할 때, 주민들을 위한 문화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내·외부 공간에 적극적으로 반영
- 공공건축물의 도시 활성화 거점을 위한 방안 모색 : 공공건축물이 입지하는 주변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문객을 유도하고 다양한 활성화 사업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기능을 도입

2) 우수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관광자원화 계획

- 특색 있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고 콘텐츠로 활용하여 스토리텔링, 이미지 홍보, 상품개발 및 브랜드화를 시도
- 공공건축물을 거점으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각종 탐방코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함



▲ [그림 V-3] 서울 오류 2동 주민센터 동네도서관
*출처 : 서울사랑(서울시정월간지)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0)	중기 (2021~2023)	장기 (2024 이후)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		·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 공공건축물의 생산 프로세스 개선 · 다양한 발주방식 및 운영과정 개선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시의회 공공기관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			·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조정건축가 (CA : Coordinating Architect) 제도 도입	건축정책과
		○		· 공공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품질 책임 제도 도입.	건축정책과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		· 공공건축물의 커뮤니티 및 도시 활성화 거점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공공기관
		○		· 우수 공공건축물을 활용한 건축관광자원화 계획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40				20	20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관리 시스템 도입	60			20	20	20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실행	200				100	100
계	300			20	140	140

S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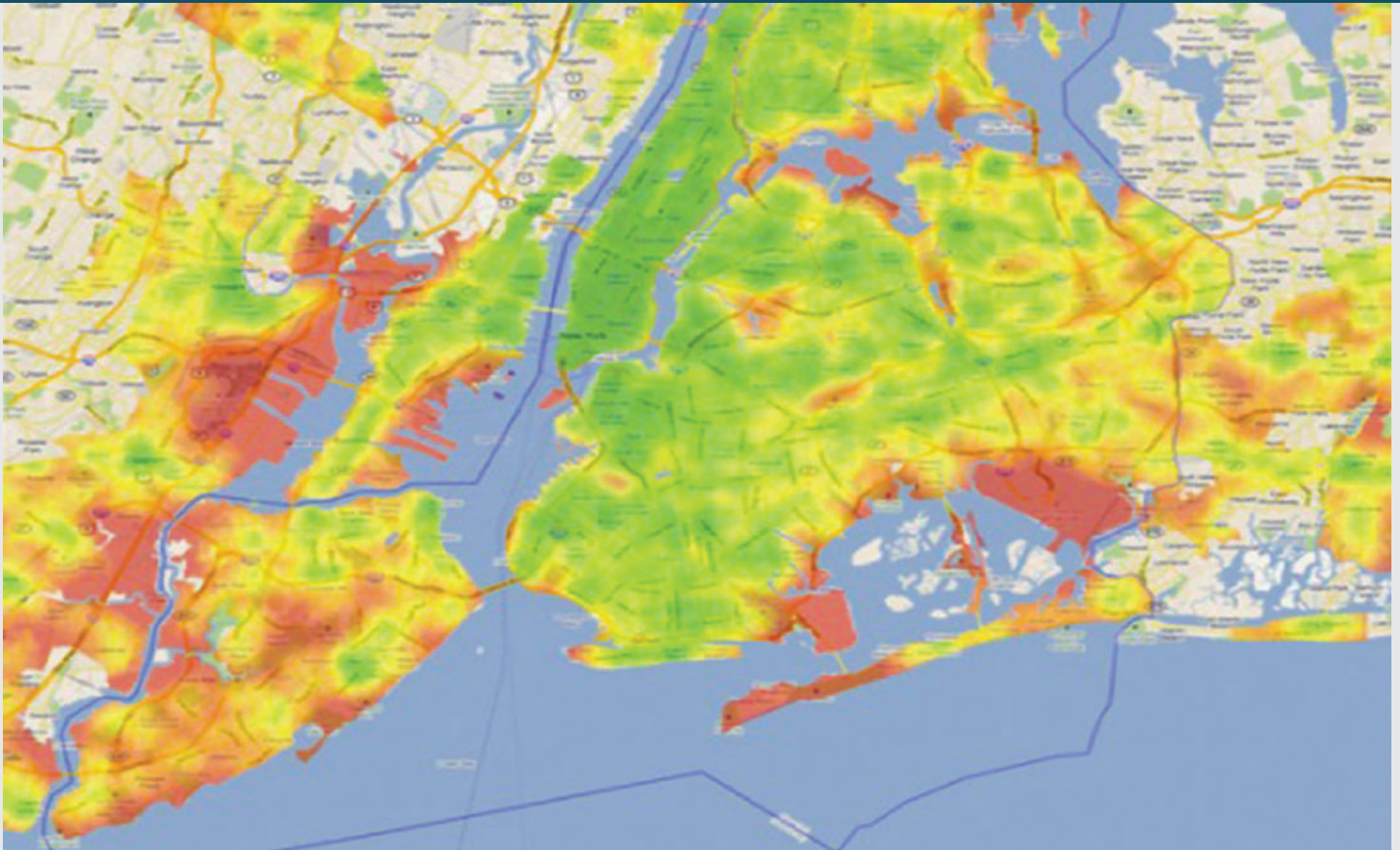
공공성

정책과제 2

S1PT2

도시공간의 보행친화성 (Walkability) 향상

- ✓ 가로활성화 및 보행환경 향상을 통해 도시의 어메니티를 향상시킨다.
- ✓ 보행자 네트워크와 근린생활동선의 시퀀스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 건축을 유도한다.
- ✓ 특색 있는 가로의 발굴, 조성, 관리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외부공간을 확충한다.
- ✓ 가로변 연접 전면공지, 공개공지를 취지에 맞게 심의하고 관리하며,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여 가로 활성화에 기여한다.



▲ [그림 V-4] 뉴욕시 보행성지표(Walk Score) : 녹색은 보행성이 좋은 지역이다. 보행성은 도시의 환경, 시민의 건강 그리고 지역의 경제에도 기여하는 가장 간단하고 최고의 해결책이다

*출처 : www.walkscore.com

1. 배경 및 필요성

1.1 보행 친화성은 도시 공공성 및 쾌적성의 척도로 적극적 계획 대상

- 기능을 중심으로 계획해온 이제까지의 도시계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활동인 보행성(walkability)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못했음
- 보행성은 도시를 만들고 유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 즉 건축가 및 건축행정가의 인본주의적 사고의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음
- 역사 및 문화자원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가로를 발굴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도시의 매력을 높이도록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1.2 보행을 기반으로 한 주요 외부활동에 대한 종합적 공간 계획 필요

- 출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우리가 경험하는 도시공간은 바로 보행공간을 의미함
- 보행공간에 대한 계획은 개별 건축행위의 폐쇄성과 배타성 그리고 도시 계획이 가지는 조정기능의 한계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 보행공간의 계획은 하나하나 단절된 개별 건축계획을 연결하는 것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건축 및 공간환경 계획의 영역이므로 계획 및 실행의 주체가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재개발 및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존 도시에 모세혈관처럼 분포하던 많은 보행로가 사라지고 있음
- 주거지의 가로는 주차장으로, 상업지의 가로는 주변 상가들의 무분별한 점유로 인해 사유화되어 보행의 쾌적성은 물론 보행 연속성마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임
- 교통사고 사망률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면도로 사망률은 증가하는 추세로 도시 내 보행 안전성은 계속 열악해지고 있음
- 도시 내에서 부족한 보행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 보행 통로 등을 제대로 확보하고 유지하여, 원래의 취지대로 보행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관리해야 함

3. 과제의 목적

- 보행환경 향상을 통한 가로활성화와 도시 어메니티 향상
- 보행 연속성과 안전성 등 보행공간의 기본적 성능 확보
- 보행자 네트워크와 근린생활동선 시퀀스 개선에 기여하는 도시건축 유도
- 특색 있는 가로의 발굴, 조성, 관리를 통해 매력적인 도시 외부공간 확충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주요 상업 및 업무지구의 가로
- 도시의 가로구역(블록)을 차지하고 보행성을 저해하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및 건축물
- 보행 및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부산시 전역의 가로

4.2 내용적 범위

- 상업 및 업무지구의 다양한 전면공지/공개공지의 관리제도
- 공동주택 단지의 빗장도시(gated community) 방지 및 통행성 개선을 위한 관리
- 보행친화도를 평가할 수 있는 가로의 보행성 평가기준 마련

5. 세부과제

5.1 상업 및 업무지역 건축물 주변 보행성 향상

1) 가로변 연결 전면공지/공개공지 활성화 기본방향 설정

- 전면공지/공개공지는 인접 보행도로와 연계하여 확장된 공공공간이므로, 도심 속의 커뮤니티 공간 및 휴식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함
- 가로를 따라 전면공지/공개공지가 연속적인 보행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별 통합적인 계획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방침을 수립

2) 전면공지/공개공지 현황조사 및 종합 계획(마스터플랜)작성

- 각 자치구별 주요 상업 및 업무지구의 전면공지 및 공개공지 사용현황 및 실태조사
- 지역의 가로 및 보행네트워크 특성을 고려하여 전면공지/공개공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종합 계획 수립
- 인접 대지의 전면공지/공개공지와 연속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심의지침 수립
- 인접 대지와와의 이격공간에 일정 폭 이상의 보행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공개공지로 인정하는 등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

5.2 빗장도시(Gated Community) 건축물 통행성 및 보행성 향상

1)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 네트워크 확보 및 공공성 증진 가이드라인 수립

- 재개발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골목을 재개발 단지로 모두 편입하면서 공동주택단지 내부의 도로율이 낮아지고 주민들만 폐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공성이 상실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 재개발사업 이전 기존 가로는 제공했던 통행성에 준하는 공공가로를 확보하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부를 폐쇄적으로 사유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통과 보행로 및 단지 내 시설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마련

2) 대규모 공공기관(대학, 구청, 법원 등)의 담장 허물기 및 통행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 대학, 구청, 법원 등은 공공기관임에도 도시 내 보행성 및 통행성을 단절하는 요소로 자리 잡음
- 점차 빗장도시화 되는 도시공간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증진하는데 대규모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

5.3 보행친화성 평가 및 보행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보행혁신 3.3.3)

1) 보행성의 평가척도 마련

- 보행친화성은 도시의 어메니티와 환경의 척도이며, 해외에서는 ‘보행자 친화적(pedestrian-friendly)’, ‘보행친화성(walkability)’ 등의 개념을 기반으로 평가 척도를 마련해 왔음
- 서울은 1998년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이후 보행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고, 민선 5기 이후 ‘보행친화도시 서울’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전용거리 등을 조성하고 있음
- 이동차량의 위협, 주차차량의 방해 등 보행의 불편함을 주는 요소를 ‘-’로, 접근의 용이성, 소공원 및 역사문화자원의 매력도, 녹화 등 보행의 쾌적성을 ‘+’로 평가하는 평가척도를 마련

2) 보행친화성 평가를 기반으로 보행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 보행친화성 및 안전성의 평가척도를 기반으로 자치구별 가로의 보행성을 평가하고 성능을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 보행성 평가척도가 낮은 사고빈발지역을 중심으로 통행차량의 평균속도, 사각지대 등 위험요소를 찾아내고 대책 수립

5.4 친밀한 근린보행가로 조성(※시민에게 꼭 필요한 보행환경개선)

1) 근린단위별 주요보행 접근로 조사 및 친밀한 근린보행가로 선정

- 교통의 발달 및 유통의 대형화 등으로 도시의 생활동선이 특정 지역으로 집중화되면서 근린중심가로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
- 생활권역 별 근린중심가로를 선정하여 보행성을 개선하고 이미지와 브랜딩을 구축하여 근린가로의 활성화와 역할을 제고

2) 친밀한 근린보행가로의 지속적 관리방안 수립

- 근린 지구별 주요 근린가로를 인근의 공원과 역사 문화자원 등과 연결시키는 다양한 보행 접근로 개발
- 주민제안에 따른 민간지원 방식을 도입하여 근린 보행가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그림 V-5]
보행친화성 및 안전성의
저하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상업 및 업무지역 건축물 주변 보행성 향상		○		· 전면공지/공개공지 조성기본방향 설정 · 전면공지/공개공지 현황조사 및 마스터플랜 작성	도시계획과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빛장도시 건축물 통행성 및 보행성 향상	○			·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로 네트워크 확보 및 공공성 증진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균형재생국 시의회
		○		· 대규모 공공기관의 담장 허물기 및 통행성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도시균형재생국 자치분권과 자치구·군
보행친화성 평가 및 보행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		· 보행친화성 평가척도마련(시), 평가실시(구)	건축정책과 자치분권과 자치구·군
		○		· 보행친화성 평가를 기반으로 보행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정책과 자치분권과
친밀한 근린보행가로 조성			○	· 근린단위별 주요보행 접근로 조사 및 친밀한 근린보행가로 선정	도시균형재생국 자치분권과 자치구·군
			○	· 친밀한 근린보행가로의 지속적 관리방안 수립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상업 및 업무지역 건축물 주변 보행성 향상	200				100	100
빛장도시(gated community) 건축물 통행성 및 보행성 향상	100		50	50		
보행친화성 평가 및 보행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200				100	100
친밀한 근린보행가로 조성						
계	500		50	50	200	200

S1

공공성

정책과제 3

S1PT3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공간

- ✓ 자연과 건축물의 공존과 상호 시너지를 통해 도시 쾌적성을 향상한다.
- ✓ 공원녹지 확충에 부합하도록 건축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 ✓ 도시지역 내 산지, 강변, 해안 등 자연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한다.



▲ [그림 V-6] 연제구 망미주공아파트 : 부산의 부족한 공원녹지를 보완하는 아파트 단지의 녹지
*사진 : 윤준환

1. 배경 및 필요성

1.1 부산시 근린녹지율 제고를 위한 건축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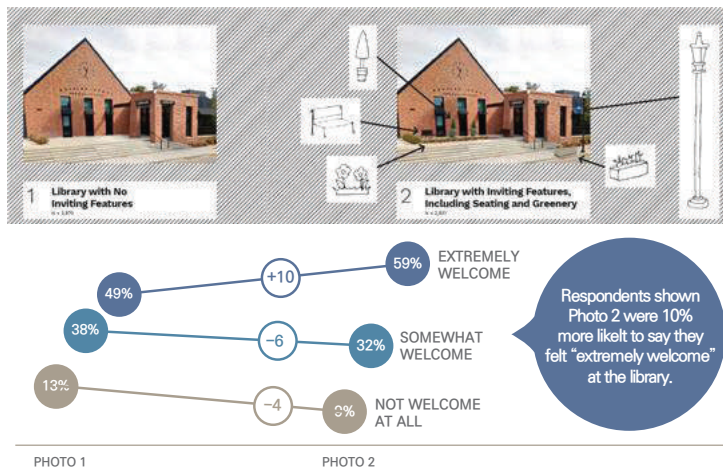
- 도시 내 근린녹지의 증가는 주로 도시개발,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건축 행위를 통해 얻어짐
- 부산은 도시 녹지율이 낮으므로 건축정책을 통한 적극적 녹지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함
- 조경면적을 제고하기 위한 건축제도들이 있지만 현재는 법정 의무로 인식될 뿐 전체적인 청사진과 계획은 수립되지 않음

1.2 도시 공공공간의 쾌적한 향유를 위한 계획 및 제도

- 건축 행위 시 의무화되어 있는 녹지율의 확보는 식재의 양, 식재의 질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인도 등으로 '구분된' 면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계획 시부터 녹지는 이용자와 분리되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일정 규모 이상 건축 시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녹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홍보하고, 실제로 공공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및 인센티브를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정비사업, 재생사업 시 녹지계획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녹지에 대한 의식 및 이용에 관한 합의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

Case Study : 미국 활동적 디자인센터(Center For Active Design)의 사진실험

도서관 전면에 녹지조경과 의자를 설치하는 작은 변화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사진을 통해 실험하였다. 사진 1은 의자는 전혀 없고 녹지도 거의 없으며, 사진 2는 벤치와 많은 조경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하였다. 매우 작은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사진 2의 도서관이 '매우 사람들을 환영한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진 1보다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 실험은 건물 주변 녹지조경과 같은 작은 개선이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림 V-7] 사진실험

*출처 : Center for Active Design(2018), 『Assembly : Civic Design Guidelines』

2.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의 녹지율은 도시 전체로는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시가화 구역의 녹지율은 산업화 시대의 난개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시민의 생활 쾌적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아파트 단지 내 사유화된 녹지, 자동차 도로변의 접근 불가능한 곳의 녹지 등 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공급되는 녹지가 아니라, 시민이 쉽게 이용가능하고 쾌적성을 높이는 녹지가 부족함
- 건축행위에 수반되는 도시자연의 보전과 개발은 늘 시민들의 참여한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는 이슈로서 보전해야 할 자연자원과 적극 활용해야 할 자연자원을 구분하는 기준이 부재함
- 도시 내 공원프로젝트가 주변의 생활권과 분리되어 있거나 보행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도시 내의 단절된 섬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음
- 공유재 성격을 가지는 자연자원에 대한 계획 결정권을 가진 관련 공공기관과 보전에 목소리를 높이는 시민단체가 대다수의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구성원 간의 합의 기제가 부재함

3. 과제의 목적

- 시가화 지역에서 녹지의 양적 증가, 근린 녹지의 이용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가이드라인 수립
- 도시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의 녹지에 대한 지속적 보전 또는 건축적 활용의 방향성 수립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의 녹지관리지역의 구분에서 '시가지 녹지 보전' 지역 및 '해양경관보전' 지역
-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지역 내 녹지율 제고를 목표로 하는 시가화지역

4.2 내용적 범위

- 건축행위를 통해 공급되는 녹지의 양적 계획에서 어떤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질적 계획으로 전환
- 근린녹지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지침 수립
- 시가화 지역 내 기존 녹지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시민참여를 통한 정책 방향 수립

5. 세부과제

5.1 녹지증진을 위한 건축정책

1) 녹지 및 친환경정책의 인센티브 기능회복

- 인허가시 건축물 슬래브 하부나 배면 등 실효성 없는 녹지계획을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정녹지율의 녹지의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강화
- 건축물에 부속된 녹지 조성과 관리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한 지침 수립

2) 녹지, 경관, 건축정책의 통합적 관리체계 조성

- 녹지율의 확보만 관리하는 행정적 한계를 넘어서 녹지계획의 공공성과 디자인을 평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등 기준 수립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건축적 계획의 부차적 요소로 여겨지는 공원 녹지계획을 경관계획과 마찬가지로 공공성을 고려한 평가기준 수립
- 중심상업지 및 노후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에서 환경개선사업 분야에 공원녹지 관련 세부사업을 적극 고려하도록 활성화 계획 수립 유도

5.2 참여하는 도시자연 정책

1) 도시 내 자연자원(자연녹지 등)의 개발에 관한 시민 의견수렴방식 마련

- 녹지 확보 및 자연정책이 개인의 재산권과 대립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체적 시민참여 방식 유도
- 도시 내 자연녹지 등의 개발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민참여 공론화방식 도입

2) 참여를 통해 도시 내 자연자원의 개발에 관한 판단 근거 정립

- 도시 내 공원으로 지정된 미개발 녹지, 개발이 예상되는 자연녹지 등의 보전/활용 여부에 대한 시민참여 공론화로 초기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 확보
- 시민참여를 통해 도시 내 자연자원의 개발에 관해 절대보전부터 적극적 이용까지 등급분류 및 행정적 판단근거 정립



◀ [그림 V-8] 연제구 배산 주변 :
자연녹지의 개발과 시가화
*사진 : 윤준환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녹지증진을 위한 건축정책		○		· 녹지 및 친환경정책의 인센티브 기능회복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실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	· 녹지, 경관, 건축정책의 통합적 관리 체계조성	
참여하는 도시자연 정책		○		· 도시 내 자연자원(자연녹지 등)의 개발에 관한 시민 의견수렴 방식 마련 및 판단 근거 제공	도시계획과 환경정책실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녹지증진을 위한 건축정책 정비	100				50	50
참여하는 도시자연정책	200				100	100
계	300				150	150

S1

공공성

실행과제 1 | 시범사업 |

S1AP1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 ✓ 공공 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커뮤니티를 활성화 한다.
- ✓ 역사 문화적 장소 및 공공시설의 장소성을 증진하여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한다.
- ✓ 근린 단위 커뮤니티부터 도시 전체의 시민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공간을 확충한다.



▲ [그림 V-9] 부산대역 주변 온천천 고수부지를 활용한 라라라페스티벌(2017)
*출처 : 금정구청홈페이지

1. 배경 및 필요성

1.1 공공건축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한 커뮤니티 활성화

- 민간건축물은 점점 더 사유화되고, 폐쇄화되면서 도시는 계층 간 분리가 진행 중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건축물 및 시설물의 중요성이 부각됨
- 도시 성장과 더불어 청소년, 고령자, 외국인 등 공간의 점유와 이용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비영리 공공공간을 공급할 필요성 대두
- 교통, 행정, 체육, 교육 관련 공공건축물은 현재 각각의 기능만을 행사하고 있지만 다양한 사회계층이 서로 만나고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개인화, 커뮤니티 붕괴로 인한 행복감 저하 및 사회유지비용 증가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건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

1.2 역사문화자원 및 공공 도시시설의 장소성 증진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심 제고

- 지역에 대한 애착심, 고장에 대한 애함심은 공동의 기억과 그를 통한 소속감과 자부심에 근거함
- 도시 내 상징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 및 장소, 공동의 기억을 가질만한 장소를 중심으로 공동체성을 제고시킬 방안 마련
- 역사 문화 사회적 측면에서 장소성을 파악하고, 그 성격에 부합한 이벤트를 개발함으로써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지역의 매력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
- 이런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관리자 및 시민, 도시건축 및 문화역사 전문가 등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



▲ [그림 V-10] 시민을 위한 마라톤대회를 위해 개방된 광안대교
*출처 : 부산광역시 홍보자료



▲ [그림 V-11] 동래구 동래읍성 역사축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우리 도시에서도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분리화(segregation)가 진행 중이고, 점차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은 다양한 활용이 가능함에도 시설이 지녀야 할 공공성보다는 시설관리자의 운영 편의와 책임 등의 문제로 오히려 폐쇄적 성격을 갖는 경우가 많음
- 또한, 현재 공공건축물의 제한된 기능으로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고 적극적인 이용을 이끌어 내기가 어려운 상황임
- 주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한 마을 평상, 약수터, 근린 체육시설 등 실제로 지역 커뮤니티 증진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 없음
- 물리적 시설의 공급 등 하드웨어 기반의 도시계획에서 축제, 시민장터, 벼룩시장, 다문화축제 등 장소에 지역 정체성을 더할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Case Study : 베이테라스 주민센터 (Bay Terrace Community & Education Center) / 미국 워싱턴주 타코마

빈곤율(32%)이 높고 교육환경이 열악했던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학교나 상점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저렴한 공공 주택을 건설하면서 인근에 교류와 교육을 위한 주민센터를 함께 조성하였다. 주민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며 서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개방적인 입구공간, 따뜻하게 환대하는 로비공간, 자연광을 활용한 밝은 교육공간, 노유자도 쉽게 수직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와 계단을 계획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공공건축이 되었다.



◀ [그림 V-12] 개발 이전의 낙후된 모습



◀ [그림 V-13]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따뜻한 로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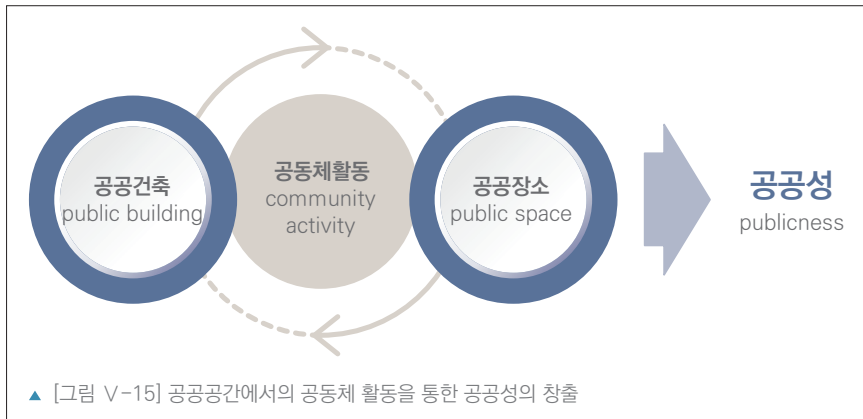


◀ [그림 V-14] 보행로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입구공간

*출처 <https://centerforactivedesign.org/bayterrace>

3. 과제의 목적

- 공공장소 및 공공건축물을 지역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공공 건축물의 활성화와 공공성에 기여
- 기존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소프트웨어 개발로 이용성 제고
-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과 시범사업 실시
-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교통 및 체육시설 등 도시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과 시범사업 실시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의 공공건축물
- 교육 및 행정 등 기타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공건축물
- 체육시설 교통시설 등 공공건축물과 공공장소를 포함한 도시 시설물

4.2 내용적 범위

- 공공건축물의 이용계층 확대 및 시간대별 이용자 활성화 계획 및 시범사업
-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를 통한 공공공간 창출사업
- 지역 정체성 정립에 부합한 장소의 발견과 장소성 확산을 위한 지원
- 공공기관주도의 '공간나눔+이벤트' 사업의 확산과 다변화

5. 세부과제

5.1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공공건축

1) 고령화에 대응한 도시형 노인복지 및 커뮤니티 활동 공간 마련 사업

- 농촌지역의 고령사회는 오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도시에 비해 안정적인 커뮤니티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지역의 고령인구는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 자치구별 건강한 고령사회를 위해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고령자 커뮤니티 활동을 증진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
- 행정동 별 마을 내 노인복지시설의 건축적 수준 및 기능을 제고

2) 학부모 공간지원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증진 및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

추진

- 해외의 경우 마을단위 커뮤니티의 중심에는 지역의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교육 시설은 학부모나 시민의 접근을 제한하기 때문에 근린 주민이 건강한 목적으로 교류할 기회와 장소가 제공되지 못함
- 초·중,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의 현안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커뮤니티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유도
- 커뮤니티 활동은 수업 시간과는 시간대를 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학교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동시에 방과후 학교 주변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안전에도 기여함

5.2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도시시설

1) 소규모 근린커뮤니티 이용시설 지원 사업

- 소규모 근린커뮤니티 시설이란 마을의 주민이 이용하는 마을 평상, 약수터, 근린 체육시설, 동네 구멍가게 등 일상적으로 교류하는 장소 및 부속시설을 말함
- 각종 개발로 인해 소규모 근린커뮤니티 공간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공공적 성격을 강화함
- 시설의 조사 및 시설개선 등 소규모 근린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주민 5인 이상의 제안과 협정의 절차로 결정하고 지원함

2)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시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증진 시범사업

-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은 면적보다는 위치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함
-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은 외부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는 마을의 입구이며 커뮤니티가 공유해야 하는 공공적 자산임
- 버스정류장을 중심으로 마을 초입 공간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마을 어귀' 시범 프로젝트 시행
- 주거지역 주변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마을 생활문화 지원 프로젝트 시행

5.3 공공기관 공간나눔 사업

- 대형 공공시설의 시민행사, 축제 등 공간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 : 각 구청의 대강당, 다목적홀, 앞마당 등의 활용도를 조사하여 시 단위에서 활용 정보 통합 공유
- 단기체류 노동자, 유학생, 상사, 해운 등 자치구 별 거주 외국인 특성을 반영한 공간 나눔 사업 개발
- 지역 내의 미활용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외부와의 소통을 확대



▲ [그림 V-16] 마을버스 주차장을 겸한 커뮤니티 공간(부산 서구 아미·초장도시재생사업)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공공건축		○		· 도시형 노인 커뮤니티 시설 개발 및 지원 시범사업	도시재생정책과 복지건강국 자치구·군
		○		· 학부모 공간지원을 통한 지역커뮤니티 증진	도시재생정책과 교육청 도시계획과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도시시설	○			· 소규모 근린커뮤니티 이용시설 지원 사업	자치구·군 주민센터
		○		· 도시시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증진 시범사업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부산지하철공사
공공기관 공간나눔사업		○		· 사회취약계층 및 외국인에 대한 대형 공공시설 공간나눔	도시재생정책과 복지건강국 여성가족국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공공건축	300			100	100	100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도시시설	300		50	50	100	100
공공기관 공간나눔 사업						
계	600		50	150	200	200

S2

경관성

심미성과 지역성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인 도시경관의 형성

S2-a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어우러진 부산의 자연지형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S2-b 기존의 도시 맥락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창조적인 건축과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해 세부 지역별 그리고 경관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적용한다.

S2-c 다양한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경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중첩된 경관, 밤과 낮의 시간적 경관, 독특한 근대사가 만든 생활문화경관 등 부산다운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보존·육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매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한다.



정책과제

- 1 **S2PT1** 경관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모니터링
- 2 **S2PT2** 부산다운 경관창출 방안
| 핵심과제 |
- 3 **S2PT3** 도시 인프라 및 구조물의 경관개선

실행과제

- 1 **S2AP1**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입지별 경관특성 강화
| 시범사업 |



“나는 우리의 테마를 잘 보여주는 장소를 찾고 있었다. 액션장면이 밤에 촬영하므로 멋진 야경을 가지고 있고, 미래적인 장소여야 했다. 현대적인 측면과 전통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진 배경을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었다”

_ 라이언 쿠글러, 블랙 팬서 감독 / 각본, 부산촬영 이후 인터뷰

S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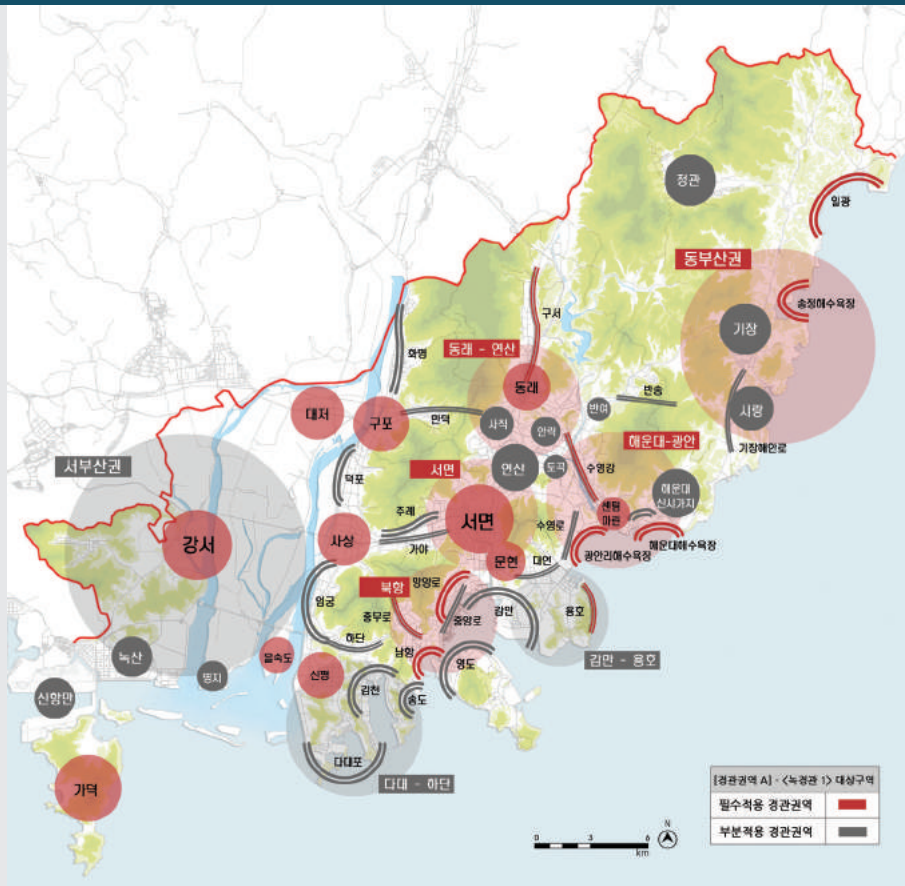
경관성

정책과제 1

S2PT1

경관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모니터링

- ✓ 자연과 인공구조물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입체적으로 관리한다.
- ✓ 지구단위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건축물 상호간 균형을 고려한 경관을 유도한다.
- ✓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를 모니터링하고 경관정책에 피드백한다.



▲ [그림 V-17] 부산시 인공경관 관리구역
*출처 : 부산시 도시경관가이드라인

1. 배경 및 필요성

1.1 새로운 개발에 의한 기존 도시경관의 파괴와 부조화를 조절할 기제 필요

- 경관관리는 신규 개발이 기존의 시가지 환경과 과도한 차이를 만들어 냄으로써 경관에 폭력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규제하고, 용적률 등 건축법상의 기준으로 조정 불가능한 도시경관의 균형을 경관 제도를 통해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관관리는 신규 건축물 또는 단지가 기존의 시가지 및 미래의 주변 환경에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 시 환경 조화도 및 경관 차폐 정도를 조정 관리하는 체계임
- 색채는 주거지, 상업지의 용도차이 및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의 시가지와 조화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창의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1.2 도시의 아름다운 풍경이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이를 지향하도록 유도할 필요

- 건축법 및 시행령을 통해 관리되어 오던 경관 관련 사항들이 사전제한의 폐지 등 법적 제한 요소가 완화되고 지역의 자율성이 증가됨
-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할 권리 및 유지 관리할 책임이 지자체로 이전되고, 지구단위계획 및 정비계획 등 경관에 대한 마을단위 자치성도 증가하고 있음
- 경관의 관리가 법적 체계에서 의사결정의 체계로 전환되면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 등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관한 문제가 점차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됨
- 경관관리의 메커니즘이 높이관리라는 단순한 기준만을 적용함에 따라 건물의 입면적, 향 등에서 유발되는 위압감이나 폐쇄감 등을 조절하는데 실패하고 있음
- 이상과 같이 허용 용적률 및 허용 높이라는 단순한 경관관리체계의 한계로 인해 병풍형 도시경관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기존 경관관리체계와 그로 인해 나타난 실제 경관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경관관리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경관관리의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과 종합적 경관관리 계획의 수립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2.1 경관관리 목표를 이행할 실행수단의 부재

- 높이관리라는 단순한 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경관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 추구하는 주요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부재한 상태임
- 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표인 주변 건축물의 주민 및 시민에게 자연에 대한 연속적 조망 확보, 건축 입면적의 제한, 주변 경관을 따르는 변화하는 스카이라인 등을 이행하게 할 제재 방안이 부재함

2.2 경관관리체계의 낮은 위상 및 관리기능

- 경관관리체계는 건축물의 볼륨 및 형태를 결정하는 최고 높은 단계의 결정 사항임에도 도시의 볼륨을 조절한다는 인식보다는 모양 및 색채에 관여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음
- 리모델링, 친환경, 공공성 등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을 완화하는 인센티브의 남발로 인해 경관에서 지정한 기준선을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경관이라는 비법정 조율 체계는 인센티브 제도보다 낮은 위상을 갖는 경우가 많고 개발사업 심의 시 조정기능을 상당부분 상실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

2.3 지역의 경관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광역관리시스템

- 경관기본계획에서 경관권역 및 관리지역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았지만, 관리 권역별 관리목표 및 관리방안에서 지역별 특성이 부족함
- 건축물/사업의 규모에 따라, 건축물의 심의가 자치구와 시로 분리되면서 지역의 경관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소재가 모호하고, 때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도시경관에 대한 결정은 정치적 결정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관의 결정권은 개발주체와 허가관청에 국한되어 있고 시민/주민의 상향식 의사 전달체계는 부재한 실정임
- 특히, 조망이 좋은 수변지역의 높이 관리가 미흡함
(사례 : 해운대 지역의 고층건물 난개발)

3. 과제의 목적

- 가로구역별 높이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정책개선
- 수변구역별 높이관리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정책개선
- 경관색채관리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후 정책개선
- 경관계획의 실행수단의 개발 및 계획 실효성 증진방안 마련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수립지역
- 부산 전역의 주요하천 및 해안주변
-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구역

4.2 내용적 범위

- ‘경관구역별 높이관리’라는 기존 경관관리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관리기능 분석
- 경관색채관리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조성된 색채경관에 대한 평가
- 부산시 경관 목표에 부합한 계획 및 관리를 실행할 수 있는 실행 제도, 실행 수단 개발

5. 세부과제

5.1 경관구역별 높이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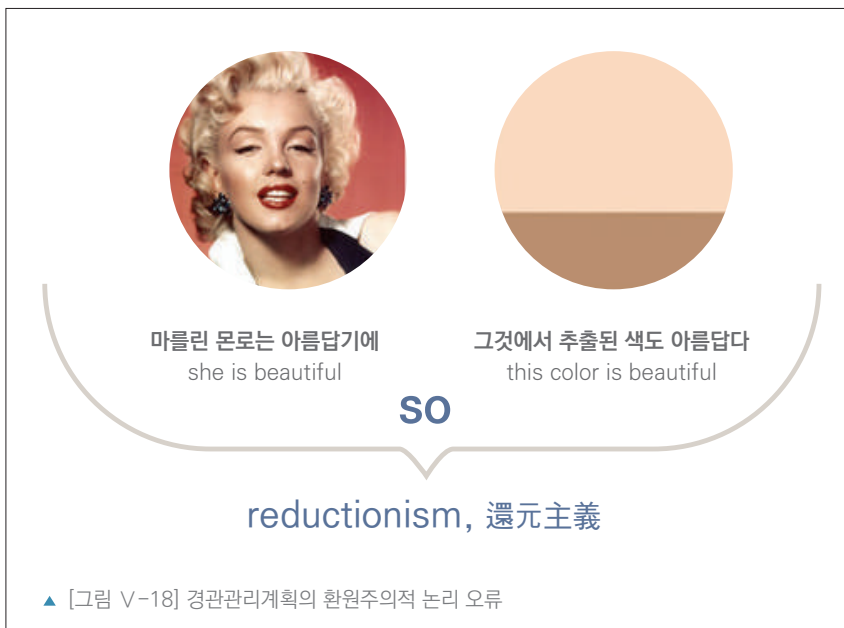
-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제도의 실행 이후 건축물 높이 및 스카이라인의 형태 등의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수변지역의 고층 개발로 인한 자연과의 조화, 풍경의 차폐 등 변화를 경관 기본계획의 관점에서 모니터링 실시
-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한 외부기관의 위탁 연구를 통해 부산의 주요 경관 권역 별 경관관리의 현황에 대해 평가
- 각종 인센티브의 공공성이 지니는 가치를 객관적 수치로 산정하여 사업성 검토 이후 허용 비율 및 적용 범위의 관리를 통한 경관관리 실행력 제고

5.2 경관색채관리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 부산다운 색 선정의 근거로 삼은 대상 및 색상 추출 과정의 논리 강화 및 시민 인식 공유
- 지역별 지정된 경관색채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색채의 사용 현황 및 적정성 분석
- 건축물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적정 비율에 대한 적용현황 모니터링
-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재료의 물성이 고려되지 않은 특정 색상의 지정 검토

5.3 경관계획 실행수단의 개발

- 대형 블록 및 대형 건축물이 주변 도시경관과 조화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 수단 개발 및 기준 선정
- 일률적 스카이라인을 지양하고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이라는 경관 목표를 유도할 수 있는 실행수단의 개발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경관구역별 높이 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			· 가로, 수변 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 모니터링 · 경관구역별 경관관리 성과평가 ·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문제점 분석, 대안 제시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경관색채관리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			· 경관 지정 색의 사용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 · 지정색 사용에 의한 경관변화 모니터링	건축정책과
		○		· 지역별 지정 색사용과 지역 정체성 및 지역경관과의 부합성 평가 · 지역별 지정 색 관리를 통한 통일색 경관 유도의 적절성 평가	건축정책과
경관계획 실행수단의 개발			○	· 대형 블록 및 대형 건축물에 대한 경관 기준 수립 및 관리 수단 개발 · 변화 있는 스카이라인의 유도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 지형 순화형 스카이라인의 유도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	건축정책과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경관구역별 높이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300	-	100	100	100	
경관색채관리 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정책 개선	100	-		50	50	
경관계획 실행수단의 개발						
계	400	-	100	150	150	



경관성

정책과제 2 | 핵심과제 |

S2PT2

부산다운 경관창출 방안

- ✓ 인문사회, 역사, 자연 등 경관의 지역성/정체성을 포함한 심도 깊은 경관분석과 이에 기반한 경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 ✓ 경관에 영향을 끼치는 새로운 제도에 대해 부산다운 경관과의 상충성을 항시 검토한다.
- ✓ 경관관리 제도에 상향식 의사수렴 방식을 도입하여 시민과 공유하는 경관정책의 지속성을 확립한다.



▲ [그림 V-19] 황령산에서 광안리조망
*사진 : 조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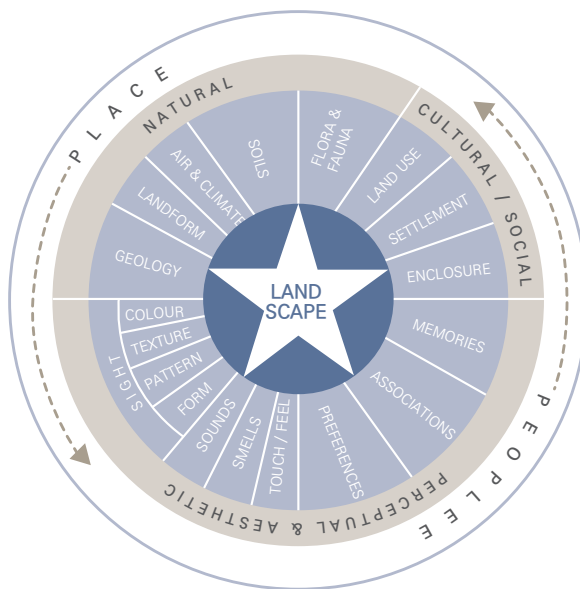
1. 배경 및 필요성

1.1 새로운 정책에 의한 급격한 변화와 부작용 등을 조절하고 정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준 마련

- 건축물 높이 규제 등 법적 규제를 통해 강력한 경관정책이 규정되어 있지만 각종 인센티브 완화 등으로 조율의 기능이 상실되기도 하고, 때로는 가이드라인 상의 권장사항이 인허가 시 전제조건으로 인식되어 법적 규제에 준하는 강제성을 갖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함
- 국가의 경제정책, 부동산정책, 주택정책 등의 변화에 따라 도시의 경관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사전에 경관변화를 예측하는 기제가 필요함
- 경관계획에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할 것, 모두가 지켜야 할 것, 대체로 유도되어야 할 것,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에 관한 원칙을 마련하고, 정책 실행 과정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함

1.2 경관정책의 적용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 지역에 따라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하는 곳과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곳 등 조건에 따라 경관계획을 다르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
- 지역의 역사 및 인문사회적 경관을 고려한 보전가치, 상업적 활성화의 잠재력을 고려한 개발가치 등 경관정책을 뒷받침하고 경관계획의 근거가 될 지역 분석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경관을 관리하는 다양한 법정, 비법정 규제들이 혼재된 상황에서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경관정책의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그림 V-20] 경관이란 무엇인가 "What is Landscape?"

*출처 : 유럽경관협약 가이드라인 1(European Landscape Convention Guideline 1)

2. 현황 및 문제점

2.1 경관정책의 계획 합리성에 대한 요구 증가

- 경관과 관련된 정책이 빠르게 변화되는 가운데, 도시환경에 대한 영향력 또한 점차 커지고 있으나 정책이 합리적인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근거 부재
- 경관 정책은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높이가 완화되고, 어떤 곳은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필요성 증가
-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고정된 기준 높이가 있고, 다채로운 색채 마을을 유도하면서도 동시에 통일된 지정색이 병존하는 등 정책의 방향성에 혼란이 존재함
- 경관 색채가 정착되고 있지만 지역의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등 기준색을 도출한 색채 추출 기법, 추출 기준, 경관색지정 등 선정과정의 설득력이 부족함

2.2 경관관리체계의 합리적 실행의 문제

- 경관정책이 이행되는 과정에 경관심의 등 의견 수렴 방식이 있으나, 높이 기준 및 인센티브 등을 넘어서는 조율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경관의 영향을 받는 지역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지역의 경제 상황 등의 이유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높이, 볼륨, 입면적 등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변 지역경관을 파괴하는 폭력적인 대규모 고층 도시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공공성 등 경관관리의 주요 원칙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단계화되고 분화된 의사결정과정 속에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고, 경관을 둘러싼 인허가의 책임관계도 불분명함

3. 과제의 목적

- 경관 특성 분석(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의 방식 마련
- 경관 특성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의 경관정책 모니터링
- 경관관리 시스템의 다각화 및 경관관리지역의 세분화
- 경관정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경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전역의 주요하천, 해안주변 등 자연경관 침해 우려지역
-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의 공동주택 등 대형 건축물 개발로 기존 도시경관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부산 전역의 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

4.2 내용적 범위

- 경관특성분석에 대한 이해
- 경관특성분석의 기본원칙, 분석대상, 분석방법 등 체계 수립
- 경관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 및 관리지역의 세분화
- 경관관리에 상향식 의사수렴방식의 도입 및 확대 개발

5. 세부과제

5.1 “부산다운 경관”을 위한 경관특성 분석체계 수립

1) “부산다운 경관” 특성분석(Busan 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의 이해

- 유럽경관협약, 영국 LCAG 등 유럽의 경관정책의 핵심인 경관특성분석이 무엇인지 이해
- 전후 유럽을 중심으로, 맹목적 계획이 실효성이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으로부터, 경관은 그 배경이 되는 지역사회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계획보다 ‘특성 분석’을 우선시하는 전통이 나타나기 시작함
- 경관을 조정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사회적 배경과 특성이 나타나는 현상 즉 이해해야 할 대상으로 시각을 전환하고 공유

2) 경관에서 지역성이 드러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분석체계 수립

- 현재 부산시에서 시행 중인 경관관리체계로 높이관리, 색채관리는 분석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압축적이고, 규제적 적용 및 원칙 제시에 있어서는 급진적으로 계획 합리성이 낮음
- 경관의 발생이 자연적 요인, 문화 사회적 요인, 인간의 지각적 요인, 미적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결정됨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산다운 경관 분석체계 수립

3) 지역에서 경관정책이 지켜야할 경관원칙 수립

- 부산의 경관에서 지역성이 드러나는 메커니즘을 발견함으로써 보존해야 할 경관, 유지해야 할 경관, 가꾸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경관 등 부산다운 경관의 원칙을 도출하여 향후 경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 부산다운 경관의 원칙이 수립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은 이해하기 쉬운 언어와 도해를 활용하여 부산의 경관 주체들이 공유

5.2 관리지역의 세분화

- 높이와 색채라는 현재 경관관리 시스템의 제한적 조율 기제를 극복하고 다각적 차원의 정책개발
- 수변, 내륙, 산지 등 부산 전체를 12개~16개 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광역 구분 체계에서 마을단위 지구 단위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리지역 세분화

5.3 경관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경관정책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를 개발하고, 경관정책 및 경관심의의 의사결정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
- 세분화된 지구 단위의 경관에 대한 자율적 완화와 규제, 그리고 주민 주도적 경관 가꾸기를 위한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특성분석체계 수립	○			· 부산시 주요 경관에 대한 영국 LCAG(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Guidance) 등을 참조한 분석체계 수립 및 분석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		· 부산다운 경관 기본원칙 수립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관리지역 세분화		○		· 지역성을 반영한 경관지역 세분 및 경관지역 지도제작 · 효율적이고 정밀한 경관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건축정책과
경관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 경관정책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참여 및 시민 의견 소통 방안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	· 지구단위 경관관리에 관한 주민 평가단 구성 및 운영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금액(백만원)	연차별 투자계획				
		2019	2020	2021	2022	2023
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특성분석 체계 수립	300		100	100	100	-
관리지역 세분화	200				100	100
경관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20					20
계	520		100	100	200	120



경관성

정책과제 3

S2PT3

도시 인프라 및 구조물의 경관개선

- ✓ 전체 도시 경관의 향상을 위해 경관관리 적용범위를 도시 인프라, 구조물, 가로시설물로 확대한다.
- ✓ 도시 기반시설의 경관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며, 디자인 역량을 집중하여 심미성을 강화한다.
- ✓ 도시 기반시설 및 구조물의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 내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그림 V-21] 광안대교 야간조명
*사진 : 조명환

1. 배경 및 필요성

- 도시 기반시설은 도시경관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이므로, 경관 측면에서 도시의 심미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시설에 대한 통합적 경관정책과 디자인 원칙과 방향성의 제시가 필요함
- 시설물의 미적 제고를 위해 자치구를 중심으로 경관 프로젝트들이 많이 시행되었으나, 지역마다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관이 유기적이지 않고 오히려 혼란스러운 경관을 야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물에 대해 개별 시설물의 본래 기능 이외에 도시의 자연, 문화, 역사, 환경, 경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공공성과 품격 향상이 필요함
- 특히 부산도시경관의 상징인 향만에 위치한 시설물에 대해 도시경관 측면에서 미적 수준을 효율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의 제시가 필요

2. 현황 및 문제점

2.1 도시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을 조성 관리하는 부서와 도시경관을 조율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부서 간 업무협조 및 소통이 긴밀하지 않아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통합적 경관관리정책이 부재한 상황임
- 도로, 교각, 향만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경관에 관해서는 대체로 비전문적이므로 심미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때로는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향만 경관의 경우, 향만 관리기관과 도시경관 관리기관의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협력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 기반시설 조성 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도시 기반시설의 심미성 결여에서 비롯된다는 의견도 있음

2.2 수준 높은 기반시설 디자인 마련에 대한 미온적 대응

- 일반적으로 도시 기반시설의 예산규모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에 포함된 도시 기반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지침으로서의 내용이 부족함
- 도시 기반시설의 디자인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도시 기반시설의 적극적 디자인 수준 제고방안이 부족함
- 도시 기반시설물은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등을 반영해야 함에도 일반적으로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디자인 역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3. 과제의 목적

-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물에 공공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도시경관 향상
- 항만도시 부산의 특성상 도시의 상징적 이미지인 항만시설물에 대해 도시 경관과 조화되고 수준 높은 디자인 적용
- 건축물,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물, 항만시설물 등이 통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도시경관 및 야간경관의 향상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물, 항만시설물

4.2 내용적 범위

-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디자인 결정 프로세스 개선
- 지자체별 실행되는 가로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물의 디자인 평가와 개선 방향 제시
- 경관 향상을 위한 항만관리주체와 부산시 사이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범 프로젝트의 운영

5. 세부과제

5.1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

1) 도시 기반시설 디자인 결정 과정의 개선

- 가로시설물 및 기타 시설물은 공공에 대한 노출 정도, 도시 내 경관 요소로서의 중요도에 비해 디자인 결정 과정이 약식이거나, 최저 입찰 방식 등에 의한 시공단가 기준으로 결정
- 안전, 편리 등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도시의 인문, 자연환경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높은 심미안을 요구하므로 설계 과정과 평가 과정의 개선

2) 도시 기반시설물 디자인의 기준과 체계 설정

- 가로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디자인 목표는 도시전체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지역마다 특성을 반영할 여지를 마련하는 것
- 지시성, 가독성, 안전성 등 공공디자인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최저 기준의 마련
- 과도한 디자인으로 오히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 (사례집) 제시

5.2 공공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 도시 기반시설 경관현황 실태조사 : 지역별, 기관별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의 디자인들을 데이터화하고 자치단체가 공유하여 서로 비교하고 상호 이해를 높임
-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및 “2030 부산광역시 경관계획”의 관련 기준에 비추어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5.3 색채와 조명을 이용한 항만시설 디자인 강화

- 항만경관 개선을 위한 관련 기관과 부산시 간의 협력체계 확립 및 항만 경관 현황 평가를 통한 부산시 항만지구별 경관 개선방향 모색
- 해수부의 항만경관 가이드라인과 부산시 경관계획을 고려한 부산항 경관 마스터플랜 및 가이드라인을 협력적으로 수립
- 부산시 야간경관 가이드라인에 항만시설 부분을 포함하고, 도시 이미지창출 및 안전 사각지대 제거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 항만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 [그림 V-22] 후쿠오카 아일랜드시티 항만 색채계획

*출처 : https://twitter.com/port_of_hakata/status/799109719113666560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	○			· 도시 인프라 경관에 대한 디자인 결정체계 통합	건축정책과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자치구·군
		○		· 도시시설물 디자인 기준 설정	
공공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		· 공공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축정책과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자치구·군
색채와 조명을 이용한 향만시설 디자인 강화	○			· 부산향만경관 행정협력체계 확립	건축정책과 향만물류담당관 부산향만공사
		○		· 부산향만 경관 가이드라인 및 마스터플랜 협력적 수립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가로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	300				150	150
공공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200				100	100
색채와 조명을 이용한 향만시설 디자인 강화	200				100	100
계	700				350	350



경관성

실행과제 1 | 시범사업 |

S2AP1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입지별 경관특성 강화

- ✓ 산, 하천, 바다의 다양한 지형적 특성이 반영된 부산의 경관 다양성을 보존한다.
- ✓ 입지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는 경관특성을 규정하고 강화해 나간다.



▲ [그림 V-23] 동부산관광단지 내 아난티코브(설계 : 민성진, 박인갑)
*출처 : 부산시 홈페이지

1. 배경 및 필요성

- 근대사의 굴곡을 집약적으로 겪어온 부산에는 역사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과 경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
-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삼포지향'으로서 부산에는 타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조망점과 독특한 경관 대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음
- 부산은 근대 이후 경사지 주거지역의 독특한 야경으로 유명했고, 최근에는 경관조명을 갖춘 대규모 교량의 완성, 수변 상업지역의 고층건물의 등장으로 사진가들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야간경관 출사지가 되고 있음
- 이처럼 가치 있는 경관이 많이 남아 있으나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지역이 많고, 크고 작은 개발사업으로 특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입지별 특성을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경관관리체계와 방안이 필요함



▲ [그림 V-24] 장산에서 바라 본 광안대교 야경
*사진 : 조명환

2. 현황 및 문제점

2.1 부산시 입지별 도시경관의 위기

1) 원도심 항만 및 주변지역

- 강변 및 해안 주변에 넓은 평지로 매립된 곳에 항만, 공장, 창고 등 주로 산업 시설이 입지하고 있음
- 항만산업시설 및 유통 관련 시설이 대단위로 입지해 있으나 항만 이전과 산업경쟁력 약화로 인해 시설도 노후화하고 쇠퇴하는 상황
- 최근 관광과 카페 붐으로 원도심 항만 주변의 노후 건물이나 창고 등이 나홀로 아파트, 호텔, 디자인 카페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나 장기적인 경관 마스터 플랜이 부재하기 때문에 난립의 우려가 있음

2) 경사지 주거지역

- 원도심의 산복도로 주변으로 발달한 경사지 주거지역은 부산의 도시경관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경관임
- 하지만, 원도심 항만의 산업과 물류기능이 신항과 시 외곽으로 이전하고, 동부산과 서부산의 신시가지로 인구가 유출하면서 원도심 경사 지역은 인구 감소, 공·폐가 증가로 인해 도시경관이 쇠락하고 있음

3) 촌락과 생활공간

- 부산의 도시화 이전 농촌마을이 있던 곳은 이제 농업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과거 구불구불한 골목이나 우물 터, 보호수, 마을 사당 등과 같은 마을의 흔적이 남아 있음
- 해안선이 긴 부산에는 52개의 어항마다 어촌마을이 있었고, 청사포 등과 같이 여전히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업에 종사하면서 어촌 공간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 남아 있음
- 하지만,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교통이 편리한 곳은 상업 및 주거 용지로 개발의 압박을 받아 원주민의 비율이 감소하고 공동체 의식이 멀어지면서 생활경관도 소멸하는 문제를 겪고 있음

2.2 특색 있는 경관을 지닌 지역의 관리

- 부산다움을 형성하는 많은 도시경관들이 시장원리에 따라 밀려나면서 꾸준히 소멸하고 있음
- 고층 공동주택 개발 등 토지이용이 점차 획일화되어 변화 있고 다양성을 가진 경관을 상실하고 도시 매력도 저하되고 있음
- 다양한 직업과 다채로운 계층의 사람들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부산의 도시 매력도가 위협받는 상황임
- 부산을 대표하는 최소한의 상징적 도시경관을 유지하고 관리할 기획과 지침이 필요

3. 과제의 목적

- 부산의 정체성을 만드는 특성 있는 도시 경관의 보전
- 원도심 항만산업시설 일원의 경관 유지 및 탄력적 재생
- 경사지 주거경관 재생 및 활성화 프로젝트 실행
- 1차 산업 생산기능 유지 및 관광상품화를 통한 어촌마을의 탄력성 제고
- 부산의 새로운 경관자원으로 각광받는 야간경관의 활용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산복도로 주변을 포함한 부산의 경사지 주거지역
- 부산 남항 및 북항과 그 주변 공업, 상업, 업무지역
- 시민들이 오래 살거나 이용하는 생활문화공간 : 어촌마을, 전통시장, 근대 역사가로
- 야간경관사업이 실행된 곳을 포함한 야경이 뛰어난 지역

4.2 내용적 범위

- 부산의 특성이 담긴 매력적 경관의 보존방안
- 입지별 기존 도시경관자원의 활용방안

5. 세부과제

5.1 경사지 주거경관 특성화

- 원도심 산복도로 주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경사지 경관의 특성을 활용하고 강화하는 사업을 실행
- 특히, 남부민동 동천주택, 수정동 국립주택 등 경사지를 잘 활용한 기존의 테라스하우스 등이 가진 독특한 경관을 보존하고 색채 및 조명 등을 활용한 경관 특성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활용하여 계단식 배치를 반영한 복합개발 또는 테라스 하우스를 활용한 소규모정비사업 등 시범사업을 실행

5.2 역사적 산업항만 특별건축구역 지정(※북항재개발 연계한 원도심재생)

- 현재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항만산업시설이 특색 없는 상업 및 주거시설로 변화되어 조망을 사유화하고 매력 없는 수변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
- 기존 산업항만시설과 그 영향을 받은 주변지역을 도시문화자원화하기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 북항 사례와 같은 전면 재개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영도 남항동, 봉래동 일원의 특정지역을 도시재생사업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창의적인 건축물을 유도

5.3 생활문화경관 개발 및 관리(※부산문화유산제도 도입)

- 여타 대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경관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산에 산재하는 포구와 주변의 어촌 공간구조가 남아 있는 마을의 경관 특성화 사업 실행
- 부산 시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해 온 전통시장, 근대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가로 등 생활문화공간을 발굴하고 경관자원으로 개발

5.4 야간경관 브랜딩(Branding) 사업

- 자연스럽게 조망점이 되는 산, 건축물의 조명을 반영하는 바다가 어우러져 부산은 야경이 아름다운 도시로 사진가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부산시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의거 연출주제인 “시간과 공간의 스펙트럼을 펼쳐는 빛의 프리즘”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홍보
- 야간경관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부산의 전체 야경의 가치를 마케팅하기 위한 부산 야간경관 브랜드의 창출
(예 : 백만불 야경, 빛의 바다)



▲ [그림 V-25] 감천문화마을 경사주거지의 아름다운 야경



▲ [그림 V-26] 일본 하코다테의 야경
*출처 : 하코다테시 공식 관광 정보 사이트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경사지 주거경관 특성화		○		· 경사지 주거경관을 활용한 경관 특성화 사업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테라스형 소규모 정비 시범사업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정비과 자치구·군
역사적 산업항만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		· 기존 산업항만 재개발, 재생 프로젝트 모니터링	도시재생정책과 부산항만공사
			○	· 부산 원도심 산업항의 용도변경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관리	건축정책과 도시계획과 부산항만공사
생활문화경관 개발 및 관리	○			· 생활문화경관자원/쇠퇴현황 조사	도시재생정책과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재생지원센터
		○		· 생활문화경관 활용을 위한 시범사업	
야간경관 브랜딩 사업	○			· 광안대교, 북항대교 등 주요 야간경관자원과 조망점 발굴	건축정책과 관광마이스과
		○		· 부산시 야간경관 정체성 확립 및 브랜드화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사지 주거경관 특성화					(5000)*	(5000)*
역사적 산업항만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200				100	100
생활문화경관 개발 및 관리	200		100	100	(2000)*	(2000)*
야간경관 브랜딩 사업	200			100	100	-
계	600		100	200	200	100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S3

지속성

복지와 건강을 융합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

S3-a 도시 기능의 저하와 왜곡을 초래하는 노후 시가지의 재생을 위해 관련 제도와 계획을 정비하고, 부산의 현황을 고려하여 도시 기능의 효율화와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지원한다.

S3-b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공간복지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건축의 조성을 유도한다.

S3-c 타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의 각종 도시재생사업과 결과물이 지속적인 체계를 갖추도록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지원을 제공한다.



정책과제

- 1 **S3PT1** 다함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책임제 구현
- 2 **S3PT2** 건강한 도시건축 인프라 구축
- 3 **S3PT3**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부산형 도시재생 완성
| 핵심과제 |

실행과제

- 1 **S3AP1** 다함께 행복한 동네 거점 조성
| 시범사업 |
- 2 **S3AP2** 도시재생 지역주체 양성
- 3 **S3AP3** 유휴공간 자원화



"마음까지 보듬은 건축"

_ 부산일보 박태성 기자

"손자 둘이 부모사랑 못 받고 자라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성격이 밝고 우애도 좋다. 평생을 서민 동네에서 살아오면서 우리 손자와 가족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무엇보다 손자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여한 없이 기쁘고 행복하다."

_ 남부민동 제12호 HOPE주택 재능/자원기부 : 김정기, 이원영, 노상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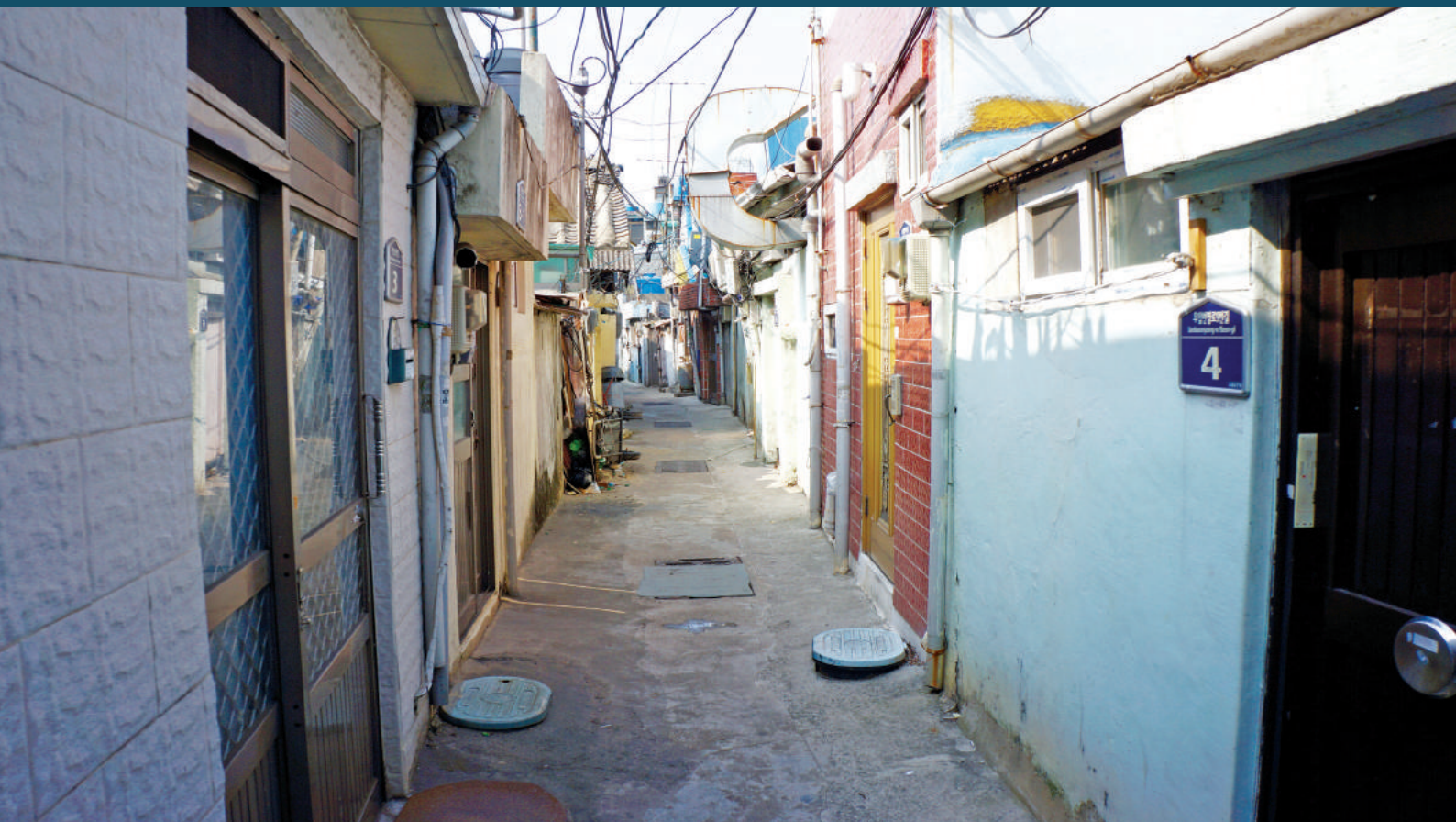
지속성

정책과제 1

S3PT1

다함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 생애단계별 주거복지 책임제 구현)

- ✓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밀집주거지의 주거환경을 향상시킨다.
- ✓ 열악한 주거지의 공간 및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범죄, 화재, 지진 등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 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물리적 사업이 아니라 공간복지사업으로 시각을 전환한다.



▲ [그림 V-27]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주거가 밀집한 우암동 소막마을

1. 배경 및 필요성

1.1 주거공급에서 주거복지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 1976년 인간정주에 관한 벤쿠버선언에서 주거권이 기본인권임을 선언
- 1994년 UN 인권위원회는 '적절한 주거의 확보는 인간의 자유, 존엄성, 평등 그리고 안전을 위해 필수적이고 주거권은 인간의 기본권리'라고 규정 함
- 2015년 주거기본법의 제정으로 주거에 관한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는 국민 모두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에서 주거 복지 향상으로 바뀌었음을 의미함



▲ [그림 V-28] 부산시 위험 주택 사례
*출처 : 부산복지개발원

1.2 기존주택의 노인친화적 리모델링 요구

-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신체적으로 약해진 노약자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음
- 이들 노약자들이 거주하기에 편한 공간구조와 시설로 리모델링하려는 요구가 많음
- 주택은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적절한 주택과 주거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1.3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가구의 거주성조사 필요

- 취약계층일수록 주거환경은 더욱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불안 제거와 만족도의 향상은 복지 차원에서 제공되어야 할 사회적 안전장치임
- 소득 수준에 따른 거주환경 실태조사와 더불어 특히 저소득층과 중증 장애인 가구의 거주환경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 함

2. 현황 및 문제점

2.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현황

-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권 보장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다 2012년부터 5~6% 내외 수준을 유지하며 2017년 기준 5.7%로 나타남

▼ [표 V-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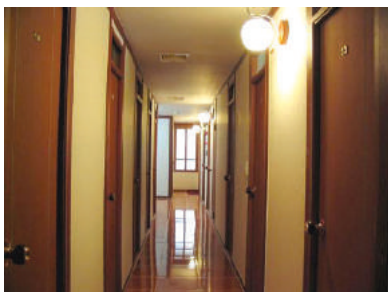
구분	2006		2012		2016		2017	
	전국 가구 중 미달비율	미달가구 중 비율	전국 가구 중 미달비율	미달가구 중 비율	전국 가구 중 미달비율	미달가구 중 비율	전국 가구 중 미달비율	미달가구 중 비율
전국	16.6	100.0	7.2	100.0	5.4	100.0	5.9	100.0
수도권	12.8	36.4	6.6	43.7	5.8	51.7	6.7	54.5
광역시	17.7	21.8	5.2	14.6	5.0	18.5	4.5	15.1
부산시	19.3	8.5	5.8	5.7	5.6	7.3	5.7	6.7
도지역	21.6	41.8	9.5	41.7	5.1	29.8	5.6	30.4

*출처 :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각년도

- 고시원, 여인숙 등 단기 체류형 주거시설은 준주택, 숙박시설로 구분되어 주택 지원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강하므로 해당 시설과 쪽방 등 주거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적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민간 주택 공급의 순기능에 치중되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고시텔 등의 지역단위의 규제와 점검이 필요함

▼ [표 V-2] 대체주택 분류

구분	쪽방	여인숙, 고시원	코쿤하우스	원룸
특징	방만 임대, 1인 1실, 주거시설 공용	방만 임대, 1인 1실, 주거시설 공용	초미니 원룸, 1인 1실, 주거시설 공용	출입구 분리, 1가구 1실, 주거시설 단독
면적(㎡)	2.5~4.0	6.0~8.0	6.0~10.0	15.0~25.0
지역	원도심, 공단배후	역세권, 대학가	대학가	대학가, 주거지
임대료	일세, 월세	일세, 월세	(선불)월세	보증부 월세
이용자	노숙인, 빈곤층	빈곤층, 학생	1인 가구	회사원, 대학생



▲ [그림 V-29] 부산시 고시원 시설 사례 1-3

*출처 : 부산복지개발원

2.2 고령자 주거 실태

- 부산시의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약 15.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 13.5% 보다 2.0% 높게 나타나고 85세 이상(초고령 인구) 인구 구성비는 2015년 0.9%에서 2045년 7.3%로 증가할 전망이다
- 부산시의 기초생활수급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38.6%로 나타날 정도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어려움과 노후자금 부족으로 인한 하우스푸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연금 수급 비율도 높아지고 있음
- 노년층의 주거실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 여부는 그렇다 45%, 그렇지 않다 55%이며, 불만족하는 이유는 집이 낡아서, 좁아서, 고령자들이 살기 불편해서, 벌레 등 위생 문제 순으로 나타남
- 한국소비자의 고령자 안전사고 위해사례 동향 분석에 따르면 가정에서 고령자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침실/방, 화장실/욕실, 거실, 주방 등의 순이며, 안전사고 내용별로는 넘어짐/미끄러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편, 고령자들은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계속 거주 항목에 대해서는 74%가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남



▲ [그림 V-30] 부산시 다세대주택 사례
*출처 : 부산복지개발원

2.3 부산시 주거복지 관련 문제점

- 부산시 공공임대주택들은 위치 및 사회적 낙인효과로 다양한 계층의 혼합보다는 저소득 소외계층만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소통이 단절되고 있음
- 중앙정부 중심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정책의 잦은 변화로 기존 주거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축소되는 등 지역적 요구에 대응하는 주거복지정책의 운영이 어려움
- 생애 단계별 맞춤형 주거소비 설계를 위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여 노후 생활자금 부족과 가계부채로 인한 하우스푸어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음
- 민·관 주거복지사업의 통합적 관리 부재, 부서별 개별 사업 추진 및 협업의 한계로 유사사업의 중복, 사각지대 발생 및 소모성 사업 중심의 추진으로 투입 자원 대비 사업의 효율성 담보가 어려움
- 부산의 인구, 사회, 도시, 역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주거현황 진단 및 대처 방안의 마련이 요구됨

▼ [표 V-3] 중앙정부 대비 부산시 생애단계별 주거복지사업

구분	중앙정부 주거복지사업	부산시 주거지원사업
전생애	주거급여, 긴급복지 지원, 임대주택, 행복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보증자리론, 임대주택 주거안정 월세대출(보증) 등	부산형 뉴스테이, 부산형 행복주택
청소년층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청년층	청년 전세임대주택, 행복기숙사, 희망하우징	햇살동지, 부산 드림아파트, 부산청년 우리집, 머물자리론
중장년층		
노년층	주거복지동 주택, 주택연금	행복나눔주택

3. 과제의 목적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거주환경조사와 지원책 마련을 목표로 함
- 주거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열악한 주거 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함
- 민간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활용으로 공적 지원 중심의 부산의 주거복지 자원 부족으로 인한 사각지대 해결을 하고자 함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노후불량 주거지, 쪽방, 여인숙, 정책이주지, 불법 주택지, 산복도로 주거지 등
- 도시재생 대상지역(예 :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사업 등)

4.2 내용적 범위

- 최저주거 수준 이하의 주거지 가구
- 고령의 노인들과 중증장애인 가구
- 저소득층 집단거주지 가구

5. 세부과제

5.1 부산형 주거복지 최저기준 대응

1)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실시 최저기준 미달현황 파악

- 부산복지개발원의 2016년 부산형 최저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더욱 광범위한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현황 파악 실시
- 도시재생대상지 사업의 실행계획 수립 시에 주거현황 파악 의무화

2) 취약계층 거주주택 단계적 개량 지원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의 감소를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이상의 주택 공급, 주택 개량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주거현황이 파악된 지역을 우선하여 취약계층의 주택에 대하여 개량을 지원함
- 고시원 및 여인숙 매입을 통한 다중주택 개조 후 지원, 매입주택 세어하우스 개발 시범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대체주택 공급
- 장애인, 고령자, 노숙인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매입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부산형 공공임대주택 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3) 불량노후주택 안전성 검증

- 부산시 공공건축사 및 민간 전문가의 재능기부, 민간 집수리 사업과 연계로 불량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주택에너지 효율화 등을 추진하여 불량 노후 주택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주치의 제도를 실시함
- 지역별 주거환경 관리 책임제 도입으로 노후 불량 주거지의 일상 문제점 해소와 부산시, 구·군, 동 단위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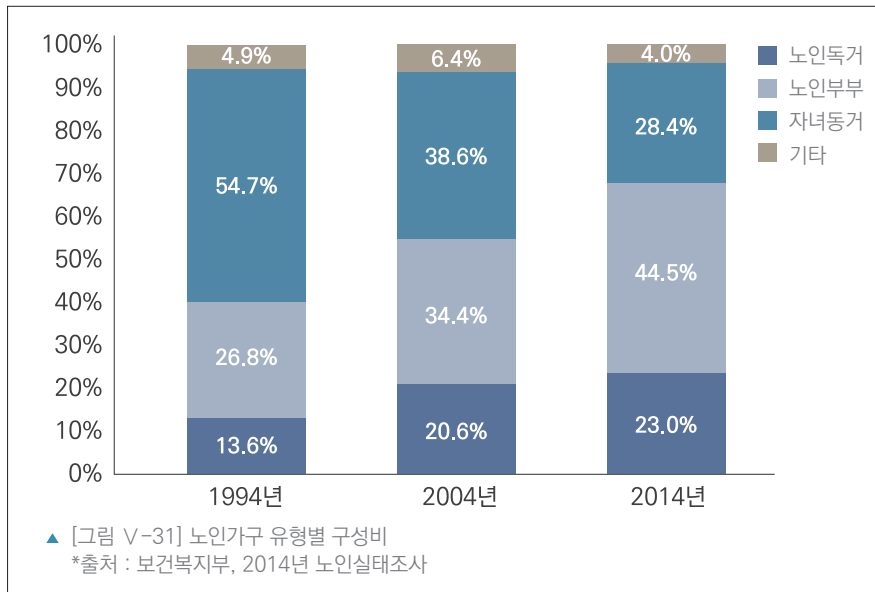
4) 부산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으로 주거복지 건설당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시민들의 주거욕구에 직접적으로 상시 대응할 수 있는 현장지원 중심의 전달 체계를 구축함
- 부산시 주거복지 관련 행정체계 내 효율적 연계 및 사회복지시설, 시민단체 등 민간자원의 적극적 활용으로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공 지원 중심의 한계를 극복함
- 사회복지, 주거급여, 일자리, 보건, 자활 등 기존의 사회 지원 서비스와 연계하여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지원체계를 마련함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생애 단계별 주거욕구에 따라 전 생애 주거플랜 수립을 지원하여 맞춤형 주거서비스와 복지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5.2 고령화대응주거 확충

1) 고령자 주거실태조사

- 전국 단위의 노인 주거실태조사를 참고하여 부산의 노인 주거실태조사를 하여 노인들에게 최적화된 주거환경을 복지 차원에서 지원
- 현재 자녀와 동거하는 가구가 점차 줄어들고 노인부부와 노인독거가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주거복지정책을 수립



2) 취약계층 노인친화형 리모델링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 UN의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노인들은 대체로 그동안 자신이 거주하는 곳과 공동체에서 자립적으로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므로 별도의 집단적 노인시설 건립보다는 노인들이 현재의 거주지를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
- 노인친화형 주거환경설비 및 장비의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5.3 방재형 노인 커뮤니티하우스

1) 방재형 노인 커뮤니티하우스 건축기준 및 운영지침 마련

- 노후하고 열악한 경로당을 종합적 고령자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는 방안 수립
- 노인 커뮤니티하우스의 공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침 마련

2) 폭염, 폭서, 지진 등에 강한 성능을 가진 노인 커뮤니티하우스 확산

- 기존의 폭염 및 폭서와 재난 대피소 기능을 겸비한 노인 커뮤니티시설의 운영실태 파악 및 시설 확충 지원
- 노인 커뮤니티하우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변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3) 동네단위 고령친화형 안심주택 모델하우스 시범사업

- 고령인구 거주 비율이 높은 동네 내 접근성이 좋은 폐·공가를 리모델링하여 고령자 안심주택과 경로당으로 활용
-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장애(Barrier Free) 설치와 비상호출 등을 지원하여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이 담보된 의료안심주택 기능도 추가(원격진료 등)

5.4 장애인 주거환경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1)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에 따른 지원사업 확대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에 근거하여 중증 장애인 가구를 우선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
-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가 및 임대주택 거주자의 지원을 시작으로 점진적 지원 확대
- 시범사업의 확대실시를 바탕으로 지원 매뉴얼 마련

2) 장애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매뉴얼 마련 및 지원

-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 장애 등 장애유형과 정도 및 행동 패턴을 고려한 주거환경 현황조사
- 유형별 주거개조의 내용과 범위를 고려한 환경개선 매뉴얼 마련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부산형 주거복지 최저기준 대응	○			· 취약계층 주거실태조사 실시 불량노후주택 안전성 검증	도시균형재생국 복지정책과 자치구·군 부산복지개발원
		○		· 취약계층 기존주택 단계별개량지원	
			○	· 부산형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으로 주거복지 컨설팅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	
고령화대응 주거확충		○		· 노인들의 주거실태조사 · 노인거주주택 리모델링 지원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균형재생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치구·군 부산복지개발원
방재형 노인 커뮤니티하우스		○		· 방재형 노인 커뮤니티하우스 지침수립 및 확산	도시균형재생국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치구·군 부산복지개발원
			○	· 고령친화형 안심주택 모델하우스 : 폐·공가 리모델링 후 고령자 안심 주택과 경로당으로 활용	
장애인주거환경 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 장애유형에 따른 주거환경 매뉴얼 및 지원방안 마련	도시균형재생국 복지정책과 자치구·군 부산복지개발원
		○		· 장애인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형 주거복지 최저기준 대응	400		200	200	*	*
고령화대응 주거확충	500				250	250
방재형 노인 커뮤니티하우스	300				150	150
장애인주거환경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200		200	*	*	*
계	1,400		400	200	400	400

* 주거환경관리사업, 새마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 하여 추진

** 2019년 추진 예정인 부산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종합계획수립 이후 실태조사 정기실행



지속성

정책과제 2

S3PT2

건강한 도시건축 인프라 구축

- ✓ 연령, 성,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다양한 도시공간에 대해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universal) 통합적인(inclusive)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 ✓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건축과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 [그림 V-33] 액티브 디자인을 적용한 미국 뉴욕 Elmhurst 주민도서관

*출처 : <https://www1.nyc.gov/site/ddc/about/press-releases/2017/pr-070117-active-design.page>

1. 배경 및 필요성

1.1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

- 대기환경 악화, 좌식생활의 증가, 식생활의 변화 등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보행, 조깅,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 건강하게 도시공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적 공간의 조성이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신체적, 경제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을 배려한 도시공간의 계획 기준 마련과 조성이 필요함



▲ [그림 V-34] 건축과 도시공간의 액티브 디자인 개념도
*출처 : <http://www.sachsinsights.com>

1.2 노인층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도시공간조정의 필요성 부각

- 부산시는 전국의 다른 광역 및 특별시 평균 연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205개 읍면동 중에서 노인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마을은 61곳으로 매우 많은 실정임
- 부산시는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으며, 2015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 및 도시 공간적 차원의 시범사업 확대실시가 필요함

부산 초고령마을 중 취약지			
지역	노인비	기초생활 수급자비	독거 노인비
중구 동광동	25.6	13.0	30.4
동구 초량6동	25.4	13.1	30.6
서구 아미동	27.4	13.5	34.0
서구 초장동	27.1	15.4	35.7
동구 범일5동	26.5	15.5	40.8
금정구 부곡1동	21.6	15.6	34.3
동구 수정4동	28.6	16.1	37.1
해운대 반송2동	20.5	25.5	37.1
영도구 동삼3동	22.7	37.2	43.0
사상구 모라3동	23.6	44.4	43.6
※단위 : %(2016년 기준)		※자료 : 부산복지개발원	

▲ [그림 V-35] 부산 초고령마을 중 취약지
*출처 : 부산복지개발원

2. 현황 및 문제점

2.1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의 부족

-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한 부산시의 공적 공간구조와 접근성에 대한 현황 파악과 대응전략의 부재
- 유아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생애주기별로 접근 가능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공간의 부족
- 유니버설 디자인 이전에 각 연령층의 행태와 공간적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의 필요
- 유니버설 디자인/액티브 디자인을 위한 시민의견수렴이 미흡하며 전문가도 부족한 상황임

2.2 경사주거지 거주 주민들을 위한 도시공간의 보행성 개선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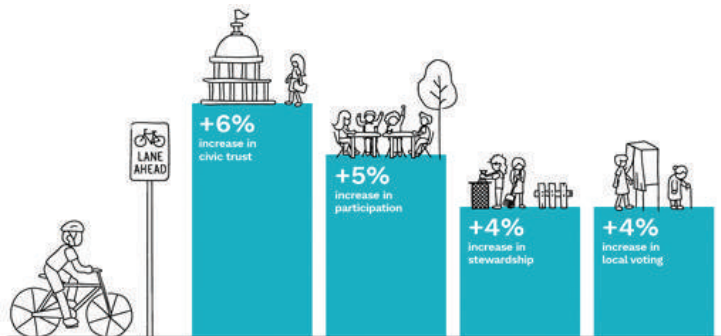
- 경사주거지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의 이동의 불편과 위험이 매우 커서 주민 이탈과 지역 쇠퇴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경사지에 많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독거 고령자들은 다른 주민들보다 공적 도시공간의 접근에 더욱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들의 보행권 향상을 위한 계단도로의 정비 필요
-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모노레일, 무빙워크 등과 같은 기계식 설비의 필요지역 현황조사가 필요

2.3 활동적 디자인(Active Design)을 적용한 건축 및 도시공간에 대한 관심 증대

- 자동차 의존 심화, 실내 생활 확대, 영양 과잉 및 운동 부족으로 비만이나 성인병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현대인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는 미국 등에서 자동차, 엘리베이터 대신 자전거, 달리기, 걷기 등을 자연스럽게 촉진하는 건축이나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활동적 디자인(Active Design)'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

Case Study : 미국 Center for Active Design의 공적참여조사(ACES)

미국 활동적 디자인센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의 이용이 신체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할 뿐만 아니라, 자전거 도로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은 커뮤니티 활동에 더 활발하게 참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환경운동(6%), 참여(5%), 지역관리(4%), 선거참여(4%)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전거 도로가 없는 지역 주민들보다 공공 활동에 더 적극적이다.



◀ [그림 V-36] 자전거도로가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출처 : The Center for Active Design(2018), 『Assembly: Civic Design Guidelines』

3. 과제의 목적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모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도시공간 창출
- 생애주기별 요구와 지형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과 이용이 쉬운 도시공간 창출
- 모든 이용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조성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의 공공시설물, 가로, 공원 등과 같은 공적 공간
- 공공건축 및 다중 이용 민간건축의 실내외 공간

4.2 내용적 범위

-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을 위한 도시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개선
- 보행, 조깅, 자전거 이용을 진작하는 활동적 디자인(Active Design)을 적용한 건축과 도시공간

5. 세부과제

5.1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개선 방안

1)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조사 시행

- 변화된 디자인을 적용함으로써 모든 약자들도 도시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들의 행태적 특징과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
- 이들을 대표하는 각 단체에 대하여 도시공간경험의 행태를 연구 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



▲ [그림 V-37] 장애물 없는(Barrier free) 생활환경 예비인증 대덕구 중리길



▲ [그림 V-38]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화장실

2)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 부산시 도시공간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
-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교육프로그램 실시와 관련 인력의 발굴과 전문가 육성
- 장기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대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디자인센터 내에 유니버설 공공디자인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역 대학의 관련 연구소를 센터로 지정하여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시책의 협력 실행

5.2 백세시대 액티브 도시건축 지원정책 수립

1) 걷기 좋은 도시공간/활동하기 좋은 건축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수립

- 보행성과 활동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도시 공공공간 및 건축공간 '활동적 디자인(Active Design)' 가이드라인의 수립 및 시범사업을 위한 평가체계와 체크리스트의 개발
- 시와 자치구·군의 건축심의 시 대상 건축물이 시민의 건강을 진작하는 공간 계획이 적절히 수립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유도

Case Study :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의 '건강기부계단(피아노 음악계단)'

시민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생활 속에서 걷기를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건강기부계단'은 부산교통공사가 장소를 제공하고, BNK 금융그룹에서 1억 4백만원을 후원하여, 계단 이용 수만큼 적립된 기부금으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저소득 어린이를 위해 사용하며, 부산시는 건강한 걷기운동의 생활화를 위해 건강증진사업 행사 등을 추진한다.



◀ [그림 V-39]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의 '건강기부계단(피아노 음악계단)'
*출처 : 부산IN신문

2) 산복도로 계단도로 보행성 향상 지원

- 고령인구와 계단도로가 많은 산복도로 일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행로와 계단의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 실시
- 안전성, 내구성, 시공성, 경제성 등의 종합적 고려를 통한 바닥 재료와 시설물의 계획과 시공 지원
- 계단도로의 공공예술의 조성은 보행성을 방해하지 않고 최소한의 심미성을 담보하도록 관련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제도화

3) 각 연령층의 신체활동을 고려한 활동하기 좋은 건축공간 시범사업 지원

- 시민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축을 대상으로 ‘활동적 디자인’을 적용한 시범사업 기획 및 설계 지원
- 공공영역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공간에서도 각 연령별 신체활동을 고려한 공간의 확대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시범사업의 기획 및 설계 지원

5.3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시민에게 꼭 필요한 자전거 도로 개선)

1) 자전거 도로의 지속적 확보와 네트워크 강화

- 부산시는 주요 간선도로, 강변 및 해안선, 대규모 자연공원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해왔으나 연계성이 부족하여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시내진입도 아직 어려움이 많음
- 수변 자전거 도로와 시내 도로의 접속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접속지점을 지정하고 자전거 도로 운행 규칙과 교차로 안전수칙 홍보를 통해 자전거 네트워크 강화계획 수립
- 자전거 도로의 안전성과 연계성 확보를 통해 자전거 운행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도난 및 방치 등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 마련(사례 : 자전거 등록제 활성화)

2) 자전거 친화적 건축물 유도

- 공공시설 및 일반 대형건축물 등에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대하여 자전거로 접근하는 이용자에게 자전거 이용편의 서비스 강화
- 자전거 통학 및 통근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지하철역, 주요 환승센터, 교외 주거지 역/정류소 등과 연계한 자전거 주차시설을 확대

3) 자전거 정차 및 정비서비스 확대

- 도시지역 어느 곳에서든 500m 이내 자전거 전용도로에 접근가능한 도시를 지향
- 보행전용도로, 보행 자전거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구분하고 이들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 보행자 간 조화로운 운영에 관한 기준 수립
- 자전거 사용, 정비 및 관리에 관한 공공서비스 확대



▲ [그림 V-40] 뉴욕의 자전거 주차장



▲ [그림 V-41] 시카고 전철역에 설치된 조형적인 자전거스탠드

6.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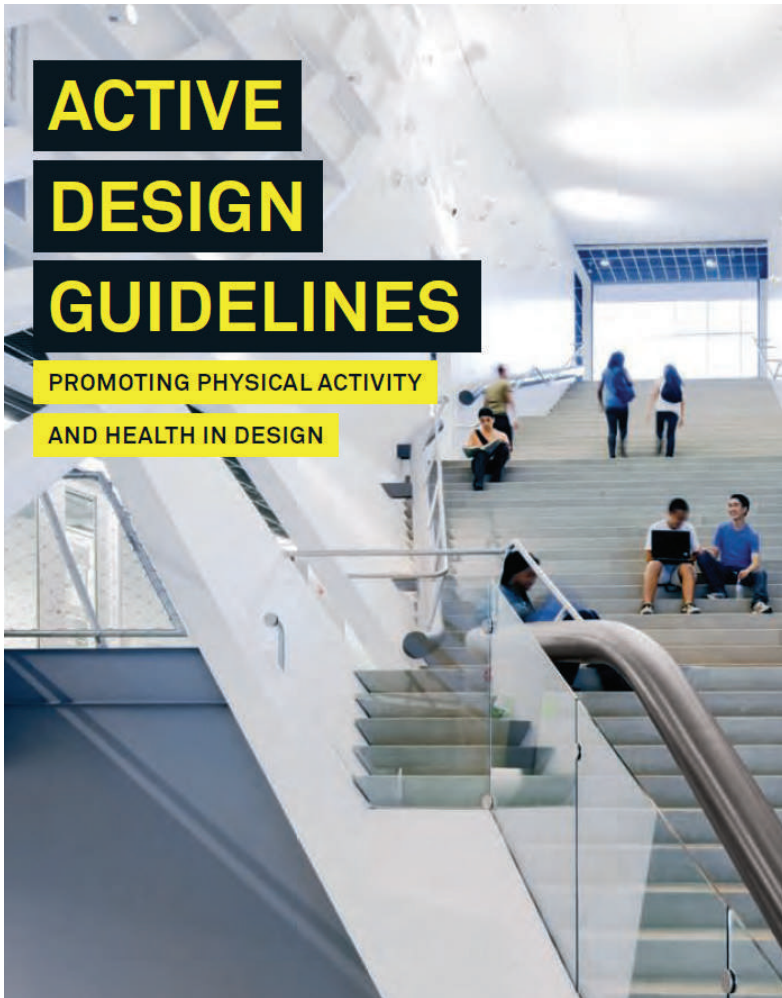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개선 방안		○		· 다양한 시민계층의 요구사항조사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	· 유니버설 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백세시대 액티브 도시건축 지원 정책수립		○		· 활동적 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공간/건축공간 가이드라인수립	건축정책과 노인복지과 자치구·군
			○	· 산복도로 계단도로 보행성향상 지원 · 활동적 디자인 건축공간 시범사업 지원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조성		○		· 자전거 도로의 지속적 확보 및 네트워크 강화	도시재생균형국 교통혁신본부 자치구·군
			○	· 자전거 친화적 건축물 유도 · 자전거 사용 서비스 확대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개선 방안	200				100	100
백세시대 액티브 도시건축 지원정책수립	500				250	250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3,000)*	(3,000)*
계	700				350	350

*도시재생 뉴딜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그림 V-42] 활동적 디자인 가이드라인



지속성

정책과제 3 | 핵심과제 |

S3PT3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및 부산형 도시재생 완성

- ✓ 각 정부부처에서 지원하는 국책사업을 적극 연계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 ✓ 그동안 부산시에서 실행한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산에 맞는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 다양한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한다.



▲ [그림 V-43] 마을기업 늘품이 운영하는 서구 초장동 천마산 에코하우스

1. 배경 및 필요성

1.1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및 행복마을사업의 마무리 및 출구전략 필요

-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전체 1,500억 원의 계획사업비를 투입해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역(6개구:중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의 공간·생활·문화재생을 통한 자력수복형 종합재생사업으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추진해 왔음
- 3개권역 9개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 온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은 2018년 대신·학장구역을 마지막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다른 구역의 사업은 완료된 상황임
- 그동안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을 계기로 형성된 마을공동체나 사회경제적 조직의 지속적 발전방안과 물리적 공간으로 조성된 다양한 공동체 거점공간이나 역사문화관광시설 등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 [그림 V-44]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으로 조성된 중구 영주동 산리마을회관 : 주민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산리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직거래 장터와 카페, 마을지기사무실 등으로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1.2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원 및 집행계획 수립

- 정부와 국토부의 집중적인 도시재생 추진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부산시 또한 장기적이며 주도적인 도시재생 전략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함
- 도시재생의 궁극적인 목표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별적 행정체계를 복합적이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체계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음

1.3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재평가 및 역할 조정의 필요성 부각

- 지금까지의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자치구군의 개별 도시재생사업과 현장지원센터를 밀착하여 지원하는 광역지원센터로의 역할이 미미하였으므로 업무체계 및 집행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이사회와 운영위원회에 자치구·군의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나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사업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의 보완이 필요함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과 집행 그리고 조직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함

1.4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및 관리 필요

-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독특한 특성이 부각되고 사업의 결과가 가시화되면서 기존 주민 세입자나 재생사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문화예술인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자가나 임대료 상승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대상지 선정과 더불어 사업시작 전에 도시재생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 및 임대료 현황 조사와 젠트리피케이션 관리방안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함



◀ [그림 V-45] 영도 흰여울 문화마을 : 젠트리피케이션과 생활문화공동체

2. 현황 및 문제점

2.1 부산시 시행 도시재생사업의 출구전략 미흡

-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직된 주민 공동체와 마을기업, 공동체 거점시설이 아직도 자립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음
- 현재 정부가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규모와 개소가 증가하면서 관련 행정조직과 지원조직이 신규사업의 신청, 평가, 수행을 위한 업무에 매몰되어 기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되고 있는 상황임
- 기준공된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갈등관리, 교육, 홍보, 디자인 지원, 청년 매칭 등을 통한 마을과 공동체의 자생력을 제고 하는 도시재생 출구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함

2.2 도시재생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심화

- 서울 성동구는 2015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 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에서는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1개 건물당 최소 400만원, 최대 2,260만원까지 리모델링 비용을 차등지급하는 사업을 실행 중임
- 부산시에서도 '부산형 장기임대주택 조성·지원사업'을 시행하여 상생협약을 하는 건물주를 지원하고 있음
- 해운대구는 2018년 4월부터 '해운대구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 체결 권장,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가 가능한 상생협력 상가 조성·지원, 상생협력상가 협의체 설치·구성, 자발적 상생협력 체결 상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상생협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없고 강제성 없이 자율에 의지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각종 지원 제도 역시 건물주에게 집중되어 있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그림 V-46]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산진구 전포동 카페거리
*출처 : 부산시 다이내믹부산 제 1817호

3. 과제의 목적

-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지속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과 부산형 도시재생모델의 개발
- 젠트리피케이션 등 도시재생사업의 부작용 방지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기존 및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 도시재생사업의 마을거점시설이 있는 마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준비 지역
-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대상지 및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대상지

4.2 내용적 범위

- 현재 부산시에서 진행 중인 각종 도시재생사업의 순조로운 마무리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지원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
-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수행을 위한 부산형 도시재생모델의 개발
-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일부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

5. 세부과제

5.1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구축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의 구성과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인적구성, 운영방안, 업무역할에 대한 부산형 기준 수립

- 자치구·군 단위의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적구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자치구·군 단위의 공동체 주민역량강화를 전담하고 공동체가 준비된 지역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이 조기에 본격화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자치구·군의 재정적인 여유가 부족한 경우, 기초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별적으로 설립하는 대신 시와 권역별 자치구·군이 예산을 분담하여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전문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
- 도시재생지원조직의 역량강화와 연계활동을 위해 부산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가 참여하는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의 활동 지원



◀ [그림 V-47] 창신송인 도시재생협동조합(CRC)
*출처 : <http://www.seouland.com/arti/PRINT/2213.html>

5.2 부산형도시재생 Ver.2.0 추진

-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사업의 출구전략을 수립하고 부산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 후속지원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존 사업을 모니터링하여 후속지원방안 수립
-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역관리(타운 매니지먼트, town management) 조직 구성 방안 수립
-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부산형 지역관리조직 구성 및 운영

5.3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활용

1)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

- 부산시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던 지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향후 공공지원사업 배제 등 집중 관리하고, 초기 단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곳은 적극적인 억제방안을 제시

2)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실효성 있는 상생협약 표준안 제정 및 지원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임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협약을 위반시에는 위약금을 청구함
- 향후 부산시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관련 사업에는 상생협약계획 수립을 의무화

3) 젠트리피케이션 역제를 위한 공공임대상가/주택, 시민신탁, 시민자산 제도 도입

-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 상가 혹은 주택의 임대료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은 공공이 마중물사업비로 공공임대상가나 임대주택을 조성하여 동지 내몰림 현상 억제
- 지역 공동체가 비영리 조직을 통해 유휴 부동산을 신탁받아 공동으로 운영·관리하여 수익을 건물주와 공유하고 일부는 지역기금으로 적립하는 공동체 토지 신탁 제도 활성화
- 시민 조직이 가치 있는 지역 자산을 공동소유의 자산으로 매입하고 운영·관리하며 그 수익을 공동체에 투자하는 시민자산화 제도 활성화 지원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구축	○			·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 및 역할 기준 수립 · 부산형 기초 및 권역별 도시재생지원 센터 구축 및 사업 지원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형 도시재생 Ver.2.0 추진		○		·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과 행복마을 사업의 출구전략 수립 및 후속지원팀 구성 · 도시재생사업의 부산형 지역관리 조직 구성 지원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활용		○		·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대책 수립 · 젠트리피케이션의 방지 방안 활성화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구축	200		100	100	*	*
부산형 도시재생 Ver.2.0 추진	300				150	150
젠트리피케이션 관리 및 활용	80				40	40
계	580		100	100	190	190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실행



지속성

실행과제 1 | 시범사업 |

S3AP1

다함께 행복한 동네거점 조성

- ✓ 복합적 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건축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 ✓ 지역의 행정 서비스 시설을 행정, 복지, 건강, 문화, 교육기능을 가진 생활SOC 복합시설로 재구성하도록 건축적으로 지원한다.
- ✓ 기존의 건축을 재생하여 주민을 위한 동네거점을 조성하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그림 V-48]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한 동래구 명장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1. 배경 및 필요성

1.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거주후 평가(POE) 및 건축 가이드라인 수립 필요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동단위에서 행정과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거점공간으로서 보건, 복지, 고용, 자원봉사, 마을관리 등의 복합적인 업무를 원스톱 종합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6년 6개소를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87개소를 조성할 예정임
-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서비스시설이므로 기존 주민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한 복합커뮤니티센터와 신축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거주후 평가를 실시하여 이용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민이용행태에 대한 정기적 관찰 데이터와 시민과 공무원 등 이용자와 관리자에 대한 시설만족도 조사를 통해 향후 조성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계획에 반영할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함



센터외관1



센터외관2



주민휴게 공간



보람생태놀이터

▲ [그림 V-49] 사하구 장림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출처 : 부산시청

1.2 지역복지시설의 노후화 개선 필요

- 부산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이용불편의 문제들이 제기됨
- 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와 내용의 변화에 따른 공간재조정을 위한 현황조사의 필요
- 복지시설에 대한 접근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변 환경정비의 필요

1.3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거점시설의 지원책 수립 필요

- 마을거점시설의 기본적 운영비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음
- 각 마을거점시설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 거점시설 연대와 공동 운영전략 지원이 필요함
- 마을거점시설의 운영실태와 공동체 구성원의 현황조사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시민들에게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확대 필요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리모델링과 신축건물의 합리적인 기능 및 공간 구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없이 건물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임
- 마을주민들의 일상생활의 거점 역할을 하는 다양한 복지시설들의 노후화로 공간, 설비, 환경 성능이 부족해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음
- 다양한 도시재생사업 전후로 조성된 마을의 많은 거점시설이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건축되어 활용성은 낮으며 운영유지에 어려움이 많음
- 도시재생사업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사업은 많지만, 기존의 산업 시설이나 유흥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건축재생사업은 활발하지 않음



▲ [그림 V-50] 사상구 주례동 주례문화공터(2012, 상수도 폐가압장을 재생하여 조성)
*출처 : 사상구청

3. 과제의 목적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양적 확대 및 질적향상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동네거점시설의 활성화
- 유흥 근대건축물 및 산업시설의 활용방안 수립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205개 동단위의 주민센터와 복합커뮤니티센터
- 각 마을의 사회복지시설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마을거점시설

4.2 내용적 범위

- 리모델링 및 신축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확충 및 계획 가이드라인
- 마을 복지시설의 이용 활성화 방안
- 유휴 근대건축물과 산업유산의 재생활성화

5. 세부과제

5.1 복합커뮤니티센터의 확충

- 기존 주민센터나 복지시설 등의 리모델링, 증축 및 결합, 신축 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각종 주민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
- 기존 조성한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거주후 평가 실시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원활한 원스톱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합리적인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5.2 지역밀착형 복지시설의 리모델링사업 계획수립

※경로당시설 현대화 및 지원확대

- 지역의 노후복지시설의 리모델링 지원사업 시행
-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권역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집수리교육/사업단, 자원봉사 참여를 통한 자립형 리모델링 체계 구축

5.3 도시재생 건축시범사업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유휴공간 및 기존 거점시설의 리모델링사업 지원
- 유휴 근대건축물 및 산업시설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활성화 지원



▲ [그림 V-51] 근대건축물의 재생(구.한성은행)



▲ [그림 V-52] 노후 주거를 활용한 감천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설계 : 에이도스 강민주)



▲ [그림 V-53] 부산진구 범천4동 신암어르신센터(상수도 폐가압장을 재생하여 조성)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복합커뮤니티 시설의 확충	○			·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거주후 평가 원활한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건축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지역밀착형 복지시설 리모델링 계획수립		○		· 지역의 노후복지시설의 자립형 리모델링 체계구축 및 지원사업 시행	도시균형재생국 복지건강국 자치구·군
도시재생건축 시범사업		○		· 거점시설의 리모델링 지원 · 유휴 근대 및 산업시설물의 리모델링 지원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복합커뮤니티시설의 확충	200		100	100	(2,000)*	(2,000)*
지역밀착형 복지시설 리모델링계획수립					(1,000)*	(1,000)*
도시재생 건축시범사업**	200				100	100
계	400		100	100	100	10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울림센터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 리모델링 계획비 지원, 사업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지속성

실행과제 2

S3AP2

도시재생 지역주체 양성

- ✓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이고 빠른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활동가, 주민리더 등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 ✓ 인적자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공과 함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기반구축을 지원한다.
- ✓ 공공성이 있는 도시재생 세부사업을 담당하면서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물리, 환경, 복지, 건강,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하고 양성한다.



▲ [그림 V-54] 2017 도시재생 뉴딜 활동가 워크숍, 코모도호텔
*출처 : 한국도시재생시민네트워크

1. 배경 및 필요성

1.1 역량 있는 도시재생 주체의 체계적 양성시스템 필요

-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 주민, 활동가, 총괄코디, 행정, 사회적 경제조직 등과 같은 각 주체의 역량강화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 및 지원체계의 재구축이 필요함
- 다양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진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대상지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다양한 참여주체의 발굴과 역량강화 노력이 요구됨
- 도시재생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지 않은 지역뿐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마을리더와 마을활동가의 활동이 필요하므로 일상적인 활동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1.2 마을공동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호협력과 활성화의 필요

- 도시재생사업으로 탄생한 각 마을의 마을공동체를 각 구청 단위의 지자체들이 행정의 공식적인 동반자로 자격을 부여하고 그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각 마을 공동체와 공동체의 연합체가 독자적이며 주체적으로 마을의 발전을 위한 전문가와 관계자들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1.3 사회적 경제측면의 도시재생 활성화 필요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지역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의 구축, 마을기업의 확대를 위한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속적인 지역기반 활동을 위하여 회원들의 신뢰감 증진,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지원, 독창적 아이템의 발굴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2.1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역량 있는 지역 인적자원의 부족

- 2018년 현재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서에서 추진하던 도시재생 관련 사업들을 연계시키고 있음
- 부산에서도 2017년 이후 매년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역이 확대되고 있으나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역량 있는 주민이나 활동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2 열악한 처우로 인한 역량 있는 활동가의 이탈현상 심각

- 부산에는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많은 마을 활동가 교육을 하였고 이후 실제 현장에서 재생사업을 경험하면서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많이 배출된 바 있음
- 하지만 이렇게 배출된 지역활동가들의 활동이 기초지자체 기반으로 이루어져 활동 기회의 제공, 경력관리 및 프로모션 등이 개인적 인맥에 의지하여 활동 기반이 매우 취약함
- 활동가들의 활동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단속적인 활동이 대부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무에 따른 처우가 매우 열악하여, 부산에서 배출된 역량 있는 활동가들이 타 지자체로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였고, 젊은 신규 활동가들의 유입도 부족한 상황임

2.3 활동가의 역량향상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의 미흡

- 마을활동가들의 지속적인 역량강화와 처우향상을 지원하는 연대조직이 필요하며, 도시재생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 정보, 전문가 등이 종합적으로 부족
- 부산에서 배출된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결성하여 조직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재생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아직 숫자도 적고 활동 영역도 좁은 상황임
- 지역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과 각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성과 운영환경의 지원이 부족함
- 마을활동가 네트워크(가칭)조직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그림 V-55] 마을활동가1기 기초·심화교육(2013) ▲ [그림 V-56] 지역주민과 청년이 함께 일하는 이바구캠프

3. 과제의 목적

- 역량있는 지역활동가 양성 및 처우개선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지원
- 사회적 경제를 통한 도시재생 강화
- 지역의 역량 있는 도시재생 주체의 확보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기존 및 신규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 도시재생사업의 마을거점시설이 있는 마을
-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및 준비 지역
-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대상지 및 행복마을 만들기사업 대상지

4.2 내용적 범위

- 도시재생 지역활동가 양성 및 활동 지원
- 도시재생주체들의 활동 영역 및 기반 지원
- 지역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

5. 세부과제

5.1 도시재생 지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시행

- 부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존의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의 업데이트 및 체계적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지역별 특화된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한 맞춤형 심화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활동가별 교육 이수 및 활동 이력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활동 매칭 지원

5.2 마을공동체 및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지원

- 광역, 기초, 현장 지원센터의 인적 강화를 위해 마을활동가의 임명 영역 확대를 통해 고용안정성 보장
- 마을공동체 및 지역활동가의 네트워크조직 육성 및 지원

5.3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 양성

- 마을기업 및 지역에 기반한 사회적 경제에 전문 능력을 갖춘 지역활동가의 양성
- 마을기업 및 마을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 부산형 청년 지역창업단 : 청년들이 참여하는 마을 또는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조직 창업지원



▲ [그림 V-57] 일본의 지역부흥협력대 활동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도시재생 지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시행	○			· 체계적인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		· 활동가 교육 및 이력관리체계 구축	
마을공동체 및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워크 지원	○			· 지역활동가의 임명영역 확대 및 네트워크 조직 지원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조직 양성	○			· 사회적 경제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회적기업센터 자치구·군
		○		· 부산형 청년 지역창업단 지원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도시재생 지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시행	200			100	100	
마을공동체 및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지원	100	50	50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조직 양성	400		100	100	100	100
계	700	50	150	200	200	100



지속성

실행과제 3

S3AP3

유희공간 자원화

- ✓ 도심 내 공폐가와 나대지 등 도시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유희공간의 유형과 발생 패턴 그리고 피해 양상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 ✓ 유희공간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유희공간 정보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유희공간의 소유자와 수요자 사이의 정보 매칭을 지원한다.
- ✓ 유희공간의 입지와 유형에 따라 다양한 활용방안을 개발하거나, 주민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림 V-58] 수영고가도로 하부 유희공간의 청년문화공간화 계획안
*출처 : 부산시, 2017

1. 배경 및 필요성

1.1 폐공가의 증대에 따른 원도심의 공동화

- 급격한 인구감소와 산업유형의 변화로 인한 폐공가의 증가
- 폐공가를 중심으로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됨으로 폐공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

1.2 유희공간 증대에 따른 현황파악 및 활용방안 수립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각 지자체는 빈집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지원기구'에 의뢰하여 빈집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
- 부산시에서도 특례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2018)에 따라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한국감정원 등의 지원기구에 의뢰 빈집실태 조사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고 있음
- 폐공가의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조직 구성과 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실정임

1.3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의 주거난 해결의 대안모색

- 빈집의 재생을 통한 저렴한 쾌적한 환경의 주거를 사회적 취약계층들에게 먼저 공급함으로써 주거난의 해결에 기여할 것을 기대
- 빈집현황 및 활용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Case Study : 일본 오노미치시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Aki-P)

해운, 상업, 조선업이 번성했던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는 해운업의 쇠퇴로 쇠락하여, 도심을 둘러싼 경사 주거지에 재건축할 수 없거나 차량접근이 어려운 주택을 중심으로 공가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였다. 지자체는 도로 등 기본 인프라를 지원하고 NPO 법인이 빈집은행을 운영하면서 빈집과 건축물, 빈집과 환경, 빈집과 커뮤니티, 빈집과 관광, 빈집과 예술이라는 5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공가를 활용하는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과거 오래된 아파트를 공방으로 임대하거나, 료칸을 게스트 하우스로 개조하거나, 폐업 병원을 쉼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하여, 도쿄 등 대도시로부터 젊은 층을 유입시키고, 상점을 입점시키며, 커뮤니티활동과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 [그림 V-59] 오노미치의 빈집에 무상으로 입주한 동경출신 만화가의 이주 체험을 담은 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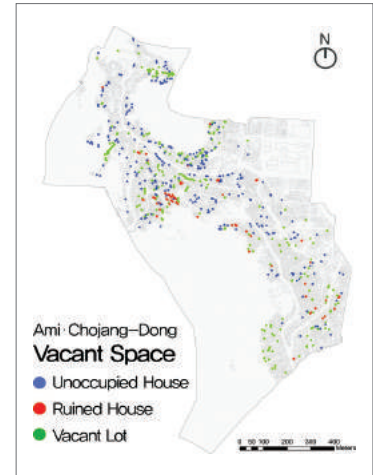
▲ [그림 V-60] 1932년 지어진 독특한 모양의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형 문화 공간으로 재활용한 〈가우디하우스〉



▲ [그림 V-61] 도심 아케이드 상점가의 빈상가를 재생한 게스트하우스 '장어의 침대'

2.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은 동부산과 서부산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면서 원도심은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적 활력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공가와 폐가 그리고 나대지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원도심 주변의 산복도로 일원 노후 경사주거지는, 그동안 부산시가 추진했던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나 행복마을사업 그리고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공·폐가 등 유휴공간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 폐공가의 증가로 인해 원도심의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청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주거난이 심각



▲ [그림 V-62] 서구 아미동·초장동·남부민동 노후 경사주거지 유휴공간(공가, 폐가, 나대지) 현황
*출처 : 부산대 도시건축연구실

3. 과제의 목적

- 유휴공간의 현황파악 및 활용방안 수립
- 빈집정보제공 및 수요자 매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부산형 빈집은행 설립
- 유휴공간을 활용한 저렴하고 쾌적한 주거 및 창업공간의 제공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원도심 전체를 포함한 공폐가 발생지역
- 원도심 항만 주변의 산업유휴시설 밀집지역

4.2 내용적 범위

-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폐공가 현황파악과 관리계획
- 산업구조의 변화로 유휴공간화되는 근대 산업시설의 조사와 관리
- 유휴시설 및 공간의 활용시스템 및 활용방안 마련

5. 세부과제

5.1 유휴시설물 및 공간의 현황파악(※노후주거지의 빈집재생 활성화)

- 산업구조의 변화, 사회적 환경과 문화의 변화로 도시 내 유휴화 된 시설의 현황조사
- 빈집 지원기구의 부산 시내 빈집 현황 조사
- 빈집 이외 산업시설, 도시 내 상업공간, 공공시설 내의 유휴공간에 대한 조사

5.2 부산형 빈집은행 시범운영(※원도심 빈집 활용한 청년들의 마을놀이터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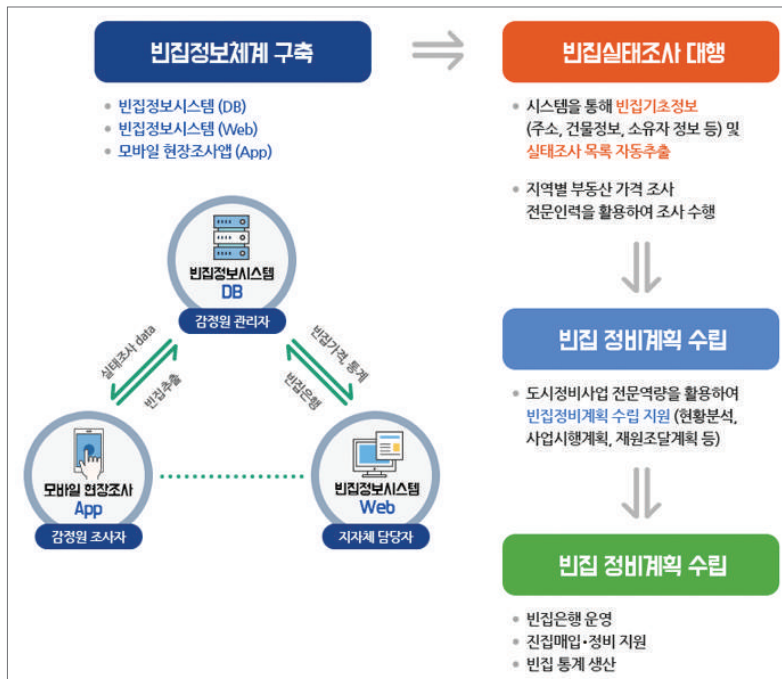
- 기존의 빈집정보시스템을 빈집은행으로 확대하고 빈집에 대한 통합적인 대응을 위한 종합정보 시스템으로 운영
- 빈집은행의 전체적인 관리는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부산의 기존조직이 담당 하되, 권역별로 활용방안이나 수요자 발굴 등은 NPO 등의 민간조직이 참여 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

5.3 유희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저렴한 주거의 제공(※사회주택사업 추진)

- 빈집정보 데이터와 빈집은행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부산형 셰어하우스와 햇살동지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기 조성된 햇살동지사업 등도 빈집정보 데이터에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 유희시설 중 대부분은 수리나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집수리나 인테리어 관련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함



▲ [그림 V-63] 영도구 동삼1동 <가치가치 하우스> : 방치된 빈집을 주민들을 위한 공유냉장고, 공유세탁실, 공유요리실, 공동회의실 등 주민공유공간으로 재활용하였음
*출처 : 일간리더스경제



▲ [그림 V-64] 빈집정비계획 수립절차
*출처 : 한국감정원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유희시설물 및 공간의 현황파악	○			· 유희공간 유형화 및 현황조사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구·군
부산형 빈집은행 시범운영		○		· 기존의 빈집정보시스템을 빈집은행으로 확대 운영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구·군
			○	· 권역별 빈집은행 운영 및 민간위탁	도시재생정책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구·군
유희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저렴한 주거 의 제공		○		· 부산형 행복쉐어하우스와 햇살동지사업의 확대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유희시설물 및 공간의 현황파악	400		200	200		
부산형 빈집은행 시범운영	300				150	150
유희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저렴한 주거의 제공	1,000				500	500
계	1,700		200	200	650	650

S4

생활성

이웃공동체에 기반한 정주성 제고와 공동체 역량강화

S4-a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해 온 단독주택지와 노후 공동주택단지 등의 정주환경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관리방안을 수립한다.

S4-b 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혹은 민관 협력으로 정주환경을 가꾸고 개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범사업을 함께 발굴하고 지원한다.



정책과제

- 1 **S4PT1** 노후 공동주택 유지 및 관리
- 2 **S4PT2** 쾌적한 단독주택지 유지 및 관리

실행과제

- 1 **S4AP1**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 2 **S4AP2** 단독주택지 동네골목 가꾸기



“봄에 온갖 꽃이 피면 이 골목이 얼마나 이쁘지 몰라, 내년에는 봄에 와요.”
_ 영주동 주민

“벽화가 아닌 식물로 마을을 아름답게 하고 계신 주민”
_ 여상희 작가

S4

생활성

정책과제 1

S4PT1

노후 공동주택 유지 및 관리

- ✓ 공동화되어 가는 노후 공동주택의 현황을 파악하고 유지·관리·운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 주민들이 당장 느낄 수 있는 거주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주민 공동체와 함께 마련하고 지원한다.



▲ [그림 V-65] 2017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에 참여한 국내외 대학생들의 좌천아파트의 현황 현장조사
*출처: 부산건축제

1. 배경 및 필요성

1.1 공동주택의 노후화로 인하여 발생할 주거환경 악화에 대비

- 노후 단독주택의 증가 못지않게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와 그에 따른 빈집의 증가로 인해 남은 거주자들의 거주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음
- 일부 노후 공동주택은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승강기가 없으며 주차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주자들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기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음
- 향후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1.2 원도심의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공동화가 심각한 상황

-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오래된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음
- 원도심의 인구감소로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도 급속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감소에 따라 주변의 상점들도 폐업하고 있음
- 노후 공동주택의 빈집으로 인한 단지 내부의 공동화와 공동주택단지 주변의 공동화가 동시에 발생함으로 남아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음

1.3 물리적 붕괴와 공동화 이전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

- 구조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등급 D등급 이상으로 판정받은 위험한 상황의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음
- 노후 공동주택의 경우 열악한 유지보수의 문제로 인한 누수 등이 구조적 노후화를 더욱 촉발하고 있으므로 물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이 시급함

2. 현황 및 문제점

- 1969년 준공된 원도심의 시영아파트를 비롯하여 많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고령화로 인해 스스로 주거 환경을 개선할 물리적, 경제적 여력이 없는 실정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
- 원도심의 노후 아파트들은 입지 상 교육환경이나 교통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의 문제로 재건축 사업의 추진도 어려움
- 1980년대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일부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파트의 약 50% 이상이 적절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슬럼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15년 송파구를 시작으로 전국의 몇몇 지방자치단체는 관내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 장기수선충당금의 전수조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실태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부산시에서도 2018년 2월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¹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조례 :
제4조의2(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과제의 목적

- 노후 공동주택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동주택의 슬럼화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모색
- 노후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위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
- 장기적으로 노후 공동주택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 및 관리 체계 개선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시영아파트를 비롯한 원도심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
- 부산시 전역의 공동주택

4.2 내용적 범위

- 40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환경과 거주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
- 부산 시내 아파트의 장기수선 대비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 부산시 공동주택의 관리체계 현황 및 공동체 활성화 방안

5. 세부과제

5.1 시영아파트 포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대응계획

- 구조적 안전성을 비롯하여, 단열, 누수, 설비시설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성능 개선의 범위와 예산을 산정
- 거주자 실태조사(연령, 소득, 장애 여부)와 거주 만족도의 조사
- 공동주택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사회적 욕구 조사
- 실태조사와 사회적 욕구 조사에 기반한 향후 환경개선방안 또는 도시재생 방안 도출

5.2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개선

-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적립한 것이며, 장기적으로 공동주택을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공간으로 만들고, 공동주택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필요한 제도임
- 현실적으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산정된 교체 및 보수 금액보다 부족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공동주택의 건설시기별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한 지원방안 수립



▲ [그림 V-66] 수정아파트 중복도



▲ [그림 V-67] 공동화장실

5.3 관리체계 지원 및 개선

- 공동주택 슬럼화는 각 세대마다 소유권이 분리되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유권이 분산되어 유지관리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공동주택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관리체계가 필수적이므로 주민공동체의 현황조사를 통해 자립적 관리 능력과 열의가 있는 주민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
- 노후화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성능개선과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공용공간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시영아파트 포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		· 구조, 단열, 누수, 설비시설 등의 건축 현황조사 · 거주자 현황 및 거주만족도 조사 · 향후환경개선방안 도출	주택정책과 자치구·군
장기수선충담금 개선			○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 충담금 현황 조사 및 문제점 파악	주택정책과 자치구·군
관리체계 지원 및 개선		○		· 주민공동체 현황조사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공동화장실과 승강기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개선 지원방안 수립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시영아파트 포함 노후공동주택 실태조사	300				150	150
장기수선충담금 개선	-					
관리체계 지원 및 개선	200				100	100
계	500				250	250



생활성

정책과제 2

S4PT2

쾌적한 단독주택지 유지 및 관리

- ✓ 공동주택에 비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단독주택지의 환경을 개선하여 대규모 철거 재개발/재건축을 줄이고 현재의 주거유형과 거주환경을 지속하도록 유도한다.
- ✓ 공동주택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인식이 있는 단독주택지의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본적인 생활 SOC를 확대한다.



▲ [그림 V-68] 안락동 단독주택지
*사진 : 조명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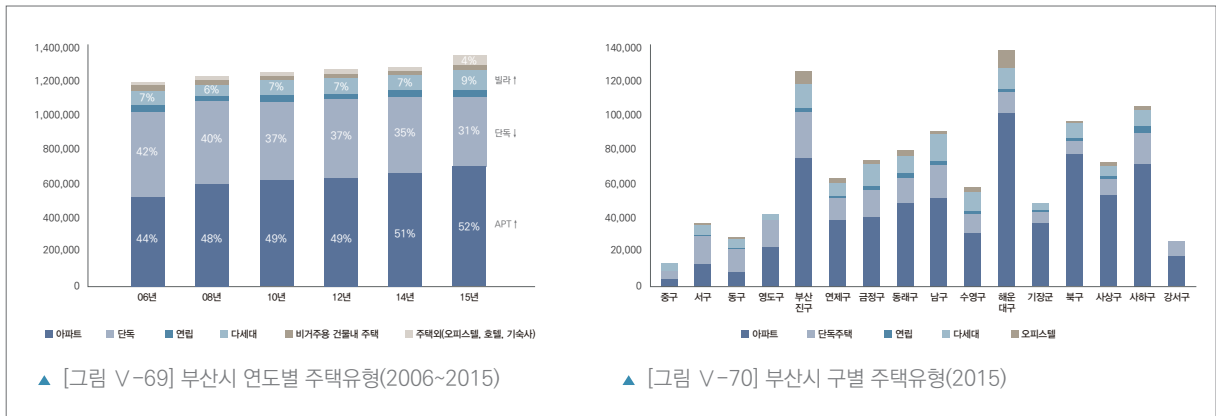
1. 배경 및 필요성

1.1 주거유형 다양성의 보존과 부산시 미래공간자원 확보 차원에서 단독주택지 인식 전환

- 시민들의 소득수준, 개인의 경제적 여력 그리고 주거유형의 개인별 선호에 따라서 주거유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유형의 다양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예측하기 어려운 인구 및 사회의 미래변화에 가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단독주택지라는 공간의 보존이 필요함
- 고층 공동주택단지와는 달리 단독주택지는 신축, 수리, 리모델링 등 소규모 건축활동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도시경제의 원천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1.2 단독주택지의 정체성 보존을 위한 방안마련필요

- 부산의 단독주택비율은 2006년 42%에서 2015년 31%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아파트비율은 2006년 44%에서 2015년 52%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그 결과, 부산의 주택 유형은 점차 아파트로 획일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다양한 주거유형과 마을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독주택지가 감소하고 있음
- 획일적이고 단순한 도시공간은 도시로서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므로 단독주택지가 지닌 공간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유지하기 위해 정책적 중요성에 대한 재평가와 시민인식 전환이 필요함



▲ [그림 V-71] '레고마을'로 알려진 만덕동 단독주택단지
*출처: 부산광역시



▲ [그림 V-72] 영주동일대 단독주택지 (사진: 조명환)

1.3 단독주택지의 노후화 대응과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젊은 세대의 아파트 선호는 단독주택지역의 생활환경이 아파트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임
- 노후 단독주택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상당수가 스스로 주택을 수리하고 보수할 경제적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주택의 노후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 주민들 중 상당수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기 보다는 아파트로 재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사업성 등의 이유로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도 많고, 재개발이 된다 해도 원주민의 재정착율이 낮아서 기존의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규모 철거재개발의 유혹으로부터 단독주택지가 가진 독특한 공간구조와 다양한 건축유형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넓은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단독주택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

※ 주택관리지원센터 (건축법 제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기준 부산시 전체 주택 133만 호 중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약 60만 호(다세대주택 포함) 정도로서 적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있으나, 공원/녹지, 상업, 문화, 교육, 복지 등의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 사회적 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외면받고 있음
- 최근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단독주택지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역공동체의 해체와 저소득층의 주거불안도 증가하고 있음
- 부산시에서는 2016년부터 60만 노후 단독주택지역에 공동주택 수준의 주택 유지관리 서비스와 무인택배 등 주민 생활편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마을지기사무소를 운영해 왔으며, 취약계층의 응급수리서비스는 도움이 되었으나 마을 전반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음
- 부산시는 2017년 '60만호 단독주택지 도시재생 개선계획'을 통해 단독주택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음

3. 과제의 목적

- 단독주택지의 슬럼화와 소멸 방지를 통한 다양한 주거유형의 유지와 도시 공간 자원의 보존
- 단독주택지의 유지를 위한 생활 SOC 확충 및 거주환경 향상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역
- 단독주택지의 보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과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4.2 내용적 범위

- 단독주택지의 소멸현황과 생활SOC 파악
- 단독주택지의 고유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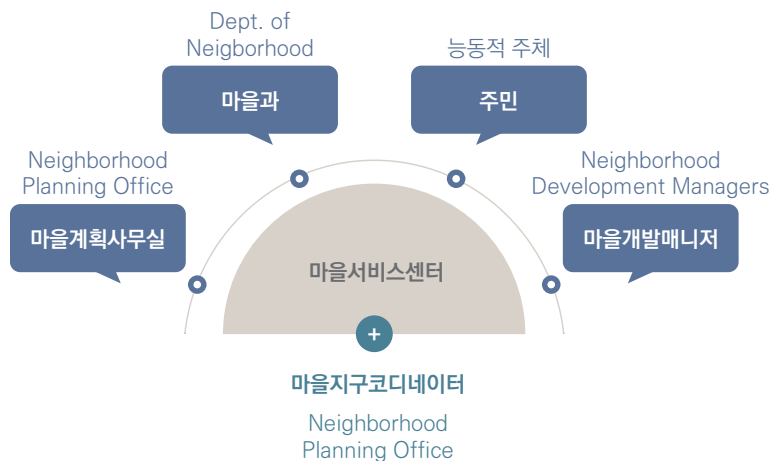
5. 세부과제

5.1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수립

- '60만호 단독주택지 도시재생개선계획'의 적용방안 수립
- 단독주택지의 정체성과 가치발굴을 위한 건축, 인문, 사회, 역사 분야 기초 조사
- 단독주택지 유지 및 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및 세부지침 수립 : 마을지기의 기능과 범위를 확대한 마을관리사무소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안 제시

Case Study : 미국 시애틀 마을서비스센터

시애틀에는 마을만들기를 전담하는 '마을과(Dept. of Neighborhood)', 주민, 마을개발 매니저, 마을계획사무실이 '마을서비스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마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고 있다.



▶ [그림 V-73] 건축문화기반의 도시 재창조와 신산업발굴
*출처 : AURI, 『건축문화기반의 도시재창조와 신산업발굴』

5.2 단독주택지 10분 생활환경 방안 마련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 계획 수립 및 관리역량 강화)

- 단독주택지의 생활기반시설(생활 SOC) 현황조사 : 공공시설, 교육시설, 문화 시설, 복지시설, 체육 및 휴식시설, 근린상점 등 공공서비스와 생활편의시설의 입지 및 접근성
- 단독주택지의 교통 및 보행환경조사
- 안심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단독주택지 10분 생활환경 조성계획 수립



▲ [그림 V-74] 10분 생활권 개념도



▲ [그림 V-75] 서울시 상도동 도화공원 녹색 골목길 중심의 10분 동네 조성계획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수립	○			· 단독주택지 현황조사	도시균형재생국
		○		· 단독주택지 관리체계 및 지원방안 수립	
단독주택지 10분 생활환경방안마련	○			· 생활기반시설 현황조사 · 교통 및 보행 환경조사	도시균형재생국
		○		· 10분 생활환경 조성계획 수립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수립	150		50	50	50	
단독주택지 10분 생활환경방안마련	300			100	100	100
계	450		50	150	150	100

S4

생활성

실행과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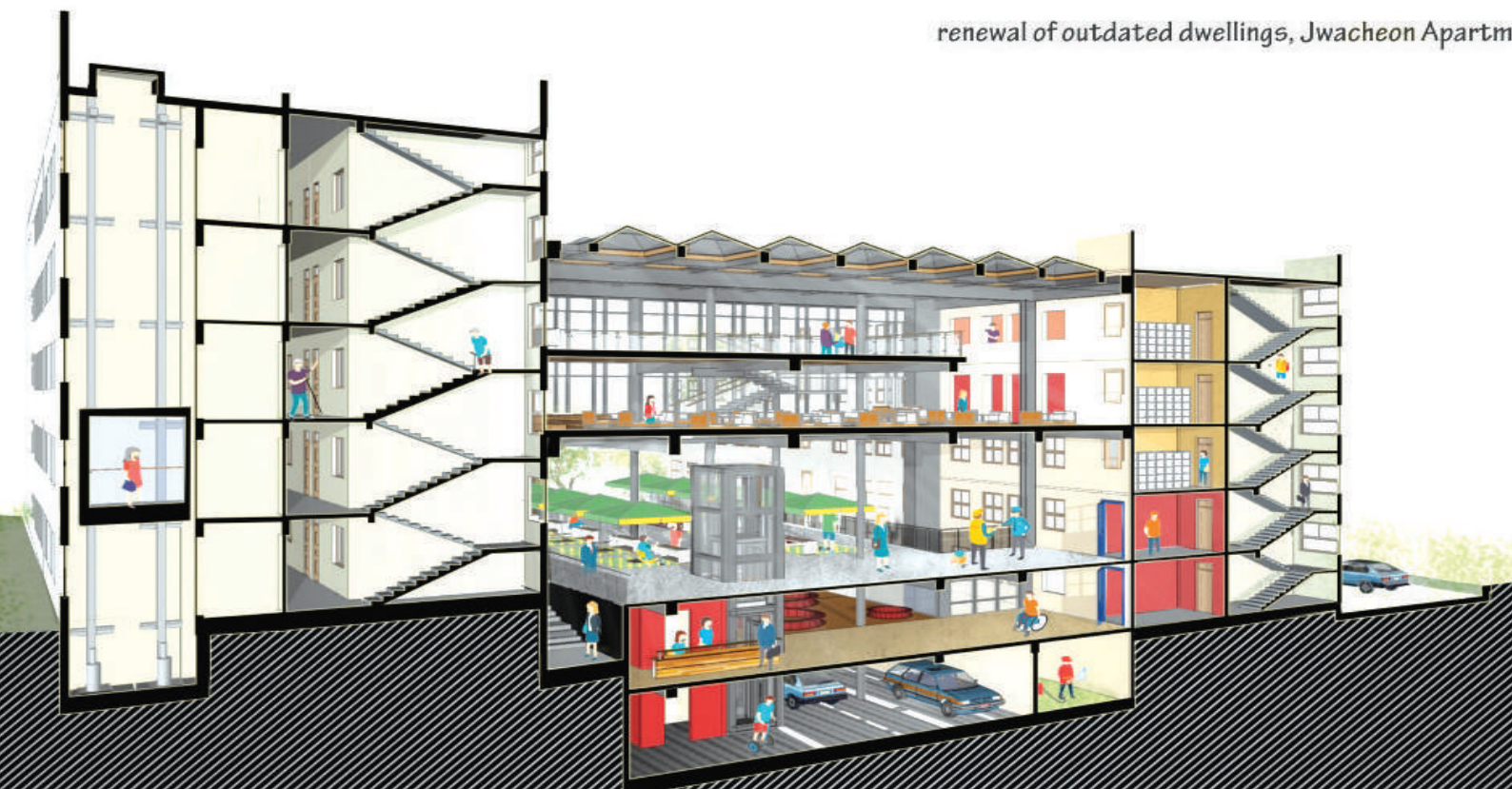
S4AP1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 ✓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
- ✓ 안전, 생활편의, 이동,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합리적비용의 적정수준의 리모델링 방법론을 마련하여 생활환경 개선에 적용한다.
- ✓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최대한 주민 스스로 단지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MEMORY STAYS IN BUSAN

renewal of outdated dwellings, Jwacheon Apartm



▲ [그림 V-76] 노후공동주택 생활환경개선 아이디어, 좌천아파트
*출처 : 2017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

1. 배경 및 필요성

1.1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화 문제 대한 대응

- 1969년부터 70년대 초, 영주동, 수정동, 보수동 일대의 판자촌 철거와 동시에 지어진 시영아파트를 비롯하여 원도심 일대의 노후 공동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음
- 그 결과 원도심 노후 공동주택에는 공가가 증가하면서 유지관리를 받지 못하는 공가가 주변 세대의 거주환경을 위협하여 거주환경이 급격히 악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1.2 구조적 불안, 설비시설 노후화, 단열성능 미흡

- 노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노후화로 인한 거주환경의 악화는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고령 거주자들에게 많은 고통과 불편을 주고 있음
- 설비시설과 단열성능의 노후로 인한 공공요금이나 냉난방비의 부담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후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따라서 합리적 비용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구조·설비·단열·실내환경의 개선을 통해 고령자와 사회취약계층 거주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사업이 필요함

1.3 치안 불안 가속화

- 대부분의 노후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출입 통제가 없기 때문에 치안의 유지에 불리하고, 거주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안전예방과 자체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
- ‘깨진 유리창 이론’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노후 공동주택의 생활환경은 한번 악화되면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므로,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1.4 공동체 활성화의 필요성

- 쇠퇴한 지역과 거주환경을 개선하려면 지역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이 기반이 되어야 함
- 공동체 의식은 같은 지역을 토대로 일상적인 생활을 함께 공유하는 집단 속에서 구성원 간 인사, 만남, 협력, 작업, 놀이 등 다양한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장소애착, 욕구충족, 상호영향, 유대감, 연대감 등을 의미함
- 따라서,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함

Case Study :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월슨과 조지 கே링이 1982년 3월에 공동 발표한 논문 '깨진 유리창(Broken Windows)'이라는 글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이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대로, 깨진 유리창이나, 공공기물 파손 같은 작은 무질서와 범죄를 조기에 개선하여 질서를 회복하면 더 큰 범죄나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인용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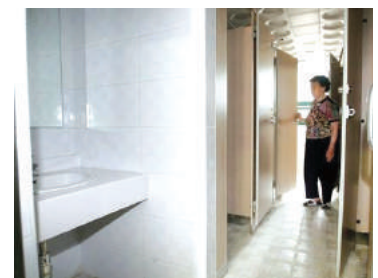
◀ [그림 V-77]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Pruitt Igoe 아파트단지 : 1956년 준공 직후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익명적인 공간에서 벌어진 범죄행위가 만연하여 가장 위험한 공동주택으로 악명을 떨치다가 1972년 폭파철거되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노후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거주자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해 지면서, 각 자치구에서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행복마을사업 등 도시재생사업을 유치하여 공동화장실의 개선, 벽면 색채 사업, 경사 엘리베이터의 설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 등을 지원하였음
- 도시재생 관련 사업비가 지원되는 동안에는 공용공간의 개선이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였지만,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은 선정된 사업구역 내의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자체의 구조·설비·환경 성능의 개선이나 개별 세대의 거주환경의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음
- 계속해서 공동주택 공간들이 증가한다면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지역적 공동화 현상으로 악화될 우려도 있음
-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들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현재의 고령 거주자들은 스스로 환경개선을 할 경제적, 신체적 여력이 없음



▲ [그림 V-78] 동구 좌천아파트 단지로 연결되는 경사엘리베이터
*출처 : 여성신문



▲ [그림 V-79] 주거환경개선사업(2012)을 통해 현대식화장실로 개선한 동구 수정시영아파트의 공동화장실
*출처 : 부산일보

3. 과제의 목적

- 노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성능 개선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
- 노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생활환경 자립적 유지관리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원도심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

4.2 내용적 범위

- 원도심 일원의 노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사회경제적 실태 조사
- 노후 공동주택 적정 성능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 노후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역량강화

5. 세부과제

5.1 노후 공동주택 성능개선 시범사업

1) 성능개선을 위한 노후 공동주택 현황조사

- 원도심 일원 노후 공동주택의 사회경제적 조사 : 가족, 연령, 소득, 장애, 소유관계, 주민 대상 생활방식 및 거주만족도 조사 등
- 원도심 일원 노후 공동주택의 물리적 성능 조사 : 구조·설비·단열·실내환경
- 현황조사를 토대로 각 단지별, 동별 현황을 유형별 정리

2) 성능개선 시범사업 지원대상 공동주택의 선정

- 성능개선 시범사업 지원대상 노후 아파트 선정
- 현황조사를 기초로 리모델링의 시급성, 필요성, 주민참여도, 실현가능성, 사업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정량적 지표로 점수화하여 객관적으로 선정

3) 적정수준의 성능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성능개선 시범사업에는 건축계획, 구조, 환경, 설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리적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정 공법과 재료를 제안
- 전문가들이 리모델링 이전과 이후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적정공법과 재료의 효과와 타당성을 검증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향후 성능개선 사업의 지침으로 활용

5.2 노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 공동체 사업 추진

1)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체 현황 조사

-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체 조직, 활동상황, 기존 공동체 시설현황 조사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요구 및 프로그램 조사

2) 공동체복원 및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

- 노후 공동주택 현황조사를 기초로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노후 공동주택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예술·문화, 교육, 복지·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3) 공동체활성화를 위한 공동체시설 리모델링 지원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 대상지 중 프로그램 참여도와 활성화를 기초로 필요한 공동체시설 리모델링 지원
- 공동체시설은 새로운 시설을 신축하기 보다는 노후 아파트 내의 1층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

4) 노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확산

- 노후 공동주택 활성화 시범사업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관하고, 원도심 기초지자체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혹은 현장지원센터가 실무적으로 실행
-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행 과정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하면서 인접 노후 공동주택으로 확산



▲ [그림 V-80] 부산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기장군 00아파트)

*출처 : 부울경신문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노후공동주택 성능개선 시범사업	○			· 성능개선을 위한 현황조사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의 선정	주택정책과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		· 성능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 성능개선 시범사업	도시재생정책과 주택정책과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			· 공동체 및 공동체시설 현황조사	도시재생정책과 주택정책과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도시재생지원센터
		○		· 아파트공동체 복원 및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책 마련 ·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 · 프로그램 수행에 합당한 공동체 시설의 리모델링	
			○	·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센터 구축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노후공동주택 성능개선 시범사업	300			150	150	(3,000)*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100		50	50	(500)*	(500)*
계	400		50	200	150	

*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

S4

생활성

실행과제 2

S4AP2

단독주택지 동네골목 가꾸기

- ✓ 아파트에 비해 거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인식을 받고 있는 기존 단독주택지의 거주환경을 개선하여 어린 자녀를 가진 가족들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지로 가꾸어 간다.
- ✓ 단독주택지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작은 사업을 지원한다.
- ✓ 단독주택지의 거주환경을 가장 위협하는 교통사고, 불법주차, 범죄를 완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수단을 지원한다.



▲ [그림 V-81] TV 드라마 <응답하라 1988> : 드라마 속의 골목에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거주하며(social mix), 함께 돕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골목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음

*출처 : tvn드라마 응답하라 1988

1. 배경 및 필요성

1.1 기존의 단독주택지의 노후화와 쇠퇴

- 단독주택지 주민들 중 다수는 오랜 기간 아파트 재개발을 희망해 왔고, 지역의 쇠퇴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과정처럼 인식되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음
- 재개발구역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더 이상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어 급속히 노후화되고 쇠락해짐
- 과도한 정비구역의 지정으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사업추진이 어려워 해제되고 있으며, 이런 지역은 도시재생 등의 방법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1.2 동네의 골목 커뮤니티 소멸

- 아파트 선호현상의 심화로 젊은 세대들이 신도시 또는 대단지 아파트로 이주하면서 산업시대 활발했던 단독주택지는 급격히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고 있음
-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거주하면서, 경제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혼재(social mix)하는 동네에서 볼 수 있는 활기가 사라지면서 동네 또는 골목 단위의 커뮤니티가 붕괴하고 자율적인 주거환경 유지관리기능도 점점 약화되고 있음
- 쇠퇴지역은 젊은 거주민의 이탈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과밀지역은 1인가구 위주의 개인화가 심화되고 있음



▲ [그림 V-82] 재개발로 사라지는 골목커뮤니티(영도 동삼동)

1.3 물리적 개선사업, 주거서비스지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 등 다각적 접근이 필요함

- 일부 단독주택지역은 공동주택지역보다 인구밀도가 높아, 안전성과 쾌적성을 위협함에 따라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일상생활의 쾌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원/녹지, 가로공간 등 공간환경 개선사업 필요함
-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지원을 통해 거주 편의성 회복이 필요함
- 고령자, 젊은 직장인 등 지역주민의 인적구성을 고려한 다양한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커뮤니티의 회복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단독주택지는 주거를 포함한 상업, 소규모 업무, 교육 및 복지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수용하고 있지만 그 역할에 대해 주민 스스로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음
- 커뮤니티 붕괴와 지역 내 갈등고조가 심각하지만,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제도나 지원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파트 재개발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노후 단독주택지의 범죄안전을 위한 환경디자인 사업인 CPTED사업이 시행주체(지자체 및 경찰청), 설계업체, 시공업체 및 사업예산 등에 따라 너무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어서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부실 사업이 되거나, 인접 CPTED 사업구역과 통합 관리되지 못하고 중복사업의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재개발사업 등 정비구역이 해제된 단독주택지에 대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등 자치구·군의 개별적인 도시재생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사업으로 오히려 비판받는 경우도 적지 않음

3. 과제의 목적

- 단독주택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마을의 공동체 회복
- 주민 주도의 단독주택지 생활환경 개선 활성화
- 공공지원을 통한 선도사업으로 단독주택지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의 단독주택지

4.2 내용적 범위

- 단독주택지 정주성 개선을 위한 커뮤니티 주도사업 지원
- 단독주택지 안전성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 개선
- 안전한 단독주택지 환경구축을 위한 범죄안전환경디자인 통합관리

5.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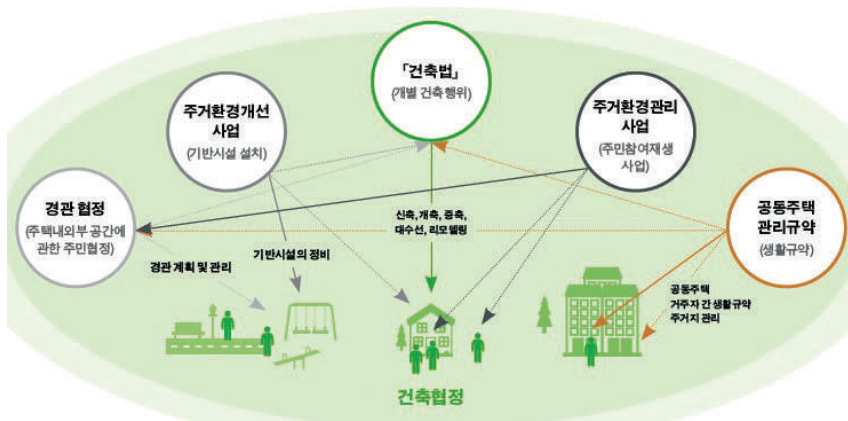
5.1 주민발의 눈높이 생활환경 개선사업

- 골목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환경에서 느끼는 소규모 불편요소의 개선을 주민이 발의하고, 전문가의 컨설팅, 행정의 사업비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거버넌스형 사업 지원계획 수립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공모사업, 국토부가 지원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주민발의에 사업의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의 관심과 역량을 제고

5.2 골목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협정제도 활성화

- 주민발의의 생활환경개선사업보다는 큰 규모와 범위의 환경개선사업은 주민 들도 예산, 공간, 서비스 등을 분담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주민협정제도를 활성화함
- 마을 단위 혹은 골목 단위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경관협정 또는 건축협정제도를 활성화
- 주민협정을 통한 경관 또는 공간 개선사업을 위해 협정제도를 홍보하고, 여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관련사업과 연계하고 통합하여 필요 사업비를 지원
- 주민발의/전문가 발의 > 협정 추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 협정 내용 조정 > 협정 및 지원 > 모니터링 및 평가의 순서로 사업 추진

정비사업(기반시설) + 건축행위(주택) + 생활규약(주민) = 건축협정



▲ [그림 V-83] 건축협정의 제도적 특징

*출처 : auric 연구보고서

5.3 주거지 안심주차

- 단독주택지내 그린주차사업 및 블록형 공용주차장 사업 등 기존 시범운영 사업의 확대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는 빈집을 활용한 동네주차장 조성을 위한 각종 기금 및 사업비 지원, 조세 등 위한 컨설팅 지원
- 주차분쟁 조정을 위한 주차선 구획, 주거지 주차장의 시간대별 공유 등을 위한 주거지 안심주차 가이드라인 수립

5.4 노후 단독주택지 안전을 위한 경관 CPTED 통합관리

1) CPTED 사업지역 모니터링 및 안전관리 평가제도 도입

- 기존 CPTED 사업지역의 데이터 통합
- 기존 사업지역에 대한 범죄현황, 주민만족도, 청결도 등 사업성과 및 유지관리 현황 모니터링 및 평가

2)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 CPTED 가이드라인 수립

- CPTED 사업 지역의 모니터링 및 평가에 기반하여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주거지 CPTED 사업 방식, 설계, 시공 및 재료,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제안
- 안전 뿐만 아니라 경관을 고려한 부산형 안심마을 가이드라인 수립 : 사업 추진체계, 절차 및 추진 방식, 방법, 안전, 색채 및 조명 등 가이드라인 제정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주민발의 눈높이 생활환경 개선사업	○			· 주민발의사업 지원계획 수립	건축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시민행복소통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		·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시범사업 실행	
골목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협정제도 활성화	○			· 골목생활환경 개선 주민협정사업 계획 수립	건축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시민행복소통본부 도시재생지원센터
		○		· 전문가 참여 주민협정사업 실행 및 확산	
주거지 안심주차	○			· 그린주차사업 확대 및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주택도시보증공사
		○		· 주거지 안심주차 공유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경관 CPTED 통합관리	○			· CPTED 사업지역 데이터 통합 및 모니터링 평가	건축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디자인센터
		○		· 부산의 특성을 고려한 부산형 안심마을 가이드라인 수립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주민발의 눈높이 생활환경 개선사업	-	-	(200)*	(200)*	(500)*	(500)*
골목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협정제도 활성화	-	-	-	-	(2,000)*	(2,000)*
주거지 안심주차**	120		30	30	30	30
경관 CPTED 통합관리	200		50	50	100	
계	320		80	80	130	30

*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주민공모사업과 연계 추진

** 주거지 사업비는 건설탕비용이며 사업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재생기금 연계

S5

안전성

지진·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건축 시스템 구축

S5-a 건축물의 노후화, 대형화, 고층화와 함께 증가하는 재난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공간환경을 조성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인프라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S5-b 건축과 공간환경 관련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난 및 사고 예방과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관련 기관이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한다.

정책과제

- 1 **S5PT1** | 핵심과제 | 노후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실행과제

- 1 **S5AP1** 부산지역 건축시설물 안전지도 작성 ※도시 리질리언스 강화형 도시계획 및 개발
- 2 **S5AP2**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 3 **S5AP3** 활용 가능한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 4 **S5AP4** | 시범사업 | 노후건물 안심보강 시범사업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_ 스톡홀름 선언, 1989

S5

안전성

정책과제 1 | 핵심과제 |

S5PT1

노후건축물 안전성 확보 및 유지관리

- ✓ 자연재해 및 재난에 대비한 노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 노후건축물의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을 제고한다.
- ✓ 안전한 도시구축을 통해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 [그림 V-84] 제천스포츠크센터 화재(2017) : 2017년 발생한 제천스포츠크센터 화재는 가연성 단열재, 불법구조변경, 건축물의 안전관리 부재, 피난과 구조동선의 혼선, 주변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의 어려움 등 복합적 요인으로 2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대형 재난이 되었다.
*출처 : SBS뉴스

1. 배경 및 필요성

1.1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및 동남권 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우려

-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대규모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으며, 건축시설물은 이러한 재해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최근, 경주 및 포항지역의 강진 발생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노후 공공건축물과 필로티 구조를 가진 건축물의 피해가 특히 심각하였음
-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건축시설물의 안전 관리체계 구축 및 지속적 예방활동이 요구됨

1.2 화재 및 침하 등 건축물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발생

- 부산의 아파트와 주상복합건축물은 점점 고층화되고 있으며 화재에 의한 대형참사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음
- 최근 대규모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와 밀양 세종 병원 화재사고를 비추어 볼 때, 건축물 화재 재난대응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정보의 수집과 활용방안이 요구됨

1.3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성 확보의 중요성 대두

- 부산시 전 지역에 걸쳐 공공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의 노후화가 급격하게 진행하고 있음
- 노후 건축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시스템이 요구됨
- 시민의 이용집중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 노후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 안전 태스크포스(T/F)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2.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는 공동주택 3,980동, 대형건축물 390동을 비롯해 총 4,759동의 1·2층 시설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32동을 재난안전 시설물로 관리하고 있음 (2018.06현재)
- 노후화된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화된 유지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 부산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진 및 폭우 등을 고려할 시 시설물 안전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당시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내부공간에 대한 현황 정보가 제대로 확보되지 못해 소방 및 구조활동이 지체되어 인명피해가 더욱 컸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피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건물도면과 같은 현황정보를 소방당국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입법 움직임이 있음
- 화재발생 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진입의 지체로 인적·물적 피해의 증대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의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이 2018년 8월부터 시행되었음

3. 과제의 목적

- 지진, 폭우 등 대규모 자연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노후 건축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 체계 구축
- 화재 등과 같은 인위적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민 이용집중도가 높은 노후 건축시설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 건축시설물의 단계별 안전관리시스템 수립을 통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노후 공공건축물과 시민 이용 집중도가 높은 노후화된 민간건축물

4.2 내용적 범위

-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및 재난에 취약한 다중이용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물 안전 T/F위원회 운영
- LCC(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부산시 <안전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
- 재난에 긴급 대응 가능한 건축시설물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
- 건설공사 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체계 강화

5. 세부과제

5.1 건축물 안전 T/F 위원회 운영

- 부산에 산재한 노후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건축위원회 내부에 '건축물 안전 T/F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축구조,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물 소방 및 방재, 건축물 유지관리, 토목 등 분야별 실무 전문가와 관련 국책연구소 연구원으로 구성
- T/F위원회는 주기적인 회의, 현장방문, 워크숍을 통해 부산의 노후 건축물 안전에 관한 현안 도출 및 사안별 현실적인 개선방안 수립을 목적으로 함
- 신축 건축물 위주의 안전대책을 기존 노후 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피난약자 이용시설, 필로티 건축물 등 자연재해, 화재, 피난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중심의 사전 예방적 관찰활동을 통해 노후 건축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방안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방안 도출
- T/F 위원회에 재해 및 재난 유형별 세부분과 설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및 위원회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건축물 안전에 대한 시민 경각심을 고취

5.2 부산시 '안전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

1) 기존 문제 사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한 개선점 도출 및 반영

- 기존 노후 건축물 문제 사례에 대한 분석
-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청취를 통해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접근
- 추출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2) 건축물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한 LCC관점의 지침 수립

- 건축시설물의 시간경과에 따른 노후화를 고려한 중장기적 접근
- 초기투자비용의 경제성보다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생애주기비용 관점에서의 건축기획 지침 수립

3)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 기반의 건축기본계획 수립

- 안전성 측면에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후 건축시설물의 정보 수집 및 조사
- 노후 건축시설물 정보의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유지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기반 건축기본계획 수립

5.3 건축물 도면 긴급공유 시스템 구축

- 2017년 제천스포츠크센터 화재는 화재발생 당시 건축물 내부공간에 대한 현황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피난 및 구조경로를 확보하지 못한 결과 대규모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음
- 재난 안전의 관점에서 신규 건축물 도면 축적을 위한 관리기준 수립 및 도면 중앙관리를 위한 관리자 권한 등에 대한 매뉴얼 개발
- 다중 이용 건축물 도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방 당국과의 공유를 위한 관리 시스템 개발

5.4 건축물 화재진압 연계 정책

-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다중이용 건축물 주변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정책의 수립
- 주차장이 협소하고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도시형 생활 주택 주변 소방도로 확보 정책의 수립

5.5 건설안전사고 방지 정책

1) 건설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건설안전 감사관 도입 정책

-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건설안전 지도 위원회 설치
- 중대형 규모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주무관청, 학계, 산업체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안전 감사관 정책 실시 : 수시 현장지도 등

2) 건설현장 작업자 건설안전 강화 정책

- 건설안전 체험시설 설치 검토
- 관내 현장을 대상으로 3대 건설안전 확인 실천운동 실시

3)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의 내실화 정책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교육 및 수료자 현황 분석
- 안전의식 등 기본 소양을 충실히 갖춘 건설 기능인력 양성의 확대 방안 수립



▲ [그림 V-85] 소방도로 확보를 위한 순찰



▲ [그림 V-86] 도면 미확보로 피해가 커진 제천사우나 화재
*출처 : 서울신문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건축물 안전 T/F 위원회 운영	○			· 건축위원회에 안전 T/F 소위원회 설치 · 사전 안전예방 활동 및 노후건축물 안전대책 수립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부산시 안전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	○			· 기존 건축물 안전재해 사례연구 및 안전계획 수립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건축물 도면 긴급공유 시스템 구축		○		· 신규 건축물 도면관리 기준 수립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소방안전본부
			○	· 도면 데이터베이스 및 공유 시스템 개발	
건축물 화재진압 연계 정책		○		· 다중이용 건축물 및 도시형 생활주택 주변 소방도로 확보 정책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소방안전본부 시의회
건설안전사고 방지 정책		○		· 건설안전 감사관제 도입 검토 · 건설현장 작업자 건설안전 강화 정책 (*건설안전 체험시설 설치 시 장기)	건축정책과 건설본부 자치구·군 공공기관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축물 안전 T/F 위원회 운영	80		20	20	20	20
부산시 안전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	150			150		
건축물 도면 긴급공유 시스템 구축	400				200	200
건축물 화재진압 연계 정책	100				50	50
건설안전사고 방지 정책	100				50	50
계	830		20	170	320	320

S5

안전성

실행과제 1

S5AP1

부산지역 건축시설물 안전 지도 작성

(※도시 리질리언스 강화형 도시계획 및 개발)

- ✓ 대규모 자연재해(지진, 태풍, 폭우 등)의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 ✓ 재난, 화재, 침수 등의 재해에 취약한 지역과 건축물에 대한 안전 지도를 작성하여 효과적인 방재관리와 피난유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 [그림 V-87] 포항지진으로 파손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지역의 2차 피해 모습(2017)
*출처 : msn뉴스

1. 배경 및 필요성

1.1 최근 지진 및 이상기후로 인해 각종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고 발생빈도도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들어 경주 및 포항지역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진으로 인해 부산지역에도 지진여파를 감지하는 등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로 인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됨
- 바다, 강, 산에 접한 부산의 지형 특성 상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태풍과 폭우로 인해 인명피해 및 건축물의 파손과 침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폭우 사례 : 2014년 부산지역 폭우로 대규모 피해사례가 속출하였음



▲ [그림 V-88] 2014년 부산지역 폭우로 붕괴된 해운대 작동 공사현장
*출처 : JTBC뉴스

1.2 재난에 노출된 고위험 시설을 권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tool)이 필요함

- 자연재해의 특성상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권역 별로 위험에 노출된 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의 대비와 재난 발생 시 피난 및 구조의 측면, 2가지 목적을 위해 재난위험 지역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지역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 해일 등 대형 자연재난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 지진이 여러 차례 발생하여 향후 지속적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건축시설물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으며, 부산지역은 도로의 접근성이 낮아 화재발생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적 관리와 대응적 관리 차원에서 집중관리가 요구됨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부산지역은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예방 관리적 차원에서 주요 상습 침수지역 건축시설물에 대한 침수 위험도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됨

3. 과제의 목적

- 자연재난 시 즉각적 대응 가능한 위험도 기반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 화재 발생 위험지역 예방 및 대응적 측면의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작성
- 상습침수지역 건축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작성



▲ [그림 V-89] 폭우로 침수된 부산연제구의 도로(2017)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하고 그 예산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 특정지역(해안가, 화재발생 위험 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위치하고 있는 중 대형 민간 건축물 등

4.2 내용적 범위

- 건축시설물 방재관리에 대한 기준 수립
- 건축시설물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지도 구축
- 건축시설물 화재발생에 대한 방재지도 구축
- 건축시설물 상습침수지에 대한 침수 방재지도 구축

5. 세부과제

5.1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1) 자연 재난별 건축시설물 영향요인 조사 및 분류

- 자연재난별(지진, 태풍, 해일 등) 발생 가능한 건축시설물 영향요인 조사
- 자연재난 집중관리 건축시설물 조사 및 분류

2)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및 활용

- 지진, 태풍 및 폭우 발생에 따라 건축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높은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건축시설물 재난 대응 안전지도 작성
- 도시관리적 관점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활용 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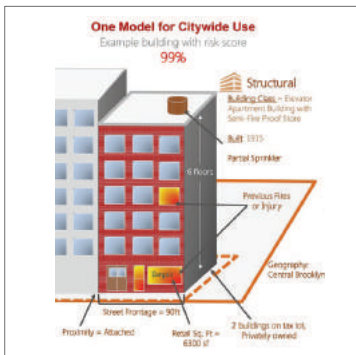
5.2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작성

1) 화재 유형별 건축시설물 영향요인 조사 및 분류

- 건축시설물 화재 유형별 영향요인 조사 및 분류
- 화재 집중관리 건축시설물 조사 및 분류

2)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작성 및 활용

- 건축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시설 유형별 안전지도 작성
- 도시안전적 측면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활용 방안 수립



▲ [그림 V-90] 화재위험 건축물 예측모델 ▲ [그림 V-91] 우신골드스위트 화재(2010)

5.3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작성

1) 상습침수지 피해 및 건축시설물 조사

- 부산지역 상습 침수지를 중심으로 최근 침수피해 조사
- 상습침수 건축시설물 조사 및 분류

2)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작성 및 활용

- 대규모 폭우에 따라 건축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침수에 대응하기 위하여 침수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지도 작성
- 도시방재적 측면에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활용방안 수립



▲ [그림 V-92] 미국 뉴욕시 침수 안전지도
*출처 : 미국연방비상관리국/FEMA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			· 자연 재난별 건축시설물 영향요인 조사 및 분류	건축정책과 시민안전혁신실 소방재난본부
		○		·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및 활용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작성	○			· 화재 유형별 건축시설물 영향요인 조사 및 분류	건축정책과 시민안전혁신실 소방재난본부
		○		·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작성 및 활용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작성	○			· 상습침수지 피해 및 건축시설물 조사	건축정책과 시민안전혁신실 소방재난본부
		○		·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작성 및 활용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300			100	100	100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작성*	300			100	100	100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작성*	150			50	50	50
계	750			250	250	250

*재난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획과제 제안 활용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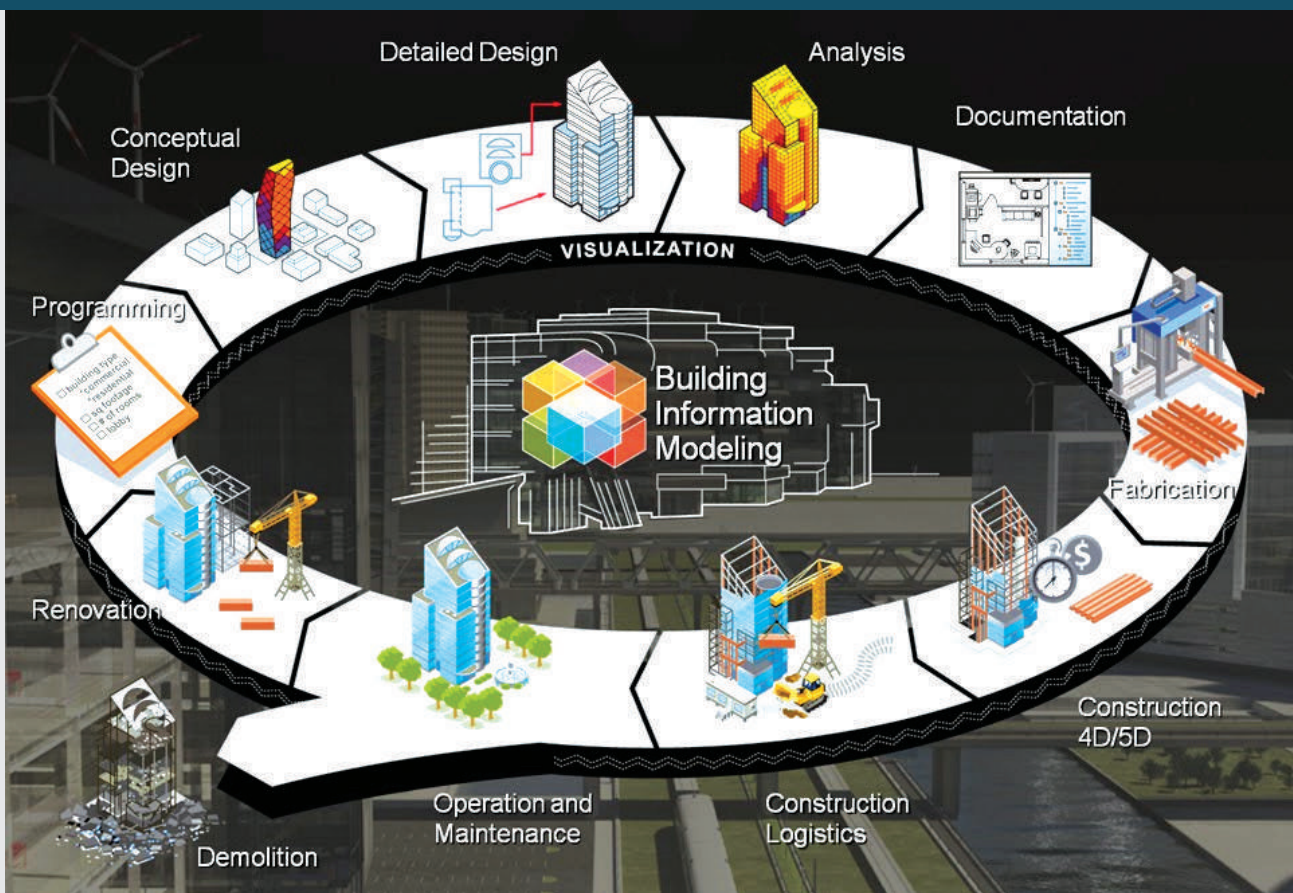
안전성

실행과제 2

S5AP2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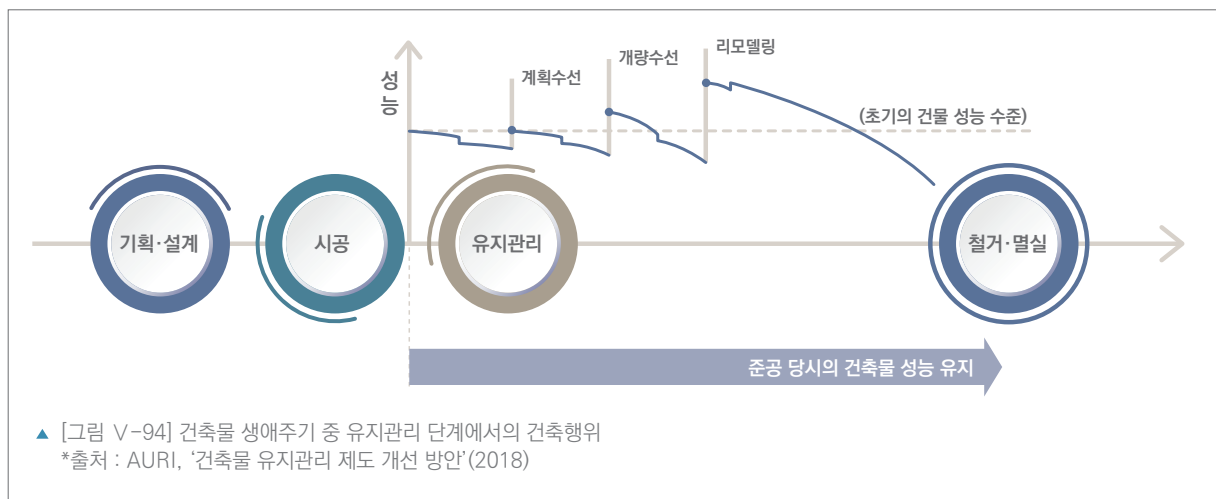
- ✓ 건축물 대형화에 따른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지속적 추적 및 관리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 건축물의 기획단계부터 설계-시공-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Life Cycle에 대한 전사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 [그림 V-93] 건축물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건축물 정보 모델링 개념도
*출처 : www.climatechwiki.org

1.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이면 준공 후 30년 이상된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50%에 이르게 되며, 대부분 사적 자치로 운영되어 행정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집합건축물 관리를 공동주택관리법 수준의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건축법 내에 건축물 유지관리규정이 있지만 사회적 인식부족에 따라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건축물 생애주기관리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관리법(안)'의 제정 움직임도 있음
-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중장기적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
- 건축시설물은 지진/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도시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므로 방재관리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됨



2.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를 위한 설계업무 및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완료 시 세움터를 통해 성과물을 제출하지만 이는 행정절차를 위한 것으로 생애주기 기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기존 실시되고 있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시설물의 준공 당시와 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이력정보가 요구됨
- 최근 부산지역에 발생한 지진과 해안가라는 지역의 입지특성을 고려하여 방재관리적 차원에서 주요 건축물을 추적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됨

3. 과제의 목적

- 주요 다중이용 시설물의 준공 당시와 현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이력정보 체계 구축
- 유지관리기반의 체계화된 건축물 생애주기(Life Cycle) 분석 시스템 구축
- 해안가에 위치한 대형재난예상 건축물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 구축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하고 그 예산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민간 건축물

4.2 내용적 범위

-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단계별 정보구축 가이드라인 수립
-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단계별 정보구축 매뉴얼 수립
- 대형재난 예상 건축시설물 유지 및 방재관리 시스템 개발

5. 세부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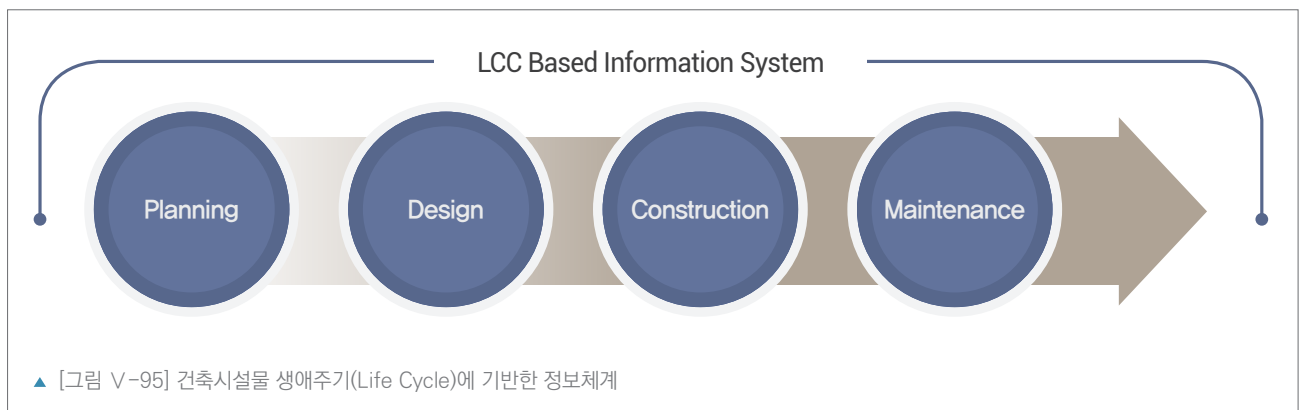
5.1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정보구축 체계수립

1)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정보분류체계 연구

-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적용범위 설정
- 프로젝트 대형화에 따른 건설단계별 정보분류체계 구축

2) 생애주기 정보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수립

- 건설단계별 정보분류체계 구축 및 생성정보 관리체계 수립(관리주체, 관리 방법 등)
- 건축물 유지관리 및 방재관리를 위한 점검 등 연관 활용분야와의 연계성 검토



5.2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1) 건축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체계 연구

- 기획-설계-시공 정보와 유지관리 정보의 분류체계 및 효율적 연계 방안 모색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2) 생애주기 정보체계를 활용한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 건축시설 규모별 유지관리 시스템 다양화
- 관리주체 중심의 유지관리 시스템 구성

5.3 건축시설물 방재관리 시스템 개발

1) 건축물 방재관리 정보시스템 체계연구

- 지진, 화재 등 대형재난에 취약한 건축시설물 정보분류체계 개발
- 지진 및 화재 취약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

2) 생애주기 정보체계를 활용한 건축시설물 방재관리 시스템 개발

- 건축시설 규모별 방재관리 시스템 다양화
- 관리주체 중심의 방재관리 시스템 구성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정보구축 체계수립	○			·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정보분류체계 연구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		· 생애주기 정보관리체계 및 활용방안 수립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			· 건축물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체계 연구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		· 생애주기 정보체계를 활용한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건축시설물 방재관리 시스템 개발	○			· 건축물 방재관리 정보시스템 체계연구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		· 생애주기 정보체계를 활용한 건축시설물 방재관리 시스템 개발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정보구축 체계수립	150		20	50	50	30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200		50	50	50	50
건축시설물 방재관리 시스템 개발	100		25	25	25	25
계	450		95	125	125	105



안전성

실행과제 3

S5AP3

활용 가능한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 ✓ 최근 동남권의 대규모 지진 피해 등을 고려하여, 건축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4차 산업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한다.
- ✓ 전체 도시안전관리와 연계될 수 있도록 건축시설물과 연관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인프라를 구축한다.



▲ [그림 V-96] 건축물 관련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으로 연결된 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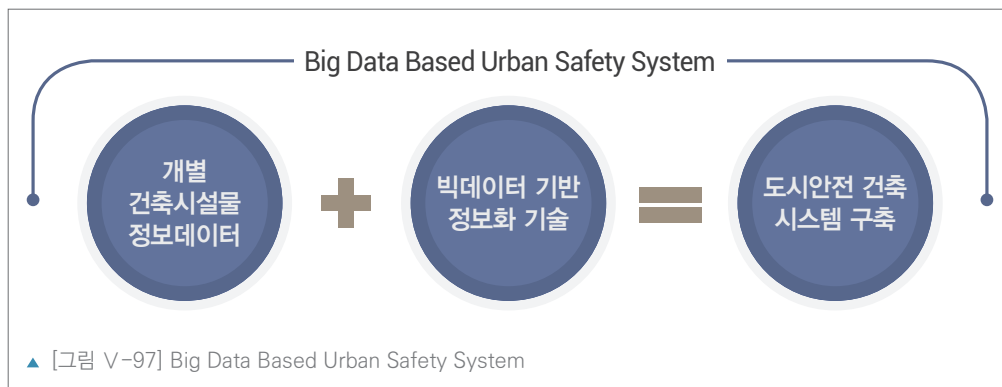
1. 배경 및 필요성

1.1 건축시설물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노후화되며, 이는 시설물 안전에 위협요소로 상존하기 때문에 지속적 유지관리를 통한 활동이 요구됨

- 건축시설물은 주거공간, 업무공간, 공공공간, 상업공간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사고는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

1.2 급진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4차 산업과 연계된 정보화 기술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도시안전 강화방안이 필요함

- 정보화 기반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축시설물 노후화 관리체계 구축은 최적의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2.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시설물의 안전은 전체 도시안전과 연계되어 있는 중요부분으로 이에 대한 인프라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최근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 등을 고려할 때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건축 시설물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3. 과제의 목적

- 건축시설물 정보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를 통한 도시안전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 빅데이터 기반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건축시설물과 도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현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하고 그 예산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대상 민간 건축물

4.2 내용적 범위

- 빅데이터 기반 건축시설물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건축시설물 정보 기반 내진정보 시스템 활용 체계
- 개별 건축시설물 시공정보를 활용한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5. 세부과제

5.1 빅데이터 활용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ICT와 신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 도시 구현)

1) 건축시설물 관련 다양한 정보자료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통합관리 기준 수립

- 도시안전 관련 다양한 건축시설물 정보자료의 분류 및 수집체계 개발
- 수집된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안전 통합관리 기준 수립

2) 도시안전관리와 연계한 건축시설물의 안전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도시안전관리와 연계된 건축시설물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건축시설물 방재관리 시스템(S5AP2)과 연계 및 활용 방안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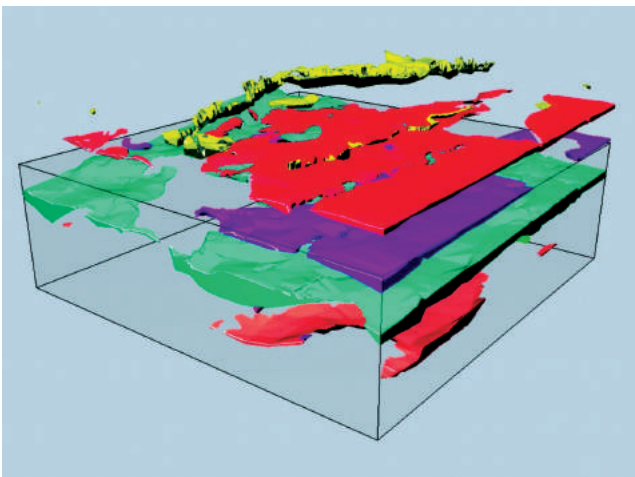
5.2 건축시설물 내진정보 구축 및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1) 설계 및 시공단계 정보를 활용한 개별 건축시설물 내진정보 수집체계의 구축

- 완공된 시설물의 설계 및 시공단계 정보 수집 및 분류 계획 수립
- 분류 정보 기반 내진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2) 개별 프로젝트별 지질조사 정보를 활용한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 완공된 건축물의 토공사 당시의 지질정보 수집 및 분류
- 수집 지질정보 기반 주변 지역의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 [그림 V-98] 3차원 지질 모델링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빅데이터 활용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 건축시설물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 통합관리 기준 수립	건축정책과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자치 구·군
		○		· 도시안전관리와 연계한 건축시설물의 안전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및 활용	
건축시설물 내진정보 구축 및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			· 설계 및 시공단계 정보를 활용한 개별 건축시설물 내진정보 체계의 구축	건축정책과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설공단 시설안전공단 자치 구·군
		○		· 개별 프로젝트별 지질조사 정보를 활용한 도시지질 정보시스템 구축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빅데이터 활용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300		100	100	50	50
건축시설물 내진정보 구축 및 지질정보 시스템 구축	250			70	80	100
계	550		100	170	130	150

S5

안전성

실행과제 4 | 시범사업 |

S5AP4

노후건물 안심보강 시범사업

- ✓ 노후건물의 안전은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문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 등을 초래하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 ✓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시설물 그리고 민간시설물 중 공공성이 높은 복지 및 문화시설에 대한 적절한 내진보강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그림 V-99] 지진으로 심각하게 파손된 포항의 노후학교
*출처 : KBS 뉴스광장 (2017.11.28.)

1. 배경 및 필요성

- 건축물의 내진설계기준은 그동안 꾸준히 강화되어 2017년 12월 2층 이상, 2018년 모든 단독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으나, 1988년 6층이상, 2005년 3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되기 이전에 지어진 수많은 건축물들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음
- 최근 포항 지진으로 관내의 노후학교의 피해가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시설의 내진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 건축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되며, 주기적인 유지관리 활동이 요구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해 개선이 힘든 실정임
- 부산은 전 지역에 걸쳐 다수의 노후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복지 및 문화시설을 비롯한 공공적 성격의 노후건축물에 대한 내진 성능과 적극적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노후건물의 안전은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특히 학교와 같은 공공건축물이나 다중이용 민간시설물의 경우, 지진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 등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심각성을 내재하고 있음
-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005년 이후로 신·증축이나 개축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 부산시 교육청 관내 초·중·고 건축물 3,135동 가운데 교육부 지침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건물은 1,435동이며, 이중 내진설계 및 보강 완료한 건물은 577동으로 내진 비율은 전체의 40.2%(2017년11월 기준)이며, 포항지진 이후 예산을 증액하여 2024년까지 내진비율 100%를 목표로 하고 있음
- 2017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이후 전국 건축물 중 내진 대상 건축물은 2017년 7월 현재 총 273만8172동이며, 이중 내진 성능을 갖춘 건축물은 56만 3316동에 그치고 있으며, 지자체별로 부산지역의 내진 확보율이 13.7%로 가장 저조하며, 이는 부산 지역의 민간건축물 내진확보율이 13.5%로 가장 저조하기 때문임
- 부산지역의 낮은 내진확보율을 고려할 때, 시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공공 시설물과 민간시설물 중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복지 및 문화시설, 특히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노유자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강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임



▲ [그림 V-100] 내진보강공사를 마친 충남 홍성중학교

3. 과제의 목적

- 내진성능이 약한 노후 공공건축물과 다중이용 민간시설의 내진보강시범 사업으로 도시 안전성 확보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소유의 노후 공공건축물
- 문화, 복지, 교육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다중이용 민간건축물과 노유자 시설

4.2 내용적 범위

-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노후 공공건축물 및 공공적 성격의 민간건축물 조사 및 분류
- 노후 공공건축물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시행

5. 세부과제

5.1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시범사업

1) 시범대상 사업의 조사 및 선정

- 노후 공공건축물 중 시민 이용빈도와 중요도, 파급효과가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대상 선정
- 노후 공공건축 현장조사 및 선정심사를 통한 시범사업 대상 최종 선정

2) 시범사업별 계획 및 실시

- 시범사업별 시설물 특성을 반영한 보강 범위 및 일정, 내진보강방법 수립
- 시범사업별 보강 실시, 성과관리, 홍보 및 향후 백서 발간

5.2 시민이용 빈도 높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1) 시범대상 사업의 조사 및 선정

- 노후 민간건축물 중 공공적 성격을 지니는 복지시설, 문화시설, 교육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민 이용빈도, 이용자 대피능력 등 고려하여 내진보강 시급성 조사
- 도시재생 뉴딜사업, '단독주택지 10분 생활환경 방안 마련(S4PT2)'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내진보강 시범사업 대상 선정

2) 시범사업별 계획 및 실시

- 지원사업별 시설물특성을 반영한 보강 범위 및 일정, 내진보강방법 수립
- 시범사업별 보강 실시, 성과관리, 홍보 및 향후 백서 발간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시범사업	○			· 시범대상 사업의 조사 및 선정	건축정책과 교육청 부산시설공단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 시범사업별 계획 및 실시	
시민이용 빈도 높은 내진보강 지원사업	○			· 시범대상 사업의 조사 및 선정	도시재생정책과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 시범사업별 계획 및 실시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시범사업	200		100	100	(10,000)*	(10,000)*
시민이용 빈도 높은 내진보강 지원사업	200		100	100	(3,000)*	(3,000)*
계	400		200	200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시

S6

환경성

기후변화, 생태, 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녹색건축 활성화

S6-a 지구온난화와 자원감소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설계, 시공, 유지 관리에 있어서 탄소의 배출을 줄이고 대체에너지와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을 지원한다.

S6-b 기존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녹색정주공간으로 전환하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친환경 건설산업을 육성하여 부산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간다.



정책과제

- 1 **S6PT1** 자원순환형 녹색입체도시
- 2 **S6PT2** | 핵심과제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정책의 융합

실행과제

- 1 **S6AP1** | 시범사업 | 부산시 맞춤형 친환경건축 개발 보급
- 2 **S6AP2** 부산녹색건축센터 설립
- 3 **S6AP3**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 ※북항 재개발 연계한 원도심재생



“옥상을 흰색으로 바꿔주는 쿨루프 캠페인을 실시한 이후 햇빛과 열을 반사해 건물의 실내 온도가 5~6도 가량 뚝 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

_ N페인트 '쿨루프' 캠페인



환경성

정책과제 1

S6PT1

자원순환형 녹색입체도시

- ✓ 탈원전정책과 부산시 클린에너지 도시원년 선포에 부응하여 생활에서 산업까지 통합적인 녹색도시를 추구한다.
- ✓ 녹색도시와 건축을 지원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지역의 녹색건축 연관산업을 장려한다.
- ✓ 녹색건축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한다.



▲ [그림 V-101] 독일 프라이부르크 Vauban 지역 주거단지 : 프라이부르크는 태양광을 중심으로 친환경건축, 태양광산업, 농업, 연구 등을 통합하는 '태양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1. 배경 및 필요성

1.1 지구온난화에 따른 신기후체제에 대한 도시건축적 이행 필요

- 2015년 12월 신기후체제를 위한 파리협정에서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안을 UN에 제출하였고, 이 가운데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35.8백만 톤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함
-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녹색건축 도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민간건축물은 심의 대상 건축물을 중심으로 녹색건축 인증제 등을 시행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에 기여할 필요 있음

1.2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른 그린 리모델링의 수요 증가

-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건축물은 약 705만 동이며, 그중에서 건축 법상 리모델링이 필요한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525만 동으로 전체의 74%에 이를 뿐만 아니라 신축건축물은 천천히 증가하는 데 반해 노후 건축물의 증가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먼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그린 리모델링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부산시는 권역별로 노후 주택의 비율이 다르므로, 노후주택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을 선별하여, 창호, 단열, LED, 고효율 보일러 등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절감 방안이 시급함



▲ [그림 V-102]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초고층 건물(마린시티)

2. 현황 및 문제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2014년 국토교통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부산시에서도 2017년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녹색도시개발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제정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등의 도입을 확대
- 부산시 자체 녹색건축인증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이나 및 제로에너지 건축 혹은 단지의 개발은 부진한 상황임



▲ [그림 V-103] BED ZED 영국 런던 Beddington 지역

3. 과제의 목적

- 탈원전 정책과 부산시 클린에너지도시 원년 선포에 부응하여 생활에서 산업까지 통합적인 녹색도시 추구
-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부산광역시의 녹색건축 및 녹색산업 활성화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녹색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녹색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로드맵 작성 및 제도 개선
- 최소 자연훼손, 최대 자연이용 : 물·에너지 재생,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 자원고갈과 기후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부산광역시의 녹색건축 및 녹색산업
- 시민 인식제고와 생활 속 참여를 위한 방안

5. 세부과제

5.1 부산형 녹색도시건축 협력 연구

- 부산 특성에 맞는 녹색도시건축 연구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고, 녹색건축의 기준을 제시
- 부산시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에 따른 공간별 녹색기술 적용방안 연구
 - 산지형 도시공간
 - 근린 주거지형 도시공간
 - 수변형 도시공간
 - 상·업무지형 도시공간
 - 역사문화형 도시공간

5.2 권역별 녹색건축 로드맵 작성

- 권역별 자연조건의 특성에 따른 건축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와 자원 검토
- 지역별로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의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방안의 제시
- 빗물저류조 등을 이용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Case Study :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

충남도는 2015년 환경부 공모 선정으로 적정기술 연구·보급을 위한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지상 1층, 426㎡ 규모에 강의실과 사무실, 휴게전시실, 공방 등)를 설립하였다. 주요 기능은 교육·워크숍·전시·체험 등 적정기술 체계적 보급, 적정기술 활용 체험관광 및 제품 판매, 에너지 자립 및 적정기술 창업지원 등이다. 연구 보급하는 적정기술로는 농기계를 비롯해 생태건축 나무 가스화 장치, 생태 단열재, 작은집, 컨테이너 하우스, 화목 난로 등 기술 개발과 적정기술 및 에너지 시범사업 등이며 센터 운영은 충남 적정기술 협동조합 연합회가 맡고 있다. *출처 : 금강일보



◀ [그림 V-104] 충남 적정기술 공유센터
*사진출처 : 예산뉴스 무한정보(<http://www.yesm.kr/>)

5.3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통한 녹색생활 활성화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녹색도시건축 사용매뉴얼 제작 보급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탄소포인트제> 유형의 인센티브제도 확산

5.4 부산시 녹색건축 설계기준 조례 신설

- 건축정책과에 녹색건축팀을 두고, 녹색건축설계기준 조례를 신설하여 신축 건축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녹색건축물로 확대하도록 함
- 녹색건축 인증제도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5.5 지역 녹색산업 활성화

- 부산시 녹색건축에 적합한 녹색기술을 특화하여 지역 녹색산업 활성화
- 녹색기술 적용 실적이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입찰시 가점)
- 녹색도시 시범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우선 참여로 경쟁력 제고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부산형 녹색도시 건축 협력 연구	○			· 부산형 녹색도시와 친환경 건축 기준 수립	건축정책과
		○		· 건축유형별 녹색기술 적용방안 연구	
권역별 녹색건축 로드맵 작성		○		· 권역별 특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 로드맵 수립	건축정책과 환경정책실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		·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녹색도시 건축사용 매뉴얼 개발 · 녹색생활 인센티브 제도 확산	건축정책과 환경정책실 자치구·군
부산 녹색건축설계 기준조례 신설	○			· 부산시 녹색건축물 인증기준 연구용역	건축정책과 환경정책실
		○		· 전담인력 배치 및 조례제정	건축정책과 시의회
지역 녹색산업 활성화		○	○	· 녹색도시건축산업에 지역업체 참여 및 기술개발 활성화	건축정책과 환경정책실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형 녹색도시건축 협력 연구	150			50	50	50
권역별 녹색건축 로드맵 작성	300				150	150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600			200	200	200
부산 녹색건축설계 기준조례 신설	100			100		
지역 녹색산업 활성화	200				100	100
계	1,350			350	500	500

S6

환경성

정책과제 2 | 핵심과제 |

S6PT2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 정책의 융합

- ✓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과 부산시 클린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건축적 실천방안을 모색한다.
- ✓ 건축물과 관련한 에너지 절감방안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활성화 하고 장려한다.
-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융합하여 추진한다.



▲ [그림 V-105] Solhuset(The Sun House) 덴마크 Hørsholm 지역

1. 배경 및 필요성

1.1 메가시티 부산시의 건축물 에너지 소비 증대 대비

- 도시의 확장과 성장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가에 대비하는 시 차원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절약의 융합화를 위한 시행 방침이 필요
- 부산시 내에 초고층 건축물이 늘어남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소비량이 증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실용적인 에너지 소비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1.2 공공기관 및 초고층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강화추세

-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의무화 제도는 2004년 3월 29일부터 공공기관의 선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적으로 연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 총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하고 있으며, 2011년 4월 13일부터는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10% 이상으로 개정되었음
-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현황은 태양광 53.7%, 지열 42.1%, 태양열 3.3%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률 및 다변화를 위해 서는 보급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권역별 적용 가능한 신·재생 에너지의 파악을 통해 해당 권역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의 권고 및 지원이 이루어질 때 보다 효율적인 보급

1.3 에너지절약과 신·재생에너지 융합정책에 의한 통합에너지 관리 정책의 필요성

- ESCO사업이란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에 의해 개인이나 기업을 대신하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이 에너지절약형 시설에 선투자한 뒤 에너지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제도임
- 서울시에서는 자체적으로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을 활용하여 주택(1500만원 이내)과 건물(20억원 이내)을 대상으로 LED조명, 보일러, 창호, 베란다 새시 등의 교체를 통해 에너지를 절약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융자지원하고 있음
- 구·군 별로 건축물 에너지 담당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광역단체 차원의 계획 수립과 기초단체 차원의 실행방안 구성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관리 체계 수립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초고층건축물의 급증으로 부산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증대 예상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강화
- 초고층건축물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사용 문제점

3. 과제의 목적

- 건축물과 관련한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장려
- 에너지 절약 방안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정책의 융합을 통한 에너지 절감 극대화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건축물 및 에너지 과소비 민간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함

4.2 내용적 범위

- 공공기관 건축물 중 신축건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액티브디자인의 적극적인 도입과 패시브디자인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절감을 최대화함
- 기존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적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의 파악 및 적용방안 검토
-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지원책 마련을 통하여 적용 건물의 확대를 유도함

5. 세부과제

5.1 건축물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및 에너지심의 분과위원회 부활

-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활성화 및 관련기업 발굴·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신설 운영
-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적극적인 클린에너지 이용을 위해, 대규모 건물의 건축심의를 위한 에너지심의 분과위원회의 부활 필요

5.2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업

- 현재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우리나라 모든 건축물과 에너지 사용 정보를 통합하여 건물분야 에너지 절감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으로 전국 690만 동 건축물 전체, 1,900만 세대의 건축물 정보와 에너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제 평가 확대에 따른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의 효과적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음
-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 진단 및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의 육성

5.3 부산시 친환경 융합조례 신설

-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분야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기여도 측면에서 약 60%를 차지하므로 병행 추진이 필요함
- 해양도시의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으로 인한 잉여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인정하여 부산시에 적합한 에너지 절약 기준과 신·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을 융합한 조례 신설 필요함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 2023)	장기 (2024 이후)		
건축물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및 에너지심의 분과위원회 부활		○		· 전담부서 신설 운영 · 에너지심의 분과위 운영방안 확립 및 시행	도시균형재생국 환경정책실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업		○		· ESCO(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지원책 · 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방안 개발	도시균형재생국 환경정책실
부산시 친환경 융합조례 신설		○		· 친환경 융합조례의 제정 및 공포 필요	도시균형재생국 환경정책실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축물 에너지 전담부서 신설 및 에너지심의 분과위원회 부활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업	400				200	200
부산시 친환경 융합조례 신설	30				30	
계	430				230	200



환경성

실행과제 1 | 시범사업 |

S6AP1

부산시 맞춤형 친환경건축 개발 보급

- ✓ 부산시 녹색건축설계기준 조례 신설로 맞춤형 녹색건축기술을 보급한다.
- ✓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현황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맞춤형 녹색 리모델링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그림 V-106] 온천천 구조물 하부

1. 배경 및 필요성

1.1 건축물 분야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을 차지

-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여력이 크므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고, 부산시 맞춤형 친환경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1.2 노후 건축물의 단열성능 저하로 에너지 소비 과다

- 증가하는 부산의 노후건축물은 에너지낭비를 초래하며,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협하고 있음
- 기존의 에너지 성능이 낮은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고효율 에너지설비 설치 등과 같은 ‘에너지 리모델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과 함께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 [그림 V-107] 부산의 노후건축물

1.3 녹색건축물 보급에 대한 요구

-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
- 제로에너지빌딩 설계방식을 통해 에너지 자립율 100% 구현

2. 현황 및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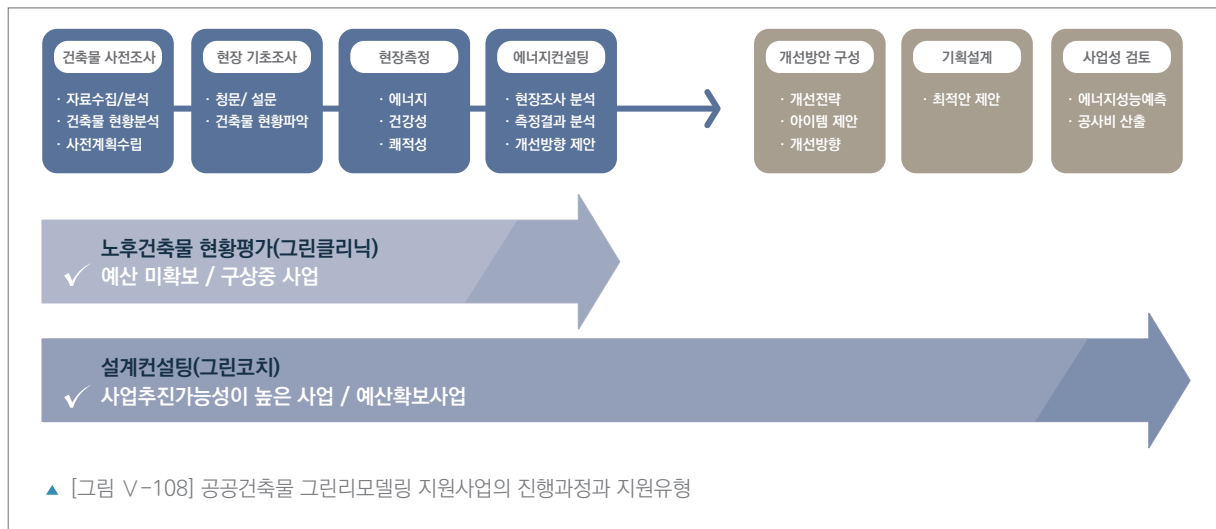
2.1 신축건물 위주의 녹색건축물 조성

- 2013. 6. 28.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명칭이 개정되었지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주체가 되다보니 부처에 따라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함
- 신축건물에 대한 녹색건축 인증이 위주이므로, 기존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방안 등에 관한 시행은 어려움

2.2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 2013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제정되어 제29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서 2013년부터 노후화된 건축물에 단열재 보강, 창호 교체, 에너지설비 설치 등을 통해 재실자 쾌적성, 높은 에너지성능, 노후화 억제, 운영의 적절성, 편의성 개선을 추구하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현재 리모델링 시공예정이거나 구상 중인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그린클리닉, 그린코치)>과 에너지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을 구상 또는 실행 중인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대출금에 대해 이자를 지원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으로 구분됨
- 공공건축물 분야에서 2018년 부산시 금정구청과 중구청 청사가 선정되어 그린클리닉과 그린코치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음
- 민간분야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에서 이자는 5년간 지원하며,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이자지원기간과 동일하게 5년 이내 분할상환하며 기초수급자에게는 보다 높은 이자지원의 혜택을 부여함

- 민간건축물의 이자지원사업은 건축주의 동의로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등록된 시공 사업자를 통해서만 신청해야 하므로, 시공사업자의 역량이나, 성향, 사업의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공신력 있는 전문가의 자문이나 지도가 필요함



3. 과제의 목적

- 친환경건축물 인증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부산시의 신축 건축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건축물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 부산시 맞춤형 제로에너지 건설기술과 건축물 녹화 사업을 위한 간편하고 적정한 수준의 기술개발과 부산시 맞춤형 친환경건축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공공기관 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 포함
- 신축 및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적용

5. 세부과제

5.1 부산시 맞춤형 녹색건축 시범사업

- 부산의 지리·지형·기후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친환경기술 및 장치의 개발 보급
- 선샤이닝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 경사지가 많은 부산의 지형과 높은 건물밀도와 대규모 옹벽과 지하주차장으로 인한 영구음영지에 자연광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을 통한 적용 가능성 타진
- 그린 쿨루프 기준 수립 및 시범사업 : 차열도료를 옥상에 적용하여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도시열섬현상을 완화하는 그린 쿨루프 보급을 위한 실태파악, 품질기준 및 계획수립, 시범사업 실행
- 냉방부하의 절감을 위한 해안 및 수변공간의 환경조건에 최적화된 건축물 또는 초고층 건축에 특화된 차양장치의 가이드라인 개발



▲ [그림 V-109] 태양광패널과 통합된 고층건물 차양장치

5.2 건축물 녹화 지원 사업

- 건축물 옥상과 벽면 녹화비용 지원을 통해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 절감,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 도모하도록 함
- 녹지가 부족한 도심지역, 일반인의 이용이 많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 후 공동주택으로 확대

5.3 커뮤니티시설 녹색 리모델링 사업 (※경로당시설 현대화 및 지원확대)

- 노후 커뮤니티 시설의 단열성능 향상, 신·재생에너지 적용, 건축물 녹화, 빗물 등 자원재활용을 지원하여 마을의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
- <지역밀착형 복지시설 리모델링 지원사업(S3AP1-2)> 및 <노후건물 안심보강 시범사업(S5AP4)>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국가 공모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활성화계획에 포함하도록 유도



▲ [그림 V-110] 남부민동 천마경로당 사업 전



▲ [그림 V-111] 천마경로당 녹색리모델링사업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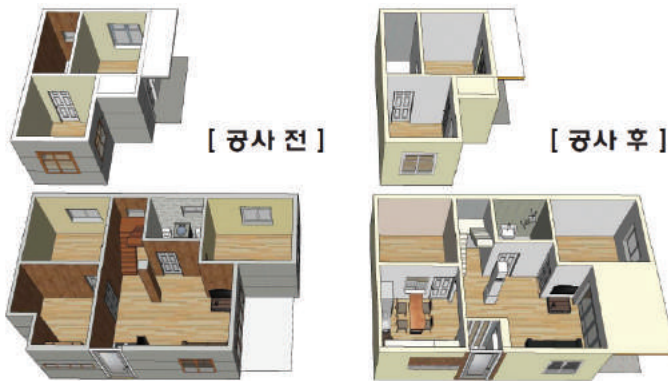
5.4 공공시설 녹색 리모델링 사업

- 지역 별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부산형 녹색건축의 선도모델로 리모델링하여 시민활동의 주요거점을 구축
- 공공건축물의 장소성과 집객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녹색건축에 대한 접근과 체험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여 친환경건축에 대한 인식을 제고

5.5 노후주택 녹색 리모델링 사업

- 저소득층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단열, 기밀성 창호, LED전등, 고효율 보일러,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의 녹색 리모델링 사업 지원
- 주거환경 관리사업, 새마을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집수리) 사회적 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추진

Case Study :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 모델링 창조센터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 [그림 V-112] 부산 대연동 단독주택 (2017) : 창호, 단열, 설비, 조명공사비에 대한 3%의 이자를 지원하여 59.9%의 에너지를 절감함



▲ [그림 V-113] 시공 전



▲ [그림 V-114] 시공 후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부산시 맞춤형 녹색건축 시범사업	○	○		· 선샤이닝 가이드라인 수립 및 시범사업 · 그린 쿨루프 기준 수립 및 시범사업 · 부산형 차양장치 개발사업	도시균형재생국 환경정책실
건축물 녹화지원 사업	○			· 건축물 녹화지원 사업의 가이드라인 구축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		· 개별 건축물 지원 사업 · 공동주택단지 녹화지원 사업	
커뮤니티시설 녹색리모델링 사업	○			· 노후화된 주민공동체시설 대상 리모델링 시범사업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공공시설 녹색리모델링 사업	○	○		·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대상 리모델링 시범사업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노후주택 녹색리모델링 사업	○	○		· 친환경 리모델링 사업 협력체계 구축 · 사업연계, 대상선정 및 실시	도시균형재생국 환경정책실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시 맞춤형 녹색건축 시범사업	1,200		300	300	300	300
건축물 녹화지원 사업	100			100	(500)*	(500)*
커뮤니티시설 녹색리모델링 사업		(300)*	(300)*	(300)*	(300)*	(300)*
공공시설 녹색리모델링 사업		(400)*	(400)*	(400)*	(400)*	(400)*
노후주택 녹색리모델링 사업		(200)*	(200)*	(200)*	(200)*	(200)*
계	1,300		300	400	300	300

*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



환경성

실행과제 2

S6AP2

부산녹색건축센터 설립

- ✓ 친환경 녹색건축 관련 전문인력을 교육·양성하여 녹색건축산업을 진작하고 청년일자리를 확충한다.
- ✓ 부산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을 신설하고 부산형 녹색건축 모델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 [그림 V-115] 초장동 에코하우스

1. 배경 및 필요성

- 건설산업은 전체산업에서 CO2발생량의 42%를 차지, 이에 대한 녹색건축 기술의 개발 요구
-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등 녹색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에너지관련 전문기관을 육성·확대하여 녹색건축 일자리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 부산 환경에 알맞은 녹색건축물의 가이드라인 설정, 녹색건축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공동 발굴, 보급 및 평가 등이 필요
-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녹색건축 전문가 양성과정 도입, 녹색건축 기술개발 연구 프로그램 실행 등이 필요한 실정임

2. 현황 및 문제점

-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이 친환경건축에 대한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의 양분화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학사일정에 대한 차이점과 교육내용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음
- 녹색건축 인증기관은 10개소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업체의 접근성이 떨어짐
- 또한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전시회와 학술행사도 부산에서는 부족한 상황이고,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내에 녹색건축 전담인력도 부족한 실정임

3. 과제의 목적

- 부산건축제(향후 부산도시건축재단)의 세부센터로 설립 또는 지역 대학과 협력하여 설립
- 부산시에 녹색건축센터를 설립함으로써 부산의 기후, 지형에 알맞은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녹색건축물의 가이드라인 설정, 친환경 건축기술 보급으로 친환경 주택 모델 개발 및 조성, 친환경 건축물 설계안에 대한 인증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시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녹색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부산 지역 건축관련 대학생 또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녹색건축 전문교육 제공
- 부산시 녹색건축물 인증사업 제공 및 부산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및 보급
- 시민들을 위한 녹색생활 건축교육 제공

5. 세부과제

5.1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녹색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노후주거 그린리모델링 교육을 통한 그린리모델링 인력(마을지기 포함) 양성
- 녹색 리모델링사업 인력 교육

5.2 부산시 녹색건축물 인증 사업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으로 설립하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증방안 개발
- 녹색건축물 설계안에 대한 기술 검토를 유도하고, 녹색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이나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 제공

5.3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및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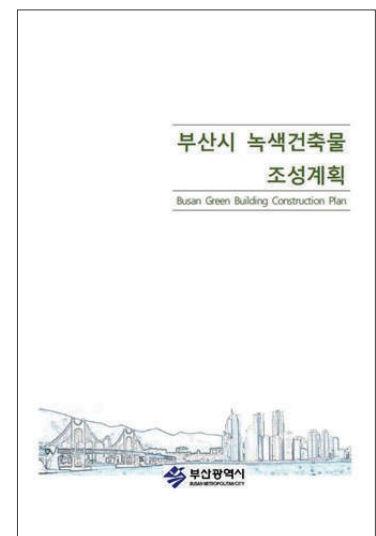
- 부산 지역의 기후 조건이나 지형에 알맞은 부산형 녹색건축물 가이드라인 설정
- 녹색건축기술 보급으로 모델 개발 및 친환경주택 조성을 유도
- 부산에서 가장 많이 건설되는 건물 유형에 대한 녹색건축 모델 개발 필요

5.4 시민 대상 녹색 생활건축 교육/보급

- 적은 사업비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므로 탄소포인트 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탄소절감 및 에너지절약 활동 촉진
- 건축물 유지관리와 연계하여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수칙 및 매뉴얼 보급을 통한 시민참여 유도



▲ [그림 V-116] 일본 큐슈 아크로스 후쿠오카



▲ [그림 V-117] 부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		· 대학과 연계하여 녹색건축 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행	건축정책과 지역대학
부산시 녹색건축물 인증 사업			○	· 녹색건축물 인증기관 설립 및 인증사업	건축정책과 부산건축제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및 보급		○		· 부산형 녹색건축 가이드라인 설정 · 녹색건축 기술보급	건축정책과 부산건축제 자치구·군
시민 대상 녹색생활 건축 교육/보급			○	· 지속적인 시민 참여교육 실행	건축정책과 환경정책실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녹색건축 전문인력 양성	100				50	50
부산시 녹색건축물 인증 사업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및 보급	400				200	200
시민 대상 녹색생활 건축 교육/보급						
계	500				250	250



환경성

실행과제 3

S6AP3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 (※북항 재개발 연계한 원도심재생)

- ✓ 수변 녹색도시 우수 사례를 창출하여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 ✓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한 TOD방식의 컴팩트 수변도시의 모델을 개발한다.



▲ [그림 V-118] 스웨덴 함마르비 수변 녹색도시

1.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시가 타 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안’ 수변공간이므로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에 적지임
- 생산유발 및 고용 유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큰 도시 재개발이나 재생사업을 통하여 녹색성장동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하여 해외에 진출하는 선진도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부산형 수변 녹색도시건설을 통해 녹색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함



▲ [그림 V-119] 남항 주변 시가지(사진 : 윤준환)

2. 현황 및 문제점

2.1 친환경 수변도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 스웨덴 함마르비는 주변 수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하여 수변공간을 친환경적이고 보행친화적인 공간으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폐기물, 물 전반에 걸쳐 단지 내에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모델인 함마르비 모델(The Hammarby Model)을 개발하여 친수·자원절약형 수변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음
- 스페인 빌바오는 네르비온강 주변을 구겐하임미술관으로 대표되는 문화중심형 상업업무기능으로 도시재생하면서 수변을 연결하는 트램라인 설치, 버스 및 지하철 체계 개선을 통해 수변공간으로 접근성을 개선하여 한때 조선소와 항만이 있던 수변공간을 시민들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공간으로 변화시킴

2.2 부산의 수변공간의 문제점과 전망

- 부산은 바다와 접한 천혜의 환경으로 인해 개항 이후부터 수변공간은 교통, 산업, 물류를 위한 산업공간으로 개발되어 시민이 바다와 접할 수 있는 워터프런트 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북항 일원에는 장기적으로 워터프런트 공간이 확대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많은 수변공간은 시민이 접근하지 못하는 산업공간으로 남아 있는 실정임
- 최근 부산 지역의 관광산업과 카페문화의 확산으로 호주 멜버른의 아라강(Yarra River) 워터프런트와 같은 전체적인 계획 없이 개별적으로 호텔이나 카페로 전환되고 있어서 향후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그림 V-120] 멜버른의 수변 창고를 활용한 아라강(Yarra River) 수변재개발 계획 전·후 비교

3. 과제의 목적

- 부산 도시공간의 특성인 수변공간을 활용한 수변 녹색도시를 개발하여 타 도시와 차별화된 도시공간 및 경관 확보
- 녹색도시 개발을 통한 녹색기술 축적으로 부산의 녹색도시에 대한 경쟁력 제고와 해외에 아시아형 수변 녹색도시 수출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수변공간 (항만 및 강변 일대)

4.2 내용적 범위

-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녹색교통체계 구축
- 부산시 수변 녹색도시 모델 개발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수변공간의 개발

5. 세부과제

5.1 친수공간과 조화되는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개발

- 부산시의 특성인 해안도시 이미지 구축을 위해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향상 필요
- 대중교통 중심의 TOD 방식의 컴팩트 도시 개념을 적용한 모델 개발 및 시범 구역 발굴
- 도시의 간선 도시철도와 수변으로 향하는 경전철이 연결되는 지역에 통합 환승센터 설치를 통한 보행 위주의 수변환경 조성방안 수립

5.2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적용

- 남항 주변 영도 남항동, 중구 자갈치시장, 서구 공동어시장 일대에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을 적용하여 남항 일대 도시 공간구조 재편 및 기능 재생
- 지하철, 버스 및 향후 계획될 경전철을 고려하여 트랜зит몰(Transit Mall) 중심의 거점 수변공간으로 조성하여 자전거, 도보, 수상택시 등으로 연결되는 수변형 녹색도시로 재생

5.3 하천변 정비사업 연계 친환경 공간 조성

- 도시하천 주변 대규모 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에는 수변 통경축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단지계획 지침 수립
- 하천 주변 수변공간과 연계된 공개공간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고, 친수형 조경 계획의 도입



▲ [그림 V-121] 수변 공공공간을 제공하는 뉴욕 브루클린의 Greenpoint 단지계획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친수공간과 조화되는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개발		○		· TOD 방식의 콤팩트도시를 적용한 수변도시 모델 개발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계획실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적용			○	·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적용	도시균형재생국
하천변 정비사업 연계 친환경공간 조성	○			· 하천변 수변통경축과 스카이라인 고려한 단지계획 지침수립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	○	· 하천변 대규모 정비사업의 수변 연계 공개공간 조성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계획실 자치구·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친수공간과 조화되는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개발	400				200	200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적용						
하천변 정비사업 연계 친환경공간 조성	200		100	100	*	*
계	600		100	100	200	200

* 개별 친환경공간 조성은 개별 사업시행자 부담

S7

문화성

역사와 문화자산에 기반한 지역밀착의 건축문화시스템 구축

S7-a 삶의 질과 도시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여 우수한 건축 및 공간환경을 확산시키고, 시민들이 건축문화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S7-b 지역의 역사와 삶을 간직한 건축과 공간환경을 부산의 문화자산으로 보전하고 기억하기 위해 체계적인 기록과 연구를 지원한다.

정책과제

- 1 **S7PT1** 우수 건축문화자산 발굴사업 및 보존활용
- 2 **S7PT2** 건축문화 향상과 시민참여 다양화
- 3 **S7PT3** 도시건축 거버넌스 활성화
| 핵심과제 |

실행과제

- 1 **S7AP1** 부산도시건축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
- 2 **S7AP2** 도시건축 시민아카데미 활성화
- 3 **S7AP3** 도시건축기록화 및 아카이브(DB) 구축
| 시범사업 |





“이 도시에서는 장소마저도 지워져 가고 있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사라지는 장소들을 기록하는 것이다.”

_ 초량1925 ‘골목의 기억, 도시의 상상’



문화성

정책과제 1

S7PT1

우수 건축문화자산 발굴사업 및 보존활용

- ✓ 역사적으로, 지역적으로 의미 있는 다양한 건축물의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보존한다.
- ✓ 단일 건축물 뿐만 아니라 뚜렷한 정체성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의 가치와 의미를 기록, 평가, 보존하여 장소적 다양성을 지킨다.
- ✓ 건축과 장소에 깃든 인문사회학적 의미와 건축학적 가치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발하고 활용한다.



▲ [그림 V-122] 동구 초량동 소재의 근대건축물(백제병원)을 리모델링한 카페

1. 배경 및 필요성

- 과거 역사적인 건축물, 가로, 장소, 지역 등 건축문화자산을 보존하고 공간 및 프로그램의 리노베이션을 통해 예술, 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성공적인 사례들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 지역만의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하면 그 도시의 특성이 유지되고 정체성이 형성되며, 다른 도시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축과 공간은 관광객을 끌어모으는 도시의 매력을 더함
- 세계의 많은 도시들이 산업화 시대를 지나 상업, 업무,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산업 위주의 도시로 변화하면서, 새로운 기능과 프로그램을 통한 건축문화 자산의 재활용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 도시의 건축문화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아래 분야의 조사와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1940년대 이후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 조사 필요
 -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사라지는 지역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자산 보존 필요
 -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과 건축을 연계한 스토리 발굴조사 필요
 - 오래된 건축물의 조사와 보존을 위한 근거마련을 위한 연구 필요



▲ [그림 V-123] 1950년대에서 80년대까지 마을모습이 잘 보존된 감천문화마을

Case Study : 아일랜드 더블린의 템플바(Temple Bar) 지구

아일랜드 더블린의 역사적 지구였으나 전통산업 쇠락으로 1980년대 무렵에는 쇠퇴지역으로 방치되었다. 이 지역을 철거하고 재개발하려던 개발계획을 주민들이 반대하면서 1990년대부터 지역의 재생사업이 시작되었다. 기존 건축자산의 유지·보존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자원으로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기능과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더블린의 가장 인기있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새로운 아파트, 신규 소매점, 호텔 등이 들어섰고, 3,000개의 임시 일자리와 문화와 서비스 산업에 기반을 둔 1,900개의 장기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그림 V-124] 템플바 지구의 대표적 장소인 템플바(The Temple Bar)



▲ [그림 V-125] 지구의 중심 템플바 광장

2.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은 외침과 개항, 피란 등 굴곡진 역사를 거치면서 수많은 근대건축 문화 자산을 갖고 있으나 최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하여 지역의 고유한 장소성과 역사가 사라지고 있으며, 특히 일제강점기에서 1960년대까지의 근대건축과 생활문화공간이 급속히 사라져가고 있음
- 온천장에 남아 있던 일제강점기의 서양식 별장건축인 권철현 씨 가옥을 비롯하여 최근 10년 동안 부산지역에서만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건축물 100여 개가 사라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음
- 부산시에서는 2010년 <부산광역시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제1차 <근대건축물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18년 현재 제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부산시립 중앙도서관에서는 외침과 개항, 피란의 역사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부산의 근대건축물들이 무분별하게 철거되는 현실에 안타까움과 위기감을 느껴 이를 기록물로 남기고자, 역사적 의미와 보존가치가 큰 부산지역의 근대건축물 74개를 선정하고 사진으로 기록하여 '사진으로 보는 부산의 근대 건축'(2016)을 발간하였음
- 지역의 고유한 장소와 건축을 스토리텔링화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함에도 아직 관광산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



▲ [그림 V-126] 재개발로 2016년 철거된 온천장 권철현 씨 가옥



▲ [그림 V-127] 부산중앙도서관, <부산의 근대건축>



▲ [그림 V-128] 1970-80년대 부산의 랜드마크였던 국제호텔



▲ [그림 V-129] 광강이예술마을 프로젝트

3. 과제의 목적

- 부산의 건축문화자산 조사발굴 및 마을흔적조사와 보존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의 건축문화자산

4.2 내용적 범위

-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정비구역의 마을조사 및 보존방안
- 각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유형 및 근대건축자산의 조사 및 활용방안
- 오래된 마을, 시장, 골목 등 생활문화공간의 조사 및 활용방안

5. 세부과제

5.1 마을 흔적 조사 및 마을 박물관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미시사, 공간구조, 건축물 등을 조사, 기록, 수집하는 학술연구를 의무화하여 주민들의 추억과 마을 역사, 지역 공동체 문화를 후대에 남기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마을흔적조사를 통해 수집된 도면자료, 사진 및 영상자료, 구술자료와 마을에서 수집된 마을의 유물 등은 향후 사업 완료 후 커뮤니티공간에 마을박물관을 조성하여 전시
-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조경 및 환경디자인에는 마을의 골목흔적, 마을의 역사, 마을에서 수집된 유물 등을 반영하여 과거의 지역의 정체성을 계승함

Case Study : 창원시 '마을흔적 보전계획'

창원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재개발·재건축으로 소멸해 가는 개발 이전 마을의 풍경과 일상의 흔적을 발굴, 복원, 보전하고 알리기 위해 ‘마을흔적 보전계획’수립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전문가(대학교, 향토사학자, 민속학자 등)가 참여하여 마을의 변천사, 특정 장소, 개발전·후의 전경, 오래된 시설물을 조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마을의 이야기거리와 보전대상 유산 등을 발굴하는 ‘마을흔적보전 계획서’를 사업시행인가신청 시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조사 및 발굴된 마을의 자료와 기록은 재개발·재건축되는 아파트 공동 시설에 조성된 ‘마을흔적 전시관’에 전시하거나 옥외에는 조경시설과 연계하여 원형 이전 또는 모형으로 제작 설치한다.



▲ [그림 V-130] 창원시 마을흔적보전사업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용지주공아파트 (1983)



▲ [그림 V-131] 용지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용지아이파크 아파트 커뮤니티센터에 조성된 '용지주공아파트 마을흔적 전시관'

5.2 우수 지역 건축문화자산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 부산시 근대역사문화자원 통합관리 조직 개편 및 부산문화유산제도 도입)

- 일제강점기 이후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건축문화자산과 부산의 생활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공간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함
-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대별 건축현황 조사를 통한 건물의 시대적, 문화적, 건축적 가치를 부여
- 지역 건축문화자산의 역사와 관련된 기록물, 관련 인물들의 증언과 구술, 도면과 사진 등을 발굴, 수집, 연구하여 1차 자료의 확보

5.3 부산역사와 건축물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 발굴

- 우수 지역 건축문화자산으로 발굴된 건축물을 기반으로 시민과 방문객이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개발함
- 부산건축제가 주관이 되어 지역 건축문화자산의 기초자료를 활용한 건축문화자산 해설자료의 제작, 다양한 방문객 맞춤형 해설자료 개발 및 해설사 교육 및 양성
- 각급 학교 방과후 학교 및 체험활동에 맞춘 건축문화자산 탐방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부산 시내 역사 및 문화관광 전문 여행사와 제휴하여 지역 건축문화자산 투어 프로그램 개발



▲ [그림 V-132] 부산야행 역사투어프로그램

5.4 역사적 건축물 보존활용 지원사업

- 문화재는 아니지만 오랜 시간 지역에 뿌리내리고 주민이나 시민과 함께 해온 50년 이상된 건축물 보존 및 재활용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성과 장소성을 유지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역사적 건축물 보존활용을 위한 역사, 설계, 구조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법적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한 보존활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컨설팅을 통해 건축물을 조사·기록하여 건물 내·외부와 연계하여 전시하도록 함
- 향후 부산의 건축문화자산 목록에 올려 홍보 및 투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 [그림 V-133] 폐가로 방치된 일제강점기 적산가옥(1941)을 개보수하고 스토리텔링을 더한 동구 초량동 카페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마을흔적조사 및 마을 박물관	○			· 재개발·재건축지역의 기존 마을역사 및 흔적 조사 후 기록전시 의무화	도시정비과
		○		· 마을자산 조사연구(아카이빙)	도시정비과 연구기관
우수 지역 건축문화 자산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			· 건축자산 현황파악 및 발굴사업 계획 수립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		·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시대별 건축자산/생활문화공간 조사	도시재생정책과 지역대학 연구기관
부산역사와 건축 물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 발굴	○			· 건축문화자산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발굴 및 문화관광과 연계한 건축문화 자산 투어프로그램 개발	건축정책과 문화체육관광국 부산건축제 자치구·군
역사적 건축물 보존활용 지원		○		· 역사적 건축물 흔적보존 및 전시	도시재생정책과 부산건축제 자치구·군 공공기관
			○	· 역사적 건축물 보존 활성화 지원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마을흔적조사 및 마을 박물관	100		50	50	*	*
우수 지역 건축문화자산 발굴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100				50	50
부산역사와 건축물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 발굴	120		30	30	30	30
역사적 건축물 보존활용 지원	120				60	60
계	440		80	80	140	140

* 마을자산조사연구비는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실행



문화성

정책과제 2

S7PT2

건축문화 향상과 시민참여 다양화

- ✓ 건축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친화적 건축행정을 추진한다.
- ✓ 건축문화의 향상을 위해 시민사회와 보다 친숙하게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
- ✓ 지역의 대학이 가진 연구역량과 인적자원이 지역의 건축문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그림 V-134] 부산 에코델타시티

1.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초고층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건축 관련 위원회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의견의 수렴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건축허가기준을 정비하여 시민과 공유하며, 시민들이 건축정책제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 부산의 전반적인 건축문화향상을 위해 대학, 지역기관, 시민단체, 주민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가 필요함

Case Study : 동의대학교 청년 마을하재

2014년부터 건축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학과 교수 및 학생을 주축으로 순수한 봉사활동 차원에서 주민들과 함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여 현재 학교차원의 빅 이벤트로 발전하였다. 40여 개 전공 동아리가 매월 1~2회씩 전공을 기반으로 하는 마을환경 가꾸기, 마을건강 돌보기, 마을문화 나누기 등의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마을환경가꾸기 프로그램으로 호계천 대청소, 공공시설 페인트칠, 폐가빈집 청소 등을 진행하였다. 마을건강돌보기는 한의학과, 치위생학과, 임상병리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이 참여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침술 및 한약 처방, 물리치료, 구강보건교육, 틀니세척, 소변 및 혈당 검사 등을 실시한다. 문화나눔 프로그램으로는 주민들의 건강댄스, 난타, 노래방 등 주민과 학생들의 공연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마을의 주민협의체와 공동으로 마을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개금동 철길마을, 2015년과 2016년에는 범천동 호천마을, 2017년에는 안창마을에서 행사를 각각 열었다. 2016년 기준 19개 학과 36개 동아리 학생 775명 참여하는 등 장기적인 비전과 체계를 가지고 대학이 지역과 협력하여 도시재생연구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그림 V-135] 마을환경 가꾸기

*출처 : 동의대 웹진(2016.11.28.), 뉴스1(2018.10.02.)



▲ [그림 V-136] 마을건강 돌보기

2. 현황 및 문제점

2.1 건축 관련 심의

- 현재 부산시와 자치구·군에서 많은 건축 관련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 중 심으로 심의 및 허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시민들과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 기회는 거의 없음
-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진행되며, 건축계획의 심의에 관해서는 대상 건축물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일반건축물 심의기준』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심의기준』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음
- 하지만 심의 기준이 해설 도면이나 구체적 지침이 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언급하고 있거나, 때에 따라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뿐만 아니라, 심의 신청인도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

2.2 시민참여 다양화

- 부산시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도시계획 시민아카데미’를 대한국토·도시계획 학회와 진행하였으며, 2015년에는 학생, 주부, 회사원, 기업인, 시민단체, 외국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 140여 명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여 <2030 바람직한 부산의 미래상 시민제안서>를 도출하였고, 2030 도시기본 계획에 반영하는 등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심의건에 대해 시민위원이 사전에 검토와 현장조사에 참석하고 위원회에서 시민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있음
- 건축은 도시계획분야보다 훨씬 다양한 주체와 참여방식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건축문화활동 분야에서 행정을 중심으로 주체들 사이의 협업체계는 미흡한 실정임



▲ [그림 V-137] 도시계획 부산시민 아카데미 공모 포스터

Case Study : 2018 부산건축주간 <골목관찰전>

동아대학교 학생동아리인 도시살리기지원단과 지도교수들이 참여하여 망양로 산복도로 일대의 계단을 조사하고, 도면과 영상 그리고 모형으로 기록한 결과물을 전시하였다. 부산의 평지와 경사지 주거지들을 연결하는 공공 인프라이면서 부산의 단면이기도 한 계단에 주목하여, 부산의 역사와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공공 계단의 역할 뿐만 아니라 거주민들의 커뮤니티의 장소를 제공하는 독특한 환경임을 제시하였다. 이들 대학 연구팀은 부산 다운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장소로서 계단연구를 확장하여 해운대 달맞이 일대를 조사하고 망양로 산복도로와 비교하는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다.



▲ [그림 V-138] <골목관찰전> 전시풍경(*출처 : 오성현교수)

3. 과제의 목적

- 시민이 참여하고 함께 공감하는 건축문화향상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건축 관련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 향상
- 시민들의 건축문화 및 건축정책 참여
- 다양한 건축 관련 주체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5. 세부과제

5.1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적용

- 건축 관련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위해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도시, 토목, 건축, 조경, 환경 디자인에도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심의 기준 수립
- 공공건축물 및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운영상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기준을 개선
- 건축물 용도별, 자치구군별 시범 적용을 통해 실효성 있는 건축디자인 기준의 모델을 정립하고 본격 적용

5.2 건축 관련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직능단체가 참여하여 건축 관련 각종 심의운영기준 및 허가심의절차의 개선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하여 통합관리 및 조정체계의 개선안 도출
- 주관적 판단과 개인적 기호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 심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심의 사례집 발간을 통해 우수 건축 심의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
- 시·구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의기준, 심의 통합관리, 심의 사례집의 공유를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5.3 시민정책제안 및 시민위원 참여

- 건축정책 및 건축문화에 대해 정기적 또는 상시적으로 시민제안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함
- 우수한 제안을 한 시민들과 시민건축 아카데미 교육을 받은 시민들 중에서 시민건축위원을 선발하여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사회적 이슈가 예상 되는 심의 등에 참여하여 참고 의견을 제시
- 시민건축위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은 건축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검토 하고 적극적으로 반영

5.4 지역대학과의 시민건축문화향상을 위한 협업 및 공동연구 수행

- 지역의 건축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그 중에 대학은 우수한 연구진의 전문지식 활용과 젊은 학생들의 자원봉사를 통한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적의 협력 파트너라고 할 수 있음
- 지역이나 마을을 대상으로 민·학 또는 민·관·학이 협력할 수 있는 소규모 실천 프로젝트, 지역자원 발굴이나 변화과정 추적 등의 장기적 조사연구를 담당할 연구회를 발굴하여 지원
- 소규모 실천 프로그램은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또는 자치구·군의 현장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주관하며, 연구회/연구동아리는 부산건축제 또는 부산연구원의 부산학센터에서 주관하여 상시적인 제안과 심사를 통해 실행
- 우수한 성과를 거둔 협력 연구/사업은 대학의 매칭투자로 장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함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적용	○			·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용역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		·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시범 적용 및 평가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강화		○		· 각종 심의운영 통합 관리 및 조정 체계구축 · 건축심의 사례집 발간 사업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공공기관
시민정책제안 및 시민위원 참여		○		· 정기적, 제도적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도시균형재생국 시민행복소통본부
			○	· 각종 위원회의 시민위원제도 도입	
지역대학과의 시민 건축문화향상을 위한 협업 및 공동 연구 수행		○		· 각 대학의 특성을 고려한 협업 체계 수립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부산건축제 부산연구원 지역 대학
			○	· 다양한 건축문화 진흥 주체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적용	80		40	40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강화						
시민정책제안 및 시민위원 참여	50				25	25
지역대학과의 시민건축문화향상을 위한 협업 및 공동연구 수행	60				30	30
계	190		40	40	55	55



문화성

정책과제 3 | 핵심과제 I

S7PT3

도시건축거버넌스 활성화

- ✓ 건축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지역 밀착형의 건축과 도시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시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과 도시를 통해 문화시민으로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른다.



▲ [그림 V-139] 부산시 1기 공공건축가 오신욱소장(라운건축사사무소)이 공공건축가 자격으로 설계한 부산 기장군 치유의 숲 방문자센터
*사진 : 윤준환

1. 배경 및 필요성

- 마을 단위 혹은 지역 단위의 주민 주도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 및 전문가의 자문 및 계획방향에 대한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필요
- 건축·도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의 참여 필요
- 건축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하여 민간전문가의 참여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표 V-4] 「건축기본법」에 명시된 공공건축가(민간전문가)의 자격·역할 및 업무 범위

구분		내용
역할	건축기본법 제 2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
자격	건축기본법 시행령 21조 1항	· 건축·도시·조경 등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건축사 및 기술사 등
업무 범위	건축기본법 시행령 21조 3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건축·도시 관련의 기획 및 설계 업무 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축민원 업무처리 · 다수의 사업자 또는 설계자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및 관리 · 건축디자인에 대한 전반적 자문과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등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모니터링』

- 2000년대 초 기존의 법제도나 공공에 의한 하향식(Top-down) 도시만들기의 한계로 인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역의 경관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협정제도가 도입되었음
- 최근 도시만들기는 경관협정, 건축협정 등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거버넌스형 사업이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2.1 민간전문가 활용

- 공공건축을 기획, 감독하는 행정조직이 건축직이 아닌 경우, 전문성의 부족, 행정업무의 과다 등의 문제로 인해 공공건축의 수준저하
-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로 인해 다양한 사업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작 시민과 주민의 전문성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로 사업의 기획단계보다는 실행단계에서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의 폭이 제한적이며 보조적인 역할에 그침
- 부산시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1기와 2기에 걸쳐 총 36명의 공공건축가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2~3차례 정도의 운영방안 논의나 몇몇 건축가의 재능기부에 가까운 인테리어 등 소규모 건축설계를 수행했을 뿐, 활동이 미미한 상황임
- 공공건축가들의 미미한 활동은 공공건축가 제도는 도입했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였고, 업무 범위나 활동 방안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활동에 따른 예산 지원 등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표 V-5] 부산시 공공건축가 현황

기수	1기 (2016. 4 ~ 2018. 4)	2기 (2018. 4 ~ 2020. 4)
인원	총 17명	총 36명

▼ [표 V-6] 공공건축가(민간전문가) 제도 유형별 역할 및 업무

구분	내용		비고
지역 총괄 계획가	역할	· 지자체 건축도시경관 관련 사업의 계획수립 및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 총괄조정	· 디자인 관리단장 · 임기 2년 (연임가능)
	업무	· 사업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디자인 전담조직 구성 및 총괄, 지역 마스터플랜 수립지원, 지역 디자인정책 수립, 중앙정부 공모사업 프로젝트 단위 업무 지원	
사업 총괄 계획가	역할	· 건축 도시경관 관련 단일사업의 디자인관리방식 결정 · 개별 마스터플랜 수립 MP/MA · 개별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 디자인프로세스 지원	· 영주시 공공건축가 · 임기 1년
	업무	· 프로그램기획, 기획제안서 검토 및 수정, 과업지시서 검토, 기획 및 과업지시서 작성지원, 발주방식 결정, 설계지침 운영, 디자인리뷰 운영, 설계자 선정위원 참여, 설계 사후관리 총괄 등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지역경관 향상 지원사업 모니터링』 / 조준배, 2016, 영주시 민간전문가 사례 발표 자료, p4참고

2.2 시민주도의 도시만들기

- 2008년 <경관법> 제정으로 경관협정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지난 10여 년간 주민 스스로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수동적인 협정이 대부분임
- 부산의 경우 청사포마을 경관협정(2009), 대천마을 경관협정(2011), 보림팩토피아 경관협정(2013) 등 7건의 경관협정을 체결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이 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곳은 많지 않은 실정임

3. 과제의 목적

- 공공건축가 제도의 활성화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마련과 이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밀착형 건축·도시디자인 행정 실행



▲ [그림 V-140] 금정구 금사동 보림팩토피아 : 주민들이 경관협정체결을 준비하고 사업수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건축물 디자인, 색채, 옥외광고물 및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디자인개선과 관리를 통해 번영로의 관문으로서 상징성을 확보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도시건축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
- 주민주도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활성화

5. 세부과제

5.1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및 공공건축가 제도 개편

1)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 2015년 공공건축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역할 및 활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해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현재 부산시의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의 도출
- 지역별 공공건축가의 선정을 통한 실질적 지역문제에 적극 참여 유도
- 자치구·군 단위의 활용에 대한 지원책과 활용 메뉴얼 수립

2)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서 공공건축가 역할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 공공사업의 각 단계별 공공건축가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한 행정 업무지침을 수립
- 주로 사업총괄계획가의 역할을 부여하며, 건축, 도시, 경관 관련 단일사업의 기획단계 지원, 개별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MP(Master Planner)/MA(Master Architect), 개별 공공건축 및 공공공간 사업의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등 디자인 프로세스 지원
- 자치구·군에서 필요한 경우 자치구군의 총괄건축가 업무 지원

3) 부산시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 부산시가 실행하는 다양한 건축 및 도시경관 관련 사업의 기획부터 계획수립과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총괄 조정의 역할을 담당
- 부산시 건축, 경관, 디자인 정책의 수립 및 디자인 전담조직 구성과 총괄, 부산시 주요 관련사업의 디자인 관리방식 결정, 건축 및 경관 관련 마스터플랜의 지원, 중앙정부 공모사업 지원
- 부산시의 핵심 도시건축사업의 경우 전담조직 중심으로 기획 및 설계, 실행 관리까지 담당

5.2 지역별 건축민원 카운슬링 제도 도입

- 구 단위 혹은 권역별 건축멘토 임명(공공건축가 또는 건축사협회 추천)하여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건축 상담 및 컨설팅 제공
- 월 2회 정도의 건축민원 및 집짓기 관련 상담 실시하고 적정한 보수 지급

5.3 시민주도의 거버넌스 사업 활성화

1) 시민주도형/참여형 도시만들기를 위한 시민 조직 지원

- 건축 및 도시만들기 관련 소규모 주민조직 또는 시민조직의 활동 모델 개발 및 지원 계획 수립(사례 : 집수리 봉사단, 지역 건축역사연구회, 건축문화답사회 등)
- 건축 및 도시 관련 시민조직 협력을 위한 업무를 배정하고 조직 운영 및 활동 및 전문가 네트워킹 지원(사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찾아가는 주민컨설팅”)

2) 시민주도형 도시건축사업 활성화

- 시민들이 제안하는 도시건축 정책공모 및 소규모 공모사업의 활성화(사례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
- 건축 및 도시 관련 시민조직의 활동을 기반으로 도출한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소규모 시민주도형 시범사업이나 협정사업의 도입 및 실행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공공 건축가 제도 개편	○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건축정책과
		○		· 공공건축가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지침 마련	
			○	· 부산시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지역별 건축민원 카운슬링 제도 도입		○		· 권역별 건축멘토 지정 및 컨설팅 제공	건축정책과 시, 자치구·군 건축사협회
시민주도의 거버넌스 사업 활성화		○		· 시민주도형 지역조직 및 사업 지원 방안 계획 개선 및 시행 · 시민주도형 사업 공모 및 선정, 시행	건축정책과 사회통합담당관 도시재생지원센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괄건축가 제도 도입 및 공공 건축가 제도 개편	140		20	20	50	50
지역별 건축민원 카운슬링 제도 도입	320				160	160
시민주도의 거버넌스 사업 활성화	300				150	150
계	760		20	20	360	360



문화성

실행과제 1

S7AP1

부산도시건축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 ✓ 부산도시건축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기반을 구축한다.
- ✓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먼저 설립된 부산건축제의 역할을 확대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질적 성장을 지원한다.



▲ [그림 V-141] 2017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출처 : 부산건축제

1. 배경 및 필요성

- 한 지역의 도시건축을 이해하고 수준 높은 건축문화를 창조하려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탕으로 기록, 전시, 연구, 교육, 교류 등 다양한 건축문화 프로그램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전개되어야 함
- 체계적인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 안정된 자원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독립 조직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민관학 협력의 기반 위에서 전시, 연구, 교육,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이미 건축문화 관련 프로그램의 중심점 역할을 하는 조직을 구성하여 통합적/융합적 사업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역사와 건축문화를 홍보하는 도시건축홍보관을 건립하여 문화, 관광, 경제, 도시 이미지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음

Case Study : 국외 건축박물관 관련시설 건립현황

- 국가 차원의 건축박물관 : 네덜란드 건축관(NAI), 스웨덴 건축박물관, 독일 건축박물관(DAM), 프랑스 건축 및 문화유적 박물관, 스코틀랜드 라이트하우스, 핀란드 건축박물관, 캐나다 건축센터(CCA), 미국 국립건축박물관(NBM)
- 도시 차원의 건축박물관 : 에도도쿄 야외박물관, 에도도쿄 박물관, 오사카 역사박물관, 오사카시립주택박물관,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
- 도시 홍보관 : 파리 아스날관, 상해 도시모형전시관, 싱가포르 City Gall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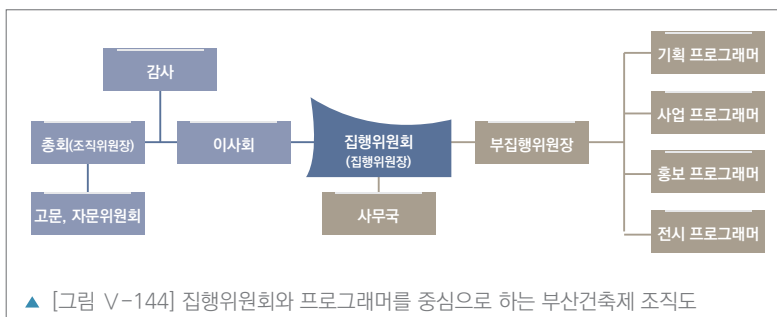
▲ [그림 V-142] 싱가포르의 도시와 건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향후 발전상에 대한 비전을 체계적으로 전시한 싱가포르 City Gallery



▲ [그림 V-143] 오래된 마을의 골목과 건물을 보존한 서울 돈의문박물관마을

2.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2001년부터 학계, 전문가, 행정이 힘을 모아 부산국제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공모전, 학술행사, 워크숍, 전시회, 이벤트, 연구용역, 시민건축교육, HOPE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여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예산을 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재정 상의 한계, 반복적이고 유사한 전시와 워크숍으로 인한 사업 상의 한계, 부산시의 과제를 해결하는 공모수행기관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심, 사회적 책임이나 시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역할 등의 문제점도 안고 있음
- 좋은 건축, 좋은 도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도시건축환경의 공공성 구현과 질적인 발전을 선도하고, 실질적인 공공 프로젝트의 실행주체로서의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와 시도를 계속하고 있음



3. 과제의 목적

- 부산 도시건축의 질적 수준향상과 시민의 인식제고를 위한 통합적인 기반 구축
- (사)부산건축제의 전문성 강화와 사업의 질적 성장을 통해 역할 정립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건축문화 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방안 제시
- 건축문화 품격 향상과 공공성 구현을 위한 역할 모색
- 부산 도시건축의 역사를 기록·전시하고 도시의 현황과 비전을 홍보하는 역사관 제안

5. 세부과제

5.1 부산건축제 조직운영 개선을 통한 부산도시건축재단 설립

- (사)부산건축제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한편, 그 한계를 극복하여 부산의 건축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적 안정을 담보하고 지속적 역할을 담당하는 재단법인으로 확대
- 부산시가 기본재산을 출연하고 매년 예산을 지원하며 관리·감독의 권한을 갖되, 민간을 중심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재단 설립 및 운영계획 수립 및 전문가, 학계, 시민으로 구성된 재단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 사단법인 부산건축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독립성과 역할을 강화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부산도시건축재단의 가치관과 목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 포럼, 시민토론회, 홍보 등을 통해 범시민적인 공감대 형성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절차 수행 및 부산도시건축재단 설립

5.2 건축도시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부산도시건축역사관〉 설립

- 부산의 도시역사와 도시공간의 변천과정, 도시 현황과 미래비전 등을 수집, 전시, 교육, 연구, 홍보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부산도시건축역사관을 설립하여 시민에게는 정체성과 자긍심을, 관광객에게는 도시에 대한 이해와 볼거리를 제공함
- 설립 위치는 도시 역사가 중첩된 원도심 지역이 좋으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폐교 리모델링으로 도시건축역사관으로서 역사성을 살리면서 동시에 설립 비용을 최소화함
- (사)부산건축제를 중심으로 '부산도시건축역사관' 소장용 자료를 미리 발굴하고 수집하며, 문화적·학술적 가치가 높으나, 개인적으로 관리 중인 도시역사 및 건축물에 대한 사료는 기증방식을 통해 수집/위탁 보관



▲ [그림 V-145]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한 서울도시건축센터 : 서울시는 서울건축센터를 중심으로 돈의문박물관마을과 서울도시건축박물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그림 V-146] 3331 Arts Chiyoda : 일본 도쿄의 도심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민간이 운영하는 예술복합공간으로 조성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부산건축제 조직 운영 개선을 통한 부산도시건축 재단 설립		○		· 부산도시건축재단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및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	(사)부산건축제 건축정책과 시의회
			○	· 부산도시건축재단 공감대 형성 및 설립 절차 진행	
건축도시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부산도시건축 역사관〉 설립		○		· 설립준비 전담조직구성 및 설립 방안 연구 · 설립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건축정책과 문화 (사)부산건축제
			○	· 부산도시건축역사관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 진행 · 부산도시건축역사관 건립공사	건축정책과 (사)부산건축제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건축제 조직운영 개선을 통한 부산도시건축재단 설립	100				50	50
건축도시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부산도시건축역사관〉 설립	200					200
계	300				50	250

S7

문화성

실행과제 2

S7AP2

도시건축 시민아카데미 활성화

- ✓ 시민에게 먼저 다가설 수 있는 열린 건축교양교육을 위한 조직체계를 마련한다.
- ✓ 체계적이며 실질적인 도시건축교육을 통해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인식의 수준을 향상시킨다.
- ✓ 시민건축교육을 위한 지식 콘텐츠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기반을 마련한다



▲ [그림 V-147] 2016 찾아가는 건축문화 아카데미
*출처 : 부산건축체

1. 배경 및 필요성

- 건축·도시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가 높은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우수한 건축과 도시공간이 형성되고 있으며, 건축과 도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없는 시민들은 왜곡된 경관이나 수준 낮은 건축에 익숙해져 문제의식조차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건축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건축관련 단체에서 유치원에서 12학년까지(K-12) 단계별 건축교육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정규건축교육에도 포함시키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 시절부터 일상적 삶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교육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과 반응하면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시민건축교육의 궁극적인 목표임
-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으로 건축에 대한 일반인들의 지적욕구가 단순한 교양수준을 넘어 전문가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만족시키는 교육의 기회는 부족함
- 궁극적으로 시민건축교육은 시민들의 삶의 토대인 도시의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전반에 대하여 인문학적 기초 위에서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그리고 통섭적 능력을 배양하고, 도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교육, 즉 ‘건축을 통한 교육(Learning through Architecture)’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림 V-148] 미국 미시간건축재단의 전문가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공간의 치수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모습

2. 현황 및 문제점

- 정림건축문화재단, K-12건축학교, 아르코미술관은 2012년부터 서로 협력하여 건축학교(Learning through Architecture)*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각각에게 맞는 특성화 건축교육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오고 있음
- 부산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건축가협회가 주관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부산 건축가회가 매년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축기초교육과 도시건축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 [표 V-7] 건축단체 교육프로그램

주관 단체	교육 프로그램	대 상
부산건축제	찾아가는 건축문화 아카데미 부산공간포럼	유아 / 초등학생 / 성인일반인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시민건축대학 - 건축사와 함께 하는 어린이 건축 한마당	초등학생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청소년건축상상마당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고등학생 / 초·중고등학생

- 각 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인해 내용이 중복되는 문제, 특정한 연령대의 교육에 편중되는 문제, 홍보 등의 부족으로 인해 특정 지역 및 특정 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대부분의 교육이 일회성 행사로 소모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고, 연령대별 그리고 수준별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움
- 성인들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시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지역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건축관련 학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건축 동아리를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으나, 건축전문가들의 지도나 자원이 없고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을 접촉하여 지식과 정보를 얻고 있는 실정임



▲ [그림 V-149] 찾아가는 건축문화 아카데미, 부산건축제, 2016 ▲ [그림 V-150] 부산광역시건축사회가 주관한 건축사와 함께 하는 어린이 건축 한마당

Case Study : 건축학교 Learning through Architecture



〈건축학교〉는 어린이, 청소년, 성인 각각에게 맞는 특성화 교육을 지향합니다. 어린이는 자신의 일상과 삶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스스로 관찰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청소년과 성인은 건축과 도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건축학교〉는 '건축가를 키우기 위한 전문 교육'이 아닌 건축이 가진 인문학, 공학, 예술 등 여러 영역이 통합되어 '건축을 통한 교육 Learning through Architecture' 으로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대한 이해, 합리적인 분석과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건축학교〉는 정림건축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K12건축학교가 서로 협력하여 체계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2012년부터 진행해왔다.

◀ [그림 V-151] 건축학교 2017

*출처 : 정림건축문화재단 <http://www.junglim.org/archives/4128>

3. 과제의 목적

- 유아기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시민들의 건축과 도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지식을 확대함
- 도시건축에 대한 양질의 콘텐츠를 수집, 개발, 공유하여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건축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우수한 도시건축의 확산과 재생산을 유도함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시민을 위한 건축교육체계
- 시민건축교육을 위한 콘텐츠와 플랫폼

5. 세부과제

5.1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시민건축교육

-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시민건축교육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기존 교육 프로그램 주관 기관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시민건축교육협의체 구성
- 시민건축교육협의체를 통해 체계적인 시민 생애 교육프로그램 수립하고, 각종 교안과 교보재를 연구·개발하며, 연령대·지역 별로 정례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 시민건축교육협의체를 통해 연령별/테마별 맞춤형 도시건축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Case Study : 시카고건축센터(Chicago Architecture Center)

세계 최초로 마천루도시가 되었고,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등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작품이 즐비하여 건축의 도시로 잘 알려진 시카고에는 모든 연령을 위한 건축투어, 전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통해 건축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건축디자인의 중요성을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시카고 건축센터(예전에는 시카고건축재단)가 있다. 이 재단에 능력있고 헌신적인 전문건축도슨트(docent, 해설사)들이 중심이 되어 85개 이상의 다양한 테마별 건축투어코스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일반인으로 구별되는 연령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투어 프로그램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방문하는 국내의 관광객들의 인기 투어프로그램으로 도시의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그림 V-152] 시카고건축재단이 주관하는 리버 크루즈 건축투어



▲ [그림 V-153] 세그웨이를 이용한 시카고건축투어

5.2 건축 꿈나무 멘토링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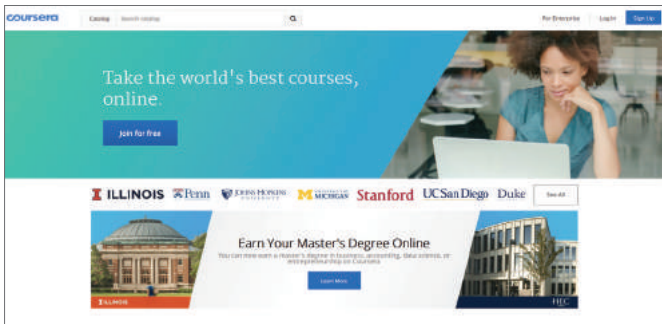
- 미래의 좋은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건축 동아리 및 건축 관련 학과 진로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 전문가의 멘토링 시스템 마련
- 부산시 공공건축가, 부산건축제 집행위원, 각종 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 등을 중심으로 재능기부형 청소년 건축 멘토를 모집
- 부산건축제가 주관이 되어 청소년 건축 멘토링 매칭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건축멘토 정보를 홍보하고, 청소년 동아리 등으로부터 멘토링 신청을 접수하여 멘토와 멘티를 연결
- 활발하게 활동하고, 멘티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전문가 멘토는 표창과 공공건축가 등에 지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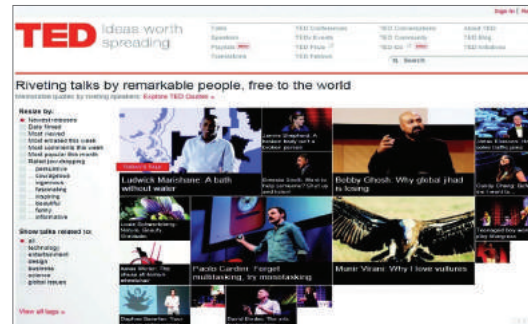
▲ [그림 V-154] 부산 경남 학생 건축디자인 연합 가온 : 고등학생들의 연합 건축동아리로 시작하여 고등학생 대학생이 건축과 디자인 관련 답사와 프로젝트를 하는 단체로 발전하고 있음

5.3 건축지식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

- 건축 관련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민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을 높여 건축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데 기여함
- 부산시청, 부산건축제, 부산건축가협회, 부산건축사협회를 비롯한 각종 학회 및 대학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시민대상 교육, 세미나, 심포지엄 등의 강연 내용을 녹화·기록하고 디지털 자료로 가공하여 부산 건축지식 플랫폼에서 공유하는 체계 구축
- 시민들을 위한 체계적인 기본 건축 지식 콘텐츠는 기획 프로그램으로 제작하고, 지역 대학 교수 및 전문가들의 재능기부 등을 통한 체계적인 콘텐츠를 구축
- 부산건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사이버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별 강좌 이수 관리를 통해 특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건축 해설사 등의 기회를 제공



▲ [그림 V-155] 교육 플랫폼 <COURSERA> : 2012년 개설한 세계 최대의 MOOC 플랫폼으로 2014년 기준 스탠퍼드대, 예일대, KAIST 등 세계 100여 개 대학, 개설 과목 450여 개, 수강생 500만 명이 참여하고 있음



▲ [그림 V-156] TED (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 일종의 지식과 경험 공유 체계로, '세상에 퍼뜨릴 만한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 모토로 인류 공동의 지식 자산으로 발전하고 있음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 2023)	장기 (2024 이후)		
시민건축교육	○			· 시민건축교육 통합운영 협의체 구축	부산건축제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부산시교육청
		○		· 시민 건축 교육을 위한 교안 연구 개발 · 연령별, 테마별 도시건축 투어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건축 꿈나무 멘토링 시스템 구축		○		· 건축멘토선발 및 매칭시스템 구축 및 실행	부산건축제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 건축학회
건축지식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		○		· 시민건축교육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건축지식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	부산건축제
			○	· 각종 콘텐츠 수집, 개발 및 체계적인 기획 프로그램 제작	부산건축제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	· 사이버교육 이수관리 프로그램 구축	부산건축제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시민건축교육	60		10	10	20	20
건축 꿈나무 멘토링 시스템 구축	20				10	10
건축지식 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	40				20	20
계	120		10	10	50	50



문화성

실행과제 3 | 시범사업 |

S7AP3

도시건축기록화 및
아카이브(DB) 구축

- ✓ 시민의 삶과 도시문화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시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과 아카이빙을 지원한다.
- ✓ 부산의 건축문화에 대한 다양한 민간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정리, 보존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 [그림 V-157] 1953년 동광동 40계단 : 계단이 많은 도시로서 부산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임
*출처 : 사진으로 보는 부산도시기록

1. 배경 및 필요성

- 부산에 현재 존재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서 부산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담고 있는 기록물이며 부산과 시민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임
- 도시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공간과 건축 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도시와 건축에 대한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서 도시건축에 관한 자료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 그러므로 건축 및 공간환경의 현황을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부산의 변화과정에 대한 자료를 구축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전한 개발 유도, 새로운 건축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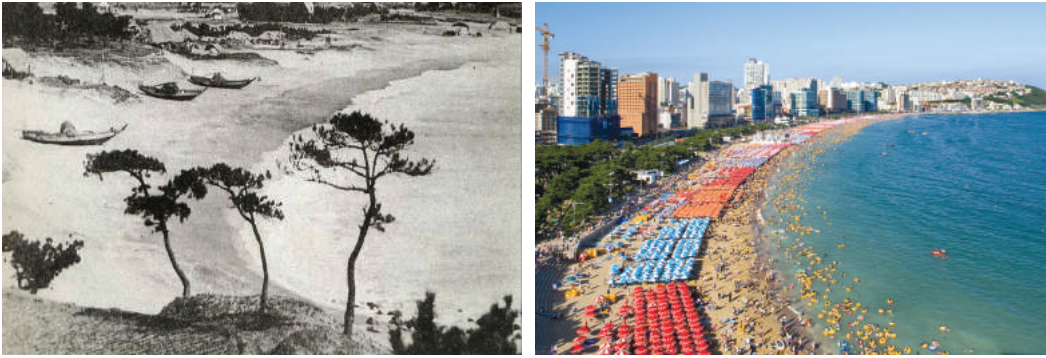
2. 현황 및 문제점

2.1 제1차 도시기록화 사업의 개요와 성과

- 제1차 도시기록화 사업의 개요
 - 사업명칭 : 부산광역시 「정비사업 도시기록화」 학술용역
 - 사업기간 : 2008. 7 ~ 2010. 3
 - 사업내용
 - 사진 기록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세부 시행 계획 수립
 - 부산의 변화하는 모습을 대표할 수 있는 대상지 선정 및 사진 촬영 수집
 - 정기적(5년마다) 사업 추진을 대비한 자료 작성 및 보관 방안 마련
 - 사진 확보집 발간
 - 해양도시 부산 특별전 기획 및 전시
 - 부산의 옛 사진 공모전
 - 기록화 결과물 웹 기반 데이터베이스화
- 도시기록화사업과 함께 진행한 부산의 옛 사진 공모전을 과거 모습도 함께 수집하여 현재의 모습과 비교를 통해 부산의 도시변천과정을 시각적으로 설명하였으며, 부산의 건축전문사진작가 2인이 참여하여 기록한 사진들은 사실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평가되어 부산시립미술관의 전시에도 초대되었음
- 제1차 도시기록화 사업을 통해 2010년 현재의 부산 모습을 체계적인 분류에 따라 사진자료로 기록하여, 웹 지도 상의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전문가와 일반인들에게 공공의 목적인 경우 무료로 제공되었으나 현재 폐쇄된 상황임 (※ 부산건축제 홈페이지에 인쇄물 형태로 공개되어 있음)
- 당시 도시기록화 사업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010년 제 1차 기록화 작업 이후, 2차 기록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림 V-158] 부산도시기록 사진집



▲ [그림 V-159] 제 1차 도시기록화 사업으로 수집한 1904년대 해운대와 2009년의 해운대 비교 *사진 : 조명환

2.2 도시건축관련 아카이브 현황

- 해외에서는 국가적으로 또는 도시 차원에서 건축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전시, 홍보하는 아카이브가 많이 있고, 민간 차원에서는 개별 건축가가 남긴 도면, 기록물, 자료를 수집한 아카이브를 건축가를 기념하는 재단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 굴지의 설계사무소인 정림건축 설립자가 세운 목천김정식문화재단이 목천건축 아카이브를 설립하여 한국 근현대 건축기록물을 수집·보존·활용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부산의 (주)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는 회사 차원에서 40여 년 동안 T자와 제도판을 비롯한 설계 도구들, 모든 작업 과정의 도면과 회의 일지, 모형 등의 기록과 자료를 모은 '일신설계 건축 아카이브'를 울산시 울주군에 조성한 바 있음
- 부산시의 건축 및 도시 관련 기록물의 아카이브는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 되지 못하고 있으며, 상당히 많은 근대기의 사진, 지도, 위성사진 자료 등이 남아 있으나 개인, 대학, 전문가, 박물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분산되어 단편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Case Study : 프랑스 20세기 건축기록물보존소 (Le Centre d'archives d'architecture du XXe siècle)

1986년 국가기록보관소, 건설교통부, 프랑스건축협회 3개 기관의 협약으로 건축협회 산하에 19세기말 이후의 대표적인 프랑스 건축가들의 자료 발굴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890년부터 1990년까지 건축가와 설계사무소 중심으로 도면, 모형, 스케치, 서신 등을 수집·소장한다. 자료는 소장 대상 설계사무소가 폐업할 때 또는 건축가의 사후에는 유가족들의 기증을 받아 수집한다. 수집과 보관 이외에도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공개하거나 특별전시를 주최하기도 하며, 해외 건축전문 기록보존소와 정보교류 등 협력하고 있다.



▲ [그림 V-160] 분류·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수집자료



▲ [그림 V-161] 수집자료 중 1950년대의 유네스코 본부 관련 조감도

*출처 : 『건축』(2003.08), 〈파리의 '20세기 건축기록보존소'와 '빠비용 드 라흐스날'〉

Case Study : 펜실베이니아대학 건축아카이브 (The Architectural Archives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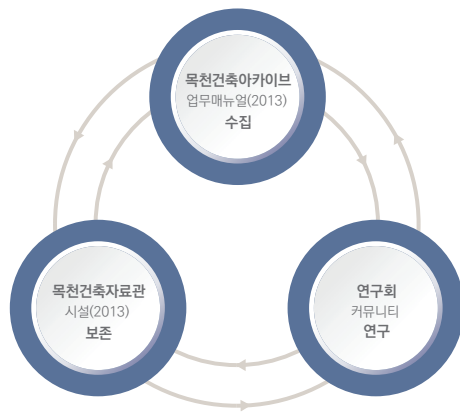
미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루이스 칸이 교수로 재직했던 펜실베이니아대학이 주체가 되어 펜실베이니아 주정부가 칸 재단으로부터 구매한 자료를 '루이스 칸 컬렉션'으로 대학에 영구임대하는 형식으로 1978년 설립되었다. 이는 지역의 건축가를 자산으로 인식하며, 관련 자료는 교육이나 대학의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아카이브는 홍보를 위한 전시실, 도서관 그리고 열람실을 구비하고 있으며, 자료공개에 적극적이고 웹상에서 이미지 파일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그림 V-162] 건축아카이브 내의 루이스 칸 컬렉션 전시실

*출처 : 건축도시공간연구소(2009), 『건축가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

Case Study : 목천건축아카이브

정림건축을 설립한 설립자가 세운 목천김정식문화재단에서 만든 건축 아카이브로서 2010년부터 건축가의 구술채록 및 기록물 수집, 건축물 단위의 수집 활동을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연구, 출간, 세미나, 비평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료의 수집과 보존 뿐만 아니라 활용에 중점을 두어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공급하며 연구기반을 제공하여 한국현대건축사 구축에 밑거름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그림 V-163] 목천건축아카이브의 업무 범위



▲ [그림 V-164] 수집자료 중 1950년대의 유네스코 본부 관련 조감도

3. 과제의 목적

- 2010년 1차 도시기록화 사업의 연속성과 정기성을 유지
- 건축·도시 분야의 통합적 자료 수집 체계 및 시대적 변화의 기록화 방안 수립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1차 도시기록화 사업의 정기 시행 및 보완
- 민간, 대학 및 각 기관의 건축·도시 관련 자료의 수집 체계 및 기록·보존 방안

5. 세부과제

5.1 부산 도시기록화 2단계 사업

- 1차 도시기록화 사업 이후 10년 간의 도시 변화 양상을 기록하여 정기적 도시 기록사업으로서 연속성을 유지
- 1차 도시기록화 사업 이후 개발된 다양한 영상 및 사진 촬영기술(3차원 레이저 스캔 및 VR, 드론 촬영 등)을 수용하여 기록 콘텐츠의 다양화와 활용성을 확대
- One Source Multi Use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 1차 도시기록화 사업에서 축적한 자료와 통합하여, 도시정책, 학술적 연구, 문화, 관광, 홍보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웹 지도 상에서 공유 시스템 구축
- 결과물은 사진 화보집으로 출판하여 부산시 시정과 건축정책의 홍보자료로 활용

5.2 부산건축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 부산지역에서 활동한 건축가들의 구술, 도서, 사진, 스케치, 모형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지역의 건축문화유산으로 보존
- 부산건축 아카이빙 팀 조직 : 학회 및 건축사협회와 협력하여 아카이빙 팀을 구성하고 부산시 1세대 건축가, 건축행정가, 중요 설계사무소 등 아카이빙 대상자 선정
- 아카이빙 자료 수집 : 생존인물의 경우 구술사업 및 소장자료 확보, 기타의 경우 유족의 동의로 기증, 수집 혹은 위탁 등의 방식을 활용
- ‘부산도시건축재단’의 설립과 ‘부산도시건축역사관’의 건립과 연계하여 자료관, 전시실 및 사무실 확보하여 부산건축 아카이브 개관하고 아카이브를 활용한 기획전시, 학술세미나, 테마별 투어프로그램 개발 운영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부산 도시기록화 2단계 사업	○			· 부산 도시기록화 2단계 사업 용역 발주 · 연구진 구성 및 영상·사진 촬영 · 웹사이트 구축 및 화보집 발간	도시정비과
부산건축 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			· 아카이빙 팀 구성 및 대상자 선정	건축학회 건축사협회 부산건축제
		○		· 자료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	· 부산건축 아카이브 개관 및 후속 활동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 도시기록화 2단계 사업	250		250			
부산건축 아카이브 기획 및 시범사업	90			30	30	30
계	340		250	30	30	30

S8

경제성

저성장 지식경제시대에 걸맞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S8-a 지역의 건축 및 공간환경 관련 설계/건설업체가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부산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도록 한다.

S8-b 국제화, 지역화, 전문화되고 있는 건축분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 건축 전문가의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의 인적 자원을 육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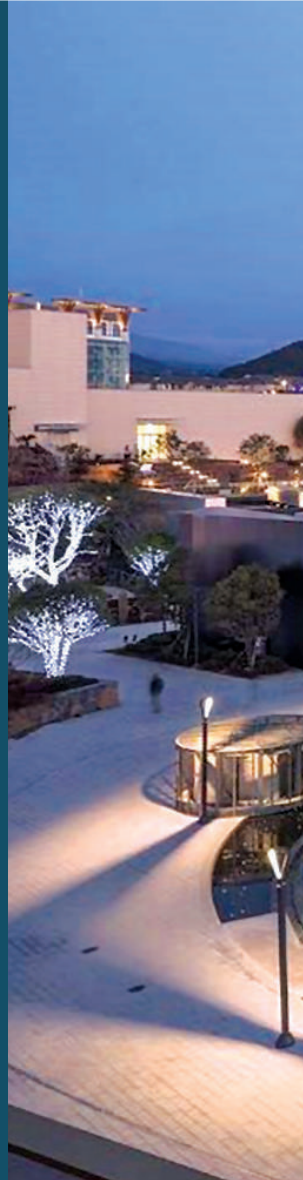
S8-c 우수한 디자인과 독특한 이야기를 가진 건축과 도시공간을 여타 산업분야와 창의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정책과제

- 1 **S8PT1** 부산건설관련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 핵심과제 |

실행과제

- 1 **S8AP1** '부산다운 건축' 가치 증진을 위한 건축문화 콘텐츠 개발
| 시범사업 |
- 2 **S8AP2** 우수 건축가 지원 및 육성사업
- 3 **S8AP3** 중소 건설업체 지원 육성





“한류 열풍의 중심이 되고 있는 제주신화월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_ 제주신화월드

*사진 : 윤준환



경제성

정책과제 1 | 핵심과제 |

S8PT1

부산건설관련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

- ✓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의 특화영역을 발굴하고 자체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주경쟁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 ✓ 지역 건축사사무소들이 참여하기 쉬운 소규모 정비사업 등의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차별화된 전문성확보를 지원한다.
- ✓ 부산 지역의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 [그림 V-165] 연희동 리프로그래밍

1. 배경 및 필요성

1.1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수주경쟁력 약화

- 전반적 건설경기가 둔화상태에 있으며, 부산지역 건설기업들은 자체사업을 시행하는 중대형 업체를 제외하고 경쟁을 통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임
- 건설회사의 경우 종합건설 중심의 시장보다는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적 시장을 발굴하여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의 시행에 따라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부산시가 활발히 유치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할 경우, 지역의 중소 건설회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1.2 부산 지역 건축설계업계의 경영 어려움

- 부산지역 건축설계업을 수행하는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수익구조가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음
- 특히 대규모 아파트사업에 편중된 설계산업으로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우 안정적 수주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영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건축사임에도 불구하고 수주기회의 어려움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업체를 견인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에도 반영되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히 요구됨
- 부산지역 건설업체 및 건축사사무소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차별화된 전문영역의 발굴과 육성 그리고 수익구조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는 실정임
- 빈집특례법의 제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반시설의 부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주체의 역량, 사업이후의 불확실한 수익률, 각종 법적 특례 적용으로 인한 과밀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순수 주민차원에서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3. 과제의 목적

- 지역 건설산업의 자생적 경쟁력 확보
- 지역 건축설계산업의 전문화와 업무영역 확대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하고 그 예산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 등

4.2 내용적 범위

- 부산지역 건설기업의 문제점 분석
- 부산지역 건설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 부산지역 건축사무소의 문제점 분석
- 부산지역 건축사무소 경쟁력 확보 방안

5. 세부과제

5.1 부산지역특화 건설영역 발굴 및 인프라 조성 (※지역전문건설업 역량강화)

1) 전문특화영역 발굴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 부산지역 건설기업들이 타 지역업체보다 차별화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화 영역을 발굴하여 제시
- 제로에너지 시범사업 등 추진을 통한 녹색기반 전문 건설기업(패시브 하우스, 제로 에너지 하우스 등) 양성

2) 전문업체 육성 및 특화영역 지원

- 부산형 친환경 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한 녹색기반 전문영역 발굴 및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통한 전문업체 견인
- 노후화된 공공 건축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우수 리모델링 전문기업 양성
- 부산지역 건설기업들의 전문특화 영역 교육인프라 지원 :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무형 건축시공 전문가 및 리모델링 시공 전문가 양성을 위한 관련 대학-협회 연계 교육 시스템 구축 (부산 녹색건축센터 설립과 연계)

현황

건설
업체

수주경쟁력 약화

설계
업체

업체별 과당경쟁

개선

자체 경쟁력 향상
기업별 특화영역 발굴 / 경영의 안정성 확보
차별화된 전문성 확보

▲ [그림 V-166] 부산건설기업들의 현황과 개선방안

5.2 건축사사무소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

1)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선을 위한 산학관 협의체 구성

- 산학관 협의체를 통하여 건축사사무소의 수주경쟁력 증대와 자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력 강화 방안 모색
- 기획설계, 시공단계 설계변경 추가업무에 따른 대가지급 기준 정립 정당한 설계대가 정착화 방안 모색

2) 설계정보화(BIM) 기술교육 등 설계기술력 제고

- 전국규모의 설계업체 육성 : 우수실적 설계업체 인증제도 도입
- 전문분야 설계업체 육성 : 친환경 건축설계 특화업체, 리모델링 설계 전문업체 등
- 설계정보화 기술(BIM) 실무 전문가 양성 교육 시스템 도입
- 리모델링 및 친환경 건축설계 양성 교육 시스템 도입

5.3 소규모 정비사업 장려·활성화 (S8AP3와 연계 추진)

1)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므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2)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주민들의 협의와 설계 등의 복잡한 추진절차와 금융지원 등의 전문적이고 상시적인 자문이 요구됨
-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건축사협회 등과 연계하여 지역 건설업체 및 건축사사무소가 참여하여 소규모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고 주택도시기금(HUG)을 활용한 소규모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입



▲ [그림 V-167]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시도 ▲ [그림 V-168] 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계획도

5.4 건축서비스산업 지원

- 건축사협회, 건설협회 등 건축산업관련 단체와 함께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지원방안 수립
- 고가장비 공동활용 사업 실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5조 창업지원의 3.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 3D 프린터 및 드론과 같은 고가장비의 건축사사무소 공동 활용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0)	중기 (2021~2023)	장기 (2024 이후)		
부산지역 특화 건설영역 발굴 및 인프라 조성	○			· 전문특화 영역 발굴을 위한 산학관 협업체 구성	건축정책과 건설본부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관련 협회 지역대학
		○		· 전문업체 육성 및 특화영역 지원	
건축사사무소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	○			· 건축사사무소 업무개선을 위한 산학관 협업체 구성	건축정책과 건설본부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관련 협회 지역대학
		○		· 설계정보화(BIM) 기술교육 등 설계기술력 제고	
소규모 정비사업 장려·활성화	○			·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관련 협회 지역대학
		○		·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시스템 구축	
건축서비스 산업지원		○		· 라운드테이블 운영 및 고가장비 공동 활용사업	건축정책과 건설본부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관련 협회 지역대학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부산지역 특화 건설영역 발굴 및 인프라 조성	140		20	20	50	50
건축사사무소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	140		20	20	50	50
소규모 정비사업 장려·활성화	140		50	50	20	20
건축서비스산업지원	50				25	25
계	470		90	90	145	145



경제성

실행과제 1 | 시범사업 |

S8AP1

‘부산다운건축’ 가치증진을 위한 건축문화 콘텐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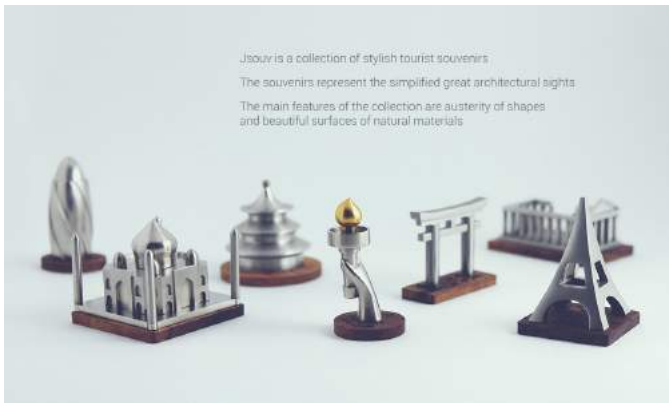
- ✓ 지역 건축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을 지원한다.
- ✓ 지역의 특색 있는 도시건축문화를 활용하여 성공적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한다.



▲ [그림 V-169] 지역의 건축문화를 기반으로 제작한 방송콘텐츠(조나단의 상상이상)
*출처: 부산건축제

1. 배경 및 필요성

-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적·국가적·지역적 문화 패러다임의 변화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건축 문화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지역만의 차별화된 건축문화를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으로 연계
- 지역적 특색을 담은 건축·도시가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정주지역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 증진에 기여



▲ [그림 V-170] 지역 랜드마크 기념품



▲ [그림 V-171] 시카고 특별판 레고

2.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임
 - 사례 : 전포카페거리, 이바구길, 흰여울마을, 강강이 마을, 감천문화마을
- 민간기업이나 특정한 마을에서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나, 통일성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담지 못해 차별성이 없는 경우가 있음
- 감천문화마을을 제외하면 건축문화를 활용한 킬러콘텐츠 및 지역 브랜드가 부재함



▲ [그림 V-172] 감천문화마을 내 판매시설



▲ [그림 V-173] 전주한옥마을 내 판매시설

3. 과제의 목적

- 지역의 도시건축문화의 특색을 담은 콘텐츠를 통하여 지역 홍보
- 건축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주민의 직접적인 경제활동 활성화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의 건축과 공간환경
- 감천문화마을, 강감마을, 흰여울마을, 전포카페거리 등 특색있는 지역

4.2 내용적 범위

- 국·내외 타 도시 지역 문화 콘텐츠의 사례 분석
- 지역 도시건축문화 콘텐츠 조사 및 분석
- 지역 도시건축문화 콘텐츠 개발·공모

5. 세부과제

5.1 도시공간/건축물을 활용한 MR·VR 가상투어 콘텐츠 개발

1) MR/VR 가상투어 콘텐츠 개발

- 부산의 특색있는 도시공간과 건축물의 가상투어 콘텐츠 개발 :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뉴욕 등의 미국 도시의 VR 체험 콘텐츠가 판매중이며, 로마의 판테온과 같은 역사적 건축물에 대한 MR 콘텐츠가 투어 및 역사 교육용으로 활용



▲ [그림 V-174] 미국 도시 가상 체험 <The City VR Experience>

- 단순한 파노라마형 VR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 개발
- 지역 내의 콘텐츠 전문기관과 공동 개발, 운영, 홍보 추진(부산콘텐츠코리아랩, 부산디자인센터 등)

2) 수변 건축물을 활용한 가상/현실 수상건축투어

- 해운대해수욕장, 동백섬, 마린시티, 센텀시티로 이어지는 수변의 중요건축물을 활용하여 배를 타고 투어하는 가상 및 현실 수상건축투어를 함께 개발하여 운영
- ‘부산건축제’에서 교육 양성하고 있는 건축문화해설사를 배치하여 우수한 건축을 시민과 내·외국인에게 알리므로써 부산의 매력을 홍보함
- 향후, 수변에 우수 건축물을 많이 유도하여 북항과 남항으로 수상건축투어 코스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함

Case Study : 부산일보 특집 "건축이 도시를 살린다." (2017.11)



광안대교 맞은편 해운대구 마린시티~센텀시티에 이르는 지역은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는 현대식 고층 건물들이 즐비해 부산의 도시 이미지를 대표한다. 강과 바다, 산과 어우러진 건물들에 스토리를 입힌다면 시카고처럼 '수상 건축 투어'도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다.

◀ [그림 V-175] 해운대구 마린시티의 전경
*출처 : 부산일보 2017-11-03 (20면)

5.2 지역도시건축문화를 활용한 Goods 개발

- 상품성이 높은 캐릭터를 이용한 지역한정 Goods 및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역 대표 캐릭터 및 아이콘의 개발(사례 : 쿠마모토현의 쿠마몬)



▲ [그림 V-176] 일본 후쿠오카의 지역한정 굿즈



▲ [그림 V-177] 쿠마모토현의 쿠마몬



▲ [그림 V-178] 홍콩 전통시장의 팝업형 먹거리 지도책

- 스타트업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건축문화 Goods 개발 및 판매
-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물, 장소의 이모티콘화를 통한 지역 홍보



▲ [그림 V-179] 노스테라스(황두진 건축가), 아키굿즈워크숍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MR, VR 가상 투어 콘텐츠 개발	○			· MR, VR 콘텐츠 제작	부산건축제 콘텐츠코리아랩
		○		· 수변 건축물을 활용한 가상/현실 수상건축투어	부산건축제 문화체육관광국
지역도시건축 문화를 활용한 Goods 개발	○			· 스타트업 공모사업을 통한 지역 건축 Goods 개발 · 부산의 대표적인 건축물, 장소의 이모티콘 개발	부산건축제 부산디자인센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MR, VR 가상투어 콘텐츠 개발	300		150	150		
지역도시건축문화를 활용한 Goods 개발	100			100		
계	400		150	250		



경제성

실행과제 2

S8AP2

우수건축가 지원 및 육성사업

- ✓ 건축계의 미래발전을 위해 우수 신인건축가의 작업기반을 지원하고 활동영역을 제공한다.
- ✓ 청년건축가들이 설계공모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폭은 넓힌다.
- ✓ 부산을 대표하는 건축상으로서 <부산다운건축상>의 위상을 강화한다.



▲ [그림 V-180] 뷰박스(동래구 안락동 소재) - 2018년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한 부산의 조정훈소장(아익건축사사무소) 작품

1. 배경 및 필요성

-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한 설계업무의 위축으로 새로 창업한 신진 건축사의 시장 참여와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규모 단지 선호와 아파트 위주의 주택 공급으로 인해 대형 설계사무소 중심의 설계시장이 형성되어 소규모 설계사무소 및 신진 건축사의 설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 대한건축사협회와 국토교통부에서는 경력부족 등으로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우수 신진건축사를 발굴·육성하여 건축설계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을 시상하고 있음
- 부산건축가회에서도 매년 부산건축상의 일환으로 만 45세 미만의 우수 젊은 건축가에게 <신인건축가상>을 시상하고 있음



▲ [그림 V-181] <멋진 할아버지집> : 2017년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의 이기철 소장(아키텍케이건축사사무소) 작품(김해시 소재), *사진 : 윤준환



▲ [그림 V-182] 2018 부산건축주간에 신인건축가상을 수상한 조정훈 소장(건축사사무소 아익)의 전시모습

2. 현황 및 문제점

-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해 신진건축가의 진출 및 육성을 위해 제한/지명 공모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유사하게 만 45세 이하의 신인건축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현상공모가 진행되고 있지만, 부산시 차원의 신인건축가를 위한 공모전 등은 없는 상황임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② 발주기관등은 특정한 기술의 보유나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설계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신진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설계공모를 제한공모 또는 지명공모로 시행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발주기관 : 건축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 또는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 우리나라 공공건축설계 발주를 보면 대부분 2억 미만은 가격입찰이나 수의 계약 방식으로 발주가 진행되며, 2억 이상은 PQ방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또한 실적이나 지역에 조건을 두고 있는 제한경쟁방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일정규모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만이 설계용역을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임(건축도시공간연구소, <건축설계 발주제도 개선방안 연구>)
- 이러한 편의와 실적위주의 발주제도는 창의력과 기술력을 갖춘 설계자나 설계안을 뽑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인건축가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여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도 저해하고 있음

3. 과제의 목적

- 신진 건축사의 설계기회와 자립기반을 제공하여 건축설계산업의 지속적 발전 도모
- 소규모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신진/청년 건축가의 참여기회 확대로 건축 후속세대 양성
- 민간사업의 경우 공모 참가 시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으로 우수 건축물 확산을 도모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청년 건축가의 설계시장 진입을 위한 지원방안
- 신진 건축사 대상의 소규모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간소한 설계경기 확대방안

5. 세부과제

5.1 청년건축가 인큐베이팅 시스템 마련 (S9PT2 사업과 연계)

1) 녹지 및 친환경정책의 인센티브 기능회복

-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가능성 - 청년건축가 창업 지원센터 등 제공
- 마을 집수리, 소규모 커뮤니티시설 등의 설계 작업에 우선 참여 기회 제공
- 마을흔적 조사사업 등 소규모 공공용역 우선 배려

- * 제2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중
(마을단위 건축서비스산업 육성)
- 신진건축사 등을 마을 건축사로 선정하여 마을에서의 재건축, 리모델링,
인테리어 등 컨설팅[‘18~’20]
- 마을 건축사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건축문화 기반의 지역 재생 추진

5.2 청년건축가 제한공모 활성화

- 부산시와 협의 하에 소규모 사업의 공모자격 제한 및 민간영역 사업으로 확대
- 청년 건축가의 참가를 지원하는 건축 3단체 주관 하의 소규모 공모전 TF 운영
- 신진건축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소규모 공공발주 또는 재생사업 프로젝트 중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시범사업화하고 건축가가 프로젝트의 총괄 PM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신진건축사 대상 시범사업을 언론에 공개하여 신진건축사의 지명도 향상과 건축행정 홍보 기회로 활용

2012.09.21. 서울파이낸스 기사 “LH,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중 “국내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역량있는 건축사를 발굴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의 공공건축물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LH공사 관계자 인터뷰)”

5.3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설계자 정보코너 마련

- 우수 신인건축가 시상 및 정보 제공 : 공공건축물 기획단계 참여 기회 제공 등 공공디자인 관련 프로젝트 참여 활성화
- 우수 신인건축가는 부산시 발주 또는 자치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명설계경기 혹은 수의계약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포트폴리오 제작 및 배포, 홍보 등 개업 후 일정기간(3~5년)동안 안정적 정착 지원



▲ [그림 V-183] 2016 부산다운건축상 대상 삼화피티에스
*출처 : 부산일보 2016.12.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0)	중기 (2021~2023)	장기 (2024 이후)		
청년건축가 인큐베이팅 시스템		○		- 도시재생사업 관련 소규모업무 지원	도시균형재생국 성장전략본부 일자리경제실
			○	- 부산 청년건축가 인큐베이팅센터	
청년건축가 제한 공모 활성화		○		- 3단체 TF팀 구성 및 공모 관련 지침 수립	도시균형재생국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자치구·군 공공기관
			○	- 민간영역으로 공모 확대 방안 마련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설계자 정보 코너 마련	○			- 우수신인건축가 시상 및 홍보	건축정책과 자치구·군 부산건축제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청년건축가 인큐베이팅 시스템	40				20	20
청년건축가 제한공모 활성화	120				60	60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설계자 정보 코너 마련						
계	160					



▲ [그림 V-184] 국립현대미술관 젊은건축가 프로그램

*출처 : 조선닷컴 2017. 07. 14



경제성

실행과제 3

S8AP3

중소 건설업체 지원육성

- ✓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의 우수 건설업체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 ✓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특화된 중소형 프로젝트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기회를 제공한다.



▲ [그림 V-185] 2014 건축명장에 선정된 대정종합건설(주)이 시공한 천주교 부산재속맨발가르멜회관, 안용대(가가건축사사무소) 설계 (기장군 안평리 소재)

*사진 : 윤준환

1. 배경 및 필요성

1.1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물량감소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잠재력을 가진 업체가 다수 있으나 실적 등 진입 장벽으로 인해 수주활동이 어려운 실정임

1.2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중소건설업체를 발굴하고 이를 육성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대형프로젝트보다는 중소형 프로젝트에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를 견인하는 다양한 사업발굴이 요구됨

2. 현황 및 문제점

- 현부산지역 건설업체는 전국규모의 건설업체에 비해 수주경쟁력이 못 미치고 있어 기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은 타 지역 기업들에 비해 특정 프로젝트 수주실적 및 차별화된 특화영역의 부족한 현실임
- 부산시에서도 ‘우수 건설기술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 건설기술인을 선정하여 인증서를 교부하고 있으나, 수여 범위가 용역, 설계, 감리,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시공감리·책임감리를 수행하는 자 등 범위가 넓고, 정보가 필요한 시민이나 예비 건축주들에게 인지도가 낮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사)새건축사협의회와 한국건축가협회에서는 실력 있는 중소규모 건설사를 발굴하고, 시민들과 건축가들에게 소개하여 ‘건축명장’ 프로그램을 매년 실행하고 그 결과를 출판하여 홍보함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그림 V-186] 2018 건축명장 소개 책자

3. 과제의 목적

-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건실한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
-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중견건설업체로 성장시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하고 그 예산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 및 민간 건축물 등

4.2 내용적 범위

- 부산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차별화된 건설업체 발굴
- 발굴된 우수 건설업체의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수립
- 전략적 프로젝트 발굴을 통한 지속적 지원 체계 구축

5. 세부과제

5.1 지역 건설명장 육성

1) 지역 우수 건설업체 선정기준 수립 및 발굴

- 타 지역 건설업체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지닌 부산지역 건설업체를 육성하는 지원 시스템이 요구됨
- 부산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수 중소건설업체를 발굴하여 건설명장으로 선정

2) 지역건설명장으로 육성 및 홍보

- 선정된 건설업체의 자체경쟁력 분석 및 육성방안 수립
- 지역 건설명장으로의 체계적 육성지원 및 지속적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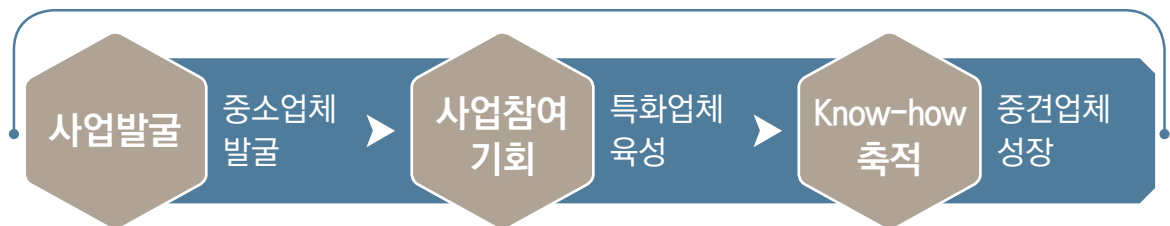
5.2 중소 우수 건설업체 업무 확대 (S8PT1과 연계 추진)

1) 업무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마을 집수리단 등과 같은 유지관리 사업의 도입 및 실시를 통해 지역 건설업체의 업무 확대
- 건설명장을 포함한 지역 내 우수한 중소 건설업체들이 수주할 수 있는 기회 확대

2) 중소 우수건설업체 참여확대방안 수립

- 프로젝트 규모를 반영한 우수건설업체의 참여범위 설정
- 프로젝트 발주기준 및 우수건설업체 관리체계의 수립



5.3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 (*지역전문건설업 역량강화)

- 지역 내 건설기능인력 부족에 대응한 건설기능인력 양성 확대 방안 수립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내실화 지원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0)	중기 (2021~ 2023)	장기 (2024 이후)		
지역건설명장 육성	○			· 지역 우수 건설업체 선정기준 수립 및 발굴	건축정책과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자치구·군 관련 협회
		○		· 지역건설명장으로의 육성 및 홍보	
중소우수건설업체 업무확대	○			· 업무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발굴	도시균형재생국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자치구·군 관련 협회
		○		· 중소 우수건설업체 참여확대 방안수립	
건설기능인력 양성 지원		○		· 부산광역시 건설기술교육원 내실화 지원	건축정책과 건설기술교육원 관련 협회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건설명장 육성	90			30	30	30
중소우수건설업체 업무확대	150			50	50	50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	1,000				500	500
계	1,240			80	580	580

S9

혁신성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 선진화

S9-a 지역의 건축산업계가 새로운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관습적인 규제와 절차를 혁신한다.

S9-b 건축전문가들이 융·복합시대의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술적 역량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정책과제

- 1 **S9PT1** 지역건설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 조성
- 2 **S9PT1** | 핵심과제 | 건축전문가의 역할·책임·영역 확대지원

실행과제

- 1 **S9AP1** 도시건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 2 **S9AP2** | 시범사업 | 부산형 스마트 시티 구축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보다 널리 적용될 경우 도시 운영 효율성 및 시민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 신기술을 익힌 IoT 전문 인력과 신산업 분야의 창조 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이 길러져 부산에 최첨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다.”

_ 부산시



혁신성

정책과제 1

S9PT1

지역건설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체계 조성

- ✓ 지역의 우수한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건축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 ✓ 기획설계를 강화하고 디자인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건축물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설계의 업역을 확대한다.
- ✓ 소규모 건축설계의 업무수행절차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단순하게 혁신한다.



▲ [그림 V-187] 경북 영주시 풍기읍 행정복지센터
영주시의 경우 디자인관리단 및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여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공공건축 혁신을 통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출처 : 디자인그룹 오즈 건축사사무소 : 최재원, 임상진, 신승수
*사진 : 황규백

1. 배경 및 필요성

- 건축가의 역량강화와 지속가능한 선순환체계는 지역 건축문화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속의 국제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축을 구성함
- 건축규모 및 투자 자본의 대형화에 따라 서울중심으로 설계시장이 편중되고 이에 따른 기술과 자본도 양극화되고 있어 실력 있는 지역 건축가의 자생 기반이 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지역 건축가들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설계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책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설계사무소의 업무에서 기획·계획설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대가 없이 수행되어 경영악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부산건축사 협회에서는 ‘기획·계획설계 협회등록제’ 등으로 대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공공건축물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한 건축적인 기획·계획설계의 업무를 경험이 없는 행정담당자가 진행하거나 주변 건축사에게 대가 없이 부탁하고 있는 실정임
- 공공건축물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자부심을 형성하는 정책 자산임에도 많은 공공건축물이 형식적 기획과 관행적 절차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기능 중복, 주민배려 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안고 있음
- 건축물의 완공 때까지 설계자의 계획 의도를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시공 과정에서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으므로 최초의 설계자에 의한 사후 설계업무의 활성화가 필요함
-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용역도 설계 과정 및 심의 상 복잡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어 설계업계의 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 과제의 목적

- 지역 설계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역의 건축과 공간환경의 창조적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건축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지원과 비전 제시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디자인감리제도의 도입
- 건축기획업무 및 기획설계의 전문성 강화
-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용역 업무 간소화

5. 세부과제

5.1 디자인 감리제도 도입

- 기술적인 감리를 정하고 있는 건축사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범위가 아닌, 설계자의 디자인 개념이 성취될 수 있도록 설계자에 의한 디자인 감리제도를 도입

▼ [표 V-8] 디자인 감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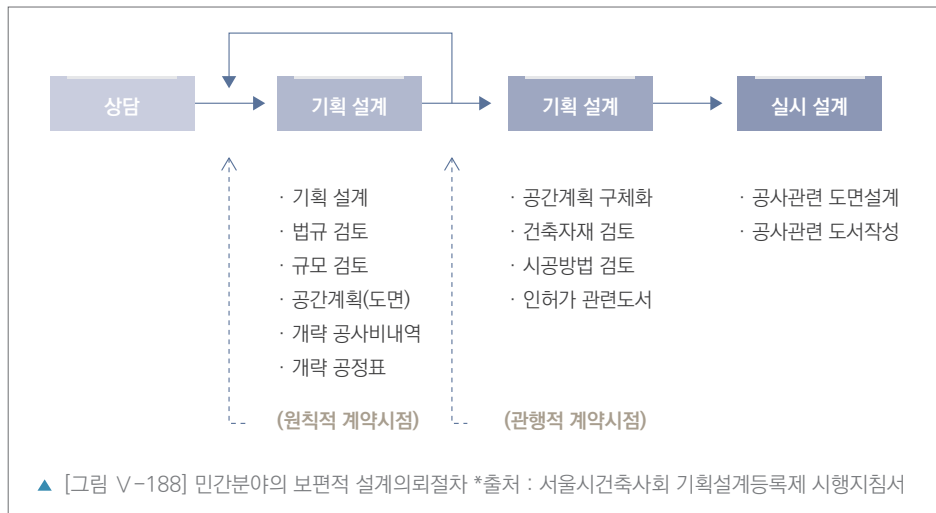
구 분	디자인감리	공사감리	건설사업관리
대 상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허가대상 건축물, 리모델링 (15년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총공사비 200억 이상 발주청 필요시 난이도가 높을시
수행주체	설계자	건축사 건설기술용역업자	법인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
관련법령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범 위	설계관리	공사관리	

- 대상건축물 : 현상공모작품, 일정 공사비 이상 건축물,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
- 감리업무 : 시공 및 유지, 관리 단계에서 자재 및 장비의 선정 등 디자인 품질 검토, 설계 변경 시 자문·협약과 시공 상세도의 디자인 사항 검토·확인, 건축과정 중 의사결정 과정 참여, 시공과 모니터링,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 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관리 제안 등
- 감리 방법 및 대가 : 현재 디자인 감리에 대한 명확한 대가기준이 없으므로 비상주 현장 방문 감리 방식으로 하되 사업목표와 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으로 지급

※ 서울시의 경우 2018년부터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디자인 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5.2 건축 기획업무의 전문성 강화

- 공공건축물의 경우 프로그램, 타당성 검토 등 건축 기획단계의 부실로 인한 획일적 디자인, 과다설계, 설계변경, 예산 낭비, 디자인의 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 필요
- 민간건축물의 경우 속칭 가설계라는 명목으로 건축사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고 기획설계를 함으로써 건축사 업무의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설계업체의 영세화가 지속되고 있음
- 공공건축물 일정규모 이하 : 부산의 경우 아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건축기획업무 또는 건축 기획 자문을 담당토록 함
- 민간건축물 : '가설계' 대신 '기획설계'를 설계업무의 하나로 정착하고, 부산 건축사협회와 함께 '기획설계 협회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지원과 홍보를 강화



5.3 소규모 공공건축물 용역의 업무 간소화

-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 과정상 다양한 보고와 심의절차를 거치면서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설계업체의 경영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과정 상에 상반된 의견 제시로 혼선이 야기되기도 함
- 공공건축물의 경우 중규모 이상의 프로젝트와 소규모 프로젝트의 업무 절차를 이원화하여 설계에 참여하는 업체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디자인의 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국토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2019년 하반기부터 1억 원 이상 설계용역비의 공공건축물은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도록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소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설계 심의 절차에 의제처리를 확대하여 “계약 → 기본설계보고 → 기술심의 → 협의 또는 허가” 등으로 심의 절차를 단순화하는 방안 적극 도입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디자인감리 제도 도입	○			· 디자인감리제도 실행방안 수립	도시균형재생국 건설본부 부산도시공사 자치구·군
		○		· 디자인감리제도 실행	
			○	· 장기적인 평가 및 개선	
기획·계획설계의 전문성 강화	○			· 건축기획업무·기획설계 대가의 지급기준 수립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관련 협회
		○		· 건축기획업무 실행 · 기획설계 협회등록제 실시 및 확대	
소규모 공공 건축물 용역의 업무 간소화		○		· 소규모 건축물의 용역업무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및 시행 · 중기적인 평가 및 개선	도시균형재생국 자치구·군 관련 협회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디자인감리제도 도입	-	-	-	-	-	-
기획·계획설계의 전문성 강화	-	-	-	-	-	-
소규모 공공건축물 용역의 업무 간소화	-	-	-	-	-	-
계	-	-	-	-	-	-

* 행정적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이므로 소요예산 없음



혁신성

정책과제 2 | 핵심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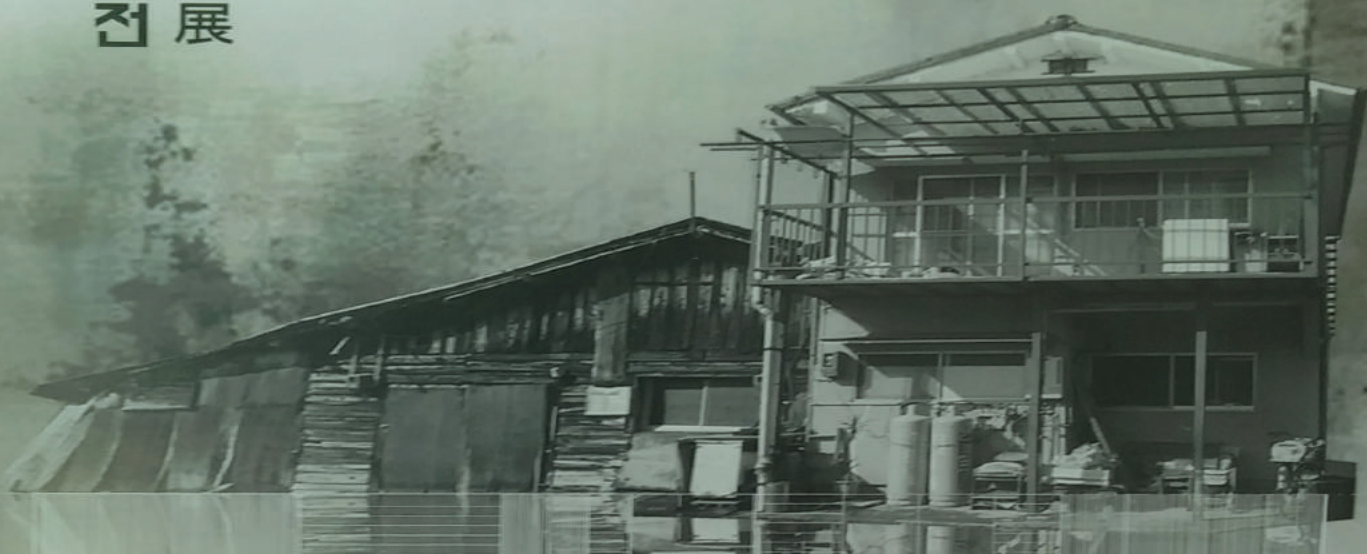
S9PT2

건축전문가의 역할·책임·영역 확대지원

- ✓ 지역 건축문화의 창달을 위해 건축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한다.
-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등 사회적 기여를 통해 건축전문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 ✓ 마을만들기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 새로운 사업분야에 지역 건축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통해 건축업역을 확대한다.

재일조선인마을
在日朝鮮人集落

우트로
ウトロ
기록전
記録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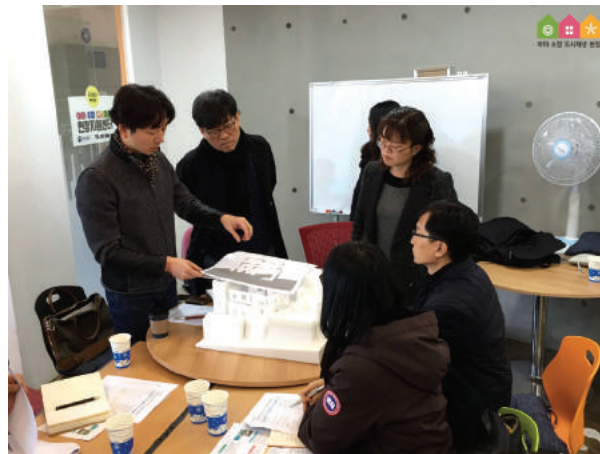
▲ [그림 V-189] 일본 우토로마을 기억보존 프로젝트(동아대학교 건축학과)

1. 배경 및 필요성

- 건축 전문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과 설계대가로 인해 건축 업무는 위축되고 실력 있는 젊은 건축가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저성장과 인구 정체로 인해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의 개선과 정비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 경우 주민 참여/주도의 마을만들기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음
- 최근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계획의 수준을 높이고, 행정과 주민 사이의 조정역할을 함으로써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음
- 건축행정 단위가 기초자치단체 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레벨에서 주민, 행정, 지역 밀착형 전문가들의 협력 작업이 필요함



▲ [그림 V-190] 민간전문가 총괄코디네이터가 지원하는 창원시 완월지구새뜰마을사업의 사회적협동조합주택 설계안 협의



▲ [그림 V-191] 민간전문가 총괄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부산서구 아미·초장도시재생사업의 회의 모습

2. 현황 및 문제점

- 건축기본법 “제23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사업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건축전문가의 민간참여 실적은 많지 않음
- 건축설계 이외에도 행정-건축 전문가의 다양한 협업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설계업무 이외 지역밀착형의 건축코디네이터의 역할이 미미함



◀ [그림 V-192] 지역의 건설회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재원을 제공하고, 지역 건축전문가가 재능기부하여 주거취약계층과 공동이용시설을 개선하는 HOPE with HUG 프로젝트

3. 과제의 목적

- 지역 건축전문가들의 사회적 역량강화와 참여를 통한 건축계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건축사의 참여와 행정의 협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치 실천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지역 건축전문가의 역량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방안
- 소규모 공공건축물과 도시재생프로젝트 등 지역 건축전문가의 활동영역 확대

5. 세부과제

5.1 지역건축전문가 사회적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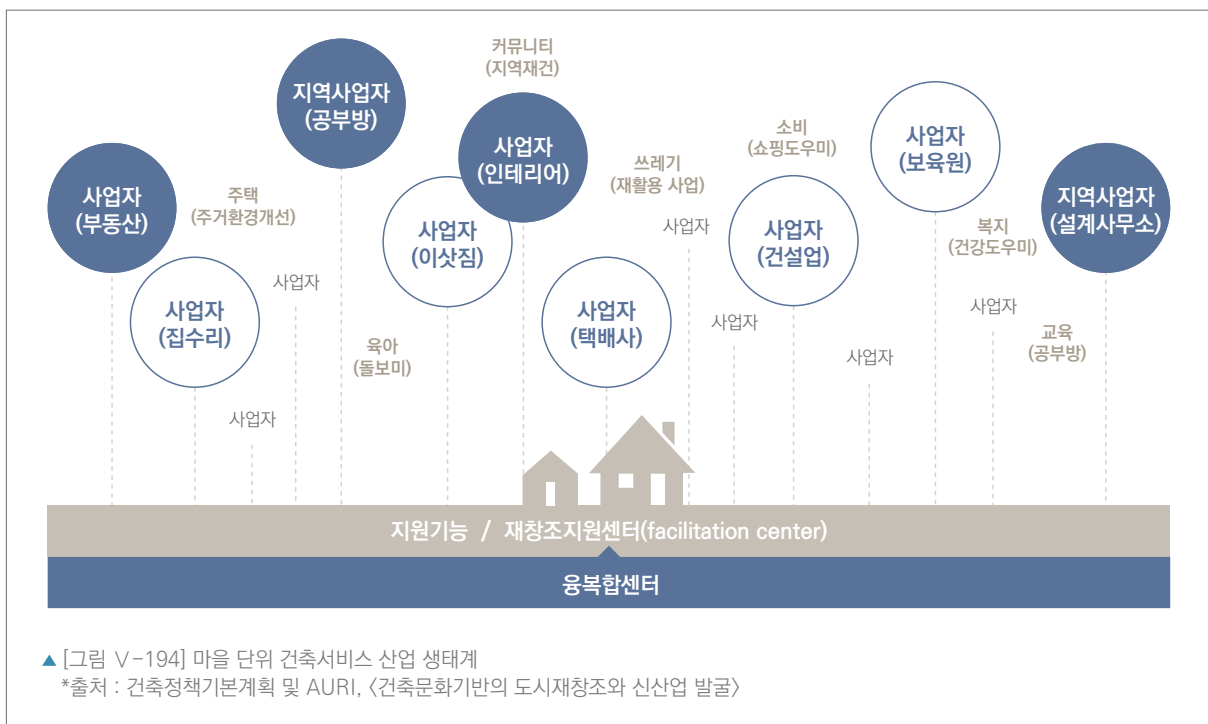
- 저성장 시대의 도시건축 전문가로서 건축사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인식과 새로운 직무 능력의 향상
- 지역전문가로서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참여의 확대를 통한 건축전문가의 인식 향상



◀ [그림 V-193] 건축가가 참여한 빈집프로젝트, 전주 노송동 별의별 프로젝트

5.2 건축코디네이터 지원제도를 통한 역할 강화

- 기존 건축단체의 기초권역 협의체 및 기초자치단체 간의 협의체 구성과 활성화를 통한 지역 단위의 다양한 사업에 참여
- 지역 기반의 공공기관의 현안사업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체계를 통한 건축 전문가의 활동 영역 확대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지역건축전문가 사회적역량강화	○			· 자치구·군 건축과에 지역전문가의 건축설계협의 체계 정비	건축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관련 협회
		○		· 건축전문가의 사회적 기여 활동	
				· 장기적인 평가 및 개선	
건축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한 역할 강화	○			· 건축전문가와 지역의 공공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건축정책과 도시재생정책과 자치구·군 각종 공공기관 관련 협회
		○		· 지역 공공기관의 관련사업에 참여 하는 시범사업 실행	
			○	· 건축전문가에 의한 지역컨설팅 제도 구축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지역건축전문가 사회적역량강화	120		30	30	30	30
건축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한 역할 강화	120		30	30	30	30
계	240		60	60	60	60



혁신성

실행과제 1

S9AP1

도시건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 ✓ 건축과 도시공간 관련 빅데이터의 접근과 활용을 통해 공공과 민간 사이의 협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 ✓ 원천 데이터 생산과 가공을 통해 건축 관련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도시 및 건축계획에 적용방안을 모색한다.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포털

로그인 | 회원가입

빅데이터 | 데이터시각화 | 셀프분석 | 활용/분석 | 소통/참여 | 이용안내

셀프분석 서비스
부산시가 제공하는 데이터와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쉽게 데이터시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주요아수
위치기반 정책지도 제공
부산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을 알기 쉽게 데이터 지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빅 데이터 포털
부산의 미래가 됩니다.

키워드를 검색하세요

국민연금 13건	건강/질병/의료 32건	신용/부채 28건	서비스연구 6건
신용카드 6건	보건환경 6건	공공데이터 16건	이용안내

데이터시각화 서비스 | 셀프분석 서비스

국민연금 + 건강/질병/의료 + 신용/부채 + 서비스연구 + 신용카드 + 보건환경 + 공공데이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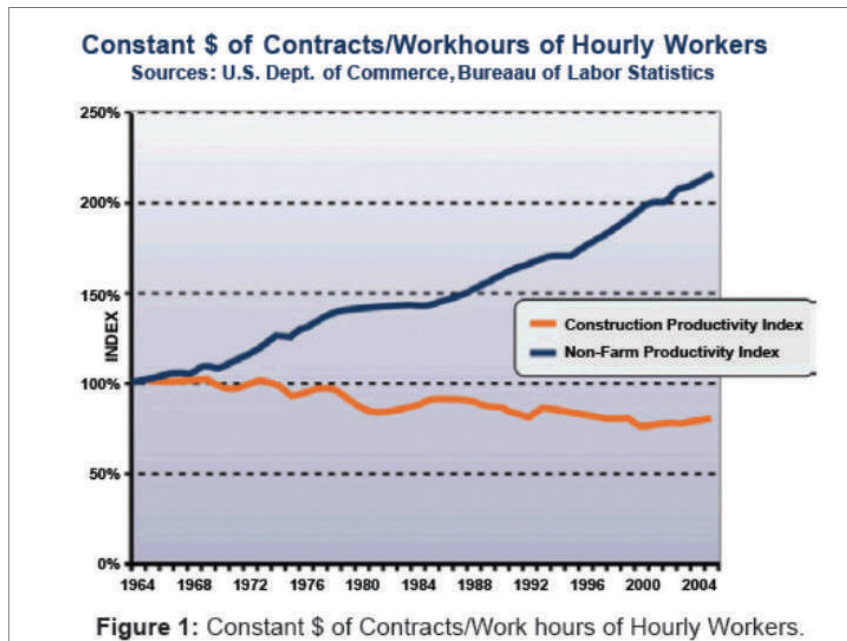
▲ [그림 V-195] 부산광역시 빅데이터 포털
*출처 : <http://bigdata.busan.go.kr/index.busan>

1. 배경 및 필요성

1.1 배경

1) 4차 산업혁명이 확산하는 가운데 건축산업은 비효율적 산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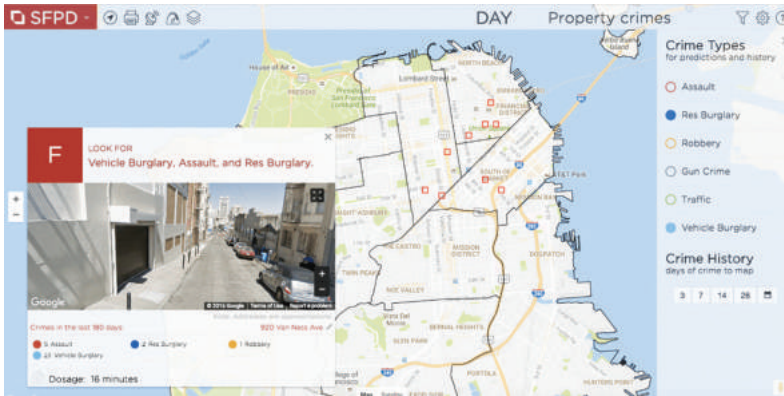
-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가운데 건축산업은 비효율적 산업의 오명을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설산업의 생산성은 꾸준히 나빠지고 있음
- 타 산업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거나 더 나가 예측하고 반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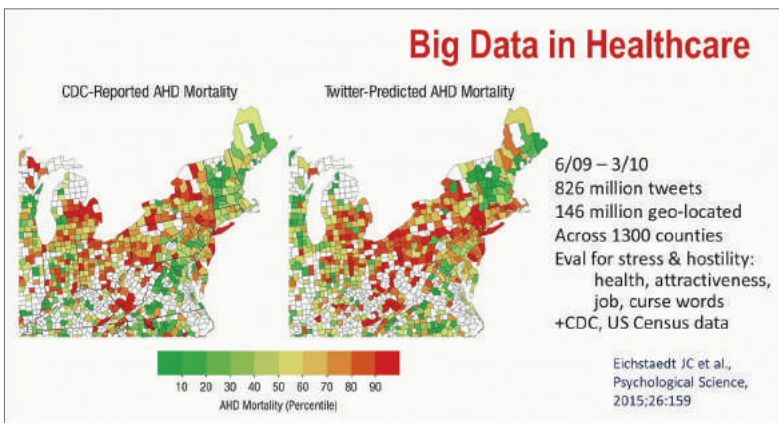
▲ [그림 V-196] 건설업 노동생산성의 저하 : 1964년 생산성을 100% 기준으로 비농업 분야 노동 생산성은 계속 증가해 왔지만 건설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감소하고 있음
*출처 : 미국 상무성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2) 런던 등 해외 도시들은 빅데이터를 도시건축 설계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음

- 세계 경제포럼은 2012년 떠오르는 10대 기술 중 그 첫 번째를 빅데이터 기술로 선정했으며 대한민국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은 IT 10대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빅데이터를 선정하는 등 최근 세계는 빅 데이터를 주목하고 있음
-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에 대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특히,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실현시키고 있음
- 복합적인 유기체의 성격을 가지는 현대의 대도시의 현상들을 모니터링하여, 변화를 관리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그림 V-197] UCLA에서 개발한 공간 빅데이터 기반의 범죄예측 프로그램(프레드폴(PredPol)) : 과거 범죄기록과 공간데이터의 기반으로 범죄발생가능 지역과 시간을 예측



▲ [그림 V-198] 공간-의료 빅데이터 기반의 질병 예측 프로그램

Case Study : 영국 왕립건축협회 <데이터로 디자인하기>



시민이 도시와 그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관한 데이터가 도시의 건조 환경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방법을 어떻게 혁신시킬 것인지 제시하였음. “건축가와 계획가가 더 나은 디자인을 위해 데이터와 디지털 툴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 하지만, 이제 겨우 출발선상에 있을 뿐이며, 데이터의 가공과 가공된 데이터의 디자인 적용을 위한 툴의 개발을 포함하여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도시건축 전문가, 기술자 그리고 행정이 협력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 [그림 V-199] 영국 왕립건축협회 <데이터로 디자인하기>

2. 현황 및 문제점

- 런던 등 해외 각국은 빅데이터를 도시 건축 설계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도시건축에 관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으나 체계적인 수집·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데이터의 특성상 수집 체계와 오픈 데이터 시스템만 마련이 되면 산업계 및 도시행정에 대한 유용성과 파급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짐
- 국토해양부는 1996년 건축 행정 전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축민원 업무를 전산화하는 건축정보시스템을 구축, 이후 세움터를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나 적절한 활용이 미진한 상태임
- 최근 부산시는 수집된 공공 데이터를 공개하였으나 건축 및 도시계획에 활용하기에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함
- 서울의 경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등)을 펼치고 있으며 부산은 아직 이 분야에서 미진한 상태임
- 건축 분야의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BIM에 관한 전문인력과 기술력이 서울을 중심으로 집결되어 있는 상황임



▲ [그림 V-200]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 컨퍼런스

3. 과제의 목적

- 지역 내 BIM을 활용한 건축 역량의 강화
- 빅데이터를 이용한 도시건축 계획 및 건축관련 파생 서비스산업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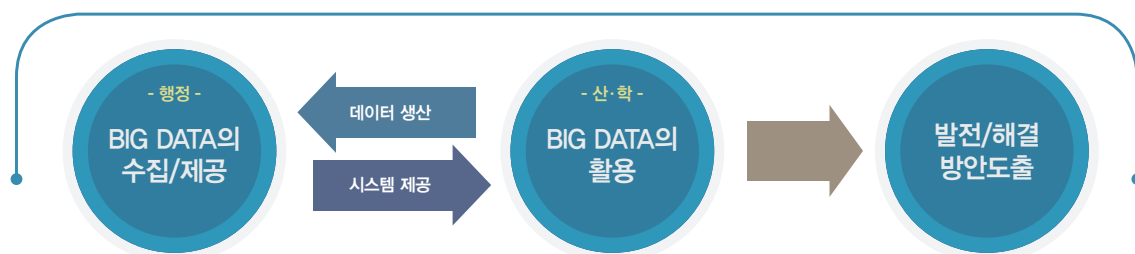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광역시 전역

4.2 내용적 범위

- BIM 적용 설계/시공의 확대
- 도시건축 빅데이터 기반구축 및 다양한 활용 방안 모색



5. 세부과제

5.1 공공건축물에 대한 BIM 설계/시공 시범사업 추진

1) 공공건축 분야 현황과 제안

- 현재 대형 건축물 위주로 BIM 설계/시공이 적용되고 있어 지역의 BIM 기술력과 전문인력이 전무한 상태임
- 제안
 - 대형 건축물에 대해 BIM설계/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 제도는 오히려 BIM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체 혹은 부분적 BIM 설계 시범사업을 추진
 - 일방적인 BIM 설계요구가 아닌 산·관·학의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을 추진
 - 프로젝트 통합발주체계(IPD)¹ 방식의 시범적인 적용
 - 연차별로 적용범위의 확대를 통해 BIM설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BIM 데이터를 통한 2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실시

2) 민간건축 분야 제안

- 민간사업에 적용 시 활성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연차별로 적용 범위의 확대를 통해 BIM 설계의 활성화 유도
- 소규모 공공건축물에 대한 부분적 BIM 설계 시범 사업 추진
 - 일방적인 BIM 설계의 요구가 아닌 산·관·학의 협력을 통한 시범사업
 - 프로젝트 통합발주체계 (IPD) 방식의 시범적인 적용
 - BIM 데이터를 통한 2차적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5.2 공간-건축도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 부산시 도시건축 관련 데이터의 유형별 축적 현황 및 활용 사례 분석 조사
- 현 세움터 자료를 포함한 16개 구·군의 건축도시 빅데이터 구축, Open Source화 및 도시건축 및 도시재생 분야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발주
- 도시건축 분야 단계별 빅데이터 구축 및 Open Source 시스템 조성으로 산업계 및 자치단체의 시범활용

1. 사업초기 단계에서부터 프로젝트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이해관계의 상충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건설사업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공공건축물 BIM 설계/시공 의무화 확대	○			· 공공건축물 BIM 설계 및 시공 시범사업 추진	도시균형재생국 건설본부 자치구·군 부산도시공사 관련 협회
		○		· 민간사업 적용 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공간-건축도시 빅데이터 구축		○		· 도시건축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용역 발주 · 빅데이터 공개 및 활용방안 마련	도시균형재생국 통계빅데이터담당관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공공건축물 BIM 설계/시공 의무화 확대	100			100		
공간-건축도시 빅데이터 구축	200				100	100
계	300			100	100	100



혁신성

실행과제 2 | 시범사업 |

S9AP2

부산형 스마트 시티 구축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도시건축분야에 스마트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인다.
- ✓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도입으로 정보, 통신, AI 등의 기술력을 접목 한 도시재생의 선진화를 유도한다.



▲ [그림 V-201] 부산 글로벌 스마트 시티 조성도_해운대구 센텀시티
*출처 : <https://blog.naver.com/edusns12210897743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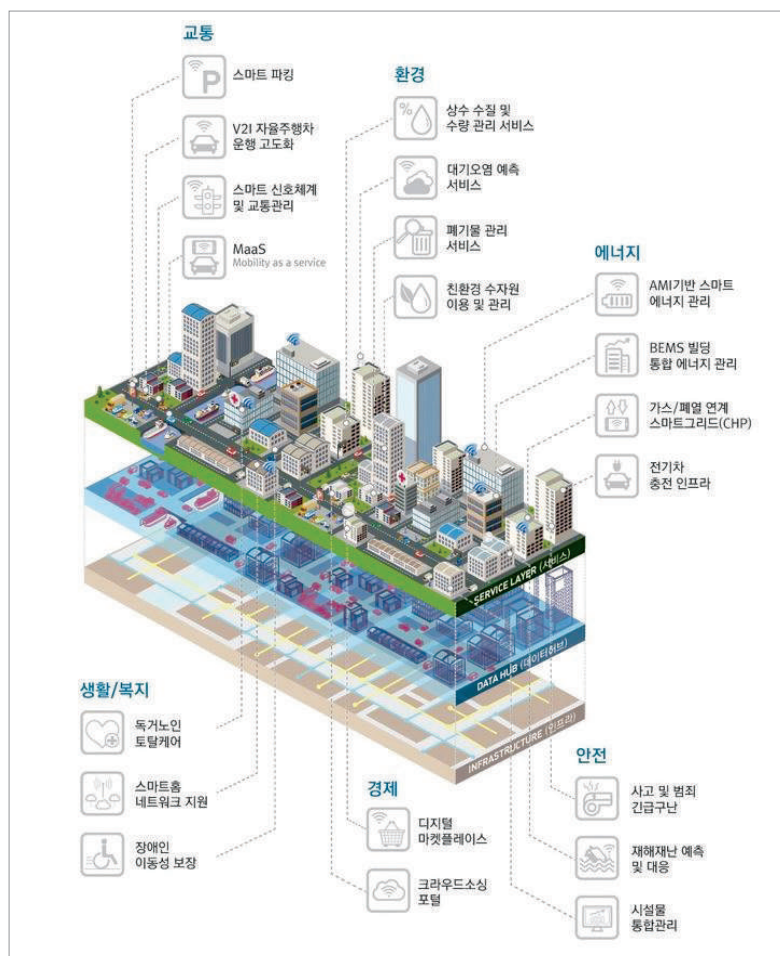
1. 배경 및 필요성

-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 시티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해외 주요 국가의 스마트 시티 정책 현황

▼ [표 V-9] 각 국가별 주요 정책

국 가	주요정책
미 국	2015년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 발표, 1.6억 달러 연구개발에 투자
중 국	500개 스마트 시티 개발계획 발표, 2020년까지 연구개발에 500억 위안 투자
영 국	스마트 시티 세계 시장 점유율 10% 목표, 2012년부터 관련 기술 표준화 집중투자
인 도	총 19조 원을 투입하여 2020년까지 전국 100개 스마트 시티 건설 프로젝트 발표
일 본	에너지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요코하마 등 4개 스마트 시티 시범지역 집중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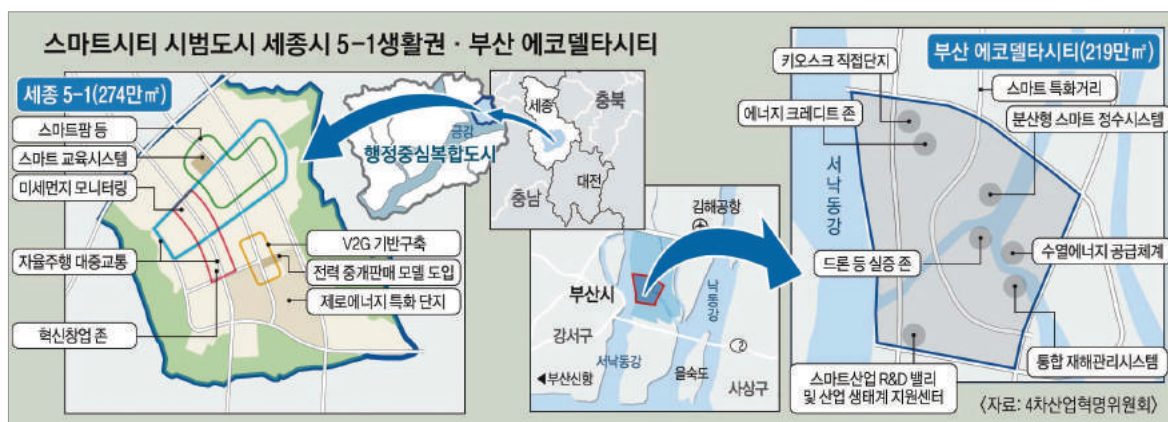
- 특히,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구도심에 스마트 인프라를 접목하는 스마트 시티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산형 스마트 시티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그림 V-202] 스마트 시티 개념도

2.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5년 내 세계최고수준의 스마트 시티 조성을 목표로 세종시와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하였음
- 2017년도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부산의 사하구가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었음(태양광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 전력지원,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
- 물리적 환경이 열악하여 교육, 복지, 건강, 안전 등에서 열악한 원도심과 낙후 지역의 생활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스마트 기술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
- 단편적인 IT 기술력의 적용보다는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건축·도시분야에서 어떠한 기반을 조성해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와 연구가 필요함
- 스마트 기술력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시티주의 교육과 성장도 필요한 요소임



▲ [그림 V-203]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세종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3. 과제의 목적

- 건축행정의 스마트화
-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기반조성
- 사물인터넷 및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도시재생 실현

4. 과제의 범위

4.1 공간적 범위

- 부산시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4.2 내용적 범위

- 건축행정의 스마트기술 도입방안
-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기반과 역할 모색
- 도시재생사업의 스마트기술 적용

5. 세부과제

5.1 스마트건축행정 서비스 구축

- 스마트 머릿돌 사업
 - 기존의 머릿돌의 사물 인터넷화를 통하여 각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
 - 1차 인프라 구축을 우선으로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도면정보 제공을 포함한 향후 서비스 모델의 창출과 상업서비스 모델에 대한 방안모색



▲ [그림 V-204] 스마트머릿돌 사업 개념도



▲ [그림 V-205] 스마트건축행정구축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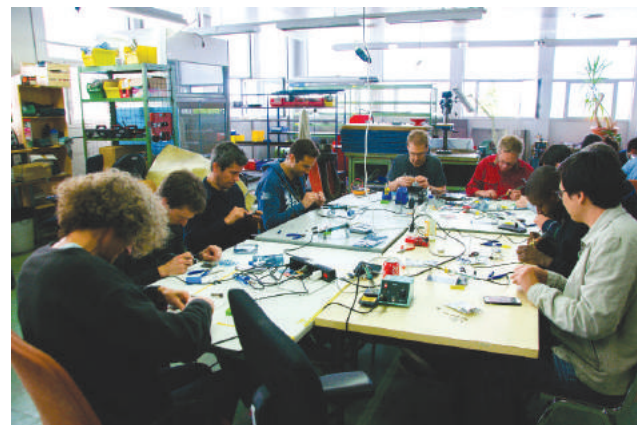
- 각종 행정관련 서류의 전산화를 통한 종이 없는 건축행정의 지속 추진

5.2 부산 스마트 시티즌 도시건축 리빙랩(Living Lab) 개설

- 세계적으로 도시의 공동창작자(CO-creator), 리빙 랩(Living Lab), 팍랩(Fablab), 해커스페이스(Hackerspace) 등 '디지털 공공 공작소'의 확산
- 스마트 시티즌-관(공급자) 주도의 스마트 시티와 다르게 주민(이용자)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서 전문가들, 서비스 제공자, 정부/관 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지원을 하는 방식(인프라 → 서비스, 물리적 공간 → 사이버 공간)
- 사례 - 바르셀로나 팍랩, 암스테르담 WAAG society



▲ [그림 V-206] WAAG society



▲ [그림 V-207] 해커스페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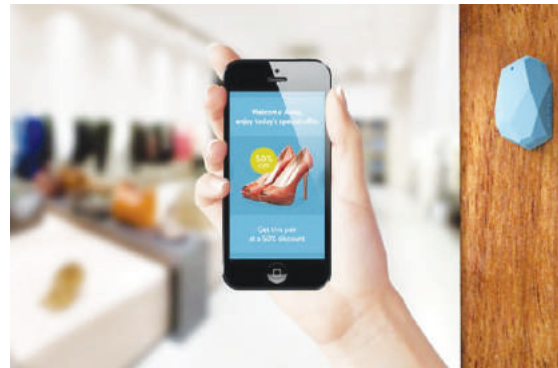
▲ [그림 V-208] 바르셀로나 팍랩

5.3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사업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사업

-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등을 통한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사업 추진
- 사업예시 : 비콘을 통한 '우리마을 정보 알리미' 운영
- 마을 입구(버스정류장, 지하철 입구 등) 등에 설치된 비콘을 통하여 마을의 소식 및 각종 안내 정보 제공
- 지역 커뮤니티 및 지역 미디어 활성화 도모
- IoT 인프라 구축을 통한 마을의 안전, 주민의 건강, 재난예방에 활용
- IoT를 활용한 역사·문화·관광·체험·숙박·주차 서비스 및 편의 제공으로 지역활성화



▲ [그림 V-209] IoT를 활용한 증강현실 길안내



▲ [그림 V-210] 비콘을 통한 정보제공

6. 추진체계

6.1 연차별 추진계획

실천과제	추진일정			추진사업	추진부서 (협력부서)
	단기 (2019~2021)	중기 (2022~2023)	장기 (2024 이후)		
스마트 건축행정 서비스 구축	○			· 스마트 머릿돌 시범 사업 · 종이 없는 건축행정 추진	건축정책과 소방안전본부
부산 스마트 시티존 도시건축리빙랩 (Living Lab)개설		○		· 스마트 시티존 리빙랩 지원사업 실시 · 테스트베드 지역 선정	도시균형재생국 미래산업국 소방안전본부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 사업		○		· 비콘을 통한 <우리마을 정보 알리미> 시범사업 · 도시재생 통합 길 안내 시스템 구축	복지건강국 자치구·군 도시재생지원센터

6.2 소요예산

사업명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금액(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스마트 건축행정 서비스 구축	200		100	100		
부산 스마트 시티존 도시건축 리빙랩(Living Lab)개설					(1,000)*	(1,000)*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 사업					(500)*	(500)*
계	200		100	100		

* 국토부 및 행안부 디지털 사회혁신 공모 사업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VI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추진방안

1. 계획의 운영 관련 지침	354
1.1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을 위한 메타계획으로 활용	354
1.2 구·군 건축기본계획 수립	354
1.3 정책과제와 실행과제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천 주체	354
1.4 각종 건축 및 도시공간 관련 시책 및 사업수립 시 계획의 반영	354
1.5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평가를 위한 부산 건축 협치 조직 운영	355
2.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	355
3. 세부과제별 실행주체 및 소요예산	356

Ⅵ.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의 추진방안

1. 계획의 운영 관련 지침

1.1 관련 법정·비법정 계획을 위한 메타계획으로 활용

- 본 계획에서는 비전과 목표, 가치, 추진전략과 세부전략이 가장 중요하며, 제시되어 있는 개별적인 정책과제와 실행과제는 일종의 예시로서 제시되었으므로 모든 과제를 5년 동안 실행할 필요는 없음
- 장기적으로 부산시 건축기본계획은 정책과제와 실행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과제형 계획을 지양하고, 건축과 공간환경과 관련한 다양한 법정·비법정계획의 중심에서 비전과 목표, 가치, 추진전략과 세부전략 등을 제시하면서 도시와 건축을 관리하는 지침형 메타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부산시 경관기본계획 및 경관상세계획, 도시색채기본계획,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등 경관관련 계획과 산복도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행복마을만들기, 도시재생 뉴딜 등의 도시재생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관리사업 등과 같은 정비사업의 시설 및 공간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1.2 구·군 건축기본계획 수립

- 법적으로 구·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공간계획체계로 볼 때 의무적으로 수립할 필요는 없음
- 구·군 차원에서는 특정지역이나 가로스케일에서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틀을 준용하여 계획 수립이 가능함
- 기장군과 강서구와 같이 도시적 특성이 여타 지역과 다른 경우, 부산 건축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별도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수 있음

1.3 정책과제와 실행과제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천 주체

- 정책과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 및 관련 실국 주도로 연차적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함
- 실행과제는 부산광역시의 도시균형재생국 및 관련 부서, 자치구·군의 해당 부서 및 관련부서가 정책환경의 여건, 우선 순위와 예산확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함
- 정책과제와 실행과제는 정합성과 통합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원칙적으로 도시균형재생국과 밀접하게 협력하면서 수립 실행하는 것을 권장함

1.4 각종 건축 및 도시공간 관련 시책 및 사업수립 시 계획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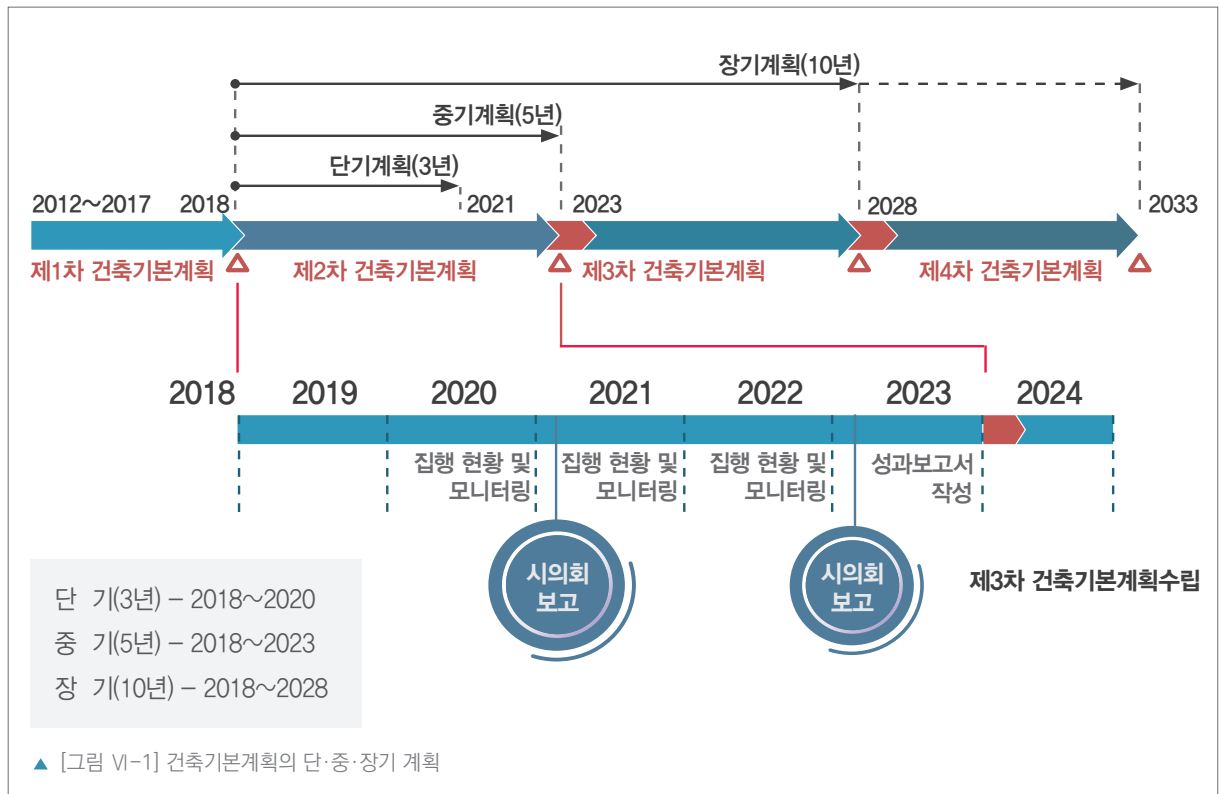
- 본 건축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계획의 비전-목표-전략에 부합하는 다양한 정책과제와 실행과제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을 권장함
-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구성체계, '비전-목표-전략-정책과제/실행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의 정합성을 위해 관련 과제내용을 참조하고 반영하도록 함
- 시군구 단위에서 각종 시책들, 예를 들어 건축심의 지침, 경관 및 도시디자인 지침, 간판정비지침, 주차장조성 지침 등을 수립하고자 할 때 부산시건축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가치, 추진전략과 세부전략에 부합되도록 함

1.5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평가를 위한 부산 건축 협치 조직 운영

- 부산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연례 모니터링과 평가를 위해 행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거버넌스형 '부산건축 시민협치위원회'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산하에 운영
- 건축기본계획의 안정적 정착과 확산을 위해, 광역시와 구·군 차원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과 과제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
- 매년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년 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2.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및 평가

- 건축관련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 실천과제별로 성과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부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2017.08.13 시행) 제4조의 2(건축정책 시의회 보고)
- 부산광역시건축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건축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조사방법 : 연구용역 발주로 성과관리 기관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추진실적 및 계획의 작성지침과 조사 양식을 마련하고, 실천과제별 담당부서 및 기관, 조직에 배포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취합하여 성과보고서 작성
- 조사대상 : 건축관련기본계획 실천과제별 담당실국 및 실과, 기초단체 관련 부서, 관련 공공기관, 민간조직, 시민단체 및 주민



3. 세부과제별 실행주체 및 소요예산

목표 1. 지역밀착의 부산다운·매력적인·개성 있는 도시건축

▼ [표 VI-1]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전략			세부	세부사업	추진기간				
					단기	중기	장기		
S1 공 공 성	일상공간과 공공공간을 아우르는 공공성과 쾌적성 제고	정책 과제	건축문화를 선도하는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	(기존)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한 프로세스 개선 (신규)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관리 시스템도입 (신규) 공공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계획수립 및 실행		○			
			도시공간의 보행친화성 향상	(기존) 상업 및 업무지역 건축물 주변 보행성 향상 (신규) 빗장도시(gated community)건축물통행성 및 보행성 향상 (신규) 보행친화성 평가 및 보행 거리 마스터플랜 수립 (기존) 친밀한 근린보행 가로 조성		○			
				자연과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공간	(신규) 녹지증진을 위한 건축정책 (신규) 참여하는 도시자연정책		○	○	
					실행	공공공간 활성화 프로젝트	(신규)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공공건축 (신규) 커뮤니티를 증진하는 도시시설 (신규) 공공기관 공간나눔 사업		○
				정책 과제		경관관리 시스템의 확립 및 모니터링	(기존) 경관구역별 높이관리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기존) 경관색채관리 시스템 모니터링 및 정책개선 (신규) 경관계획 실행수단의 개발	○	
			부산다운 경관 창출 방안			(신규) 경관분석을 위한 경관특성분석체계 수립 (신규) 관리지역 세분화 (기존) 경관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	
				도시인프라 및 구조물의 경관개선	(기존) 가로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의 디자인 개선 (신규) 공공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모니터링 (기존) 색채와 조명을 이용한 향만시설 디자인 강화	○	○		
			실행		매력적인 도시를 위한 입지별 경관특성 강화	(기존) 경사지주거경관 특성화 (기존) 역사적 산업항만의 특별건축구역지정 (기존) 생활문화경관 개발 및 관리 (기존) 야간경관브랜딩 사업		○	○
		다 함께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신규) 부산형 주거복지 최저기준 대응 (신규) 고령화대응 주거 확충 (신규) 방재형 노인 커뮤니티하우스 (신규) 장애인주거환경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	○	○		
				건강한 도시건축 인프라구축	(기존)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개선 방안 (신규) 100세대대 액티브 도시건축 지원 정책 수립 (기존)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	○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원 및 부산형 도시재생 완성	(신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체계 구축 (신규) 부산형 도시재생 Ver2.0 추진 (신규) 젠트리피케이션관리 및 활용				○				
	실행	다함께 행복한 동네 거점 조성	(기존 + 확대) 복합 커뮤니티 시설의 확충 (신규) 지역밀착형 복지시설 리모델링계획 수립 (신규) 도시재생건축 시범사업		○				
			도시재생 지역주체 양성	(신규) 도시재생 지역활동가 양성프로그램의 시행 (신규) 마을공동체 및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지원 (신규)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 양성	○	○			
유희공간 자원화				(신규) 유희시설물 및 공간의 현황파악 (신규) 부산형 빈집은행 시범운영 (기존+변경) 유희시설 및 공간을 활용한 저렴한 주거의 제공	○		○		

실행주체									소요예산						
시청				타 부서	구/군	시의 회	부산 건축제	공공기관	민간 조직	합계	19	20	21	22	23 이후
도시균형재생국	도시 정책	주택 정책	도시 재생												
○					○	○		해당기관		40				20	20
○										60			20	20	20
			○	도시계획과	○			해당기관		200				100	100
○				도시계획과	○					200				100	100
	○		○	자치분권과	○	○				100		50	50		
○				자치분권과	○					200				100	100
○			○	자치분권과	○					-					
○	○		○	도시계획과/환경정책실	○					100				50	50
○				도시계획과/환경정책실	○					200				100	100
			○	복지건강국	○			교육청		300			100	100	100
			○		○ 주민 센터			부산지하철공사		300		50	50	100	100
			○	복지건강국/여성가족국	○					-					
○					○					300		100	100	100	
○										100			50	50	
○										-					
○					○					300		100	100	100	
○										200				100	100
○					○					20					20
○				관련부서/산하기관	○					300				150	150
○				관련부서/산하기관	○					200				100	100
○				항만물류담당관				부산항만공사		200				100	100
	○		○		○					-					
○			○	도시계획과				부산항만공사		200				100	100
			○	문화체육관광국				도시재생지원센터		200		100	100		
○				관광마이스과						200			100	100	
		○	○	복지정책과	○			부산복지개발원		400		200	200		
		○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부산복지개발원		500				250	250
		○	○	복지정책과/노인복지과	○			부산복지개발원		300				150	150
		○		복지정책과	○			부산복지개발원		200		200			
○					○					200				100	100
○				노인복지과	○					500				250	250
○	○		○	교통혁신본부	○					-					
			○		○			도시재생지원센터		200		100	100		
			○		○			도시재생지원센터		300				150	150
			○		○					80				40	40
○			○		○					200		100	100		
			○	복지건강국	○					-					
○			○		○					200				100	100
			○					도시재생지원센터		200				100	100
			○		○			도시재생지원센터		100	50	50			
			○		○			도시재생지원센터/사회적기업센터		400		100	100	100	100
			○		○			도시재생지원센터		400		200	200		
			○		○			도시재생지원센터		300				150	150
○			○		○					1000				500	500

목표 2. 안전한 도시 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심/안전/안정의 친환경 도시건축

▼ [표 VI-2]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전략			세부	세부사업	추진기간		
					단기	중기	장기
S4 생활성	이웃공동체에 기반한 정주성 제고와 공동체 역량강화	정책 과제	노후 공동주택 유지 및 관리	(신규) 시영아파트 포함 노후 공동주택 실태조사		○	
				(기존) 장기수선 충당금 개선			○
				(신규) 관리체계 지원 및 개선		○	
			쾌적한 단독주택지 유지 및 관리	(신규) 단독주택지 관리 방안 수립	○	○	
				(기존+확대) 단독주택지 10분 생활환경 방안 마련	○	○	
		실행	노후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기존) 노후 공동주택 성능개선 시범 사업	○	○	
				(신규)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시범사업	○	○	○
			단독주택지 동네 골목가꾸기	(기존+변경) 주민발의 눈높이 생활환경 개선사업	○	○	
				(기존) 골목 생활 환경개선을 위한 주민협정제도 활성화	○	○	
				(기존+확대) 주거지 안심 주차	○	○	
				(신규) 경관CPTED 통합관리	○	○	
S5 안전성	지진·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 건축 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노후건축물 안전성확보 및 유지관리	(신규) 건축물 안전TF위원회 운영	○		
				(신규) 부산시 안전한 건축 기본계획 수립	○		
				(신규) 건축물 도면 긴급 공유 시스템 구축		○	○
				(신규) 건축물 화재진압 연계정책		○	
				(신규) 건설안전사고 방지 대책		○	
		실행	부산지역 건축시설물 안전지도 작성	(신규) 건축시설물 재난 안전지도 작성	○	○	
				(신규) 건축시설물 화재 안전지도 작성	○	○	
				(신규) 건축시설물 침수 안전지도 작성	○	○	
			건축물 생애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신규) 건축시설물 생애주기 정보구축 체계수립	○	○	
				(신규) 건축시설물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	○	
				(신규) 건축시설물 방재관리 시스템 개발	○	○	
			활용 가능한 도시안전 인프라 구축	(신규) 빅데이터 활용 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	
				(신규) 건축시설물 내진정보 구축 및 지질정보 시스템구축	○	○	
		노후건물 안심보강 시범사업		(신규) 노후 공공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시범사업	○	○	
				(신규) 시민이용 빈도 높은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	○	
S6 환경성	기후변화, 생태, 에너지문제에 대응하는 녹색 건축 활성화	정책 과제	자원순환형 녹색입체도시	(기존) 부산형 녹색도시건축 협력연구	○	○	
				(신규) 권역별 녹색건축 로드맵 작성		○	
				(기존) 시민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	
				(기존) 부산 녹색건축설계 기준조례 신설	○	○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절약 정책의 융합	(기존) 건축물 에너지전담부서 신설 및 에너지심의 분과위원회 부활		○	
				(기존) 건축물 에너지소비 통합관리 시스템 활용사업		○	
				(기존+변경) 부산시 친환경 융합조례 신설		○	
		실행	부산시 맞춤형 친환경건축 개발 보급	(기존) 부산시 맞춤형 녹색건축 시범사업	○	○	
				(기존) 건축물 녹화지원사업	○	○	
				(기존) 커뮤니티시설 녹색 리모델링 사업	○		
				(기존) 공공시설 녹색 리모델링사업	○	○	
				(신규) 노후주택 녹색 리모델링사업	○	○	
			부산녹색건축센터 설립	(기존) 녹색 건축 전문인력양성		○	
				(기존) 부산시 녹색건축물 인증사업			○
				(기존) 맞춤형 녹색건축 모델 개발 및 보급		○	
				(기존+변경) 시민 대상 녹색생활건축 교육/보급			○
			수변형 녹색도시 시범사업	(기존) 친수공간과 조화되는 수변형 녹색도시모델 개발		○	
				(기존) 수변형 녹색도시 모델 적용			○
				(신규) 하천변 정비사업 연계 친환경 공간조성	○	○	○

실행주체							소요예산					
시청		구/군	시의회	부산건축제	공공기관	민간조직	합계	19	20	21	22	23 이후
도시균형재생국	타 부서											
건축정책	도시정비	주택정책	도시재생									
		○		○			300				150	150
		○		○								
		○	○	○	도시재생지원센터		200				100	100
			○				150		50	50	50	
			○				300			100	100	100
		○	○	○	부산도시공사		300			150	150	
		○	○	○	부산도시공사/도시재생지원센터		100		50	50		
○			○		도시재생지원센터							
○			○		도시재생지원센터							
			○		주택도시보증공사		120		30	30	30	30
○			○		도시재생지원센터/부산디자인센터		200		50	50	100	
○				○			80		20	20	20	20
○				○			150			150		
○				○			400				200	200
○				○	○		100				50	50
○				○		해당기관	100				50	50
○							300			100	100	100
○							300			100	100	100
○							150			50	50	50
○				○		부산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	150		20	50	50	30
○				○		부산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	200		50	50	50	50
○						부산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시설안전공단	100		25	25	25	25
○				○		부산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시설안전공단	300		100	100	50	50
○				○		부산도시공사/부산시설공단/시설안전공단	250			70	80	100
○				○		부산시설공단/교육청/도시재생지원센터	200		100	100		
○			○	○		도시재생지원센터	200		100	100		
○							150			50	50	50
○							300				150	150
○				○			600			200	200	200
○						○	100			100		
○				○			200				100	100
○												
○							400				200	200
○							30				30	
○			○				1200		300	300	300	300
○			○	○			100			100		
○			○									
○			○									
○			○									
○			○									
○						지역대학	100				50	50
○					○							
○				○	○		400				200	200
○				○								
○			○				400				200	200
○			○									
○	○			○			200		100	100		

목표 3. 활기찬 도시 창의적 건축문화 육성과 혁신적 건축생태계

▼ [표 VI-3] 제1차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전략	세부	세부사업	추진기간		
			단기	중기	장기
S7 문화 성	역사와 문화 자산에 기반한 지역 밀착의 건축문화시스템 구축	정책 과제	우수 건축문화자산 발굴 및 보존활용	(신규) 마을흔적조사 및 마을박물관	○ ○
				(신규) 우수 지역건축문화자산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조사 및 활용방안 수립	○ ○
				(신규) 부산역사와 건축물을 연계하는 스토리텔링 발굴	○
				(신규) 역사적 건축물 보존활용 지원	○ ○
		건축문화향상과 시민참여 다양화		(기존+변경) 부산시 건축디자인 기준 수립 및 적용	○ ○
				(신규)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	○
				(신규) 시민정책제안 및 시민위원참여	○ ○
				(신규) 지역대학과의 시민건축문화향상을 위한 협업 및 공동연구 수행	○ ○
		도시건축거버넌스 활성화		(신규) 총괄건축가제도 도입 및 공공건축가 제도 개편	○ ○ ○
				(기존) 지역별 건축민원 카운슬링 제도 도입	○
				(기존) 시민주도의 거버넌스 사업 활성화	○
		실행	부산도시건축 선진화를 위한 기반 구축	(기존) 부산건축제 조직운영 개선을 통한 부산도시건축재단 설립	○ ○
				(신규) 건축도시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부산도시건축 역사관> 설립	○ ○
			도시건축 시민아카데미 활성화	(신규) 시민건축교육	○ ○
				(기존) 건축꿈나무 멘토링 시스템 구축	○
				(신규) 건축지식 콘텐츠 공유플랫폼 구축	○ ○
			도시건축기록화 및 아카이브(DB)구축	(신규) 부산 도시기록화 2단계 사업	○
				(신규) 부산건축 아카이브기획 및 시범사업	○ ○ ○
S8 경 제 성	저성장 지식 경제시대에 걸맞은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 과제	부산건설관련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강화	(신규) 부산지역특화 건설영역 발굴 및 인프라조성	○ ○
				(기존) 건축사사무소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	○ ○
				(신규) 소규모정비사업 장려·활성화	○ ○
				(신규) 건축서비스산업지원	○
		실행	'부산다운 건축' 가치증진을 위한 건축문화 콘텐츠 개발	(신규) MR, VR 가상 투어 콘텐츠 개발	○ ○
				(신규) 지역 도시건축문화를 활용한 Goods 개발	○
			우수 건축가 지원 및 육성 사업	(신규) 청년 건축가 인큐베이팅 시스템	○ ○
				(신규) 청년건축가 제한 공모 활성화	○ ○
				(신규) 공공기관 홈페이지 내 설계자 정보 코너 마련	○
			중소 건설업체 지원 육성	(신규) 지역 건설명장 육성	○ ○
				(신규) 중소 우수 건설업체 업무 확대	○ ○
				(신규) 건설기능인력 양성지원	○
S9 혁 신 성	미래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 선진화	정책 과제	지역건설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 조성	(기존) 디자인감리제도 도입	○ ○ ○
				(기존) 기획·계획 설계의 전문성 강화	○ ○
				(기존) 소규모 공공건축물 용역의 업무 간소화	○
			건축전문가의 역할· 책임·영역 확대지원	(기존) 지역건축전문가 사회적 역량 강화	○ ○
				(신규) 건축 코디네이터 지원 제도를 통한 역할 강화	○ ○ ○
		실행	도시건축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신규) 공공건축물 BIM 설계/시공 의무화 확대	○ ○
				(신규) 공간-건축도시 빅데이터 구축	○
			부산형 스마트시티 구축	(신규) 스마트 건축행정 서비스 구축	○
				(신규) 부산 스마트시티존 도시건축 리빙랩 개설	○
				(신규) 스마트 도시재생 시범 사업	○

실행주체								소요예산						
시청				구/군	시의회	부산건축제	공공기관	민간조직	합계	19	20	21	22	23 이후
도시균형재생국	타 부서													
건축정책	도시정비	주택정책	도시재생											
	○							연구기관	100		50	50		
			○	○			지역대학	연구기관	100				50	50
○				○		○			120		30	30	30	30
			○	○		○	해당기관		120				60	60
○				○					80		40	40		
○	○		○	○			해당기관							
○			○				시민행복소통본부		50				25	25
○			○	○		○	지역대학/부산연구원		60				30	30
○									140		20	20	50	50
○				○				건축사협회	320				160	160
○				○			사회통합담당관	도시재생지원센터	300				150	150
○					○	○			100				50	50
○						○			200					200
						○	부산시교육청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60		10	10	20	20
						○		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부울경건축학회	20				10	10
						○		건축가협회/ 건축학회	40				20	20
	○								250		250			
						○		건축사협회/ 건축학회	90			30	30	30
○				○			부산도시공사/지역대학	관련협회	140		20	20	50	50
○				○			부산도시공사/지역대학	관련협회	140		20	20	50	50
	○		○	○			부산도시공사/지역대학	관련협회	140		50	50	20	20
○				○			부산도시공사/지역대학	관련협회	50				25	25
						○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코리아랩	300		150	150		
						○	부산디자인센터		100			100		
			○				일자리경제실/성장전략본부		40				20	20
			○				청년정책담당관	○	○				60	60
○				○		○								
○				○			부산도시공사	관련협회	90			30	30	30
			○	○			부산도시공사	관련협회	150			50	50	50
○							건설기술교육원	관련협회	1000				500	500
			○	○			부산도시공사							
			○	○				관련협회						
			○	○				관련협회						
○			○	○				관련협회	120		30	30	30	30
○			○	○			해당기관	관련협회	120		30	30	30	30
			○	○			부산도시공사	관련협회	100			100		
			○	○			통계빅데이터담당관		200				100	100
○				○			소방안전본부		200		100	100		
			○	○			미래산업국/소방안전본부/복지건강국	도시재생지원센터						
			○	○			미래산업국/소방안전본부/복지건강국	도시재생지원센터	200		100	100		

■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



VII

부 록

1. 연구진행 과정	364
1.1 착수보고회	365
1.2 1차 Workshop	366
1.3 2차 Workshop	366
1.4 3차 Workshop	367
1.5 1차 전문가세미나	367
1.6 5차 Workshop	368
1.7 6차 Workshop	368
1.8 7차 Workshop	369
1.9 8차 Workshop	369
1.10 9차 Workshop	370
1.11 전문단체 의견청취	370
1.12 10차 Workshop	371
1.13 11차 Workshop	371
1.14 중간보고	372
1.15 실무진회의	372
1.16 공청회	373
1.17 12차 Workshop	373
1.18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연구진, 행정간 상견례	374
1.19 시의회 의견청취	374
1.20 성평등영향평가	375
1.21 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최종보고회	375
1.22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376

Ⅶ. 부록

1. 연구진행 과정

▼ [표 Ⅶ-1] 계획수립 추진 경과

일 정	추진현황	주요 내용
2017.05.25	착수보고회	제2차 건축기본계획 추진계획
2017.06.20	1차 워크숍	연구 분야 별 연구진 확정 - '정책'위주로 하되 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 필요
2017.07.20	2차 워크숍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분담 및 분야별 연구방향 논의
2017.08.16	3차 워크숍	부산건축현황 - 건축기본계획과 실국별 주요 건축계획사업과의 관계 -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브랜드 전략
2017.09.14	4차 워크숍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책임연구원 단국대 이재훈 교수 간담회
2017.10.12	5차 워크숍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최종 정리
2017.11.09	6차 워크숍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세부 사업 아이템 정리
2017.11.25	7차 워크숍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세부 사업 정리 - 연구진 개별 연구 정리
2017.12.02	8차 워크숍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세부 사업 결정
2018.01.09	9차 워크숍	연구자별 분담자료 발표 및 의견 교환 - 각 항목별로 정책과 실행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 조정 필요
2018.01.29	전문단체 의견청취	과제별 시행주체, 예산, 시기 반영 필요 키 아이템(key item) 필요 등의 의견 수렴
2018.02.09	10차 워크숍	전문단체 의견을 반영하여 슬로건 및 부산의 3대 목표, 9대 전략 일부 수정
2018.03.12	11차 워크숍	중간보고 대비 최종 의견 조율 3대 목표, 9대 전략 일부 수정 확정
2018.03.22	중간보고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초안 보고 및 의견수렴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주요 실천과제(안) 검토
2018.04.02	실무진회의	지방선거로 인해 의회보고 일정, 공청회 일정 연기 불가피하여 사업기간 연장
2018.05.10	공청회	기본계획(안) 발표 및 의견수렴(구·군 건축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 협회 등)
2018.07.04	12차 워크숍	시의회 의견청취 일정 조율 및 향후 일정
2018.08.10	내부 보고	시청 조직개편으로 인해 연구진행 사항 보고
2018.10.15	시의회 보고 - 사전설명	기본계획(안) 발표 및 의견수렴
2018.10.19	시의회 보고	시의회 의견청취
2018.10.30~11.05	성평등영향평가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2018.11.20	최종보고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최종안 보고 및 의견수렴(구·군 건축 관계 공무원)
2018.12.11	건축위원회	기본계획(안) 발표 및 의견수렴

1.1 착수보고회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5월 25일 목요일 16:00
- 회의 장소 : 부산시청 24층 노조회의실

□ 주요 안건

1. 건축기본계획 착수보고

□ 회의 내용

- 부산에 있는 고층건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했으면 함, 건축 시공방법, 시스템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관광자원화가 필요함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디자인조례 등이 시행되었으므로 경관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함
- 국제건축문화제에서는 시민들에게 건축에 대한 관심 유도를 위해 기존 전시 외에 다양한 새로운 시도와 접근 방법이 필요함. 발굴된다면 행정에서 기획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음
- 건축기본계획에 스마트시티, 자율에너지마을(도시) 시범설정 등의 내용 포함 요청
- ‘피란수도’ 부산유산 계획에도 건축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기본계획에서도 유지관리나 가치에 대해서 별도의 언급이 요구됨
- 민선 6기의 비전과 전략 반영이 필요함
- 2012 제1차 건축기본계획에서 많은 부분을 실천해 왔음, 각각의 목표와 가치 아래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음
- 부산의 도시 쇠퇴지수가 높다고 하지만 이는 아직도 매력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경사지덕분에 아직 많은 주택지가 남아 있음
- 현재와 같은 수준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함
- 기본계획은 시민과 함께 할 수 있어야 함, 전문가 그들만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됨
- 건축기본계획의 중심은 건축문화에 있음
- 다양한 분야에서 건축을 만들고 있고 그것들이 합쳐져서 ‘부산의 건축’이 이루어지길 원함
- 지난 부분(제1차 건축기본계획)에서 잘 된 부분도 있고 모호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음
- 특정 부분에 치우쳐서 될 것이 아니라 건축전체의 개념에서 재생, 녹색건축 등 각 분야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함



▲ [그림 VII-1] 2017.05.25 착수보고

1.2 1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6월 20일 목요일 16:0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건축기본계획 착수보고
2. 부산 건축기본계획에 대한 이해(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자료)
3. 전체 방향 도출 - 김민수 교수(제1차 기본계획 책임 연구원)
4. 분야별 담당 설정

▼ [표 VII-2] 연구 분야

총괄 책임연구		우신구
그룹 -1	소규모 건축산업분야, 신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건축디자인, 건축교육	백지웅
그룹 -2	도시설계, 경관·색채, 조경·보전·보행, 공공건축(공공미술)	정재훈
그룹 -3	도시재생, 공동체건축, 사회적경제·문화기획	신병윤
그룹 -4	환경·에너지, 방재·안전, 셉테드(CPTED)	추동엽
그룹 -5	주택정책, 재정비, 지역건설산업, 관련법제도	양진국
부산시와의 관계정리, 연구행정지원		이인희, 부산건축제

1.3 2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15:0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연구자별 역할 분담
2.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모니터링
 - 각 담당별 기본계획 평가(첨부1)
 - 부산시 시정 사업(2012~2016)에 관한 모니터링
3. 전체 방향 도출 : 워크숍/세미나 적극 활용
 - 자체 워크숍, 정책 및 사례 세미나 등
4. 분야 별 연구방안 논의
 - 제1차 기본계획과의 관계 설정
 - 변화 요구 반영
5. 향후 일정 논의



▲ [그림 VII-2] 2017.07.20
2차 Workshop

1.4 3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8월 16일 수요일 15:0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 각 연구원별 조사내용 발표 및 자유토론
2. 타 지역 건축기본계획
전남 건축기본계획
부산은 정책과 사업과제로 나뉘어있는데 전남은 같이 있음
지자체에서 시행하기에는 사업비가 많은 사업이 많아 국책사업 발굴이 많음
서비스산업/도시재생/빈집/취약계층에 대한 내용이 많음
전남은 아우리에서 수립하여 외부인의 시각에서 접근
3. 김민수 교수 발표
 - 계획의 틀과 주요과제
 - 부산건축현황
 - 건축기본계획과 실국별 주요 건축계획사업과의 관계 명시
 -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브랜드 전략 필요
4. 향후 일정



▲ [그림 VII-3] 2017.08.16
3차 Workshop

1.5 1차 전문가세미나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요일 13:30
- 회의 장소 : 키스라이어 센터 3층 회의실

□ 주요 안건

1. 초청인사 : 제2차 서울 건축기본계획 책임연구원 단국대 이재훈 교수
2. 서울시 공간개선단에서 추진
3. 2015년~2016년 8월 마무리계획이었으나 내부사정 및 시국문제 등으로 미결된 상태 임
4. 서울 건축기본계획은 기준연도가 2016~2020
5. 건축기본계획의 실효성 및 법적 위상의 문제가 있음
6. 건축정책위원회는 아이템을 찾아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아이디어 북의 역할 요구
7. 연구진 4~5명이 서울시의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 어려워 다양한 의견, 보편성을 위해 많은 자문 회의했음 : 30회 이상 추진

8. 연구결과로 찾은 서울시건축기본계획의 3가지

- ① 서울시의 건축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수준향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건축을 알리고 시민중심의 건축과 참여 필요
- ② 개발의 시대에서 내실을 추구하는 시대로 선진화된 건축행정 필요
 - 건축사들도 시민들에게 질적 서비스 제공
 - 서비스행정 - 행정조직개편, 발주제도 개편
 - 건축사 - 젊은 건축사 양성, 건축사무소 쿼터제
- ③ 도시재생, 녹색건축, 건축을 통한 복지사회 등 이슈 반영
 - 3개의 키워드, 각각 2개씩 세부전략과제 - 세부전략과제 별 3~4개씩의 사업 대략 60여 가지 사업으로 정리



▲ [그림 VII-4] 2017.09.14 전문가세미나

1.6 5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10월 12일 목요일 16:0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모니터링 최종정리
2. 제2차 서울 건축기본 계획 사례연구
3.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진행방법 논의
 - 착수보고 시 제안한 비전, 3대 목표, 9대 전략(안)이 있으므로 이(안)를 기준으로 세부사업내용을 작성하고 추후 논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함
4. 추후 진행과정 논의

1.7 6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11월 09일 목요일 17:0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세부 사업 아이템 정리
 - 유엔 해비타트 어반아젠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제2차 국가 건축 정책기본계획, 부산시 민선 6기 공약을 종합하여 비전과 핵심키워드 선정
 - 2차 건축기본계획의 시기와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와는 시차가 있어 용어는 정부 100대 과제를 따르는 것이 좋음
2.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진행방법 논의
 - 집중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함
 - 분야는 모니터링 시 연구원 별로 맡았던 파트를 중심으로 작성하고 타 분야에도 제안 하고자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하기로 함



▲ [그림 VII-5] 2017.10.12 6차 Workshop

1.8 7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14:00
- 회의 장소 :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세미나실

□ 주요 안건

1.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전략별 가치 수정

비전	3대 목표	가치	9대 전략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 — 건축으로 행복한 부산	1. 녹색경관 도시 자연과 건축의 생태적/ 경관적 조화를 통한 건강하고 품격있는 도시기반	S1 공공성	· 일상 공간과 공공 공간을 아우르는 공공성과 쾌적성 제고
		S2 경관성	· 심미성과 지역성이 조화를 이룬 매력적/상징적 도시경관조성
		S3 환경성	· 기후변화, 생태, 에너지 문제 등에 대비한 녹색건축 활성화
	2. 생활정주도시 이웃과 함께 안심/안정/안정의 공유가치를 실현해가는 도시건축	S4 생활성	· 이웃공동체에 기반한 정주성 제고와 공동체 역량 강화
		S5 지속성	· 재생과 복지/건강 분야와의 협치를 통한 생활 기반 안정화
		S6 안전성	· 지진/재난/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한 도시건축 시스템 구축
	3. 문화경제도시 창의적 건축문화 육성과 건설산업 및 건축서비스의 선진화	S7 문화성	· 역사문화자산에 기반한 지역 밀착의 건축문화 시스템 구축
		S8 경제성	· 저성장 지식경제시대에 걸맞는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S9 탄력성	· 예측 불가능한 미래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건축 선진화



▲ [그림 VII-7] 2017.11.25
7차 Workshop

▲ [그림 VII-6]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1.9 8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7년 12월 02일 토요일 14:00
- 회의 장소 : 부산대학교 건축학과 세미나실

□ 주요 안건

1. 그간 연구진의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과 진행해 온 연구를 반영
2. 전체 연구진의 자료를 현장에서 의견을 취합하여 바로 수정
3. 정책과 실행으로 나누고 세부사업까지 정리
4. 각 사업 당 분량 조정 예정 - 균형유지

1.10 9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1월 09일 화요일 10:3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연구자별 분담자료 발표 및 의견 교환

- 1차(안)을 각 세부 사업으로 정리
- 각 항목별로 정책과 실행의 균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음
 - 향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 초안 작성 후 항목 이동 가능
 - 제1차 건축기본계획과 변동이 없는 사항들은 배경 및 필요 요소에 모니터링 사항들을 반영할 것

2. 향후 일정

- 전체 일정이 한 달 정도 미뤄짐
 - 1월 중으로 관련단체 의견청취 하려함
 - 중간보고 일정은 그 후에 정할 수 있고 1월 말~2월 초 예상함
 - 건축관련단체 협의 일정(안) 1월 29일 오후 2시 건축사회관으로 정함

1.11 전문단체 의견청취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1월 29일 월요일 14:00
- 회의 장소 : 부산건축사회관 2층

□ 주요 안건

1. 건축관련 전문단체에서 제시된 의견에 관해 논의

의견	검토의견
1차년도 건축기본계획의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모니터링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
슬로건이 포괄적임	수정, 검토
과제별 명확한 실행주체, 예산, 실행시기가 필요함	세부사업의 실행력 향상을 위해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영하도록 함
키 아이템이 필요함	수정, 검토
설계비 현실화문제, 건축서비스 산업문제, 인허가 절차문제	향후 건축사협회와 협의 필요
실행사업과 예시사업이 구분 필요	반영
실행부분도 필요하므로 테스트베드가 있으면 좋을 듯함	검토



▲ [그림 VII-8] 2018.01.29
전문단체 의견청취

1.12 10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2월 08일 목요일 17:0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건축관련 전문단체에서 제시된 의견에 관해 논의

의견	검토의견
제1차 건축기본계획의 피드백 과정이 필요함	모니터링을 보다 상세하게 작성
슬로건이 포괄적임	수정, 검토
과제별 명확한 실행주체, 예산, 실행시기가 필요함	세부사업의 실행력 향상을 위해 중간보고 이후에는 반영하도록 함
키 아이템이 필요함	수정, 검토

- 보고서 체계 : 건축기본계획 + 기본계획수립과정 보고서
- 각 파트별로 핵심사업 도출 : 정책사업 – 핵심정책사업, 실행사업 – 테스트베드사업
- 사진, 표, 다이어그램 : 적절한 사례 및 설명



▲ [그림 VII-9] 2018.02.08
10차 Worksho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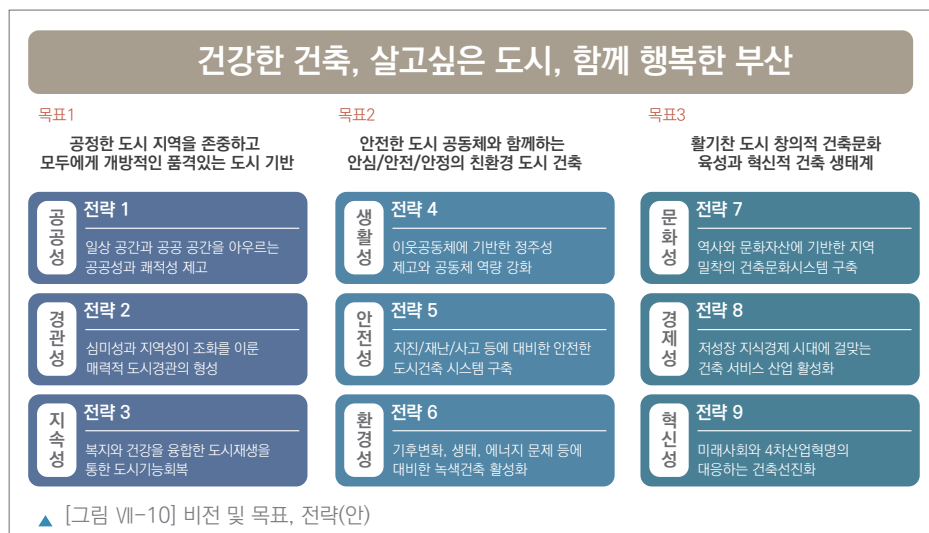
1.13 11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3월 12일 월요일 18:00
- 회의 장소 : 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주요 안건

1.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중간보고 일정 알림
 - 2018. 03. 22 (목) 오전 10:30 시청 24층 회의실
2. 슬로건, 3대 목표, 9대 가치 및 전략 수정



1.14 중간보고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3월 22일 목요일 10:30~12:00
- 회의 장소 : 부산시청 24층 회의실

□ 주요 안건

1.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계획과 평가에 따른 문제점 반영계획 검토
- 건축기본계획과 관련성 있는 타 계획과 연계성, 공감대 필요
- 예산까지 포함해서 로드맵을 충실하게 표현
- 부산만이 추구하는 각 부분의 'identity'가 필요
- 부산의 수변에서 해양만 강조하고 있고 강변에 대한 언급이 없음
- 실천에 관한 사항
- 건축 관련 현장전문기술인력 육성
- 건축사의 역할 반영
- 안전성에 대한 계획
-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마무리가 되면 공유 및 활용·확산사업구상
- 도시기록화사업(2차) 검토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기 쉬운 자료 요청



▲ [그림 VII-11] 2018.03.22 중간보고

1.15 실무진회의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4월 02일 월요일 14:00~16:00
- 회의 장소 : (사)부산건축제 시민사랑채



▲ [그림 VII-12] 2018.04.02 실무진회의

□ 주요 안건

내용	반영 계획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 평가계획과 평가에 대한 문제점 반영 계획 검토 - 건축기본계획과 관련성 있는 타 계획과의 연계성, 공감대 필요 - 예산까지 포함해서 로드맵을 충실하게 표해 해주길 바람 - 부산만이 추구하는 각 부분의 'identity'가 필요함 - 부산의 수변에서 해양만 강조하고 있고 강변에 대한 언급이 없음	연구진,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방안을 찾고 보고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 건축 관련 현장 전문기술인력 육성 - 건축사의 역할 반영 - 안전성에 대한 계획 - 안전사고에 대비한 시스템 개발보다 근본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부산만의 대책이 필요함	관련 전문단체와의 의견청취를 통해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 -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마무리가 되면 공유 및 활용·확산 사업구상 - 도시기록화사업(2차) 검토 -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보기 쉬운 자료가 있었으면 함	행정 및 건축 문화제와 협의 필요

1.16 공청회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5월 10일 목요일 14:00~17:00
- 회의 장소 : 부산상수도사업본부 10층 대회의실

□ 주요 안건

1. 부산시 창조도시국과 각 구·군의 실행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 활용방안 마련
2. 해외 사례처럼 시민들에게 좀 더 각인 될 수 있는 플랜이 필요
3.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말랑말랑한 계획이 필요함
4. 각 사업의 경중이 있는데 모니터링의 결과가 모호함, 보다 입체적이고 정량적인 모니터링 분석틀이 필요함
5. 제1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모니터링에서 실행이 안 된 부분은 이유를 파악해야 함(28개)
6. 인구변화에 대한 고민필요, 1인가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7. 시간대비 변화의 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대비가 필요함
8.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의 사업 수는 129개 - 사업의 가지 수를 100개 이내로 줄여야 함
9. 재정계획을 감안하여 실행을 담보 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야 함
10. 신규 사업 발굴에 치중하기보다는 기존사업을 2/3, 신규사업을 1/3로 운영하면 지속적 추진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됨
11.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징을 가진 부산을 표현하기 위해 지역별로 건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12. 유관기관들(행정, 교육청, 가협, 사협, 국토부 등)과의 협의가 필요
13. 행정만 구속하는 계획이 되어서는 안 됨, 실행을 위해 모두 역할 분담이 필요
1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활성화 문제 중요
15. 디자인감리제도 : 비용이 문제
16. 건축사보, 인력확보, 건축사들의 위상, 경제적 문제와 결부되어있어 보충해야 할 문제



▲ [그림 VII-13] 2018.05.10 공청회

1.17 12차 Workshop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7월 04일 수요일 17:00~19:00
- 회의 장소 : 초량 비폴로

□ 주요 안건

1. 민선 7기 정책공약 로드맵 반영
2. 보고서 보완 가이드라인
3. 의회 의견 청취 일정에 따른 최종 자료 제출 협조
4. 향후 일정 공유

1.18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연구진, 행정간 상견례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08월 10일 목요일 10:00~11:30
- 회의 장소 : 부산시청 노조회의실

□ 주요 안건

1. 민선 7기 이후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해 국장, 과장, 팀장이 새롭게 부임하여 제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안) 수립과정 및 진행사항 보고
2. 시의회 의견청취 일정 - 제272회 임시회 안건 상정 유무 논의
3. 민선 7기 공약사항 반영과 도시균형재생국과의 협의
4. 향후 일정 공유



▲ [그림 VII-14] 2018.08.10 회의사진

1.19 시의회 의견청취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10월 19일 금요일 15:00~16:00
- 회의 장소 :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회의실

□ 주요 안건

1. 해양도시 부산의 건축계획을 대표할만한 대표성이 있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2. 우리나라 전체에 파급효과가 있게 선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담아주기 원함. 특히, 공공건축물은 계획이 내세우는 9가지 가치 부분에서 공공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함이 많음
3. 부산은 해양도시이므로 해양도시만의 특징이 있음, 그러나 법은 내륙 중심의 법을 따르고 있어 해양도시에 맞는 건축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4. 해양건축 관련하여 임해지역에 선도적으로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 해양건축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5. 영어 용어 순화 필요, 젠트리피케이션 등 용어를 순화하여 시민이 소통할 수 있는 정책사업 명칭
6. 산복도로 구역에 녹색테라스 주택 시범사업 추진
7. 기후 변화, 도시안전 등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구조물의 도면을 공유하는 방안
8. 부산의 색채경관은 잿빛과 시멘트색이므로 예술성, 경관성, 심미성을 고려하여 변화가 필요함
9. 구청이나 시청과 같은 공공건물도 유럽의 건물들처럼 역사적인 건물, 사진 찍고 싶은 건물을 만드는 계획이 필요함
10. 시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
11. 함께 행복한 부산건축에서 함께 조망해야 하는 바다 경관을 해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옴
12. 세계적으로 지역을 가르고 계층을 가르는 건축이 지금의 현실이므로 이런 점들을 지양해야 할 것임



▲ [그림 VII-15] 2018.10.19
시의회 의견청취

1.20 성평등영향평가

□ 개최개요

- 2018년 10월 30일 제출
- 2018년 11월 5일 결과 통보 받음

□ 주요 안건

1. 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의한 지역현황과 실정에 부합하는 광역건축 기본계획으로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정책의 기본 단계에서부터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공간이용 설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본 계획의 비전은 건강한 건축, 살고 싶은 도시, 함께 행복한 부산이며, 공정한 도시, 안전한 도시, 활기찬 도시 등의 3대 목표와 9대 가치에 따른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특히, 전략 1 공공성에서는 보행친화성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전략 3(복지와 건강을 융합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기능회복)에는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 대상별, 성별에 따른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음
 - 또한 전략 4에는 단독주택지 동네 골목가꾸기에 셉티드를 반영해 경관관리 정책을 구성하고 있음
3. 다만 전략3의 자전거 친화적 도시환경의 경우, 성별에 따른 자전거이용 행태를 파악해 그에 알맞은 정책적 개발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지역주체 양성과 건축전문인력 양성(전략6)에서는 성별을 고려해 지역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음

□ 검토의견

1. 제2차 부산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제시된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성별 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자체개선안에 동의
 - 보행친화성 평가체계를 마련
 -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개선 방안
 - 단독주택지 동네 골목가꾸기에 셉티드를 반영해 경관관리 정책

1.21 2차 부산 건축기본계획 최종보고회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11월 20일 화요일 16:30 ~ 17:40
- 회의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주요 안건

1. 2년 뒤에 시의회에 평가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 세부계획을 단순히 나열하기 보다는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타임 스케줄이나 재정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2. 현재 2018년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여기서 1년 반 뒤에 시의회 보고인데 의회에 보고 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음
 - 계획의 수립시기를 2017년으로 잡고 있음



▲ [그림 VII-16] 2018.11.20 최종보고

3. 도시재생 분야도 많이 포함하고 있으므로 같이 논의해서 추진하면 실행하는 데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4. 기본 계획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실행력(강제성)을 가질 것인가?
 - 기본계획은 만들어놨지만 일반 건축물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지 일선에서는 잘 판단이 서지 않음
5. 시에 '총괄건축가제도'를 추진하게 되면 조직도 변화가 필요함
 - 구·군에 흩어져있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에서 시공까지 관리하게 됨
6. 계획에 담긴 9가지 가치의 실현 중요
7. 구·군에서도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보고' 작성 시 구청별 시책에 맞는 사업, 특색있는 사업 발굴 시 활용하기 바람

□ 검토의견

1. 보고서에서 반영하고 있음
2. 타임스케줄은 실천력을 위해 장·중·단기별로 나누고 재정계획도 반영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연계사업들도 찾고 있음
3. 이 부분은 연구진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임
4. 행복주택복지국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음
5. 각 구·군에 건축위원회가 있으니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시에서 지침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하려고 함

1.22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

□ 개최개요

- 회의 일시 : 2018년 12월 11일 화요일 14:00
- 회의장소 : 부산시청 24층 회의실

□ 주요 안건

1. 용어 선택의 신중함 필요
 - 경제성보다는 '경제적 가치'나 '경제적 확장성'이 어울린다고 생각됨
2. 현재 보고서는 문화, 역사 등 부산의 다방면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대학, 건축사, 각 구·군, 건축사협회, 건축가 등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없음

□ 검토의견

1. 경제성은 건축이 산업에서 미치는 비중이 크고 특히 소규모 건축물의 부가 효과가 큼
2. 건축을 너무 미(美)에만 국한 시킬 것이 아니라 부산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강조
3. 보고서에는 대학 및 각 구·군, 전문가 및 시민의 역할도 제시하고 있음